

ISSN : 1975-390X

獨島研究

제28호

2020.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이 학술지는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차 례

특집: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

우리나라 초등학교 독도 교육정책 및 독도 교재 분석 전기석 · 박경근	7
우리나라 중학교 독도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박재홍	47
우리나라 고등학교 독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광현	73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교육과정』의 독도기술 비교검토 송휘영	103

일반논문

1696년 안용복 뇌헌 일행의 도일과 의승수군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이태우	139
일제강점기 일본어 자료에 나타난 ‘울릉도의 屬島로서의 독도’ 인식 윤소영	169
아마구치현 주민의 울릉도 침탈사건에 대한 연구 박지영	209
북한의 독도와 동해 관련 고지도 자료 연구에 대한 고찰 서인원	243

겐로쿠(元禄)·덴포(天保)·메이지(明治) 도해금지령의 규범 형성절차 및 형식의 법적 의미 ■ 최철영	293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한 연구 ■ 이동원	329
독도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그 실태 ■ 김은령	381
『독도연구』 제28호 편집위원회	421
논문투고규정	422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426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429

특 집



우리나라 초등학교 독도 교육정책 및 독도 교재 분석

전 기 석* · 박 경 근**

〈목 차〉

1. 서론
2.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 독도교육
3. 독도교재의 내용체계 분석
4. 요약 및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가 독도 학습에 중요한 교구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에 맞춰 흥미롭고 심도있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10가지 분류 항목은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생태, 자원, 지명의 변천, 독도수호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영토주권수호노력이다. 그러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10개의 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속적인 독도교육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에 걸쳐 각 각 다루어져야 할 분류 항목의 분량과 난이도가 적절하게 구분되거나 체계적으

* (제1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 (제2저자) (재)독도재단 연구원

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요소를 무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가 초등학교에서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학생활동 중심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도교육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기술하고 이와 함께 독도의 자연, 사료, 동·식물 등의 스티커 붙이기, 독도십자말풀기, 독도보드게임, 독도책갈피 만들기 등 독도관련 체험·활동을 돕는 학생 참여 중심의 독도교재 개발도 요구된다.

주제어 : 독도교육, 초등학교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주제, 독도교재, 독도교육 내용체계.

1. 서론

동해상에 우뚝 솟아있는 해양성 화산섬인 독도는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되는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하는 특별한 장소성과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토임을 의미하는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특수한 공간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처럼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치며 영유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¹⁾

특히 일본은 2008년 3월 28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에 ‘우리나라(일본)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포함시키며, 교육 분야에서 영토 도발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교과서 검정 승인 결과를 보면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점거)’이라는 왜곡된 내용을 담

1) 박경근·전기석·신재열, 「중학생들의 독도(Dokdo) 인식 및 바람직한 독도교육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21, 2016, 154쪽.

은 교과서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7년 문부과학성에서 ‘독도와 쿠릴 4개섬, 조어도(釣魚島) 열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과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하도록 한 신학습지도요령해설을 확정된 후,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 26일 처음으로 실시한 교과서 검정에서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과교과서 검정 승인을 통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관련 기술이 보다 확대되고 구체화되어 교육을 통한 미래 세대의 의식 학습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²⁾

이러한 일본의 교육에 맞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도교육주간을 통해 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과 연간 10시간의 독도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독도관련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독도교육의 체계적인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도를 범교과 학습의 주제로 설정했으며, 초·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 역사, 기술·가정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독도교육의 내용을 확대하였다³⁾ 또한 교육부는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실천 중심의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컨대 전국의 독도지킴이 학교 운영, 학생용 및 교사용 독도교재의 개발 및 보급, 독도교육주간 운영 및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 개최, 독도바로알기 대회 및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운영 등이다.⁴⁾

현재와 같이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로 교육하면서 영토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토

2) 박경근·전기석·신재열, 앞의 논문, 154쪽.

3) 심정보, 「일본이 부정하는 한국의 독도교육」, 『독도연구』26, 2019, 282쪽.

4) 심정보,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활동 분석」, 『독도연구』24, 2018, 234-236쪽,

교육을 통한 국가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초등학교 단계는 영토 교육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독도와 관련한 영토교육은 학생들이 투철한 역사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독도와 관련한 영토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의식과 영역의식을 키우는 근간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사나 학생들의 독도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도관련 교과운영 방안 마련 및 학습내용 개발 등을 제시하는 연구(김소용·남상준, 2015; 김태우, 2015; 박경근 외, 2016)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독도관련 부교재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독도교육 정책과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박진숙, 2010; 김수희, 2013; 김호동, 2014; 김희선, 2014; 신동호·남상준, 2014; 이우진, 2014; 석병배, 2016; 문상명, 2018; 김혜진·서태열, 2019; 심정보, 2019)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가 독도 학습에 중요한 교구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에 맞춰 흥미롭고 심도있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5) 이우진,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나타난 초등학교 독도 기술의 변화」,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60, 2014, 84쪽.

2.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 독도교육

1) 독도교육의 목표 및 학습내용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독도교육은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 인적자원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민족의 영토주권 및 자주권을 수호하는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독도 교수 학습의 기본 체제를 갖추고 독도교육 목표 및 학습내용을 제시하였다. 독도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3가지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독도관련 지식,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논증하는 능력(기능), 독도사랑 및 수호하려는 태도이고, 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리환경, 생태환경, 중요성, 역사, 인물 5가지 분야에 대한 학습내용을 마련하였다<표 1>.

<표 1> 2005 독도교육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교육인적자원부)

학습 목표	지식	독도의 위치와 현황 및 지리적 환경을 파악한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이해한다. 독도의 중요성을 정치·경제·역사·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최근 쟁점들을 이해한다.
	기능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독도관련 자료를 분석·종합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논증한다.
	태도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토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학습 내용	지리 환경	위치, 거리, 행정구역, 지형 및 기후 특징, 형성 과정
	생태 환경	독도의 동·식물
	중요성	정치, 수산 및 해저자원, 생태학적·지질학적 중요성
	역사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사료, 지도, 자료
	인물	이사부, 안용복, 독도 수호대, 독도 경비대, 독도의 주민 등

(출처 : 신동호, 2013)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교육과정의 독도교육에 대한 기본 체제를 계승하면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개정을 이어나 갔다. 특히 일본이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독도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일선 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점진적으로 강화하 였는데, 이를 위해 2011년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영토에 대한 올 바른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적합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독 도관련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독도교육 내용체계 안내 및 활용 협조」라 는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전달하여 국가수준의 독도교육과정을 제시했다. 이 공문에는 ‘독도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독도의 역사적·환경적·정치적·군사적·경제적 가치 등을 이해,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갖기의 의미와 방안 탐색’을 위한 학습내용 이 제시되었다<표 2>.

<표 2> 2011 국가수준 독도교육 내용체계(교육과학기술부)

목적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적합한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목표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학습 내용	<p>독도에 대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독도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의 자연 환경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 - 독도의 중요성과 역사적·환경적·정치적·군사적·경제적 가치 이해 -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갖기의 의미와 방안 탐색

(출처 : 신동호, 2013)

다음으로 2011년 제시된 국가수준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토대로 교육부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수정·보완한 2014 개정 독도교육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표 3>. 전반적으로 2011 국가수준 독도교육 내용체계와 유사하지만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면, 독도교육의 목적은 다분히 배타적이고 민족적일 수밖에 없는 영토교육이지만 세계화 시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에서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목표는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물론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억지 주장에 대응하여 독도 수호의지를 다지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이에 따른 학습내용 중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는 고등학교 학습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독도의 역사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인물들의 노력 이해’라는 새로운 학습내용을 추가하였다.⁶⁾

6) 김호동, 「우리나라 독도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독도연구』17, 2014, 295-296쪽.

<표 3> 2014 개정 독도교육 내용체계(교육부)

목적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적합한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목표	독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학습 내용	<p>독도의 자연 환경, 지리와 역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 수호의지를 다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의 자연 환경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 이해를 통한 독도 중요성 인식 - 독도의 역사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인물들의 노력 이해 -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갖기를 통한 나라 사랑 의지 함양

(출처 : 김호동, 2014)

가장 최근에 새롭게 개정되어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한 독도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종합해 보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독도 사랑과 독도 수호의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첫째,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 둘째, 독도 영유권 교육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 제고, 셋째, 역사의식 및 시민의식 발현을 통한 독도주권 수호 실천력 확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음으로 체험활동을 통한 독도수호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독도 교육과정 운영, 독도 교육자료 보급, 독도교육 연수 강화,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운영, 독도바로알기 행사 운영, 독도교육

주간 운영, 독도교육협의체 구성, 독도관련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독도 지킴이 동아리 운영, 독도 체험 탐방단 운영 및 안내서 책자, 독도교육 전시체험관 운영, 독도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이 있다<표 4>.

<표 4> 2019 독도교육 기본계획(시·도교육청 내용 종합)

목적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독도사랑과 수호의지 강화
목표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 독도 영유권 교육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 제고 역사의식 및 시민의식 발현을 통한 독도주권 수호 실천력 확산
추진 과제	<p>독도교육 강화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바로알기’, ‘독도교육주간’ 운영 - 다양한 독도 교육자료 지원으로 단위학교 독도교육 활성화 - 역사적 쟁점 문제에 대한 관점을 갖고 행동하도록 논쟁과 토론의 기회 제공 -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등 관련 부서 연계 교육활동 운영 지원 <p>체험 활동을 통한 독도수호 의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체험의 독도교육 실천의 기회 제공 - 독도지킴이 동아리, 체험탐방단, 전시체험관, 연구학교 등 운영 - 단위학교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및 독도지킴이 학교 운영 지원

(출처 : 시·도교육청 2019 독도교육 기본계획)

이처럼 최근의 독도교육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및 교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며, 학생 활동 중심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영토교육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수호 의지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촌 글로벌시대에 맞게 미래 지향적이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주적인 세계 시민 양성으로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2) 독도교육의 학년별 내용체계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은 주로 지리, 일반사회, 역사 영역인 사회과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독도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이다. 이 해설서의 5학년 5단원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과 6학년 1단원 ‘아름다운 우리 국토’에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었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독도관련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후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나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있지 않았고, 2011년에 이르러서야 수정된 국가수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발표하면서 마침내 독도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처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여러 교과에 공통적으로 연관시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1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역사영역인 5학년 4단원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과 지리·일반사회 영역인 6학년 1단원 ‘살기 좋은 우리 국토’에서 독도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표 5>.

<표 5>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의 학년별 내용체계

교육과정	학년/단원	내용
2007년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	5학년 (5)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일제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 시킨 사실을 알게 한다.
	6학년 (1) 아름다운 우리 국토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일본의 영유권 훼손 지도의 부당성을 깨닫게 한다.
2011년 교육과정	5학년(역사) (4)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허준, 효종, 안용복 등 인물 이야기를 통해 전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
	6학년(지리·일사)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중요성(예, 독도, 비무장 지대, 접경지역 등)을 이해할 수 있다.

독도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기본사항 9가지를 살펴보면 독도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39개 범교과 학습 주제를 통합하여 10개 주제(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로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범교과 학습의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단위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주제에 따라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 활동’ 영역의 ‘창의주제활동’으로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⁷⁾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독도교육의 학년별 내용체계를 반영하여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해, 그리고 영토의 동쪽 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에서 국토의 위치와 영역 등 우리 국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지만, 독도관련 내용은 8단원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있다<표 6>.

<표 6>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독도교육의 학년별 내용체계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
학년/단원	5-6학년 / 사회과 (8)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목적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을 기르고, 독도를 지키려는 그동안의 노력과 독도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지구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함양한다.
목표	독도를 지키려는 조상들의 노력을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독도의 위치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영토주권 의식을 기른다.
학습요소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특성, 독도를 지킨 조상들의 노력 등
성취기준해설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과 독도를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영토주권 의식을 기르고, 이웃 나라의 역사 왜곡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7)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초등학교」, 교육부, 2016, 60쪽.

교수 · 학습 방법	<p>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관련 역사적 자료와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수호 의지와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주변국과 영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p> <p>독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하여 아름답고 소중한 국토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인식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p> <p>지리적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 속에서 독도의 의의를 넘어 현재에도 우리 영토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도록 한다.</p>
평가 방법	<p>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논술형 평가를 실시한다.</p> <p>-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리적 특성 등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독도의 아름다움과 독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독도를 소개하는 글쓰기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p>

3) 독도교육의 내용체계에 나타난 세부적 내용요소

독도교육의 목적을 위한 성취기준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국가 수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발송하면서 ‘독도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독도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라는 초등학교 독도교육 목표에 맞추어 학습내용 및 내용요소를 제시하였다<표 7>. 첫 번째 학습내용 ‘독도의 자연 환경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독도의 지명, 위치와 모양, 지형 형성 과정, 기후 등을 비롯하여 독도의 전반에 관한 내용요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학습내용 ‘독도의 중요성과 독도의 역사적, 환경적, 정치적·군사적, 경

제적 가치 이해’를 위해 독도 수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료와 독도를 지킨 인물들을 소개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며, 독도의 생태와 천연기념물 지정, 영토와 영해, 독도 경비대 파견, 자원 등의 내용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세 번째,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갖기의 의미와 방안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시민 단체인 ‘반크’에 관한 내용요소 등으로 구성하였다.⁸⁾

이처럼 독도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총 11개 분류 항목, 25개 학습 내용, 66개의 내용요소 중 일본의 독도관련 문헌(한국영토 표기), 특정도서 2개 학습내용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21개 내용요소를 제외한 11개 분류 항목, 23개 학습내용, 45개의 내용요소를 제시하였다.

〈표 7〉 2011 초등학교 독도교육 학습내용 및 내용요소

분류	학습내용	초등학교 내용요소
지명의 변화	지명의 유래	돌섬(석도), 독섬
	독도의 옛 이름	우산도, 자산도, 삼봉도, 가지도
	독도의 명칭(외국)	리앙쿠르(프), 다케시마(일)
독도수호 자료	우리나라의 독도관련 문헌	삼국사기(512), 세종실록지리지(145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일본의 독도 침탈(1905), 이승만 라인(1952)
	독도를 지킨 인물들	이사부, 안용복, 독도의용수비대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다케시마의 날’ 제정(2005)

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바람직한 독도 교육의 방안」, 교육부, 2011, 103쪽

실효적 지배	경찰청 독도 경비대	경찰청 독도경비대의 파견
	시설물	등대, 어업인 숙소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제336호) 지정
	독도를 지키기 위한 활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시민운동의 내용과 참여 방안
위치	행정구역	독도의 주소
	수리적 위치	독도의 경·위도 확인하기
	지리적 위치	지도·지구본·구글맵 등에서 찾아보기, 울릉도와 오키섬으로부터의 거리 비교,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방법
영역	영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영토, 영해
생활	독도와 한반도 관계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
지형	모양	사진(위성사진 포함), 모식도 등을 통한 모양 파악, 해저지형(해저분지, 해산)
	지형 형성 과정	모식도, 3D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형성과정 이해
기후	기온과 강수	울릉도와 독도의 연중 기온 강수 그래프
	안개	안개일수
생태	동물	괭이갈매기, 바다사자
	식물	해국, 사철나무
자원	수산자원	해류, 어장
	지하자원	해양심층수, 메탄 하이드레이트

2011년에 제시된 학습내용 및 내용요소는 2014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해설 개정의 조짐이 나오자 새롭게 수정·보완되었다<표 8>. 첫째, ‘분류’ 항목을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생태, 자원, 지명의 변천, 독도수호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영토주권 수호노력의 순서로 독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앞에 두고, 수호 및 활동 등은 뒤로 재배치하였다. 그리고 ‘실효적 지배’는 ‘독도 영토주권 수호 노력’으로 수정되었고,

‘생활’은 삭제되었다. 둘째, 실효적 지배의 ‘경찰청 독도 경비대’는 ‘독도 수호자료’의 독도를 지킨 인물들 내용요소에, 생활의 ‘독도와 한반도 관계’는 ‘위치’의 ‘지리적 위치’내용요소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독도수호자료’의 학습내용에서 ‘독도 주민들’이 추가되었고, ‘영토주권수호노력’의 학습내용은 ‘독도법령’을 추가하여 천연기념물, 특정도서, 독도의 지속한 보존을 위한 법령을 내용요소로 추가하였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독도교육 내용체계는 이전 내용체계와 달리 10개 분류 항목, 22개 학습내용, 45개 내용요소로 제시되었고, ‘고유영토설’과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내용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⁹⁾

〈표 8〉 2014 초등학교 독도교육 학습내용 및 내용요소

분류	학습내용	초등학교 내용요소
위치	행정구역	독도의 주소
	지리적 위치	지도·지구본·인공위성 지도 등에서 찾아보기, 울릉도와 오키섬으로부터의 거리 비교,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방법
영역	영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영토, 영해
지형	모양과 크기	동도와 서도 외 89개 부속섬 사진 (우산봉, 대한봉, 탕건봉 등)
	지형 형성 과정	화산섬(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비교
기후	기온과 강수	독도의 연중 기온 및 강수량
	안개	안개일수
생태	동물	팽이갈매기, 가재(바다사자)
	식물	사철나무, 해국

9) 김호동, 「우리나라 독도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독도연구』17, 2014, 289-295쪽.

자원	수산자원	해류, 어장
	지하자원	해양심층수, 메탄 하이드레이트
지명의 변천	지명의 유래	독섬(독도), 돌섬(석도)
	독도의 옛 이름	우산도
	독도의 명칭(외국)	다케시마(일)
독도 수호 자료	우리나라의 독도관련 문헌	삼국사기(512), 세종실록지리지(145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울도군수 심홍택보고서(1906),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 1952)
	일본의 독도관련 문헌 (한국영토표기)	태정관 지령과 기죽도약도(1877)
	독도를 지킨 인물들	이사부, 안용복, 독도경비대와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주민들	최종덕 일가, 김성도·김신열 부부, 등대관리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일본의 영유권 주장 내용과 대응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다케시마의 날’ 지정(2005)
영토 주권 수호 노력	시설물	물골, 998계단, 등대, 주민숙소, 독도경비대숙사, 접안시설
	독도법령	천연기념물(제336호, 1982) 지정
	독도지킴이 참여 방안	독도지킴이 활동을 통한 독도 사랑

이처럼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충실하게 반영한 내용요소는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이나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개발,
각 학년별 독도교육 내용의 성취기준과 목표 제시 등 독도교육 내용체
계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각 학년별 및 과목별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과목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집필되어 학생들의 독도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도교육은 사회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독도교육도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 등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내용요소에도 독도의 지명이나 위치·영역·생활·지형·기후·생태·자원 등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독도수호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을 위한 역사자료 등 독도 교과서 학습 내용요소의 대부분이 사회과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독도교육에 있어 사회과와 연계된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독도교재의 내용체계 분석

1)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독도교재의 개요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자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제작된 독도교재는 중요한 교수 및 학습 도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독도교재는 고시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제작된다.

이처럼 독도교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편찬되기 때문에 독도교육 내용체계가 독도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이 교육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독도교육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에 맞게 다양한 측면에서 흥미롭고 심도있게 독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독도 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장 최근에 출판된 경상북도교육청의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바로알기』 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교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표 9〉 독도교재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명		출판 연도	집필진	단원		분량
				대	중	
경상북도 교육청 『독도』	4학년	2019.1	이계숙, 이영록, 이종호 정하진, 이장훈, 조규창 황은주, 김정희, 배현호 김정영, 최인향, 권정화 금류기	2	10	59
	5학년			2	10	67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3~4학년 군	2018.4	김은희, 양재원, 김유현	3	6	51
	5~6학년 군	2017.3	황인영, 김재웅, 한경섭, 이운진, 김지선, 박정현, 강현구, 김은희, 김정희, 김정민, 김조은	5	10	85

〈그림 1〉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작한 교재 『독도』

경상북도교육청 『독도』 4학년	경상북도교육청 『독도』 5학년

먼저, 2009년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09-20호에 의거 경상북도교육감 초등학교 인정도서로 제작된 『독도』는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도교육을 위한 교과용 교재로 개발되었고, 최근 2019년 1월 개정판이 출판되었다<그림 1>.

개정판은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집필진은 총 13명으로 모두 초등학교 교사이다. 교재는 4학년 2단원 10차시, 5학년 2단원 10차시로 총 4단원, 2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별로 단원도입, 학습내용, 단원정리의 체제로 구성된다. 단원도입은 학생들이 독도를 바로 알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단원의 학습문제로 선정하여 관련된 사진이나 삽화, 중요한 내용 등을 제시하며,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학습내용은 단원의 학습문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단원별로 5개씩 제제명을 기술하고 각 제제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동기를 유발한 후 제제에서 학습할 내용인 활동 주제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는 세부활동을 담고 있다. 단원정리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작한 교재 『독도바로알기』

	
<p>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초등학교 3-4학년군</p>	<p>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초등학교 5-6학년군</p>

다음으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수준 독도교육 내용 체계를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전달할 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바로알기』라는 교재를 제작하여 독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일선 학교에 함께 배포하였다 <그림 2>. 이후 개정을 거쳐 최근 2017년 개정판이 출판되었고, 2018년에 기존 『독도바로알기』 교재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을 감안하여 좀 더 쉬운 내용으로 구성한 초등학교 3-4학년 『독도바로알기』 교재를 새롭게 개발했다. 교재의 집필진은 각각 초등학교 3-4학년군 3명, 5-6학년군 11명으로 모두 초등학교 교사이고, 초등학교 3-4학년군은 3단원 6차시, 초등학교 5-6학년군은 5단원 10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는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독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

와주며,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원도입, 주제학습, 활동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 3-4학년군 교재에서 단원도입은 학습주제에 대한 삽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고, 주제학습은 생각열기, 독도바로알기, 독도 함께 알기, 독도에 대해 나누기를 통해 학습하고, 각 학습 주제의 마지막에는 퀴즈를 풀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군 교재에서 단원도입은 만화를 통해 단원의 학습 문제와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고, 주제학습은 각 단원마다 제시된 2개의 학습 주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활동하기는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전체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작한 교재 『독도』

	
<p>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초등학교 3-4학년군</p>	<p>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초등학교 5-6학년군</p>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19년 제4회 독도교육주간을 맞이하여 기존의 『독도바로알기』 교재를 기초로 학생 스스로 독도를 배울 수 있는 『자기주도형 내가 만들어가는 독도』 교재를 개발하였다<그림 3>. 이 교재는 여러 교과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독도를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초등학교 3-4학년군은 독도의 모양과 위치, 독도의 이름과 시설물, 독도의 바위와 동식물, 독도 주변의 바다 생물과 자원, 독도를 지켜주신 분, 독도로 떠나는 여행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5-6학년군은 독도의 위치와 모양, 독도의 동물과 식물, 독도의 자원, 독도의 역사와 인물, 독도의 디오라마로 되어 있다.

2) 독도교재별 내용체계 분석

2015년 개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반영하여 제작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대한 ‘분류’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 교재에 대한 내용체계 ‘분류’ 항목을 보면, 4학년은 영토주권수호노력 12페이지(30%), 위치 8페이지(20%), 지명의 변천 8페이지(20%), 독도수호자료 8페이지(20%), 지형 4페이지(10%) 순이고, 5학년은 영토주권수호노력 12페이지(30%), 독도수호자료 12페이지(30%), 자원 8페이지(20%), 지형 4페이지(10%),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4페이지(10%) 순이다<표 10>. 4학년과 5학년 교재 모두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설물, 독도법령, 독도지킴이 참여 방안 등의 영토주권수호노력에 대한 자료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4학년에서는 독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 지리적 위치 등의 위치와 독도 지명의 유래, 독도의 옛 이름과 명칭(외국)에 대한 지명의 변천에 대한 내용이 높은 비

중을 보이지만 5학년에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 지형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지형이나 일본의 억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독도관련 문헌과 독도를 지킨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독도수호자료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4학년 교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독도의 수산 및 지하자원,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자료 등이 기술되어 있다.

〈표 10〉 경상북도교육청 교재 『독도』의 분류 분석

학 년	대단원	중단원	분량	분류
4	동해에 우뚝 솟은 독도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땅 독도	4	위치
		예로부터 우리 바다인 동해	4	지명의 변천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4	위치
		천연보호구역 독도	4	영토주권 수호노력
		바람과 파도가 빚은 예술 작품	4	지형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	이름으로 만나는 독도	4	지명의 변천
		옛 지도 속에서 만나는 독도	4	독도수호자료
		독도에 사는 사람들	4	독도수호자료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노력	4	영토주권 수호노력
		독도 사랑! 내가 앞장설래요	4	영토주권 수호노력

5	우리의 보물 독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도의 지형	4	지형
		자연이 만들어준 황금어장	4	자원
		미래 자원의 보물창고	4	자원
		독도와 동해를 사랑하는 사람들	4	영토주권 수호노력
		독도의 보존과 개발	4	영토주권 수호노력
	우리 땅 독도의 어제와 오늘	기록으로 만나는 독도	4	독도수호자료
		조선의 독도 사랑	4	독도수호자료
		독도를 향한 일본의 욕심	4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독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	4	독도수호자료
		독도 사랑! 내가 앞장설래요	4	영토주권 수호노력

다음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대한 내용체계 ‘분류’ 항목을 보면, 3-4학년군은 영토주권수호노력 19페이지(58%), 위치 5페이지(15%), 독도수호자료 5페이지(15%), 지형 4페이지(12%) 순이고, 5-6학년군은 독도수호자료 16페이지(34%), 영토주권수호노력 8페이지(17%), 위치 7페이지(15%), 생태 7페이지(15%),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5페이지(11%), 자원 2페이지(4%), 지명의 변천 2페이지(4%) 순이다 <표 11>. 3-4학년 교재는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설물, 독도법령, 독도지킴이 참여 방안 등의 영토주권수호노력에 대한

자료, 5-6학년 교재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독도관련 문헌이나 독도를 지킨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독도수호 자료의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3-4학년에서는 독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 지리적 위치 등의 위치와 독도의 모양과 지형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지형, 독도의 수산 및 지하자원 자료들로만 꾸며져 있고, 5-6학년 교재에서는 3-4학년 교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독도의 경·위도를 나타내는 수리적 위치, 영토·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독도의 영역, 외국에서 불렸던 독도의 명칭, 일본의 억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독도관련 문헌과 독도를 지킨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독도수호자료, 동·식물에 대한 생태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자료)에 대한 지명의 변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11> 동북아역사재단 교재 『독도바로알기』의 분류 분석

학년	대단원	중단원	분량	분류
3-4	두근두근, 독도로 떠나기	독도를 찾아 떠나는 여행	5	위치
		독도에서 만나는 사람들	5	독도수호자료
	구석구석, 독도 살펴보기	바위로 이루어진 섬, 독도	4	지형
		환경, 천연기념물의 가치	6	영토주권 수호노력
	와글와글, 독도와 친해지기	독도 명예 주민 되기	6	영토주권 수호노력
		독도 지킴이로 첫발 내딛기	7	영토주권 수호노력

5-6	독도로 여행을 떠나요	독도의 위치와 모양	4	위치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	3	위치
	독도에서 보물을 찾아요	독도와 독도 주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	7	생태
		독도와 독도 주변 바다의 해양 자원	2	자원
	독도의 역사를 알아 보아요	독도의 옛 이름	2	지명의 변천
		독도의 역사	8	독도수호자료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	8	독도수호자료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단체	2	영토주권 수호노력
	독도를 세계에 바로 알려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	5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독도를 세계에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	6	영토주권 수호노력

3) 독도교재별 내용체계의 세부적 내용요소 분석

2014년 새롭게 수정·보완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반영하여 제작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대한 내용요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재에 내용요소가 반영되었으면 ○, 내용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내용 중에 용어가 언급되거나 일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시하였다<표 12>.

‘위치’의 내용요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5학년 교재를 제외하면 모든 교재에서 자세한 지도 제시와 함께 내용요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5-6학년 교재에서는 수리적 위치의 독도의 경·위도 확인하기라는 중학교 내용요소까지도 기술되어 있다.

‘영역’의 내용요소에서 영토와 영해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내용요소에 해당하다는 통상기선·직선기선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하여 동북아역사재단 5-6학년 교재에서만 다루고 있다.

‘지형’의 학습내용인 모양과 크기, 지형형성과정의 초·중·고등학교 내용요소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 4학년 교재를 제외한 모든 교재에서 독도 최신 사진이나 모식도, 해저지형(해저분지, 해산), 화산분출 삽화, 형성과정에 대한 3D 시뮬레이션 등 자세한 부연설명과 함께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다.

‘기후’의 내용요소는 경상북도교육청 4학년 교재와 동북아역사재단 5-6학년 교재에서 기온과 강수 등에 대한 기술은 있지만 그래프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안개일수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교재에 언급되고 있지 않다.

‘생태’의 내용요소는 경상북도교육청 4학년과 동북아역사재단 5-6학년 교재에서 다양한 독도의 동·식물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면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5학년 교재는 가제(바다사자)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자원’의 내용요소도 대부분의 교재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만, 경상북도교육청 4학년 교재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 동북아역사재단 3-4학년 교재에서는 해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지명의 변천’의 학습내용 중 지명의 유래에 대한 내용은 비중있게 제시하고 있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의 5학년 교재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5-6학년 교재를 제외한 다른 교재에서는 독도의 명칭(외국)인 다케시마(일)에 대한 내용이 없다.

‘독도수호자료’에서 초등학교 수준에서 어려울 수 있는 역사적 지식이 필요한 사료관련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교재인 경상북도교육청 5학년 교재와 동북아역사재단 5-6학년 교재에서 그림이나 삽화, 사진 등을 제시하며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역사재단 3-4학년 교재는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5-6학년 교재는 거의 모든 내용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용요소에 해당하는 조선전도(1846)와 해좌전도(19c중), 삼국점양도(1785)가 경상북도교육청 4학년 교재에 언급되고 있고, 중·고등학교 내용요소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은주시청합기(1667) 등의 우리나라 및 일본의 독도관련 문헌(한국영토표기) 등이 동북아역사재단 5-6학년 교재에 기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독도주민들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재에서 내용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부분에서 고학년 교재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 5학년 교재와 동북아역사재단 5-6학년 교재에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와 ‘다케시마의 날’ 지정(2005)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내용요소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677호(1946)를 설명하고 있다.

‘영토주권수호노력’의 대부분 내용요소를 모든 교재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편이며, 특히 동북아역사재단 3-4학년군 교재는 유일하게 서도 998계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언급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내용요소인 특정도서(제1호) 지정(2000)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표 12〉 경상북도교육청 교재와 동북아역사재단 교재의 학습내용 및 내용요소 분석
(진한글자는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분류	학습내용	내용요소	경상북도 교육청		동북아 역사재단	
			4	5	3-4	5-6
위치	행정구역	독도의 주소	○		○	○
	지리적 위치	지도, 지구본, 인공위성 지도 등에서 찾아보기	○	○	○	○
		울릉도와 오키섬으로부터의 거리 비교	○		○	○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	○		○	○
		독도와 한반도 본토의 관계				
		독도와 한국, 독도와 일본의 관계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방법	○		○	○
영역	수리적 위치	독도의 경·위도 확인하기				○
	영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영토				○
		영해		△		○
		통상기선·직선기선				
지형	모양과 크기	배타적 경제수역(EEZ)				○
		동도와 서도 외 89개 부속섬 사진 (우산봉, 대한봉, 탕건봉 등)	○	○	○	○
		사진(위성사진 포함), 모식도 등을 통한 모양 파악	○	○	○	○
	지형 형성 과정	해저지형(해저분지, 해산)		○	○	○
		화산섬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비교		○	○	○
		모식도, 3D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형성과정 이해		○	○	○
		독도 지질의 특성				
기후	기온과 강수	독도의 연중 기온 및 강수	○			○
		독도의 연중 기온·강수 그래프 비교				

	안개	안개일수				
		독도 가시일수				
생태	동물	팽이갈매기	○		○	○
		가재(바다사자)		○		○
	식물	사철나무	○			○
		해국	○		○	○
		식물 약 50-60종	○			
자원	수산자원	해류		○		○
		어장		○	△	○
	지하자원	해양심층수		○	○	○
		메탄 하이드레이트		○	○	○
지명 의 변천	지명의 유래	독섬(독도)	○		○	○
		돌섬(석도)	○		○	○
	독도의 옛 이름	우산도	○	○		○
		자산도				
		삼봉도				
		가지도				
	독도의 명칭 (외국)	리앙쿠르(프)				○
		올리부차, 메넬라이(러)				
		호넷 암(영)				
		다케시마(일)		△		○
		마쓰시마(일)				
		량코도(일)				
독도 수호 자료	우리나라의 독도관련 문헌	삼국사기(512)		○		○
		세종실록지리지(1454)	○	○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
		속증실록(169)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				
		수토관 기록				
		정상기의 동국전도(18c초)				
		동국문헌비고(1770)				○
		조선전도(1846)	○			

		해좌전도(19c중)	○			
		이규원 검찰사 울릉도 개발 건의(1882)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	○		○
		울도군수 심홍택보고서(1906)	△	△		△
		이명래 보고서(1906)		○		
		참정대신 박제순 지령 3호(1906)		○		
		남조선과도정부·조선산악회 독도조서(1947)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 1952)				○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견해				
	일본의 독도관련 문헌 (한국 영토 표기)	은주시청합기(1667)				○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번 답변서(1696)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				
		삼국접양도(1785)	○			○
		죽도 도해일건기(1836)				
		조선죽도도항시말기(1870)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
		조선동해안도(1876)				○
		태정관 지령과 기죽도약도(1877)	○			○
		일본영역도(1952)				
		총리부령 24호(1960)				
		대장성령 4호(1968)				
	독도를 지킨 인물들	이사부		○		○
		안용복		○		○
		독도경비대와 독도의용수비대	○	○	○	○
	독도	최종덕 일가			○	○

	주민들	제주해녀들				
		김성도·김신열 부부			○	○
		등대관리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	○	○	○
일본 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		○
		‘다케시마의 날’ 지정(2005)		○		○
		카이로선언(1943)				
		포츠담선언(1945)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677호(1946)		○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일본 중학교 독도교육 현황				
		일본 고등학교 독도교육 현황				
영토 주권 수호 노력	시설물	일본 정부의 ‘독도 홍보 동영상’과 ‘정부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대응				
		물골	○	○	○	○
		998계단			○	
		등대	○	○	○	○
		주민숙소	○	○	○	○
		독도경비대 숙소	○	○	○	○
	독도법령	접안시설	○	○	○	○
		천연기념물(제336호) 지정	△		○	○
		특정도서(제1호) 지정(2000)				○
	독도지킴이 참여 방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		○
		독도지킴이 활동을 통한 독도 사랑	○	○	△	○

4. 요약 및 결론

일본이 2008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면서 교육분야에서 영토도발을 시도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며 본격적으로 독도교육의 체계적인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독도교육을 10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여러 교과에 공통적으로 연관시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교육 활동에 이용하는 다양한 교수 및 학습 도구 중에 독도교재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의 독도교육 내용체계가 이들 독도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적절한 수준에 맞춰 흥미롭고 심도있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10가지 분류 항목은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생태, 자원, 지명의 변천, 독도수호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영토주권수호노력이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10개의 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속적인 독도교육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각 각 다루어져야 할 분류 항목의 분량과 난이도가 적절하게 구분되거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요소를 무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가 초등학교에서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교재는 교육부의 독도교육 교육과정과 내용체계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초등학교 수준에서 제시되는 분류항목에 대한 학습내용과 내용 요소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독도교육의 내용요소가 너무 많아 한정된 지면으로 제작되는 교재에 모두 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내용요소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저학년 교재와 고학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요소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기술한 분류 항목의 분량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독도교재에서 저학년 교재는 독도에 대한 위치, 지형, 기후 등의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기술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학년 교재는 독도수호 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영토주권수호노력 등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근거들에 대한 자료 위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요소들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진(위성사진 포함)이나 모식도 등을 통한 모양 파악, 해저지형(해저분지, 해산), 3D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형성과정 이해, 삼국점양도(1785),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677호(194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등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도 신경써야한다. 만약 독도교육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고 많은 내용을 교육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는 교재 집필진들이 내용요소를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교재가 집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학생활동 중심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도교육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은 초등학교 수준

에 맞게 기술하고 이와 함께 독도의 자연, 사료, 동·식물 등의 스티커 붙이기, 독도십자말풀기, 독도보드게임, 독도책갈피 만들기 등 독도관련 체험·활동을 돕는 학생 참여 중심의 독도교재 개발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 「독도교육 기본계획」, 강원도교육청, 2019.
- 경상북도교육청, 「독도·4학년」, 경상북도교육청, 2019.
- _____, 「독도·5학년」, 경상북도교육청, 2019.
- _____, 「독도교육 기본계획」, 경상북도교육청, 2019.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초등학교」, 교육부, 2016.
- _____, 「별책2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2018.
- _____,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8.
- _____, 「독도교육 기본계획」, 교육부, 2018.
- 김소용·남상준, 「영토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독도교육을 사례로」, 『초등교과교육연구』21, 2015.
- 김수희, 「초·중·고 역사교과서에서의 독도 기술과 방향성 검토」, 『역사교육논집』51, 2013.
- 김태우, 「초등학생의 영토 인식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23, 2015.
- 김혜진·서태열, 「초등학교 실천적 독도교육 방향 모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9, 2019.
- 김호동, 「우리나라 독도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독도연구』17, 2014.
- 김희선,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초등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기본계획」, 대구광역시교육청, 2019.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바로 알기-5~6학년군」, 동북아역사재단, 2017.
- _____, 「독도 바로 알기-3~4학년군」, 동북아역사재단, 2018.
- 문상명, 「초등 사회과 교과서 독도 서술의 변천 연구」, 『사회과교육』57, 2018.
- 박경근·전기석·신재열, 「중학생들의 독도(Dokdo) 인식 및 바람직한 독도교육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21, 2016.
- 박진숙,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독도교육을 중심으로」, 『독도연구』8, 2010.
-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기본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 석병배, 「영토교육으로서의 초등학교 독도교육 탐색-한 일간 미래 지향적 과제로서 초등학생들의 독도교육 방향 모색」, 『사회과수업연구』4, 2016.

- 신동호, 「초등학교 독도 교과서 내용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 신동호·남상준, 「초등학교 독도 교과서 내용분석」, 『초등교과교육연구』19, 2014.
- 심정보,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활동 분석」, 『독도연구』24, 2018,
- _____, 「일본이 부정하는 한국의 독도교육」, 『독도연구』26, 2019,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바람직한 독도 교육의 방안」,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1
- 이우진,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나타난 초등학교 독도 기술의 변화」,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60, 2014.
- 전라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기본계획」, 전라북도교육청, 2019.

<Abstract>

Review of Korea's Dokdo Education Policy and Dokdo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s

Jeon, Ki-seok · Park, Kyung-geun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Dokdo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We analyzed how the Dokdo educational content system is reflected in textbooks important for Dokdo learning. Through thi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Dokdo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were grasped, and future-oriented measures to conduct interesting and in-depth Dokdo education at appropriate levels were sought.

The 10 categories of the system of Dokdo Education contents are location, territory, topography, climate, ecology, resources, geographical name changes, Dokdo guardian data, Japan's territorial claims, and responses, and Efforts to protect territorial sovereignty. However, when looking at the classification items covered in the textbooks of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ll of the 10 categories are not described. Also in the continuous Dokdo education, it seems that the amount and difficulty of classification items to be dealt within each of the lower and upper grades are not properly classified or systematically organiz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divided, and the suggested content elements are ignored. In elementary school, the content elements to be addresse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are being described.

Currently, the system of Dokdo education contents that reflect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in front-line schools and has been pursuing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relatively well. In particular, as the education centered on student activities is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is pursuing changes so that various learning opportunities centered on experience and activities can be guaranteed.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are writte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nd along with these, Dokdo's nature, Dokdo's historical records, stickers on animals and plants of Dokdo, Dokdo crosswords, Dokdo board games, and Dokdo bookmarks are created to help Dokdo-related experiences and activities. The development of Dokdo textbooks focusing on student participation is also required.

Key words: Dokdo educatio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Pan-textual Learning Topics, Dokdo textbook, System of Dokdo education contents,

이 논문은	2020년 5월 1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

우리나라 중학교 독도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박 재 흥*

〈목 차〉

- I. 머리말
- II.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 체계
- III.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독도교육 추진 내용
- IV. 중학교 독도교육의 현황
- V. 중학교 독도교육의 과제
- VI. 맺음말

〈국문초록〉

독도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다가 광복 후 다시 되찾은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학습 지도 요령’과 그에 따른 교과서 등을 발간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중심이 된 소위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노골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 우익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현장의 독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독도가 단순히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과거사 극복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독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를 되짚어

* 성광중학교 교사

보는 작업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해결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길러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구성과 체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독도교육 정책에 따라 실제 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독도교육의 과제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역사관과 영토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주제어: 독도, 영유권, 교육, 중학교, 교과서

1. 머리말

최근 독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일본의 독단적인 처사로 한일관계가 계속 소원해지고 있다. 잇을 만하면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은 양 국민 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특히 독도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일 양국의 정치적 신뢰 구축과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노골적인 독도영유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독도가 단순히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과거사 극복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중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김영수(2013)¹⁾, 한철호(2012)²⁾, 송호열(2013)³⁾, 이상분(2014)⁴⁾, 박경근·전기석·

1) 김영수,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독도 관련 교육과정과 주요내용 분

신재열(2016)⁵⁾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역사, 사회 교과서의 독도 기술에 대해 분석하거나(김영수, 한철호), 부교재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이상분), 혹은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검토(김영수)하고 있다. 또한 박경근·전기석·신재열의 연구에서는 독도교육 내용체계와 관련하여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기술과 교육 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학교교육 현장의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학교 독도교육의 현황을 교육현장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중학교 교육현장에서 독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는 작업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해결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길러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구성과 체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독도교육 정책에 따라 실제 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독도교육의 과제와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석], 『사회과교육』Vol.52 No.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3.

- 2) 한철호, 「한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서술 경향과 과제」, 『영토해양연구』 No.3, 동북아역사재단, 2012.
- 3) 송호열, 「중학교 사회2 교과서의 독도(獨島) 중단원 비교 분석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지학회지』Vol.23 No.4, 한국사지리지학회, 2013.
- 4) 이상분, 「중학교에서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도교육 방안 -부교재 "영원한 우리 땅 독도" 활용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Vol.52, 역사교육학회, 2014.
- 5) 박경근·전기석·신재열, 「중학생들의 독도 인식 및 바람직한 독도교육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제2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II.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체계

현재 중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의 독도교육은 3학년을 대상으로 2011년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집필된 6종의 <사회②> 교과서와 9종의 <역사②>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⁶⁾ <사회②> 6종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공통적으로 대단원 지리영역인 <VI. 우리나라의 영토>, 일반사회 영역인 <VIII.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단원으로 구분되어 비교적 비중 있게 배정되어 기술되고 있다. 전체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단원의 분량은 VI단원은 독도의 위치와 영역, 독도의 자연 및 인문환경, 독도의 가치 등에 관한 내용이 6쪽 이내로 기술되어 있으나 VIII단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내용이 1쪽 이내로 기술되어 있어 비중이 크지는 않다.

<역사②> 9종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공통적으로 <I.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III. 대한민국의 발전>단원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I 단원은 ‘일제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강제로 편입한 것은 침략 행위였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III단원은 ‘다양한 자료로 정당성을 파악한다, 일본 역사 왜곡 실태를 파악한다, 역사 왜곡의 배경과 문제점을 탐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즉, I 단원에

6) 현재 중학교 1,2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 3학년은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각각 1년 유예되어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중, 고등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학교급	2018	2019	2020	
			일반 교과	역사, 한국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서는 이해, Ⅲ단원에서는 탐구가 중심이 된다.⁷⁾ 전체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단원의 분량은 I 단원, Ⅲ단원 모두 1~2쪽 이내,로 기술되어 있어 비중이 크지는 않다.

현재 중학교의 독도교육은 대체로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역사적 접근’에만 집중되어 있다. <사회②>, <역사②>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체계

교과	영역	성취기준	단원명	검인정 교과서	독도관련 단원 분량	수업 시수
사회 ②	지리	사91133. 우리 국토에서 독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영역·경제·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VI. 우리나라의 영토 2.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 1)독도는 어떤 섬일까? 2)다양한 가치를 가진 독도	6종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신사고, 지학사, 천재교과서)	전체 280~318쪽 중 6쪽 이내	주 2시간
	일반 사회	사92133.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예: 독도 문제, 동북공정)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VIII.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2-3. 우리나라의 국제갈등과 해결방안은?		전체 280~318쪽 중 1쪽	
역사 ②	근대	역9215.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특히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I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수호운동 3. 일제의 국권침탈과 국권수호운동의 전개	9종 (교학사,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신사고, 지학사,	전체 218~248쪽 중 2쪽 이내	주 2시간

7) 이서영, 이상균,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분석」, 『독도연구』, 2018.

	현대	역9234.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Ⅲ. 대한민국의 발전 4. 동아시아의 갈등과 평화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전체 218~248쪽 중 2쪽 이내	
--	----	--	--------------------------------	-----------------	------------------------------	--

Ⅲ.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독도교육 추진 내용

우리 정부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10년 4월 30일, 교육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독도교육을 위해 ‘독도교육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하여 2010년 5월 12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하여 「사회과 교육과정해설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기술’을 「사회과 교육과정」에 상향시켜 명기하였다.⁸⁾ 이후 2011년 8월 9일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독도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 즉 ‘국가·사회적 요구와 수요자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고 강조하여 지도해야 할 교육내용’의 하나로 선정하였고⁹⁾, 더불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독도 관련 기술’을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일본의 독도 교육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 체계」를 다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독도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교원 중심의 독도교육실천연구회

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2010.5.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8.9.),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독도관련 연수 및 독도탐방교육 등의 독도교육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년 4월 중 독도교육주간을 선정하여 일선 초·중·고교에서 1시간 이상의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지역 사회에 살아있는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독도 체험(전시)관을, 2018년부터는 지역 간 독도체험 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어촌 등 체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이동식 독도체험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등 국가차원에서 독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수립된 독도교육 정책의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부의 독도교육 정책 추진 경과

- ‘독도교육’을 강화한 중·고 역사교육과정 개정(‘10.5.)
 - 초등학교‘사회’, 중학교‘사회’·‘역사’, 고등학교‘한국지리’·‘한국사’·‘동아시아사’ 과목에 독도 교육 내용 강화
 - 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독도관련 내용 기술 : 역사(중 3), ‘한국사’(고 1) 과목 각각 2개 영역에서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부당성 및 ‘독도’ 관련 영토문제 탐구 등 기술
- 2009 개정교육과정 內 독도교육 내용 강화(‘11.8.)
- 독도교육 내용 체계 수정·보완(‘14.5.)
 - 학생 발달 단계와 학교 급별 위계를 고려한 독도 내용체계 기술
- 2015 개정교육과정 內 범교과학습 주제*에 독도교육 포함(‘15.9.)
 - 2009 개정교육과정의 39개 주제를 10개 주제로 범주화하여 학교교육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시
 -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급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운영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독도교육 운영 권장(‘14년~)
 -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 안내’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연중 10시간 내외의 독도교육 운영 권장(교육부 → 시·도교육청)

○ **‘독도교육 강화방안’ 계획 수립 및 운영**

- 매년 **‘독도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11년~)

※ 학생 체험활동 지원, 교원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체험시설 구축 등 포함

- **‘독도교육주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16년~, 매년 4월)

○ 지역 사회에 살아있는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12년부터 독도체험 (전시)관을 구축·운영**

※ (‘12)서울 / (‘14)경남, 충북, 전북 / (‘15)대전, 인천, 경기, 전남 / (‘16)대구, 광주 / (‘17)세종, 경북/ (‘18)충남

○ 지역 간 독도체험 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어촌 등 체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이동식 독도체험시설 독도체험 버스 구축·운영 (‘18년~)

※ (‘18년) 충북교육청 선정·지원

○ **(교원 역량 강화)** 현장교사 중심의 자발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 및 초·중등 교원 대상 집합·탐방연수, 온라인 연수 실시로 교원의 실천적 독도교육 전문성 강화

*전국 20~30개 연구회 선정 및 연구회별 300만원 지원

○ **(학생체험 활동 지원) 독도 체험 발표대회* 및 독도지킴이 학교 운영** 등 학생 독도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독도 수호 실천의지 제고**

* ‘생활 속 독도사랑’ 실천 내용을 공유, 전국 중·고교 181개 동아리(812명) 참가, 청소년 독도 체험활동(‘18.5.~8.)→지역예선(‘18.8.~9.)→전국본선 및 시상식(‘18.10.)

** (2018년) 초·중·고 90개교 선정, 발대식(‘18.4.)→독도 탐방(‘18.8.)→성과발표회 및 시상식(‘18.12.)

(2019년) 초 : 30개교, 중 : 50개교, 고 : 40개교(총 120개교)

○ **(독도교육 연구학교 운영) 체험·활동 중심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적 독도교육 일반화 방안 마련 (‘19년)

※ (3개 교육청 지원) 경기, 충남, 경북

○ **(독도사랑 인문콘서트 운영)** 인문콘서트를 통해 독도의 역사적 배경 및 다양한 생태계를 알람으로서 독도에 대한 사랑 및 환경의식 고취(‘19년, 초·중·고 각 33개교)

이러한 교육부의 독도교육 정책에 발맞추어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대구시내 교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연구회(교원 10명 기준)를 운영하여 독도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초·중·고 10~15개 팀을 선정하여 연구회별 500만원을 지원하여 연구회 소속 교원 전원이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개설한 독도 교원 연수를 필수로 이수하고, 연구회별 자체로 독도 탐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경북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관별 산재한 독도 콘텐츠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처할 수 있는 민간외교관 양성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지킴이 동아리를 도내 초·중·고 140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독도 체험 탐방단을 운영하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Ⅳ. 중학교 독도교육의 현황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독도교육 강화 정책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다양한 독도 부교재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역사교육강화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독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안전교육, 다문화, 인성교육, 교실수업개신 등 크고 작은 교육현안과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만을 집중해서 전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도교육은 사회과나 역사과가 중심이 되어 교과수업시간에 교과서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하여 학생들에

게 전달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행사, 동아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물론 독도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교는 독도를 주제로 다양한 교과수업과 함께 동아리활동, 독도관련 대회 주관이나 참가를 통해 독도교육의 영역을 넓히고 학교단위에서 독도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간 계획과 학년별 연계성, 학교급별 위계성을 가지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속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표자가 수행한 독도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독도교육의 개요

대구지역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타 지역보다 한·일간의 독도, 일본군‘위안부’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 일단 대구사람들이 동일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직접 독도를 관할하고 있어 학생들이 지리적으로 독도를 가깝게 인식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인 이용수(91) 할머니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시민, 학생들과 함께 적극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개관되어 학생들이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구 중구 근대 골목은 일제의 침략으로 변화된 대구의 모습

과 대구사람들의 삶을 전체 역사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탐방의 장소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발표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특수성도 독도교육을 전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사립 남자 중·고 병설학교로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교무실이 교과연구실 체제로 편제되어 있어 교과 내, 교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찍부터 중·고 6년 교육과정을 2년씩 3개 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중·고 통합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또한 본인이 부장교사로서 교육경력과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국·공립학교에 비해 학교차원에서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려 발표자는 다른 일반 중학교에서의 독도교육과 마찬가지로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독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학교급별 독도교육을 실천하고 학교급간 독도교육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중·고 인문사회과 연합으로 ‘성광독도사랑연구회’를 결성하여 교육부가 주관한 독도교육실천연구회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도교육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성광중학교 독도교육 현황

교과수업 과 연계한 독도교육	정규 수업	[1학년]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프로그램 운영(16차시) [3학년] · <사회②>, <역사②> 수업시간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 과제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융합 독도수업
	방과 후 학교	· 대상: 2학년 · 차시: 16차시(주2회 8주) · 주제: Fun Fun한 역사읽기와 오감이 즐거운 스토리텔링 한일관계사

체험학습과 연계한 독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명: 나라사랑 독도사랑 리더쉽 캠프(독도탐방)· 대상: 전교생 80명· 장소: 울릉도 및 독도
창의적 체험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독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체험 동아리활동(반일제, 전일제)· 독도관련 행사 개최 및 대회 참가(학교축제 시 독도페스티벌 등)· 나라사랑 독도사랑 캠페인(수시), 지역의 독도관련 단체 방문(반·전일제)· 교내 축제시 독도 부스 운영 및 활동 결과물 전시회· 지역의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과 연대활동 (영남대독도연구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등)

2. 독도교육의 내용

교과수업과 연계한 독도 수업실천

- 목적 : 학생활동중심 수업실천을 통해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 올바른 국토관·국가관 정립
- 수업실천 사례

■ 1학년 - 자유학기제 / 2학년 - 방과 후 보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수업시수 (주당)
1학년	독도야 놀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면서 주권 수호의지를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체험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내면화한다.	16(2)
2학년	Fun Fun한 역사읽기와 오감이 즐거운 스토리텔링 한일관계사		16(2)

성취기준		성취수준
역9215.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상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할 수 있고, 각 산출물을 제작하여 독도의 중요성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설명하고 발전적인 산출물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중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각 산출물을 제작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간단한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독도와 관련되어 생각나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2	독도의 위치와 영역, 자연 환경과 가치	독도의 형성, 독도의 지형, 독도의 기후, 독도 생태계(동, 식물)의 특징, 독도 생태계(어류)의 특징, 독도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3	고문헌 및 근대 이후 자료에 나타난 우리 영토로서의 독도	삼국시대~조선 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를 모듬별로 정리하고, 근대 이후 독도가 수록된 자료에 대한 사료학습을 한다.
4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조선 전기 지도와 조선 후기 지도, 서양 고지에 나타난 독도를 확인한다.
5-6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독도가 한반도에 편입된 역사와 근대 이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업적,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성격을 찾아본다.
7	일본 고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일본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8~9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내용(일본 외무성의 왜곡된 10가지 주장)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반박문을 쓰고 발표한다.
10~11	독도 모형 만들기	독도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 모형을 만들고, 독도 모형에 나타난 독도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11~12	독도신문 만들기	동북아역사재단의 『중학생 독도 교수 학습 과정안 및 학습지 (독도 부교재 활용)』를 활용하여 독도신문을 제작한다.
13~14	북아트로 배우는 우리 영토 ‘독도’	학생들 스스로 자르고 붙이는 재미있는 체험제작활동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와 독도의 역사, 가치, 자연 등을 학습하고 독도사랑 의식을 함양한다
14~16	독도사랑 홍보물 만들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확고한 근거와 신념을 심어주고 독도의 소중함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한다.

■ 3학년 - <사회②>, <역사②> 수업시간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 과제

2019 1학기 수능평가 과제 과제 계획서(3학년 변 모듬용 :)			
오 동 변	1	학인.환.번호	이름
	2	교과 [email] 주소	연락처
	3	학인.환.번호	이 름
	4	학인.환.번호	이 름
	5	학인.환.번호	이 름
과제명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알리는 독도 홍보물을 제작하여 객관적 논리적으로 발표하기	
홍보자료 형태		영문() 역사신문() UCC() 다국어라디오() CF광고() 웹툰() 블로그를 이용한 알림란() PPT() 기타()	
홍보 자료 선정할 이유			
어떻게 만들것인가? (홍보물 제작 시나리오)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이름		역할	평가 (관람/음료수)
과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동변 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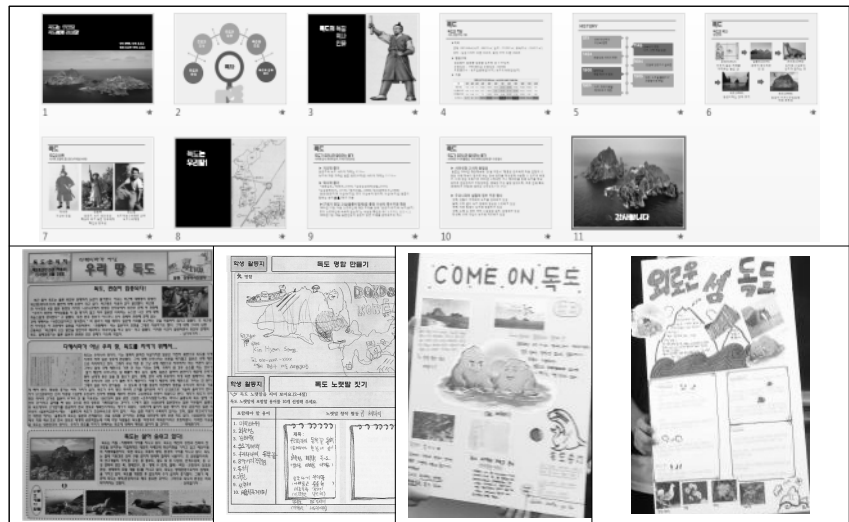
[illegible]

■ 3학년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융합 독도수업

교과목	국어	과학	수학	역사	사회	영어	가정
설리기준	2008 대체지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비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48025 여러 가지 생 물들을 분류하고, 특 성과 기능에 따라 다 양하게 분류할 수 있 다.	59502 삼각 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8004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주변 국가 와의 역사 갈등을 고려하여 적 당히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입 장 설정을 할 수 있다.	59020 우리나라가 지 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를 독도 문제 등 주요 갈등을 파악하고, 이 를 설명할 수 있다.	480254 일일생 활이나 친숙한 일 반적 주제에 관한 상황, 그림, 도표 등의 자료를 설명 할 수 있다.	기원전532 전쟁과 관 계를 생각하는 지 식 가능한 주제를 양 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단원	3. 교과적인 읽기와 쓰기	6. 육지와 진화	6. 삼각비	3. 대한민국의 발전	2. 국제 사회의 경쟁과 갈등 및 평화	8. Product Placement	3. 지속가능한 주생활
수업 내용 및 방법	대체의 특성 을 알고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 여 '독도'에 대 해 효과적으로 다양한 글쓰기	독도의 다양한 생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류 하여 발표하기	독도의 해발고도 를 삼각비 이용하여 구하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구 체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 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 권 주장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발표하기.	독도 문제 관련 우리나라 대응방 침, 일본의 전략 미국의 태도 등 발표하기	독도에 관한 영 어 광고를 제작 하여 친구들에 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독도가 주권경 으로 적합한지 알아보기
수업 시기	11월 1주 (2차시)	11월 1주 (2차시)	10월 5주 (2차시)	10월 5주 (2차시)	10월 5주 (2차시)	10월 5주 (1차시)	10월 5주 (2차시)
수업 결과물	대체의 특성을 고 려한 '독도' 관 련 글쓰기 활동지	독도 생물지도 및 티셔츠	독도 섬 높이 구하기	독도민화그리기 독도활동관 제작	독도 분형에 대한 학생활동지	독도 영어광고 운동권	독도 주권모형
평가 방법 및 내용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	수행평가
통합 활동	세계 각국에 우리 땅 독도 소개 활동(영어, 트위터 등)						

수업실천 결과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독도교육

○ 창의적 체험 동아리활동(반일제)

독도티셔츠 만들기	독도 독서대 만들기	한중일 역사분쟁 입체북 제작
		
한지를 활용한 독도 전통책 만들기	제3회 창의체험동아리축제참가	영남대 독도연구소 탐방
		

○ 독도관련 행사 개최 및 대회 참가

행사명	교내 독도사랑 글짓기 및 나라 (독도)사랑 글짓기 국제 대회 참가	나라사랑 독도사랑 골든벨	교내 디베이트 대회
일시 및 대상	매년 4월/전교생	매년 10월/전교생	매년 12월/전교생

○ 학교축제와 연계한 독도 교육 활동

 <p>독도자료전시회</p>	 <p>교과융합 독도수업 결과물 전시</p>	 <p>독도티셔츠 전시회</p>
 <p>독도사랑 골든벨</p>	 <p>독도 스피드 퀴즈</p>	 <p>독도 사물놀이 공연</p>

V. 중학교 독도교육의 과제

○ 중학교 교육과정 및 연간 학교교육계획을 고려하여 독도교육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독도교육은 담당교사의 의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교와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서 대부분 교과와 교과외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교과외 시간을 활용한 독도교육은 캠페인, 대회 개최, 문예 행사, 체험학습 등 단위 학교의 상황과 교육대상,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실에서의 독도수업은 생각만큼 녹록치가 않다. 교과수업의 경우, 학년별 교육과정에 맞게 1학년은 자유학기제, 2학년은 방과후 보충, 3학년은 <사회②>, <역사②> 수업시간과 과정중심 수행평가 과제로 하거나 타 교과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독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교육과정에 편성된 수업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방과후 보충은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학력신장과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강좌와 내용은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에 대한 상당한 강화와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독도 교육’이 「사회과 교육과정」과 ‘역사적 접근’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규수업 시수 또한 현재 2009개정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어 정규수업 시간에 독도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역사, 지리, 사회, 도덕,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과 시수 내에 연간 10시간 독도교육을 편성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방송실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독도 관련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과 교사와 타 교과와의 소통을 통해 독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이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부 교과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연간 교육활동 안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중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제안한다. 교과영역에서는 첫째, <사회②>, <역사②> 교과 공통으로 과정중심 수행평가로 학생들에게 모둠별로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독도의 가치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을 찾아보게 하면서 독도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학교 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이후와 마찬가지로 11월 초·중순에 실시되는 2학기 기말고사가 종료되면 고입과 관련한 성적산출이 마무리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통해 2학기 기말고사 이후 3학년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바로 이 시기에 독도를 비롯한 한일관계사를 주제로 특별수업을 실시한다면 10시간 의무교육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수업시간에 담아내지 못한 독도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을 학생들과 편하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현재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연간 10시간 독도교육을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와 연계한 독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맥락 있고 밀도 있는 독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교과의 영역으로는 학교단위에서 독도동아리를 조직하게 하고, 학교 축제때 독도관련 부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학교교육계획에 명시하게 한다면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독도교육이 학교교육계획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중학교 사회·역사 등 관련 교과서가 독도에 대한 객관적 사실

을 담고는 있지만 조금씩 피상적으로 다루면서 독도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의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는지를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사회②> 6종 교과서에는 지리영역인 <VI. 우리나라의 영토>에 독도의 위치와 영역, 독도의 자연 및人文 환경, 독도의 가치 등에 관한 내용이, 일반사회 영역인 <Ⅷ.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역사②> 9종 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Ⅰ.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Ⅲ. 대한민국의 발전>단원에서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과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교과 고유의 내용체계와 범위를 넘어서서 독도 단원을 설정하여 교과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독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물리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독도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내용으로 독도를 가르칠까라는 점이다**. 현재 독도수업실천사례를 보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는 다르게 대부분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과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독도에 대한 주권과 영토의식 함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근대 제국주의 질서하에서 일본이 당시의 영토나 해양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자기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당시에는 바다, 해양주권, 어업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일본이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할 때도 대한제국은 이에 대해 정당한 항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당시에 우리나라와 맺은 모든 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고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나 ‘태정관 지령’ 등 일본측의 자료에

서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일본이 합법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하면 논리적,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에게 유리한 주장만 가르치고 있을 뿐 불리한 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은 ‘독도문제=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라는 전제하에 ‘독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 땅’이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독도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하기 보다는 일본은 억지 주장만을 일삼고 있는 나쁜 나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웃 나라라는 인식을 키우고 있다. 이렇다보니 독도는 소유권만이 문제가 되는 동해바다에 떨어진 하나의 사물로 인식돼 독도 수호 의지도 자신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교육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의도나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논리 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대응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 교육부의 역할만큼이나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교육부의 독도교육 정책에 따라 시도교육청도 매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로 배부하고 있으나 정책 목표 및 세부 추진방향 역시 중앙 교육부와 유사하게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정책 제안이 많은 편이라 학교현장에서 크게 참고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역의 독도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독도교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의 독도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로 독도관련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면 한다.

Ⅵ. 맺음말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구성과 체계를 살펴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독도교육 정책에 따라 실제 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표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사례로 검토한 후 독도교육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독도교육은 단위 학교별 연간 교육활동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업시수 부족에 따른 교과진도와 진학을 이유로 교과서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행사, 독도탐방 등 일회성 활동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속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본 발표자의 독도교육 사례가 전국의 모든 중학교의 독도교육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본교보다 더욱 활발하게 독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독도교육만을 실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다.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독도교육에서 한걸음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 급별 독도교육을 실천하고, 학교급간 독도교육이 연계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독도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수업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독도관련 정책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2010.5.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09),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 체계」, 2014.
_____, 2019년 독도교육 기본 계획, 2019.
경상북도교육청, 2019년 독도교육 기본 계획, 2019.
대구광역시교육청, 2019년 독도교육 기본 계획, 2019.

[논문]

- 권영배, 「중등학교 사회과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36, 2006.
김영수,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독도 관련 교육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사회과교육』52, 2013.
김호동, 「교육과정과 해설서의 독도기술과 학교급별 체계적 독도교육의 방안 모색」, 『역사교육논집』51, 2013.
_____, 「우리나라 독도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독도연구』17, 2014.
박경근·전기석·신재열, 「중학생들의 독도 인식 및 바람직한 독도교육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제2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박지영, 「일본 중학교 독도교육의 실태 -교과서 기술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독도연구』제26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
송호열, 「중학교 사회2 교과서의 독도(獨島) 중단원 비교 분석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Vol.23 No.4, 한국사진지리학회, 2013.
이상분, 「중학교에서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도교육 방안 - 부교재 "영원한 우리 땅 독도" 활용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51, 2013.
이서영·이상균,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분석」, 『독도연구』24, 2018.
이우진, 「독도 교육'의 측면에서 본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교일본학』40, 2017.
주혜영, 「영토분쟁문제에 대한 중학교 역사 수업 방안 연구 : 독도교육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한철호, 「한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서술 경향과 과제」, 『영토해양연구』No.3, 동북아역사재단, 2012.

[교과서]

- 주진오 외 13명, 『중학교 역사②』, 천재교육, 2012.
조한욱 외 10명, 『중학교 역사②』, 비상교육, 2013.
양호환 외 7인, 『중학교 역사②』, 교학사, 2012.
김형중 외 12인, 『중학교 역사②』, 금성출판사, 2012.
이문기 외 19인, 『중학교 역사②』, 두산동아, 2012.
김덕수 외 13인, 『중학교 역사②』, 천재교과서, 2012.
정선영 외 8인, 『중학교 역사②』, 미래엔, 2012.
정재정 외 10인, 『중학교 역사②』, 지학사, 2012.

<Abstrac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n Middle School Dokdo Education

Park, Jae-Hong

Dokdo is our own territory that was captured by Japan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nd reclaimed after independence. However, Japan continues to insist on sovereignty over Dokdo by publishing “Takeshima-Day” and publishing “Teaching Instructions” that marke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and textbooks. In addition, recently, even in Korea, the authors of the so-called <Anti-Japanese Religion> led by professors of famous universities have been blatantly claiming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Even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this false claim to Japan's claim to Dokdo and the misrecognition of history by some intellectuals in Korea, who are embracing the logic of the Japanese right-wing, Dokdo education at the school site is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ducate teenagers who will lead the future society that Dokdo is not just a sovereignty issue, but a matter of past history in Korea and Japan.

In this sense, rethinking how to teach and learn Dokdo at the current school site is meaningful for resolving conflicts with Japan over Dokdo and developing the capacity for democratic citizens for our students who need to live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Based on this problem recognition, we examine the composition and system of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s related to Dokdo, and then review how Dokdo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in the middle school

according to the Dokdo education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etropolitan/Do Office of Education. I would like to make some educational suggestions and suggestions.

However, it has not progressed to what extent Dokdo's educational activities at school sites have changed students' history and territorial views, and whether they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Japanese aggression of Dokdo. I intend to leave this part as a research project in the future.

Key words: Dokdo, territories, education, Middle School, textbook

이 논문은	2020년 5월 1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

우리나라 고등학교 독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 광 현*

〈목 차〉

1. 머리말
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독도 교육
3. 고등학교 독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4. 고등학교 독도 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5. 맺음말

〈국문초록〉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외교적인 주장을 넘어 교육 정책 면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거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탓에 교육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역사적 문제로 인식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독도 수호 활동을 펼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실질적인 고등학교 독도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독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년 초 교육 준비 주간에 교과 연계 독도 융합 수업, 공동 수행평가 등의 교과 수업 설계부터 교내 행사와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 등 학교 단위 교육계획 수립까지 독도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전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능 한국사에 독도 문항이 필수로 포함된다면 독도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과 질적 강화가

* 북삼고등학교 교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등학교 독도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 현황, 교육의 내실화

1. 머리말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제국주의 시대의 한 축이었음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릇된 역사 인식을 지닌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하면서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이를 왜곡해 자국의 미래 세대에게 가르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침략의 역사를 사죄하고 철저히 가르치는 독일과 너무 비교되는 행보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지닌 건전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역사적 문제임을 분명히 알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지니도록 가르쳐야 동아시아의 건전한 일원으로 한·일 양국이 함께 웃는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은 단순히 애국심을 자극해 독도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적 문제로 독도 문제를 이해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화된 독도 교육이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해보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고등학교 독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 분석은 김화경(2011)¹⁾, 이상일

1) 김화경,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독도

(2011)²⁾, 김영수(2012)³⁾, 김영수(2013)⁴⁾, 강승호(2015)⁵⁾, 송호열(2012)⁶⁾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특정 교과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을 분석하거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최근 독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학교교육 현장의 관점에서 실제 독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독도 교육’

교육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고 학생 및 교원들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지’ 강화를 위해 2017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독도 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채택한 취지에 부응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초·중학교 사회, 고등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Vol.14 No.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pp.31-56.

- 2) 이상일,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개항기 내용분석 - 독도와 러일전쟁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Vol.13, 역사와 교육학회, 2011, pp.39-68,
- 3) 김영수,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 Vol.14 No.1, 한국평화통일학회, 2013, pp.243-262
- 4) 김영수, 「한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No.3, 동북아역사재단, 2012, pp.112-133.
- 5) 강승호, 「역사교육에서의 영토 교육 현황과 문제점 - 2011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 『역사와실학』Vol.57, 역사학회, 2015, pp.381-418.
- 6) 송호열,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22 No.2, 한국사진지리학회, 2012, pp.53-69.

학교 지리, 역사, 기술·가정 교과에 독도 교육 내용을 확대하는 등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⁷⁾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교육 강화’에 맞서 2010년 ‘독도교육통합위원회’가 출범되고 2011년에 처음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채택된 독도 교육은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가 10개로 통합·조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독자적인 학습 주제로 남아 강조되고 있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⁸⁾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국가·사회적 요구와 수요자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고 강조하여 지도해야 할 교육 내용인 범교과 학습 주제로 계속 채택되어 강조되는 독도 교육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우선 살펴보려고 한다.

1) 교과 영역에서의 독도 교육 강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대체로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과 일제에 의한 독도의 불법 편입’이었다. 다음으로 ‘지리·일반사회 영역’과 「실과 교육과정」에서는 ‘독도의 가치’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⁹⁾ 그렇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에서는

7) 교육부(2017. 3.24.), 「보도자료: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독도교육 기본계획 발표」, 1~2쪽.

8)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17, 53쪽

9) 이우진, 「‘독도 교육’의 측면에서 본 ‘2015 개정 교육과정」, 2016, 80쪽

어떨까? 독도 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강조한 대로 독도 교육은 강화된 듯 보인다. 고등학교 사회과,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독도 교육이 강화된 모습은 더욱 뚜렷하다.

먼저, 사회과에서는 『한국사』,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교과목에서 독도 교육이 강화되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사 중심의 중학교와 계열성을 고려하며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만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통과목으로 배우는 『한국사』에서 독도 관련 단원은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이다. ‘독도와 간도’라는 소주제에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을 학습요소로 하고 있고¹⁰⁾,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소주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독도 수호’를 학습요소로 하고 있다.¹¹⁾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확립’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애국심을 자극하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민주 시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까지 갖추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0)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149쪽

1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151쪽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과목에서의 독도 교육 내용

단원	독도 관련 내용				
(5)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10한사05-04]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이해한다.</p> </div> <p>(가) 학습 요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소주제</th><th>학습 요소</th></tr> </thead> <tbody> <tr> <td>독도와 간도</td><td>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간도 협약</td></tr> </tbody> </table> <p>(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p> <p>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뿐 아니라 효율적인 홍보 방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제시를 평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p>	소주제	학습 요소	독도와 간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간도 협약
소주제	학습 요소				
독도와 간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간도 협약				
(7) 대한 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10한사07-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p> </div> <p>(가) 학습 요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소주제</th><th>학습 요소</th></tr> </thead> <tbody> <tr> <td>현대 세계의 변화</td><td>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후 보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독도 수호, 동북 공정</td></tr> </tbody> </table> <p>(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p> <p>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뿐 아니라 효율적인 홍보 방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제시를 평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p>	소주제	학습 요소	현대 세계의 변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후 보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독도 수호, 동북 공정
소주제	학습 요소				
현대 세계의 변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후 보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독도 수호, 동북 공정				

다음으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일반 선택 교과로 배우는 『한국 지리』와 『동아시아사』과목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자. 『동아시아사』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오늘날의 동아시아’ 단원에서 다뤄진다. 현재 동아시아의 갈등 문제에 대해 다룬 단원이라 독도 문제가 포함되어 배운다는 점에서 내용 면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갈등과 분쟁에 대해 ‘사례

를 통해 화해를 위한 방법을 탐구' 하는 수준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좀 더 실천적인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²⁾ 또한 학습요소로 '독도'와 '센카쿠(다오위 다오)', '북방 도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센카쿠(다오위 다오)나 북방 4개 도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어떻게 다르고 모순되는지 교육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는 독도 교육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표 3> 『동아시아사』 과목에서의 독도 관련 기술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심화과목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일반선택과목
교과	동아시아사		교과	동아시아사
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		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
성취기준	[동1264]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화해를 위한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12동사05-03]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table><tr><th>소주제</th><th>학습요소</th></tr><tr><td>갈등과 화해</td><td>독도 센카쿠(다오위다오), 북방 도서, 난샤 군도, 시샤 군도 일본의 식민 지배 미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고노담화, 동북공정</td></tr></table>
소주제	학습요소			
갈등과 화해	독도 센카쿠(다오위다오), 북방 도서, 난샤 군도, 시샤 군도 일본의 식민 지배 미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고노담화, 동북공정			

1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203쪽

13) 이우진, 「『독도 교육』의 측면에서 본 '2015 개정 교육과정」, 2016, 80쪽

『한국지리』과목은 독도 교육 강화라는 변화의 방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토에 대한 인식을 다루면서 독도가 다뤄지고 있었으나 성취기준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표 4>에서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표 4〉 『한국지리』 과목에서의 독도 관련 기술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심화과목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일반선택과목
단원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단원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성취기준	[한지1222] 세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¹⁴⁾		성취기준	[12한지01-01]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지리적·역사적 자료를 통해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¹⁵⁾ 단순히 영토로서의 이해를 넘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실천까지 모색함으로써 실천적 민주 시민 교육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살펴보면,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해양과학』과목에서의 성취기준이 ‘독도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이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해양문화와 기술』과목에서는 단순히 독도의 가

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핵심 성취기준의 이해, 24쪽

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160쪽

치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국토로 지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

〈표 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의 독도 관련 기술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심화과목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진로선택과목
과목	해양과학		과목	해양문화와 기술
학년	고1~3		학년	고2~3
내용	(4) 해양과 인류 (다) 해양 강국을 위한 해양의 중요성과 인접 국가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영해로서 해양의 가치를 알게 한다. 특히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한다.		내용	나. 성취기준 (1) 해양과 문화 [12해양01-04] 영해로서 해양의 가치를 알고, 독도의 가치를 파악하여 우리의 국토로 지킬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해양문화와 기술』 등의 과목에서 독도 교육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독도 교육 강화

교육부의 독도 교육 강화는 비단 교과 영역에서의 내용적 강화만을 이야기 하진 않는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미 2016년부터 4월 둘째 주를 ‘독도 교육 주간’으로 선정해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는 지역 간 독도 체험 격차 해소를 위해 체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독도 체험 시설을 구축해 운영하

16)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0] 72쪽

고 있다. 이 밖에 독도 체험 발표대회, 독도 지킴이 학교 운영, 독도 교육 연구학교 운영, 독도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등 국가 차원에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품고 있기에 독도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독도 교육을 살펴보자.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독도 교육을 진행하는데 주요 내용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경북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해 기관별로 산재한 독도 콘텐츠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 지킴이 동아리를 매년 초·중·고 140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독도 체험 탐방단을 모집해 독도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별로 교원 독도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는 등 독도 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한 독도 교육 기본계획에 의거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도 교육의 실제 모습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자.

3. 고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형식적인 ‘독도 교육 주간’과 교사의 열정이 필요한 ‘독도의 달’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은 4월 ‘독도 교육 주간’과 10월 ‘독도의 달’을 전후해 강조되어 진행된다. 학교에서는 매년 4월 둘째 주를 ‘독도 교육 주간’으로 교육 계획에 반영해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그 실적을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다. 공문으로 차곡차곡 정리되는 ‘독도 교육 주간’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대개의 일반계 고교에서는 현수막 걸기, 담당교사가 안내해 준 사이트에 접속해 독도 영상 시청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좀 더 독도 교육에 관심이 높거나 적극적인 관리자 또는 담당교사가 있는 경우(독도 지킴이 동아리가 있거나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사진 전시회, 단원 재구성을 통한 독도 융합수업 등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본격화되면서 학급활동 시간이 사라진 고등학교에서는 그나마 독도 관련 동영상을 보여줄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독도 교육 주간’에 비해 ‘독도의 달’에는 10월 25일 ‘독도치령의 날’을 전후한 계기교육이나 행사는 그나마 내용 면에서는 나은 편이다. 독도 교육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역사교사라면 10월 25일을 전후한 수업 시간에 독도에 대한 계기교육을 진행하거나 교수학습 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 단원 재구성을 통해 독도 관련 단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학교에 따라 모습은 조금 다르겠지만 ‘독도치령의 날’을 전후해 독도 관련 교내대회(독도독서대회, 독도바로알기대회, 독도스토리텔링대회, 독도 백일장 등)를 실시하거나 독도 사진전 등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교내대회의 경우 독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용 이해가 필요하기에 독도 교육으로 효과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독도 관련 계기교육이나 교내대회 모두 교사의 열정이 필요한 일이고, 교내대회의 경우 전체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참가 희망자에 한 해 일어나는 활동인데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내대회 수상실적을 한 학기에 한 개까지만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기에 교내대회 참가자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한계가 있다.

2) 필수가 아닌 10시간 권장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외면 받는 독도 교육

신학년도를 준비할 무렵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춰 범교과 학습을 진행하도록 <표 6>과 같은 공문을 학교로 발송한다.

〈표 6〉 경상북도교육청 2019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과정 반영표(중등)

연번	교과 학습 주제	법령에 근거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시수			관련 근거(법, 지침, 교육부 계획, 도교육청 계획 등) 및 편성 시 유의사항	담당과
		주제	필수	권장		
1	안전 교육	생활안전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2조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교육부, 2017.4.21.)	기획조정 관 (교육안전 단) 학생생활 과
		교통안전	10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10			
		약물 및 사이버	10			
		중독예방	6			
		재난안전	3			
		직업안전	2			
	안전· 건강 교육	성교육	15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학생생활 과
		보건교육		자율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2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2019.1.11.) ·보건교사는 최소 1개 학년 이상 17시간 필수	체육·건강 과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자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교육부 훈령 제198호, 2017.1.1.) 월 2회 이상 실시로 되어 있음	
2	인성교육			자율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제6조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11조	초등과
3	진로교육			자율	·진로교육법(2015.6.22.)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4.5.)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활용	중등과
4	민주시민교육			자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11.)	학생생활 과

연번	교과 학습 주제	법령에 근거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시수			관련 근거(법, 지침, 교육부 계획, 도교육청 계획 등) 및 편성 시 유의사항	담당과
		주제	필수	권장		
5	인권교 육	장애이해교육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2항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7.12.08.)	정책과
		생명존중(자살예방)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17조	학생생활과
6	다문화교육		2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2019년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연간 2시간 이상)	초등과
7	통일교육			10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2018.11.) *교과 4, 창체 6(10시간 이상 권장) *통일교육주간(5월), 호국보훈의 달(6월), 광복절(8월), 통일문화주간(10월), 꿈끼 탐색주간(12월) 등 활용	중등과
8	독도교육			10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896(2018.12.4.)	정책과
9	경제·금융교육			자율	·경제교육활성화방안(기획재정부, 교육부)	중등과
10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자율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세계 물의 날(3월 22일), 식목일(4월 5일), 바다의 날(5월 31일), 환경의 날(6월 5일) 활용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에 대한 이해	과학직업과

독도 교육은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이니 학교 교육 여건 상 교육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학교가 있을까?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거의 모두 포함시키겠지만, 범교과 학습 주제가 39개에서

10개의 주요 주제로 범주화되는 과정에서도 독자적인 학습 주제로 당당히 남은 독도 교육이 필수가 아닌 권장이란 점은 많이 아쉽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은 교육청의 공문을 접수한 후 독도 교육 10시간을 역사나 지리교사에게 할당하고 수업진도표를 작성할 때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럼 아마도 역사과나 지리과 교사는 자신의 교수 학습 진도계획에 독도 관련 단원을 찾아 넣거나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시수를 맞춰 어딘가에는 포함시킬 것이다.

<표 7> 2019학년도 ○○고등학교 범교과 학습 주제 배당표

영역	세부 영역	기준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운영 시간
안전·건강 교육	생활안전	10	체육5, 수학5	체육5, 수학5	체육5, 수학5	10
	교통안전	10	사회4, 과학5 자율1:체험학습	사회4, 과학5 자율1:체험학습	사회4, 과학5 자율1:체험학습	10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10	사회2, 국어3 영어3, 역사2	사회4, 국어3, 영어3	윤리3, 국어2 영어3, 역사2	10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10	과학4, 기가3 자율3:체험학습, 체육한마당, 축제	과학4, 정보3 자율3:체험학습, 체육한마당, 축제	과학7 자율3:체험학습, 체육한마당, 축제	10
	재난안전	6	국어4, 음악2	국어4, 과학2	국어4, 음악2	6
	직업안전	3	진로3	정보3	국어3	3
	응급처치	2	체육2	체육2	체육2	2
	성교육	15	사회2, 국어2, 영어3 계기2:인성안전부 (보건) 자율6:체험학습, 체육한마당, 축제	사회2, 국어2, 영어3 계기2:인성안전 부(보건) 자율6:체험학습, 체육한마당, 축제	사회3, 국어3, 영어4 계기2:인성안전 부(보건) 자율3:체험학습, 체육한마당, 축제	15
	보건교육 (1개 학년이상)	17	체육15 계기2:인성안전부 (보건)			17

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2	자율4:학생복지부(특수)	자율4:학생복지부(특수)	자율4:학생복지부(특수)	4
	생명존중(자살예방)	4	자율4:인성안전부(상담)	자율4:인성안전부(상담)	자율4:인성안전부(상담)	4
	양성평등교육	2	자율2:인성안전부(보건)	자율2:인성안전부(보건)	자율2:인성안전부(보건)	2
다문화교육		2	영어2	영어2	영어2	2
통일교육		10	사회2, 역사4, 자율4	사회4, 자율6:사회과	사회4, 역사2, 자율4:사회과	10
독도교육 (고1만 대상)		10	사회5:김○○, 우○○ 역사5:김○○, 이○○			10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1	자율2:교육정보부	자율2:교육정보부	자율2:교육정보부	2
학교폭력예방교육		8	미술2 자율6:인성안전부, 답임	국어2 자율6:인성안전부, 답임	미술2 자율6:인성안전부, 답임	8
합계		122	125	98	98	125

필수가 아닌 권장인데 시수표까지 만들어서 공문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야 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10시간일까? 학교는 시수표에 할당된 10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확보하기 불가능하기에 교과 수업에 반영해 진행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게 된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의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집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 교육」에도 이러한 바람은 잘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시기에 선택 과목에서 독도 교육이 잘 정리되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에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짧은 시기였지만 한국사가 선택과목이 되었을 때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를 제외시키는 과감한 고등학교가 생겼던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결과이다.

독도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가 부실해서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학생 수준별로 여러 기관에서

만든 훌륭한 독도 교재가 충분히 있다. 오히려 비현실적인 시간 부여가 문제이다.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기 보다는 독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한국사』 과목에서 관련한 내용이 적절한 시수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장이 아닌 필수로 하고 시수는 학교의 자율에 맡기거나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는 그렇다.

〈표 8〉 범교과 학습 주제(독도 교육)와 교과 교육과정 관련성¹⁷⁾

구분	국토 개념	독도 이해 및 사랑
고 공통	통합과학(1)	국어(2), 통합사회(5), 한국사(6), 통합과학(3)
고 선택	한국지리(5)	생활과 윤리(3), 윤리와 사상(1), 사회·문화(1), 한국지리(4), 세계지리(2), 동아시아사(1), 정치와 법(4)
		음악(2), 미술(8)
	해양 문화와 기술(1)	해양 문화와 기술(3)

※ ()안의 숫자는 독도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수업 시수 예시를 나타낸 것임.

3)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에서 크게 줄어든 독도 관련 서술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발표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독도의 역사적 연원부터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의 독도 강탈, 해방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까지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럼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독도 관

17) 교육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 교육(고등학교), 9쪽

련 내용의 서술은 어떻게?

현재 심의를 마치고 오는 12월에 각 학교에서 선정될 새 교과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지면을 통해 소개할 수는 없다. 다만 발표자가 출판사 두 곳의 새 한국사 교과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어 독도 관련 서술 부분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독도 교육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관련 서술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근대사 부분을 축소하고 근현대사 부분을 강화한 새 한국사 교과서이기에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약이 사라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방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전후해 시작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사라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간단히 소개하면 대한 제국 시기 독도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며 한국과 일본 측 사료를 비교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정도로 서술하거나,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불법적으로 편입했다고만 간단히 서술하는 대신 범교과 학습 주제로 별도로 다루는 정도이다. 지나치게 많은 내용 지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역사를 어려워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사실상 독도 문제에 대해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한국사 수업 시간뿐임을 고려한다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표 9〉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에서의 독도 관련 내용¹⁸⁾

단원명	본문 내용
III-3-4. 양난 이후 일본, 청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을 까?	일본과의 관계 한편, 조선 후기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하여 충돌이 일어났다. 17세기 말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 독도 지역을 침범한 일본 어민들을 몰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그 지역이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이 침범하자 19세기 말 조선 정부는 주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켰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18) 도면회 외 7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p>IV-7-1.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하다.</p>	<p>독도의 역사적 연원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p> <p>대한 제국 시기 일본 어민들의 불법적인 침입이 잇따랐다.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 일본인이 거주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대한 제국 정부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자 주한 일본 공사는 “울릉도에 일본인이 거주하는 것은 조약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00년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 울릉도에 무선 전신 시설과 망루를 설치하였고, 1905년에는 우리 정부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주인 없는 땅임을 이유로 들어 시마네 현 고시를 발표하고 독도를 시마네 현에 불법 편입하였다. 1906년 울도군수 심홍택은 일본의 독도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은 곧 대한 제국 정부에 보고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응 방안을 지시하였으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p>
<p>VI-6-1. 일본이 역사·영토 갈등을 일으키다.</p>	<p>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p> <p>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략)… 나아가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자국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p> <p>독도는 우리 땅</p> <p>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다. …(중략)… 광복 이후 연합국이 작성한 지도에서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중략)…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영토 주권 행사를 강화하며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지리학, 역사학, 국제법학, 국제 정치학 등 여러 분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p>

4) 비교과 영역 축소 속에 설 자리 잃어가는 독도 동아리와 교내대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매년 ‘독도 지킴이 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독도 지킴이 동아리’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독도 동아리는 독도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 활동

과 독도 수호를 위한 실천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 독도 동아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 2019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선정한 ‘독도 지킴이 동아리’는 모두 140개이다. 이 중 초등학교가 60개, 중학교가 42개, 고등학교가 38개이다. 독도 동아리는 매년 새롭게 선정하지만 한 번 선정되면 재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대개 자율동아리로 개설되어 활동하고 특히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타 시도와 구분되는 특색 있는 활동으로 대학 입시 준비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동아리 개수는 완만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일반계 고교에서는 대체로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활동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그 내용이 학생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입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편안으로 비교과 영역 축소, 학생부에서 동아리 활동 삭제 등의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나마 고등학교에서 독도 교육 활동의 내용성과 실천성을 담보하고 있던 독도 동아리 활동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9학년 입학생부터는 교내대회 입상 실적을 분기별로 1개까지만 학생부에 반영되기에 교내대회 참가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 당 한 개만 그것도 동아리명만 입력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학생들은 동아리 가입과 교내대회 참가에 신중함을 보이는 실정이다. 대학입시를 중시하는 한국 현실에서 독도 수호에 대한 당위성만으로 학생들에게 독도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독도대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교육청에서는 내년 초 ‘독도 지킴이 동아리’ 신청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에서

는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진로진학과 당장 연결되지 않는 독도 동아리를 사실상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1개의 동아리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 학기에 한 개씩만 반영되는 교내대회 수상경력에 독도대회보다는 다른 대회명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행사활동을 포함한 자율활동 영역에서 진행되는 독도 교육으로는 야영 수련활동 중 수련원 한 쪽에 마련된 독도 체험장을 견학하거나, 수학여행 중 독도 관련 시설을 체험하기, 학생 축제 때 독도 동아리에서 준비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도 플래쉬 몸에 참여하는 정도일 것이다. 의미가 없기 보다는 일회성인데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깐 체험하는 것이기에 독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5) 교원의 전반적인 독도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원 독도 연구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국어 교사라고 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도 교육 담당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개 사회과 교사 특히 역사 또는 지리교사가 담당자라고 답할 것이다. 도서관 업무나 독서 교육이 국어과의 전유물이 아니듯 독도 교육도 사회과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구나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되어 다양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뤄지는 주제이니 교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내용 지식을 갖추는 필요가 있고, 이를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예하 각 교육지원청에서 독도 교육과 관련해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대상이 거의 독도 업무 담당자나 독도 동아리 담당교사임을 알 수 있다.

<표 10> 독도 교육 교사 역량강화 연수¹⁹⁾

차례	주관 교육지원청	제목	교육대상	일자
1	영주	독도교육 업무담당자 연수회	초·중·고 독도교육 업무담당 교사 50명	2017. 4. 5.
2	울릉	박물관 연계 독도 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유·초·중 교원 20여 명	2017. 4.20.
3	김천	독도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초·중·고 교장 50여 명	2017.1 0.16.
	구미	독도교육 역량 강화 교육	초·중학교 독도 업무 담당교사 75명	2017.1 0.23.
4	경주	독도 교육 강화 연수회	초·중·고교 독도 교육업무 담당교사 84명	2017.1 1. 2.
5	칠곡	독도업무 담당교사 역량강화 교육	초·중학교 독도 업무 담당교사	2017.1 2.21.
6	김천	나라사랑 독도사랑 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초·중·고교 교감 및 독도 교육 업무담당 70명	2018.1 0.18.
7	포항	독도사랑 직무연수	초·중학교 독도업무와 독도동아리 담당교사 200여 명	2018.1 0.23.
8	경주	독도사랑 결의식 및 강연회	초·중·고교 교사	2018.1 0.25.
9	구미	초·중학교 독도 교육 담당교사 및 독도동아리 운영 교사 연수	초·중학교 독도교육 담당교사 85명	2018.1 1.19.
10	고령	독도 교육 강화 연수	초·중학교 독도교육 업무담당 교사, 독도지킴이 동아리 운영교사	2018.1 1.27.
11	군위	사례로 살펴보는 독도사례 연수회	초·중·고 독도업무 담당자 및 희망자 20명	2018.1 2.14.

19) 경상북도교육청 보도자료(2017~2018) 참고.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 교육 역량강화가 아닌 업무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는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독도 업무 담당자나 동아리 운영자(대개 사회과 교사)만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 학교가 어느 해 독도 교육 선도학교나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일부러 독도 관련 수업을 고민하지 않은 한 사회과 교사를 제외하고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4. 고등학교 독도 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 독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교원의 독도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자.

현재 교원임용시험을 보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보유가 기본 조건이다. 교원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한국사 내용 지식을 갖추라는 이유일 것이다. 이미 교사들은 한 해 동안 120시간에서 많게는 200시간이 넘게 연수를 받고 있다. 청렴 교육 등 일부 주제는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5시간 내외로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도 수호에 대한 내용 지식이나 다양한 독도 교육 사례에 대한 연수를 의무화 한다면 독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신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교과 관련 범교과 학습 주제로 독도 교육을 다루는데 부담감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방과후 수업 주제로 개설할 수도 있고 독도 교육 주간에 담임반의 계기교육으로 적용해 본다거나 담당 동아리 활동에 응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학교는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적인 독도 교육을 내실 있게 설계 진행하자.

교사들에게 2월은 한가한 듯 보이나 실상 매우 바쁘고 중요한 달이다. 학교를 옮기고 가르칠 과목을 확인하고 수업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쁘기

도 하지만 학교의 1년 동안의 교육계획이 협의되는 시기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고등학교에서는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강조되면서 모든 교과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데, 교과 간 협의회를 통해 수행평가를 통합해 진행하거나 융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도표를 조정하는 작업이 2월에 이뤄지지 못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학기 동안 수행평가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준비 기간에 범교과 학습 계획도 협의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독도 교육 주간에 실시하는 활동이 깊이 있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독도 교육 연구·시범학교 등에서 진행한 사례들을 활용해 일상적인 독도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자.

○ 교과 연계형 융합교육으로 독도 교육을 내실화 하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적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독도 교육을 관련 교과에서 융합교육으로 실시하다면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더 권장할 만하다. 범교과 학습으로 독도 교육을 10시간 진행하도록 권장하며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음악, 미술 등의 교과 수업 시간에 몇 시간씩 할당한 예시 자료를 보내주기 보다는 교원에 대한 독도 수업 사례 연수를 강화하고 교과 연계형 융합수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일 것이다. 학기 준비 기간에 교과 간 협의를 통해 독도 교육을 융합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수행평가를 통합해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실 있는 독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역사 글쓰기 수업을 한국사 시간에 진행한 후 하고, 미술 시간에 독도 관련 광고 디자인을 공동의 수행평가로 진행하는 것이다.

○ 고1 『한국사』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와 연계하자.

발표자가 보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이 가장 강화된 과목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한국사』가 아니라 선택교과인 『한국지리』이다. 때문에 고1 『한국사』 수업에서 독도 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보완되도록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발표자는 몇 해 전부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교재로 고등학교에 배포한 『독도 바로알기』를 활용해 1학년 한국사 수업시간에 독도 관련 역사글쓰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수업 중 서술형 평가를 진행하면서는 독도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평가와 연결되다 보니 독도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수능 한국사 영역에 독도 문제가 1문제 의무 출제된다면 어떨까? 학생들에게 공부 부담만 더 늘어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었지만 절대평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목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에 내용 지식을 채우기 위한 강의식 수업보다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더 고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독도 교육에 한국사 교육의 상황을 대입시켜 보면 어떨까? 일본의 경우 시마네현에서는 2014년부터 공립 고교 입학시험에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수능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에 한 문제 정도 독도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구호로만 외치는 독도 수호가 아니라 실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문제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 내 삶과 연결된 비교과 영역의 독도 교육활동을 강화하자.

독도 동아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서 독도 동아리가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독도 동아리의 존재 가치가 분명하다. 하지만 독도 지킴이 동아리로만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워 졌다. 이미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가 1개로 제한되고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없게 되었으니 교육과정 동아리로 개설된 역사 동아리 또는 사회과 교과 관련 동아리의 한 주제로 독도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활동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대개 2학기에 진행하는 동아리 발표행사에 독도 주제를 포함시키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댄스 동아리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댄스를 선보이고, 만화 동아리는 독도 캐릭터를 그려 전시하고, 역사 동아리는 독도 사진전과 주제탐구 발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10월 25일 ‘독도척령의 날’을 전후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고 독도스토리텔링대회와 같은 교내대회로 연결해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외교적인 주장을 넘어 교육 정책 면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 교육을 강조하고 강화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거나 영토 의식을 강조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독도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10개의 주요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렇

다면 고등학교에서 실제 독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 대개의 고등학교에서는 4월 독도 교육 주간 행사와 사회과(주로 역사, 지리) 수업 중 관련 단위에서의 수업, 독도 지킴이 동아리나 역사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독도 관련 활동, 교내 독도 대회(독도바로알기대회, 독도 골든벨, 독도 백일장 등) 등이 진행된다. 독도 연구학교 또는 독도 지킴이 동아리가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좀 더 다양한 독도 관련 활동이 진행되겠지만, 대개의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은 독도 교육 주간에 형식적인 영상 자료 시청 또는 일회성 행사로 치러지고 독도 관련 교내대회에 일부 학생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크게 보면 입시 위주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필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독도 교육은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축소된다. 독도 교육은 사회과 교사만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비사회과 교사들의 관심 밖에 있고,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비교과 영역의 축소 또는 폐지가 언급되는 상황이라 독도 지킴이 동아리는 설 자리를 잃어 가는데 독도 동아리 조직을 권장만 한다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독도 교육에 머물지 않고 역사적 문제로 독도를 인식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독도 수호 실천 활동을 펼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독도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독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년 초 교육준비 주간에 실질적으로 운영해 교과 연계 독도 융합수업, 공동 수행평가 등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내 행사와 동아리 활동, 교내대회 등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는 독도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한국사 교과서에서의 독도 분량과 상관없이 현장의 역사교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독도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대학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능 한국사에 독도 문항이 필수로 포함된다면 독도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과 질적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2017.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0]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2017.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17.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고등학교)』, 2017.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 고등학교 사회과』, 2018.
- 교육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독도 교육』, 2019.
- 교육부,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2019.
- 김미선, 「독도 교육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 이우진, 「‘독도 교육’의 측면에서 본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교일본학』 40, 2017.
- 도면희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3.
- 신정엽 외 8인, 『고등학교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2017.
- 2019학년도 독도 교육 기본 계획(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885, 2019. 1. 17.)
- 2019학년도 범교과 주제학습 운영 계획(북삼고등학교-2198, 2019. 3. 8.)

<논문>

- 강승호, 「역사교육에서의 영토 교육 현황과 문제점 - 2011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 『역사와실학』 Vol.57, 역사실학회, 2015, pp.381-418.
- 김영수,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Vol.14 No.1, 한국평화통일학회, 2013, pp.243-262.
- 김영수, 「한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 :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No.3, 동북아역사재단, 2012, pp.112-133.
- 김화경,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 중·고등학교 국가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 -」, 『교육과정평가연구』Vol.14 No.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pp.31-56.
- 이상일,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개항기 내용분석 - 독도와 러일전쟁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Vol.13, 역사와 교육학회, 2011, pp.39-68.
- 송호열,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사지리지학회지』 Vol.22 No.2, 한국사지리지학회, 2012, pp.53-69.

<Abstract>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igh School Dokdo Education in Korea

Lee, Kwang-Hyun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of sovereignty over Dokdo has been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strengthened in terms of educational policy beyond diplomatic claims. On the other hand, Korea emphasizes education on Dokdo, but in high schools, it is either a formal and one-time activity, or it is being pushed out of educational priority due to the reality of entrance-oriented educ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practical high school education on Dokdo, which recognizes the Dokdo issue as a historical issue, logically responds to Japan's claim to sovereignty, and develops its capacity as a democratic citizen to defend Dokdo. To this end, it is mandatory to train Dokdo education for teachers, strengthening their professionalism, and designing curriculum related to Dokdo convergence class, joint performance evaluation, etc. Until establishment, Dokdo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school curriculum. Also, considering the reality of high school, which is inevitably sensitive to college entrance exams, if Dokdo questions are included in the Korean history of SAT, practical improvement and qualitative enhancement of Dokdo education can be achieved.

Key words: Dokdo education of high school, Revised curriculum in 2015, actual condition, internalization

이 논문은 2020년 5월 1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교육과정』의 독도기술 비교검토*

송 휘 영**

〈목 차〉

1. 머리말
2. 일본의 독도 정책 및 독도 교육의 변화
3.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2015년 『교육과정』 독도관련 기술 비교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고, 독도교육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각 과목의 독도기술이 일본 외무성의 공식 논리와 연계되어 ‘영역의 이해’에서부터 ‘국제법적 해결’이라는 논리구조로 체계화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도 필요하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8A02103036)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한일관계사 / hysong@ynu.ac.kr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늘어났다. 2016년 ‘독도교육주간’ 실시 이후,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별로 그 내용이 확대되고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초·중·고 「법·교과 교육과정: 독도교육」을 보면 학교급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심화되는 과정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이 각각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 강화를 통해 첨예하게 경쟁을 이어가는 느낌이 든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의 논리를 명쾌하게 무력화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의 논리를 간결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독도 부교재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학습지도요령, 교육과정, 독도교육, 영토주권, 독도기술

1. 머리말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야기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일관계는 해방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와중에도 독도, 교과서, 과거사문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들도 일본 교육정책의 우경화와 맞물려 개선의 여지는 요원해 보인다. 한일관계를 경제보복이란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외교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의한 자신감과 더불어 일본 국내적으로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기 위한 우익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장치로도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2010년 3월 31일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검정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여 국경선을 명기하여 발표하면서부터 일본의 독도 ‘왜곡’교육은 본격화하여, 2017년 3월 31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을 고시한데 이어, 2018년 3월 30일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을 확정·고시하였고 그해 7월 17일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이하 해설) 개정판¹⁾을 고시하였다.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죽도(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²⁾’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은 보통 10년 주기로 개정을 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초·중·고가 모두 1년 앞당겨졌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적용시기도 2년 앞당겨짐으로써 늦어도 2022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 왜곡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독도교육에 관한 일본의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고, 독도교육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 독도교육 특히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 실태와 교과서 독도기술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왔으나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요령』의 독도기술에 대한 분석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일본 독도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이우진(2014, 2017)³⁾, 홍성근·서종진(2018)⁴⁾이 있다. 이우진의 연구는 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및 『해설서』를 다루고 있으며, 홍성근·서종진의 경우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서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비교 검토한 위에 독도교육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1) 단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이행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그럴 경우, 2021년도에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2) 개정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고유 영토”의 정의를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음.
 - 3) 이우진,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나타난 초등학교 독도 기술의 변화」, 『교육연구』 60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pp.81-98; 이우진, 「독도 교육의 측면에서 본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교일본학』 Vol.40,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7, pp.69-94.
 - 4) 홍성근·서종진,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Vol.16, 2018.12, pp.30-57.

2. 일본의 독도 정책 및 교육의 변화

지난 2017년과 2018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개정⁵⁾은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영토교육에 대한 일본정부의 일방적 방침을 어린 학생들에게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가치관을 학교교육 현장에서 강요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이웃나라들에 대해 협력과 이해가 아닌 혐오와 대립의 뿌리를 내리게 할 우려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교육 우경화 정책은 영토문제에 관한 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개정으로 거의 완성되어버린 느낌마저 든다. 독도(죽도) 교육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그 전제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일본은 항의를 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교급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애국심’, ‘애향심’을 북돋운다는 교육이 우경화를 넘어 넘지 말아야 할 루비콘강까지 넘어선 느낌이 든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교육정책의 변화는 2005년 3월 「죽도의 날」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해 6월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에 「죽도문제연구회」를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연구성과는 거름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일본 외무성의 공식견해로 채택되어 2008년 2월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로 게재된다.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태도변화는 『학습지도요령』과 『해

5)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17년 3월 31일 확정고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2017년 7월 14일 고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17년 3월 30일 확정고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은 2017년 7월 14일 고시하였음.

설』의 개정을 통해 ‘독도영유권 갈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기’하도록 권유하는 문부과학성의 교육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8년 3월에 개정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2010년 3월 31일에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서 사회과부도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하게 되었다(<표1>을 참조). 이를 계기로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비중이 점차로 높아져갔다.

<표1> 2005년 ‘죽도의 날’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관련 연표

시 기	독도관련 동향	비 고
2005.03.25	시마네현 의회가 「죽도의 날(2.22)」 제정(시마네현고시 100주년)	현조례
2005.06.06	「죽도문제연구회」(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설치	
2006.02.22	제1회 「죽도의 날」 기념행사 개최(좌장: 시모조 마사오) 죽도문제홍보책자 『윗토 시마네』 발행 배포	
2006.05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 발간	
2006.05.31	「죽도·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및 「죽도·북방영토 확립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이 연명으로 중참의원에 청원을 본회의에서 채택	
2007.02.	「죽도문제연구회」가 「영토문제를 생각하는 포럼」 개최	
2007.03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 발간	
2007.04.19	구현립박물관 2F에 「죽도자료실」 개설	
2007.09	「Web죽도문제연구소」를 시마네현청 홈페이지에 개설	
2008.02	「10의 포인트」 외무성 홈페이지 게재(3개국어)	외무성
2008.7.14	「초·중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2011·12년용) 개정 독도영유권 갈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 명기	문부과학성
2008.12	「10의 포인트」 외무성 홈페이지 게재(10개국어로 확장)	외무성
2009.02.21	제4회 「죽도의 날」 기념식전 거행	
2009.02.21. -03.31	「죽도의 날」 기념식전특별전시 「나카이 요사부로와 죽도」	
2009.07.03	한일학자에 의한 독도문제 토론회(좌장: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대학)	
2009.10.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平成20년도)』 발행	Web竹島

2009.10.19	제2기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2009.12.25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2013년용) 개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	문부과학성
2010.3.31	초등 사회과 검정교과서 발표(독도를 일본령으로 하여 국경선 명기)	문부과학성
2011.02	『제2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발간	
2012.02	죽도합습용 리플릿 『죽도-일본의 영토인 것을 배운다-』 발행	
2012.03	『제2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발간	
2012.10.28	제3기(-14.12)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2013.11.11	죽도문제 계몽 포스터 「죽도 돌아오라 섬과 바다」 발행	
2014.02	『죽도문제 100문 100답』 발간	
2014.01.27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전격 개정	문부과학성
2014.04.01.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문부과학성
2015.4.6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2016년용) 15/18종(83.3%): 고유영토, 13/18종(72.2): 불법점거	
2016.3.18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저학급용(2017년용) 사회과 27/35종(77.1%):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2017.2.14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 고시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 명기 의무화	3.31 확정
2017.3.24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중급학급용(2018년용) 19/24(79.2%): ‘일본 고유의 영토’ 명기	
2018.2.14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 고시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 명기 의무화	3.30 확정
2018.7.14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개정안 확정·고시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 명기 의무화	
2019.3.26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4-6학년 9/9종 고유영토 명기)	
2020.3.24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17종 모두 고유영 토 명기)	
2022.4.1~	초중고 모두 개정교과서에 의한 독도교육이 본격화(예 정)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명기	

자료: 필자 작성.

지금까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대개 10년마다 개정⁶⁾해 왔었다 (<표2>를 참조). 2008년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09년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라는 기술을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2014년 1월 17일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전격 개정으로 인해 그 이후 2015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는 지리, 공민, 역사 등 사회과 교과서에서 18종 중 15종(83.3%)이 ‘일본 고유의 영토’, 18종 중 12종(72.2%)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여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이듬해인 2016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는 35종 중 27종(77.1%)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였고, 2017년에는 24종 중 19종(79.2%)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는 등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약 8할 정도가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게 된다. 이전과는 달리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7년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여 같은 해 3월 31일 고시하였고, 마찬가지로 2018년 2월 14일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여 별 수정 없이 그해 3월 30일 고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독도(죽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기화하도록 함으로써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에서는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것에 의해 집필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결과가 2019년 3월 26일 발표되었고, 4·6학년용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되었다. 올해 2020년 3월 24일 발표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17종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 대부분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내년에 있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모두 같은 영유

6)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은 대개 10년 주기로 이루어졌으며, 개정된 『요령』은 『요령』에 의한 교과서 집필과 검정과정, 교과서 선택과정을 거쳐 4년 후에 사용하는 교과서에 적용이 됨.

권 주장을 담게 되며 2022년 4월 1일부터는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영유권 교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표2> 일본 개정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의 고시 및 실시

구분		고시	실시	비고
2008·09년 개정	소학교학습지도요령(08)	2008년 문부성 고시	2011년 전면실시	교육기본법 개정 후
	중학교학습지도요령(08)	2008년 문부성 고시	2012년 전면실시	상동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09)	2009년 문부성 고시	2013년부터 학년진행에 따라 실시	상동
2017·18년 개정	소학교학습지도요령(17)	2017년 문부성 고시	2020년 전면실시	상동
	중학교학습지도요령(17)	2017년 문부성 고시	2021년 전면실시	상동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18)	2018년 문부성 고시	2022년부터 학년진행에 따라 실시	상동

이렇듯 최근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①일본 고유영토론 정착, ②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점거하고 있음을 강조, ③유엔 안보리 및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일본의 초·중고 전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일본의 독도교육 왜곡 수위가 증가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라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 비율이 증가하여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모두 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일본 독도교육 혹은 독도정책이 모종의 장기적 국가 전략(로드맵)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전전 획일화되었던 군국주의, 국가 총동원 교육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1947년 미군정시에 제정된 『학교교육법』

과 2006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근거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며, 이전의 교과서 국정제도를 초·중·고교 모두 검정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교과서의 집필자와 발행자(출판사)는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등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집필·제작하고,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용도서 검정 조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만을 결정하는 제도이다.⁷⁾ 사용하기 1년 전에 민간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하면 문부과학성에서 검정과정을 거쳐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에 문부과학성이 지자체에 채택 선정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일선 학교에 선정권을 위임함으로써 일선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선정·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검정의 기준은 문부과학성이 제정한 『학습지도요령』이며 이에 준거하여 실시한다. 검정은 대개 교과서 별로 4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문부대신은 검정실시 시기의 전년도에 검정 신청 과목 및 시기 등을 고시하고, 검정 기준은 총칙과 각 교과목마다 공통조건과 각 교과 고유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일본의 독도교육은 기본적으로 검점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실시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각 교과 담당 교사에 의한다. 현재 도쿄도(東京都), 사이타마현(埼玉県) 등 자체적으로 부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개 일본 시마네현에서 실시하는 「죽도(竹島)에 관한 학습」이 독도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일본 독도교육의 지침이 될 개연성이 크다.

일본 시마네현에서의 독도교육은 「죽도문제연구회」 등에서 제시된 「죽도학습지도안」 등을 바탕으로 시마네현교육위원회 담당자와 교사들로 구성되는 ‘죽도(독도)학습 검토회’를 거쳐 학습의 내용과 범위를 협의한다.⁹⁾

7) 김화경, 「일본의 독도 교육 실태와 전망」, 『일본의 독도 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안』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4. 11.

8) 송휘영, 「일본 독도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검토」, 『일본문화학보』 제64집, 2015, p487 참조.

9) 송휘영, 「일본 시마네현 독도정책의 동향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6

<표3> 『현대사학습』에서 독도(죽도) 관련 학습 항목

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향해 한국은 연합국, 승전국의 일원으로 강화회의에 참가하도록 미국에 이야기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②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포기할 섬에 죽도(독도)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러스크서한).
③	1952년 1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한국은 이승만 라인(해양주권선언)을 선언하고 죽도를 라인 안에 포함하였다.
④	1953년 한국은 일본의 순시선에 발표하는 등 죽도를 불법으로 점거하였다. 한국은 이후 죽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해양경비대를 두어 감시를 시작했다.
⑤	한국에 의한 죽도의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정부는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⑥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죽도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⑦	1999년에 발효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잠정수역」을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일본어선이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⑧	1952년 1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한국이 이승만 라인(해양주권선언)을 선언한 배경.
⑨	전후 죽도문제에 관한 여러 사안과 관련된 죽도문제의 고찰.

그렇게 하여 학교교육현장에서의 「죽도(독도)에 관한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시마네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대사학습』에서 독도(죽도) 관련 학습 항목을 보면,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우선, ①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향해 한국은 연합국, 승전국의 일원으로 강화회의에 참가하도록 미국에 이야기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②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포기할 섬에 죽도(독도)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러스크서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③1952년 1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한국은 이승만 라인(해양주권선언)을 선언하고 죽도(독도)를 라인 안에 포함하여, ④1953년 한국은 일본의 순시선에 발표하는

등 죽도(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였고, 한국은 이후 죽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해양경비대를 두어 감시를 시작했다. ⑤한국에 의한 죽도의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정부는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⑥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죽도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⑦1999년에 발효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잠정수역」을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일본어선이 독도(죽도)에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학습한다. 결국 1952년 1월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하기 전 한국이 이승만 라인(해양주권선언)을 선언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독도 점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아울러 전후 독도(죽도)문제에 관한 여러 사안과 관련된 문제의 고찰을 통해서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시마네현 교육위원회(교육청)에서 제작한 독도(죽도) 학습자료 및 부교재로 『죽도학습부교재DVD』(2009.5.), 『고향 독본「더욱더 알고 싶은 시마네의 역사」』(2012.12.), 『죽도학습 리플릿 「죽도~일본 영토인 것을 배운다」』(2017.6.개정), 『영토에 관한 교육 핸드북』(2015.3) 등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DVD를 중심으로 독도(죽도)의 위치와 영토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독도(죽도)가 일본 영토인 이유를 간단한 8쪽짜리의 리플릿을 바탕으로 하여 가르친다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의 향토사와 연관시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독도(죽도)가 어떠한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표4〉 시마네현교육위원회가 제작한 독도(죽도) 학습자료

발행 시기	자료 및 내용	비 고
2009년 5월	『죽도학습부교재DVD』 소학교 5학년 사회과, 중학교 사회과 지리적 분야에 서 활용하도록 죽도의 위치와 현재의 모습, 영토문제 가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 등에 대해 수록	
2012년 2월	『죽도학습 리플릿 「죽도-일본 영토인 것을 배운다」』 중학교 사회과 역사적 분야 및 공민적 분야에서 활용 하도록 한 8쪽의 리플릿. 근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 죽 도와 일본과의 관계와 죽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 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죽도가 우 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근거,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민 여론의 환기가 중요하다는 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8쪽
2012년 11월	『고향 독본 「더욱더 알고 싶은 시마네의 역사」』 소학교의 역사학습에서 활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 료.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시마네현내 각지의 역사와 문화를 22개의 주제로 기술한 것 중에 「근세 이후의 죽도, 울릉도」라는 제목으로 에도시대부터 제2차 세계 대전까지의 죽도, 울릉도와 일본의 관련성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66쪽
2015년 3월	『영토에 관한 교육 핸드북』 영토와 영토문제에 관한 기본사항과 영토에 관한 교 육을 추진함에 있어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개념 론」, 학년의 발전단계에 맞는 수업 등의 실천과 교내 연수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는 「사례편」, 수업과 계발 에 활용하는 「자료편(DVD)」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례는 지금까지 시마네현내에서 시행한 실천에 근거 한 것이며, 각 사례가 1-2시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자료편에는 「고향 오키」의 죽도에 관한 학습 부분 도 게재하고 있다.	
2017년 6월	『죽도학습 리플릿 「죽도-일본 영토인 것을 배운다」』 중학교 사회과 역사 및 공민에 활용하도록 제작. 2012년 2월 제작한 리플릿의 개정판	8쪽 내용 보완

특히 중학교 이상에서 사용하는 『영토에 관한 교육 핸드북』에서는 영토와 영토문제에 관한 기본개념을 우선 확인하는 「개념론」, 학년의 발전 단계에 맞는 수업 등의 실천과 교내연수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는 「사례편」, 수업과 계발에 활용하는 「자료편(DVD)」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시마네현내에서 실시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각 사례가 1~2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토에 관한 교육 핸드북』과 『죽도학습 리플릿 「죽도~일본 영토인 것을 배운다」』는 이미 다른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교육자료로 응용되고 있기도 하다.

3.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2015년 『교육과정』 독도관련 기술 비교

1)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소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개정『학습지도요령』이 2017년 3월 31일 확정·고시되었고, 고등학교 개정『학습지도요령』은 1년 뒤인 2018년 3월 30일 확정·고시되었다. 소학교의 경우 이 개정 『학습지도요령』 2년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20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며, 중학교의 경우 3년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21년도부터 전면 실시된다.

이러한 일본의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으로 사회과 교과목에서의 독도 기술은 자국중심주의적 영토교육의 내용 구성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독도와 센카쿠(다오위다오),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유의’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¹⁰⁾이 나오자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10) 일본을 둘러싼 영토문제에 대해 ‘고유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다수 존재한다. 독도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나이트 세이쥬(2008), 다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으로 개념을 수정한 것이다.¹¹⁾ 독도와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점거 되고 있으며, 자국이 실효지배 하고 있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듭 항의를 하면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제는 독도 ‘왜곡’ 교육을 몇%나 실시하고 있다든가 하는 비판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초중고 모든 학교교육현장에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그림1〉 개정『학습지도요령』에 언급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의 독도(죽도) 기술의 내용 구성

중학교 사회과
<p>[공민적 분야] 「D. 우리와 국제사회의 제과제」 (1)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의 증대」</p> <p>영토(영해, 영공을 포함)에 대해서는 지리적 분야에서의 「영역의 범위와 변화 및 그 특성」, 역사적 분야에서의 「영토의 확정」 등 학습의 성과를 고려하여, 국가 간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유의 영토인 죽도(독도)와 북방영토 (하보미아군도, 시코탄섬, 구나시리섬, 에토로후섬)에 관하여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영토문제의 발생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위, 및 도항과 어업, 해양자원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가 행해지거나, 그중 과거에는 일본측에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점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 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향해 노력</p>

케우치(2013), 池内敏(2006, 2016), 박병섭(2018) 등이 있으며, 개정『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반 일본 국민의 의견에서도 제기되었다.

11) 원래는 “예로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입장에서 개념 규정을 수정한 것임.

하고 있다는 점을 국가주권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지리적 분야] 「영역의 범위와 변화 및 그 특징」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미아군도, 시코탄섬, 구나시리섬, 에토로후섬)에 대하여,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죽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는 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들 영토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취급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분야] 「영토의 확정」

「영토의 확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확정을 비롯하여 류큐의 문제와 홋카이도 개척을 취급한다. 여기서 북방영토(하보미아군도, 시코탄섬, 구나시리섬, 에토로후섬)가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국경확정이 되었던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죽도,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도 언급하고**, 이들 영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소학교 사회과



제5학년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 국토의 구성, 영토의 범위」

영토의 범위에 대해 지도할 때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미아군도, 시코탄섬, 구나시리섬, 에토로후섬), **센카쿠열도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죽도와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는 죽도에 관해 대한민국에 대해 거듭 항의를 하고 있다는 점**, 북방영토에 대해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더욱이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유효하게 실효지배하는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도록 한다.

이때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우선 초등학교(소학교)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 국토의 구성, 영토의 범위」에서 「영토의 범위」를 지도할 때에 독도(죽도)와 남쿠릴열도, 센카쿠열도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고, 현재 한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독도와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과 거듭 항의와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바탕 위에 중학교 사회과 교과에서는 「지리적 분야」에서 「영토의 범위와 변화 및 그 특징」과 「역사적 분야」에서 「영토의 획정」에서 영역의 변화와 국경획정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 및 역사 분야에서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공민적 분야의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의 증대」에서는 영토문제에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국가의 주권과 관련하여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예로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개념 규정이다.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혼란이나 국내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방어막으로 장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이전(기존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북방영토에 대해서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언급을 했을 뿐 「독도(죽도)」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었던 것이 일본의 영토문제와 그 획정 부분에서 명확히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각 사회과 분야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3월 30일 확정·고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서는 이들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양적으로도 많은 사항들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학교사회과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에 대해 분야별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사회과 개정『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 내용

[공민적 분야(정치경제·사회)] 「A.영토문제의 현상과 요인 (1)국가 주권과 영토」

“국가주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국제법의 의의,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관해서는 관련시켜 취급하고,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竹島)와 북방영토에 관해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거론한다. “국가주권, 영토(영해, 영공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방위”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관련시켜서 취급한다. “국제공헌”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지리적 분야] 「B.현대세계의 지역구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도 (1)일본의 위치와 영역」

또한 일본의 국민국가의 형성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한다. 그 때, 북방영토를 언급하는 것과 함께, 죽도(竹島),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영토 문제의 현상이나 요인,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룰 때에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 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는 것과 함께, 죽도(竹島)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한다. 그 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룬다.

[역사적 분야] 「영토의 획정」

메이지 유신과 국민 국가의 형성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한다. 그 때,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함께, 죽도(竹島),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하도록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학습에서는, 이 전쟁이 인류 전체에 참화를 미친 것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제사회의 실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영토의 획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일

본이나 세계의 역사적인 변화와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지리적 분야’에서는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영역의 확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독도(죽도) 등 영토의 편입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토문제의 현황과 그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문제와 해양국가의 특색과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며, 독도와 남쿠릴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영역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론한다. 그러나 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타국이 지배하는 영토에 대해서는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면서도 자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중의 잣대를 여기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역사적 분야’에서는 메이지유신의 시기에 있었던 국민국가의 형성 등에서 「영토의 확정」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도(죽도)의 편입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학습과정을 통해 인류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과 민주적인 국제사회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세계의 영역과 관계성 등이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영역확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영역 확정의 역사적 경위와 그 타당성이라는 측면¹²⁾에서 영토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 등 ‘공민적 분야’에서는 「국가주권과 영토」에 관한 항목에서 다루고 이에 관한 국제법적인 의의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관련시켜 학습하도록 하며, 독도에 대해서는 ‘미해결의 문제’를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거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

12) 다시 말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임.

러 국가주권과 안전 보장에 대해 국제법과 관련시키고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의 국제공헌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교과 및 과목 구성을 개편하였는데 지리총합, 역사총합, 공공(公共) 등 3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하고, 세계사와 윤리는 영토교육 과목에서 제외되고 현대사회 과목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¹³⁾ 고등학교의 개정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기술은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체계 위에 그 연장선상에서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과 ‘고유영토’→‘불법점거’→‘항의’→‘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프레임을 견지하면서 일본은 어디까지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문제에 대한 주장을 국제법에 기초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대로 상대국은 이러한 일본의 정당한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면서도 평화적인 주장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도의 경우 “한국이 무력에 의해 불법점거하고 있으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가 자연스레 씌워지게 되고 이러한 자국중심적 프레임이 미래의 일본과 한일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표5> 개정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의 핵심 내용 비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5학년)	일본 고유의 영토	지리	일본 고유의 영토	지리총합	일본 고유의 영토
				지리탐구	일본 고유의 영토
		역사	독도 영토편입	세계사탐구	(언급 없음)
				역사총합	독도 영토편입
				일본사탐구	독도 영토편입
		공민	평화적 해결	공공	평화적 해결
				윤리	(언급 없음)
				정치경제	평화적 해결

주: 홍성근·서종진(2018)에서 인용

13) 구체적인 것은, 앞의 홍성근·서종진(2018), pp.40-44.를 참조.

그렇지만 일본의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그 내용체계가 간단명료하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일본의 영역’으로서 ‘영토문제’를 인식하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우선 지리에서 「영역의 확장」이라는 공간적 인지와 영토가 된 역사의 학습과 그 당위성,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고등학교에서는 지리 영역에서 공간적인 「영토의 범위」와 영토편입 과정과 역사적 경위를 배우고 영토문제의 국제적 판례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 및 해결방법 모색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정당성을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과 비추어 검토하고 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해 갈 것이라는 것이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독도 기술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죽도의날」(2005.3.16.) 지정으로부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첨예화된다. 그것이 「죽도문제연구회」의 발족,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게재, 2010년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죽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도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담기게 된다.¹⁴⁾ 그러한 가운데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바로알기』, 경상북도교육청의 『독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독도』 등의

14)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시기에 독도 접안시설을 건설하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슈화되어 가던 시점에서 차세대의 독도 영유권 인식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입장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독도 교육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1997년의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내용에 독도 교육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들어갔다. 이후 2007년 교육과정, 2009년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의 독도 기술 내용과 분량이 구체화되고 강화되어 왔음. 허준, 「교과서 독도 기술과 중등독도교육의 사례-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7차교육과정-2015개정교육과정)-」, 독도와역사연구회 발표자료, 2020.5.15.을 참조.

부교재가 개발되어 최근의 개정판까지 이르고 있다.¹⁵⁾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2016년 ‘독도교육주간’을 설치하여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고 학생 및 교사들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지’ 강화를 위해 「독도 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¹⁶⁾ 이에 따르면 독도 교육은 「2015 교육과정」에서 10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또한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내용이 확대되었다.¹⁷⁾ 이렇게 하여 2009 교육과정에서 2015교육과정에의 변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 학습자료: 독도교육(초중고)』(2019.2.)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는 초중고등학교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의 검토를 통해 독도 기술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국토 개념 이해’ 및 ‘독도 이해 및 사랑’이란 내용 요소에서 독도가 다루어지고 있다. ‘국토 개념 이해’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역을 이해하고 독도가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 이해하기, 독도의 고유한 자원과 일본의 독도 침탈 목적 파악하기 독도를 알리는 홍보물 만들기 등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도 이해 및 사랑’에서는 독도를 지킨 사람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이해하기, 세계시민의식과 생태의 지속가능성 관점, 세계시민윤리의 관점에서 독도문제 바라보기, 독도의 자연경과 조사하기, 독도 사랑을 표현하는 음악 알아보기 등으로 학습내용이 채워져 있다(<표 6>을 참조).

15) 동북아역사재단의 초중고 『독도바로알기』는 제4개정판이 2016년 4월에 발행되었음.

16) 앞의 이우진(2017), p71-72.

17) 앞의 이우진(2017), p.72.을 참조.

<표6> 초등학교 독도교육 주요내용(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

내용 요소	주요 학습내용 개관
국토 개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를 놓고 지도의 기본 요소 찾아보기 기본 요소들에 비추어 국토 탐색하기 지도나 그래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실정보 파악하기 영상 자료를 활용해 독도의 아름다움 감상하기 백지도 완성하기 지형 모형 제작을 통해 국토의 지형 특성 탐색하기 등고선을 이용하여 독도 모형 만들기(프로젝트형)
독도 이해 및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에 사는 동물을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독도와 관련된 인물 조사하기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 알리기 우리 영토인 독도 소개하기 독도를 나타내는 상징물 만들기(가정·지역사회 연계형) 독도 탐험하기(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

<표7> 초등학교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요소(예시 자료)

교과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관련 정도 (○, △)	자료 개발
학교급/ 학년(군)	교과	성취 기준 코드	성취기준	교과 내용요소	세부 내용요소	학습활동	시수		
초 1-2	통합	2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	국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의 상징과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 만들기 국토와 전통 문화에 관심 가지기 	3	△	
초 1-2	통합	2슬08-03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동물 흉내 내기	국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에 사는 동물 흉내내기 놀이에 참여하기 	2	○	
초 3-4	국어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감상	국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있는 독도 전시관(또는 독도를 소재로 다룬 영상)을 찾아 독도의 지형, 문화, 생물 등을 체험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리는 편지 쓰기 	2	○	
초 3-4	사회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 경험을 나누는 태도 갖기	국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읽고 느낀 점 표현해보기 자료 내용에 대한 진실을 찾아 친구에게 설명해보기 	2	○	
초 5-6	국어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토의하기(의견 조정)	국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사회자, 토론자, 판정단, 청중 등을 설정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 실행하기 	3	○	

※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맵 자료는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에듀넷티-클리어(edunerT-CLEAR)」에 탑재되어 있음.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별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에 맞춘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을 보면, 독도에 사는 동물 흥내내기, 독도 전시관을 찾아 독도의 지형, 생물, 문화 등을 체험하기 등이 각기 1-2학년 및 3-4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또한 3-4학년의 사회에서는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읽고 느낀 점, 자료의 진실을 찾아 친구에게 설명해보기가 담겨져 있고, 5-6학년 학습주제로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토론자, 판정단 등에게 바른 내용을 설명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구성한 감이 적지 않지만 학습활동 내용이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기본적 논리를 담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과연 예비 지식이 별로 없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구성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표6>, <표7>을 참조). 그렇다면 이것을 중학교 학생들에게 확장해서 제시한 것을 살펴보자.

우선 중학교 독도교육 주요내용에서 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의 학습내용을 보면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영역 확인하기, 독도의 위치와 가치 확인하기, 독도의 자원 확인과 일본의 독도 침탈 목적 확인하기, 독도를 알리는 홍보물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요소 ‘독도 이해 및 사랑’에서 학습내용도 보면 초등학교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초등학교의 학습내용을 나열해놓은 느낌이 든다.

<표8> 중학교 독도교육 주요내용(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

내용 요소	주요 학습내용 개관
국토 개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에서 우리나라 영역 확인하기 • 독도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과 가치 이해하기 • 독도의 고유한 자원과 일본의 독도 침탈 목적 파악하기 • 지역 브랜드로 독도 알리기(가정·지역사회 연계형) • 독도를 알리는 홍보물 만들기(프로젝트형)
독도 이해 및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를 지킨 사람들 알아보기 •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 이해하기 • 일본이 독도를 불법 점령한 이유 파악하기 •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독도문제 바라보기 •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독도 바라보기 • 세계시민윤리의 관점에서 독도문제 바라보기 • 독도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조사하기 • 독도 사랑을 표현하는 음악 즐기기

<표9> 중학교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요소(예시 자료)

교과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관련 정도 (○, △)	자료 개발
학교 급/학 년(군)	교과	성취 기준 코드	성취기준	교과 내용요소	세부 내용요소	학습활동	시수		
중	국어	9국01 - 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토론하기 (논박)	국토 개념	-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논박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일본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 논리적인 주장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급의 게시판에 전시하기	3	○	
중	국어	9국02 - 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표현 방법과 의도 평가하기	국토 개념	-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매체 자료를 읽고(보고) 분석한 후 모둠별로 올바른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작성하기	2	○	
중	사회	9사(지리) 11-01	우리나라의 영역을 지도에서 파악하고, 영역으로서 독도가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한다.	우리나라 영역	국토 개념	- 우리나라의 영역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그려보기 - 국가 영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2	○	○
중	사회	9사(지리) 11-02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특징을 조사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등 지역화 전략을 개발한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	국토 개념	-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특색과 가치에 대해 조사하기	1	○	○

중	사회	9사(지리) 11-03	세계 속에서 우리 국토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 우리 생활의 변화를 예측한다.	위치와 인간생활, 우리나라 영역	국토 개념	- 독도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을 파악하고, 통일 이후 독도의 위상 변화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예측하기	1	△	○
---	----	-----------------	---	-------------------	-------	---	---	---	---

※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맵 자료는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에듀넷·타·클리어(edunet·T·CLEAR)」에 탑재되어 있음.

그 예시자료로 나타낸 것이 <표9>이다. 우선 중학교 국어교과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학습활동 내용의 지침을 보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논박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일본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언론 매체를 보고 분석한 다음 올바른 정보의 자료를 작성하기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과 교과에서 우리나라의 영역을 지도에서 파악하고 독도가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국가 영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세계 속에서 국토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과 통일 이후의 독도의 위상을 예측하기 등으로 학습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독도 교육의 내용도 초등학교에 비해 다소 난이도를 올린 느낌이 있지만 거의 같은 수준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에서 독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로 하자. 우선 ‘국토 개념 이해’에서 지도를 통해 독도의 가치 알아보기, 고지도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기, 한반도와 독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이해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요소 ‘독도 이해 및 사랑’에서는 미술, 퀴즈, 상품 만들기과 여행을 통해 독도 사랑하기, 일본의 불법편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이해하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의도 파악하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자료로 반박하기, 환경과 윤리의 관점에서 독도 바라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눈높이라고는 하지만 고지도와 고문서 통해 독도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과정에서 식상해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을까? 보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유도해서 독도에 대한 특정 사안을 조사하고 정

리하게 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이나 해법을 찾게 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든다.

〈표10〉 고등학교 독도교육 주요내용(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

내용 요소	주요 학습내용 개관
국토 개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를 통해 독도의 가치 알아보기 • 고지도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기 • 한반도와 독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 이해하기
독도 이해 및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작품으로 독도 표현하기 • 환경에 대한 책임 윤리의 관점에서 독도 바라보기 • 세계시민윤리로 바라본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바라보기 •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이해하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자료로 반박하기 •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의도 파악하기 • 부모님과 함께 하는 독도 여행 계획 세우기(가정·지역사회 연계형) • 독도를 상징하는 상품 만들어 판매하기(프로젝트형) • 우리 땅 독도 사다리 퀴즈 게임하기(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

〈표11〉고등학교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요소(예시 자료)

교과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관련 정도 (○, △)	자료 개발
학교 급/학 년(군)	교과	성취기 준 코드	성취기준	교과 내용요소	세부 내용요소	학습활동	시수	
고 선택	한국 지리	12한지 01-02	고지도와 고문헌을 통하여 전통적인 국토 인식 사상을 이해하고, 국토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독도 이해 및 사랑	- 지리적·역사적 자료를 통해 독도 주권 및 동해 표기 문제 등의 의미와 중요성 파악하기	1	○
고 선택	한국 지리	12한지 01-01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영역으로서 독도가 지닌 가치와 중요성	독도 이해 및 사랑	- 독도에 관련된 다양하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 정리, 확인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영토 의식을 함양하기	1	△
고 선택	한국 지리	12한지 01-01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독도 주권	독도 이해 및 사랑	- 독도의 주요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본인의 고장에서 독도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조사하기	1	△
고 선택	해양 문화 와 기술	12해양 01-04	영해로서 해양의 가치를 알고, 독도의 가치를 파악하여 우리의 국토로 지킬 방안을 마련한다.	독도의 가치	독도 이해 및 사랑	- 독도의 주요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본인의 고장에서 독도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조사하기	1	△

고 공통	한국 사	10한사 05-04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이해한다.	일제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	독도 이해 및 사랑	-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독도를 상징하는 상품을 제작·판매하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 키우기	5	○	
---------	---------	---------------	---	----------------------	------------	---	---	---	--

※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맵 자료는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에듀넷-T-클리어(edunet-T-CLEAR)」에 탑재되어 있음.

다음으로 고등학교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선택교과인 한국지리에서 고지도와 고문헌을 통해서 국토 인식 사상을 이해하고 변화과정을 설명하며,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양문화와 기술 교과에서는 영해로서 해양의 가치를 알고 독도의 가치를 파악하여 우리 국토로 지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춘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학습내용도 독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독도 가는 다양한 경로 조사하기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공통과목인 한국사에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의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이해하고, 이와 연계한 범교과 학습주제로는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품을 제작하면서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확인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는 있다고는 하지만 독도 관련 학습 콘텐츠가 나열되어 있다. 각각의 학습행위가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목별로 상호 연계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체계로 학습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느낄 수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의 ‘독도교육’에 대한 맞대응의 독도교육에서 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수준이나 눈높이가 무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지니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자연스런 독도에 대한 학습과 정보수집 장치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할 것이다. 이미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독도교육 내용 체계화 작업

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들 또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독도 교육의 기본 이념과 방향성이라는 틀이 여전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제는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교육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독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명료한 기본 논리를 정리하고 이를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개념을 키워나가는 교육의 전략적 사고 혹은 이론적 장치가 우선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2019년 3월 26일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됐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 9종 모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이들 교과서는 1년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내년 2020년 4월부터 학교교육 현장에서 사용된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일본 문부성이 2017년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기술을 주문한 이후 첫 검정결과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모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것으로 왜곡된 역사교육은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일뿐더러 미래세대들에게 ‘한국의 불법점거’ 등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향후 악화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고, 독도

교육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각 과목의 독도기술이 일본 외무성의 공식 논리와 연계되어 ‘영역의 이해’에서부터 ‘국제법적 해결’이라는 논리구조로 체계화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간결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도 필요하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늘어났다. 2016년 ‘독도교육주간’ 실시 이후,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별로 그 내용이 확대되고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초·중고 「범교과 교육과정: 독도교육」을 보면 학교급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심화되는 과정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이 각각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의 독도기술 강화를 통해 첨예하게 평행선을 이어가는 느낌이 든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의 논리를 명쾌하게 무력화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의 논리를 간결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독도 부교재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화경, 「일본의 독도 교육 실태와 전망」, 『일본의 독도 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응 방안』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pp.51-65.
- 남상구,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1.9, pp.176-209.
- 송휘영, 「일본 독도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검토」, 『일본문화학보』 제64집, 2015.2, pp.481-502.
- _____, 「일본 시마네현 독도정책의 동향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6집 제2호, 2015.2, pp.67-93.
- 심정보,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 학회지』 제16권 제3호, 2008, pp.179-200.
- 이우진,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나타난 초등학교 독도 기술의 변화」, 『교육연구』 60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pp.81-98.
- _____, 「‘독도 교육’의 측면에서 본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교일본학』 Vol.40,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7, pp.69-94.
- 홍성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4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7.12, pp.45-68.
- 홍성근·서종진,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6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8.12, pp.30-57.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 독도교육(초등학교)』 2019.2.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 독도교육(중학교)』 2019.2.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 독도교육(고등학교)』 2019.2.
- 日本文部科学省, 『小学校学習指導要領』および『学習指導要領解説』, 2017年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7014.htm)
- 日本文部科学省, 『中学校学習指導要領』および『学習指導要領解説』, 2017年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7016.htm)
- 日本文部科学省,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および『学習指導要領解説』, 2018年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1407074.htm)

日本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 <http://www.mest.go.jp>

日本外務省ホームページ: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日本内閣官房、領土主權対策企画調整室ホームページ: <https://www.cas.go.jp/jp/ryodo/ryodo/takeshima.html>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about Dokdo Description on the Revised *Teaching Guidelines and the Curriculum*

Song, Hw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trends of Dokdo education in both Korea and Japan countries and to compare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of Dokdo education as a basic frame. Based on this, I tried to fi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Dokdo education in Korea.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n the case of Japanese 『teaching methods』, Dokdo descriptions in each subjec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ocial studies are systematized from 'understanding of the domain' to 'international legal solution' in connection with the official logic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he 「Dokdo Education」 in our 『curriculum』,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the frame that can point out that the Japanese claim of Dokdo sovereignty is a fiction. Second, the Dokdo-related description has increas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compared to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ough the 「general subject curriculum: Dokdo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as organiz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ach school, bu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systematically by the process of deepening to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ccording to the level of students. Third, it looks that the two countries are continuing parallel lines sharply through strengthening Dokdo description in the 『

curriculum』 and 『teaching guidelin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learly break down the logic of Japanese distorted Dokdo education and to simply recognize our logic that “Dokdo is our own territory.”

This work should be preceded by the systematic reorganization for rather easier way of Dokdo supplementary materials issued by various institutions.

Key words: Teaching Guidelines, Curriculum, Dokdo learning, territorial rights, describing the Dokdo

이 논문은	2020년 5월 1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

일반논문



1696년 안용복·뇌헌 일행의 도일과 의승수군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이 태 우**

〈목 차〉

1. 머리말
2. 의승수군의 주진사(駐鎭寺) 흥국사
3. 의승수군의 규모 및 역할
4.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의 구성
5. 금오승장 뇌헌 관련 몇 가지 오해와 진실
6. 맺음 말

〈국문초록〉

숙종 임금과 영의정 남구만 등 조선정부 관리들은 국방정책과 변방관리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까지의 논문은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에 대해 안용복 개인의 주도적 기획에 따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리고 안용복의 2차 도일과 관련하여 『숙종실록』 1694~1697년의 기록을 비롯하여 에도시대 일본 고문서인 『원록9 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와 『죽도기사』 등에서 안용복과 함께 뇌헌 일행 5명을 포함 모두 11명이 도일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안용복과 동행했던 순천승(여수 흥국사) 뇌헌 일행은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수군이었으므로 이는 조선 정부로부터 모종의 지령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9S1A5B8A0 2103036)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twlee62@ynu.ac.kr

을 받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일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정규군인 관군이나 전라좌수영 수군이 아닌 승려 신분인 의승수군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정규군을 파견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뇌헌 등 5인의 흥국사 소속 의승수군들은 안용복, 이인성 등 민간인 소송단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송하는데 책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할 수도 있는 조선 정부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셋째, 이들 일행은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자산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 목적도 있었지만,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찰 또는 정탐 목적도 있었다.** 1696년 안용복과 함께 도일한 금오승장 뇌헌을 포함한 5명의 승려들은 ‘떠돌이 장사승’이 아닌 전라좌수영 산하 정규군인 의승장과 의승수군이였다. 결론적으로, 안용복과 뇌헌 일행은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조선정부의 특별한 임무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도일한 것이다.

주제어: 독도, 울릉도, 의승수군, 뇌헌, 안용복, 흥국사, 해석학

1. 머리말

안용복은 지금까지 독도를 지킨 위인, 영웅호걸, 장군 등으로 불리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국내 독도 관련 학술논문을 검색해보면 안용복과 관련한 논문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것이다.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안용복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독도영토주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는 일본에 대해 안용복은 넘을 수 없는 큰 장벽과 다름없는 존재이다.

반면에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죽도영유권론자들은 안용복을 눈에 가시처럼, 아킬레스건처럼 여기고 그의 인물됨과 행위를 폄훼하는데 진력함으로써, 안용복의 도일이 우발적이고 일탈된 개인의 영웅주의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17세기 후반 안용복은 두 번이나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마침내 조·일 양국의 울릉도쟁계를 통해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최종 인정받고,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을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이처럼 안용복은 독도영토주권을 확립한 상징적 인물로서 그의 공적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용복의 도일 관련 연구는 대부분 안용복 개인의 주도적 기획에 따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물론 1693년의 1차 도일은 의도치 않은 납치로 인해 안용복과 박여둔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1696년 2차 도일을 감행했을 때는 안용복을 포함해 11명이 함께 건너갔으며, 그 중에는 뇌헌을 포함한 5명의 승려들이 동행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기록은 에도시대 일본 고문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와 『죽도기사』 등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숙종실록』 1694~1697년의 기록에도 안용복과 그 일행의 도일과 관련한 사실들이 잘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안용복의 2차 도일과 관련해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①안용복의 2차 도일은 안용복 자신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것이며, 나머지 10명은 단순히 그의 기획에 따라 동행하고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②안용복이 순천승(여수 흥국사) 뇌헌 일행 5명과 뇌헌의 조카 이인성, 순천 낙안 사람 김성길 등의 주축 인물들과 협력을 통해 모종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일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인지?

①에 따르면 뇌헌 등 5명의 승려들은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떠돌이 상승으로 간주되어, 단순히 지휘자 안용복의 지시에 따라 도일에 따른 대가성 보상을 받는 수동적 참여자로 파악된다. ②에 따르면 뇌헌과 그의 제자 등 일행 5명은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수군으로서 뇌헌의 조카 이인성, 순천 낙안 사람 김성길 등의 주변 인물들과 협력해서 안용복과 함께 모종의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즘 말로하면 《울릉도·독도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TF팀》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배후에는 숙종과 남구만 등 조선정부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1696년 안용복의 도일과 관련한 문헌들을 보면 대체로 ①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안용복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①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①의 입장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에도막부가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정부에 인정하게 되지만, 도해 동기는 애초에 안용복과 그 일행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정책적 의도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 파악된다.

그러나 ①의 해석을 통한 안용복의 2차 도일에 대한 연구가 주류이지만, 우리는 ②의 해석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자연과학과는 달리 인문·사회과학(정신과학)에서 해석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이다. ②의 해석이 저자의 주관적 ‘선입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선입견’은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scher Zirkel)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¹⁾ 비록 현재는 ①의 해석이 주류 해석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사료가 발견되어 ②

1) W. 딜타이, 손승남 옮김, 『해석학의 탄생』,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참조; 해석학적 순환이란 전승된 어떤 텍스트 전체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텍스트의 부분들에 대한 해석에 의해 이끌리고, 역으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텍스트 전체의 의미에 대한 선취로부터 인도된다는 것, 말하자면 텍스트의 전체와 부분의 상호 규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해석학에서는 순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순환에 휘말려들어가 순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해석이 완성되고 이해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W, 딜타이, 이한우 옮김, 『체현·표현·이해』, 책세상, 2009. 130쪽.) 이때 ‘선입견’은 더 진전된 해석학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입견’을 진리인식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인식한다. 그러나 ‘선입견’이나 ‘전통’이라는 개념이 진리에의 길을 막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가졌던 ‘선입견’이나 ‘전통’을 고집해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입견을 고집하면 우리는 독단과 권위적인 주관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의 해석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안용복의 2차 도일과 관련한 학계의 주류 입장 즉 ①의 패러다임(정상과학=기존 학설)은 ‘변칙현상’과 ‘위기’의 출현(과학혁명=비판적 학설)과 함께 얼마든지 ②의 패러다임(새로운 학설)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²⁾

그렇다면 ②의 해석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①의 해석에 따르면 1696년 안용복의 도일은 안용복 개인의 일탈된 영웅주의에서 비롯된 행위로 영토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 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②의 해석에 따르면, 1696년 안용복의 도일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전라좌수영 소속 정규군인 의승수군을 투입한 것으로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영토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 의사를 표명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³⁾ 그렇다면 이러한 ②의 주장의 근거

2) 토마스 쿤, 김명자·홍성욱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2014(제4판 3쇄). 참조.

3) 안용복과 뇌헌 일행이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도일하였다는 필자의 주장과 유사한 견해들이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학자들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용복 밀사설**’로 수렴되고 있다(최영성, 『조선의 밀사 안용복』, 도서출판문사철, 2019 참조). ‘안용복 밀사설’과 관련한 선행연구들로는 권정, 「독도에 관한 일본 고문서 연구-『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을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38, 2011); 권정, 「숙종 실록 기록으로 본 안용복-안용복 진술의 타당성에 관해-」(『일본언어문화』19, 2011); 권정,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일본어문화』55, 2011); 권혁성, 「순천승 뇌헌의 일본 도해: 호국승으로서의 뇌헌」(『일어일문학』55, 2012); 권오엽, 「안용복의 호패」(『일본문화학보』64, 2015); 권오엽,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일본어문화』65, 2015) 등이 있다. 반면 안용복의 도일을 “**자신의 이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울분과 적개심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된 경우**”로 보거나(윤재환, 「약천 남구만이 바라본 안용복의 의미」, 『동방한문학』 제69집, 동방한문학회, 2016. 323쪽; 김병우, 「안용복 연구현황과 과제」, 『경주사학』34, 2011.12), 안용복의 2차 도일은 1차 도일 때 받은 냉대에 대한 항의 목적일 뿐이며, 안용복은 독도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케우치 사토시), 또는 “**안용복의 개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박지영, 「돛토리번 사료를 통해 본 울릉도 쟁계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25호, 2018.12. 243-244쪽) 도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유미림에 의해 다루어졌다. 유미림은 「안용복 밀사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로서 의승수군의 존재와 역할, 조직, 뇌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하 본론에서는 안용복과 뇌헌 일행의 1696년 2차 도일의 성격을 ‘의승수군’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의승수군의 주진사(駐鎭寺) 흥국사

여수 영취산 흥국사는 고려시대인 1196년(명종 26) 지눌(知訥)이 창건하였으며, 나라가 흥하면 이 절도 흥할 것이라는 흥국의 염원을 담고 있어 흥국사라 하였다고 한다. 즉, 변방의 국찰(國刹)로, 나라의 안정과 융성을 기원했던 기도처로, 불법 그 자체보다는 호국을 우선으로 창건된 호국사찰이다.

흥국사는 1696년 안용복과 뇌헌 일행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승려 뇌헌(雷憲)이 소속되어 있던 사찰이다. 『숙종실록』 30권 기록 <동래 사람 안용복 등이 일본국에서 왜인과 송사하고 돌아오니 잡아 가두다>에 따르면 뇌헌은 네 명의 순천승(現 여수 흥국사 승려) 제자들과 함께 안용복 등 총11명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송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 동행한 흥국사 소속 승려들의 명단을 보면 뇌헌(雷憲), 연습(連習), 승담(勝淡), 영률(靈律), 단책(丹責) 등 5명이다.⁴⁾ 뇌헌을 포함한 이들 흥국사 승려들에 관한 기록은 『숙종실록』과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이하 『원록각서』), 『죽도기사』

(『독도연구』27호, 2019.12, 123-161쪽)에서 ‘안용복 밀사설’을 두가지 설로 구분하여 ‘안용복 밀사’설-1: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 ‘안용복 밀사’설-2: ‘조선정부의 밀사 안용복’설로 구분한 후, 1의 논지(권오엽)를 수용하고 구체화한 2의 논지(최영성)를 검토하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판을 시도하였다.

4)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8월 29일 기사 참조; 『인변지』, 『죽도고』에서는 이들 5명을 ‘대솔승(帶率僧)이라 하였으며, 대솔이란 본디 한 집안에 딸린 식구란 의미다. 이는 승려 5명을 한 집단, 즉 의승수군 출신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다(최영성, 『조선의 밀사 안용복』, 도서출판문사철, 2019. 125쪽).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원록각서』 발견 초기에 원문 해석상에 오류가 있어 홍국사를 홍왕사로 잘못 해독함으로써, 홍국사의 위치에 대한 혼돈이 있기도 했다.⁵⁾ 순천부 홍국사, 즉 지금의 여수시 홍국사는 고려시대부터 현재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여수와 순천 일대에 홍왕사라는 절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다.

홍국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뇌헌 일행이 소속된 사찰이기도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약 300년간 의승수군이 주둔했던 주진사(駐鎭寺)였기 때문이다. 전남 여수시에 있는 홍국사는 호국사찰로서 임진왜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사찰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홍국사예의 의승수군 대장 자운과 옥형 두 스님이 승려 300여명을 이끌고 이순신 장군을 도와 수군으로 활약하게 된다. 홍국사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한 남해바다 노량과 인접해 있어서, 홍국사 승려들은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수군으로 투입되어 뛰어난 전과를 올리게 된다.

5) 『원록9병자년조선주작안일권지각서』는 2005년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창간호(233-288쪽)에 처음 탈초·번역 소개되었다. 원문(237쪽)과 탈초문(253쪽)에는 홍국사(興旺寺)로 되어 있으나, 번역문(291쪽)에는 홍왕사(興旺寺)로 오역되어 있어서 한동안 연구자들이 홍왕사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헤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원문의 ㅍ자가 ‘왕’이 아니라 國(국)의 고자(古字)인 ‘국’이라는 사실은 한자대사전이나 네이버 한자 사전 등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기에 뇌헌을 포함한 5명의 승려들이 소속된 사찰이 ‘홍국사’라는 것이 근년에 들어와서 확인되었다. 같은 오류가 『원록각서』(권오엽·오니시 토시테루 주해, 제이앤씨, 2009. 52-53쪽)에도 나타난다. 최근 정태상은 『원록각서』상의 ‘홍국사’와 ‘금오산’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시도하여, 이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연구성과를 발표한바 있다(정태상, 「안용복 2차도일 당시 순천승 뇌헌의 역할」, 『세계역사와 문화연구』54집,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20.4. 29-35쪽 참조).



[그림 1]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 유물전시관

임진왜란 당시 서산·사명 등 육지에서 활약한 승병들을 의승군이라 불렀으며, 흥국사를 주진사로 삼아 전라좌수영에 소속되어 수많은 해전에서 활약한 자운·옥형 등이 이끈 승병들은 의승수군(義僧水軍)으로 불렸다.⁶⁾ 즉 의승수군은 승려로서 임진왜란 때 수군에 참전한 의병들을 가리킨다. 임진왜란 이전의 시기에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승려들은 일반적으로 승군이라 하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정묘호란에 참전한 승려들은 그와 구별하여 의승군이라 한다. 흥국사에 의승수군유물전시관이라는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이 사찰이 임진왜란 당시 주진사였기 때문이다.⁷⁾

6) 진옥 편, 『호국의 성지 흥국사』, 흥국사, 2003(개정판). 71-77쪽 참조.

7) 이와 관련한 연구는 김덕수, 『임진왜란과 불교의승군』, 경서원, 1993. 291-330쪽; 김용태, 『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김용태,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동국사학』, 2016; 양은용, 「임진왜란과 호남의 불교의승군」, 『한국불교』19집,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4; 양은용, 「임진왜란 이후 불교의승군의 동향 -전주 송광사의 개창비 및 신출 복장기를 중심으로」,

홍국사가 다른 사찰에 비해 특별한 것은 공북루(拱北樓)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찰 배치구조상 공북루가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공북루는 성의 북쪽에 해당하는 데, 북쪽 성문은 성문의 북쪽에 임금이 있다하여 공북(拱北)이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홍국사도 승군이 있었으므로 성문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1893년 절도사 이봉호가 쓴 「홍국사공북루중수기(興國寺拱北樓重修記)」가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에 걸려 있던 현판도 남아 있어 19세기 말까지 홍국사에 의승수군이 주둔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즉 공북루는 일주문처럼 사찰의 문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북쪽 성문 위에 세워진 누각이다. 따라서 절의 출입문을 '공북루'라 불렀다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홍국사를 단순한 절이 아니라 군대 주둔지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임란 이후에도 홍국사는 의승수군의 본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전라좌수영 절도사의 군무 통제 하에서 17~18세기 홍국사에는 많은 때는 700여명에 이르는 승군이 머물렀다고 전해지기도 하나, 19세기 말까지 약 300년간의 기간 동안에 300명 내외의 의승수군들이 항상 홍국사에 진주하고 있었다. 홍국사 승군의 규모와 지위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승군들과 비교되는데, 홍국사 의승수군의 수장은 팔도도총섭의 직함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최고의 승군주둔지로 자리하면서 그 위상을 떨쳤던 곳이 홍국사이다.

3. 의승수군의 규모 및 역할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수군으로서의 승군은 전라좌수영과 홍국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4,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참조.

8) 진옥, 같은 책, 159쪽.

를 중심으로 한 의승수군이 처음이었다. 1592년 처음 400명이 조직되어 스스로 군량을 조달하고, 또 관군에 군량을 확보해주기도 했다. 이듬해에 다시 300여 명으로 정비되어 활동을 해오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전후의 수습에 힘을 기울였다. 임진왜란 후 의승수군들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엄한 군율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절도사의 승군에 대한 담화문인 「완문흥국사(完文興國寺)」(1653.11)의 내용 중에는 “본사 승도는 이미 성을 지키는 군졸인즉, **임의로 이주하는 것을 금하고 군율에 의해서 처벌한다.** 본사에서 삭발하고 다른 절로 이주하는 자는 대사(大師), 수좌(首座) 이외에는 소재지를 알릴 것이며, 일일이 소환토록 경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¹⁰⁾ 이는 의승수군 승려들이 임의로 주둔지인 흥국사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한 군령인 것이다. **이러한 엄한 군령에 의거해서 볼 때 안용복 일행을 신고 도일했던 선박과 금오승장 뇌헌과 그의 제자인 5명의 의승수군들이 상부의 특별한 지시나 허락 없이 주둔지인 흥국사를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의승수군이 전라좌수영 소속 군인이기에 이들 5명이 일본에 들어가는 것은 전라좌수사의 비밀 허가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¹¹⁾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전라좌수영 군영을 무단으로 이탈, 말하자면 탈영하여 안용복 일행과 합세하여 도일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순신 장군의 영향으로 임란 후에도 엄격한 군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전라좌수영 소속 군인들이 무단 탈영하여 일본을 다녀 온 후 체포되었지만, 안용복, 이인성을 제외하고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은 다시 전라좌수영 산하 흥국사 의승수군에 복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뇌헌을 비롯한 5명의 탈영병은 자대인 전라좌수영에 복귀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9) 진옥, 같은 책, 82-83쪽.

10) 진옥, 같은 책, 84-85쪽.

11) 최영성, 『조선의 밀사 안용복』, 도서출판문사철, 2019. 85쪽.

복무하였을까? 아마도 안용복 못지않은 처벌을 받아야만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승장 뇌헌일 것이다.

그런데 뇌헌은 1703년 홍국사 중수에 큰 역할을 하여 대웅전 공포 사이 벽면에 ‘뇌헌 비구’라는 시주자 그림과 이름이 올려져 있다.¹²⁾ 군대를 무단이탈하고 월경하여 국가적인 큰 물의를 일으킨 자를 조선조정의 왕과 대신들은 왜 죄가 없다고 석방해주었을까? 그리고 소속 부대로 복귀한 뇌헌 일행은 아무런 처벌 없이 홍국사 중창불사에 공헌하고 공적을 인정 받았을까? 미스테리한 일이다. 숙종과 영토확장주의 국방정책¹³⁾을 추구한 남구만 등의 목인이 없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따라서 “안용복 일행의 도일에 뇌헌을 비롯한 의승수군 5명이 동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도일이 조선 조정의 고위급 관리와 비밀리에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¹⁴⁾

12) 『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1703년) 및 본 논문 <그림2> ‘홍국사 대웅전 벽화에 있는 뇌헌 그림’ 참조.

13) 남구만의 영토수호와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은 그의 국방정책에 잘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강신엽, 「남구만의 국방사상」, 『민족문화』14, 한국고전번역원, 1991; 성당제, 「약천 남구만의 고토 회복의지」, 『한문학보』10, 우리한문학회, 2004; 이규철, 「약천 남구만의 북변 상소와 폐사군 · 厚州鎭 설치 논의」, 『한국인물사연구』26,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윤재환, 「약천 남구만이 본 안용복의 의미」, 『동방한문학』69, 동방한문학회, 2016.

14) 최영성, 같은 책. 129쪽.



[그림 2] 홍국사 대웅전 벽화에 있는 뇌헌 그림

그렇다면 조선 조정의 지시에 의해 안용복·뇌헌 일행이 도일했다면, 왜 승선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의 군인들을 정규군인 관군이나 좌수영 수군으로 구성하지 않고 승려 신분인 의승수군을 파견했을까?

그 이유는 ①정규군을 파견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 조정에서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알아서 건너간 것이라고 하면 조선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준군사적인 성격을 지닌 의승수군을 파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②이들 의승수군이 좌수영 수군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임진왜

15) 최재목·이태우·박지영·정태만 편,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거문도·초도 사람들』, 영남대 독도연구소 자료총서9, 도서출판 선인, 2019. 275-276쪽 참조.

란 당시 이들 의승수군은 해상전투에서 가장 첨병의 역할을 맡았다. 오늘날로 보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돌격대 또는 유격대, 해병대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뇌헌 등 5인의 **홍국사 소속 의승수군들은 안용복, 이인성 등 민간인 소송단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송하는데 책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할 수도 있는 조선 정부의 절묘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전라좌수영 소속 승장 뇌헌과 경상좌수영 소속 능로군¹⁶⁾ 안용복은 공통적으로 수군 소속 신분이었다. 이들 일행은 일본 에도막부에 울릉도·자산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 목적도 있었지만,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찰 또는 정탐 목적도 있었다.** 이미 조선정부는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병자호란(1636) 등 외적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국토가 유린되고, 국권이 침탈되는 치욕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국방을 강화해야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되풀이 되는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 일본의 재침 의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군인 신분이었던 이들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안용복과 뇌헌 일행이 도일한 것이다.

16) 안용복과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았던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그가 동래부(경상좌수영) 전선의 노를 젓는 일을 맡은 군사로, 진작부터 왜관을 출입해 일본어를 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증보문헌비고』권31, 여지고19에도 “동래의 안용복은 능로군으로 왜어에 능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물론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편찬한 『죽도고』(1828)에는 서울에 사는 오충추의 ‘사노비’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지금도 일본의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똑같이 안용복을 ‘노비 출신 사기꾼’으로 폄훼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인의 신분이 비천하다고 비판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취한 업적까지도 평가절하 하는 오류(‘인신 공격의 오류’)에 빠진 잘못된 추론이다. 안용복의 신분과 관련된 연구는 한일 양국의 문헌자료 비교를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되고 고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4.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의 구성

전라좌수영 산하의 의승수군은 육상전투를 이끈 휴정(서산대사)·유정(사명대사) 등과 같이 전국적 조직망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전라좌수군에 자원종군하며 이순신의 지휘에 따라 활동하였다. 이순신의 기록에 의하면¹⁷⁾

...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어 여러 사찰에 은닉한 승려들과 병적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적발하여 석주·도탄·두치 등지에 나누어 파수 보도록 하였더니, 승려들이 소문을 듣고 즐거이 모여들어 한 달 이내에 4백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 용맹과 지략을 가진 자들로 순천 사는 승 삼혜는 시호별도장, 홍양 사는 승 의능은 유격별도장, 광양 사는 승 성휘는 우돌격장, 광주 사는 승 신헌는 좌돌격장, 곡성 사는 승 지원은 양병용격장으로 정하고 ... 승장 삼혜·의능 등에게는 전선을 나누어 주어 수선하여 갈라 타고 바다로 나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은 주요부대의 보충이나 예비의 성격이 아닌, 자체적으로 부대를 통솔하여 능동적으로 전투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의 주요 임무는 오늘날로 보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돌격대 또는 유격대, 해병대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다. 전라좌수군으로서의 의승수군은 전라좌수영 인근에 있는 홍국사에 주둔하여 활약하였으며, 특히 삼혜(자운慈雲)·의능(옥형玉炯) 두 승장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임진왜란 이후부터 1894년 갑오경장으로 전라좌수영이 폐영되기까지 300명의 승려들이 상비군으로서 전라좌수군으로 편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17) 『이충무공전서』권3, 「分送義僧把守要害狀」.

18) 신윤호, 「『호좌수영지』를 통해 본 전라좌수군의 운영과 충무공 현창」,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3,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83-84쪽.

홍국사에 주둔해 있었던 전라좌수영 소속 승군의 조직은 처음부터 관군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유지되었다. 「완문홍국사」현판(1653)에 “승군을 영문에 전속시키면 승군들이 반대하고 승군을 줄이면 승군 본래 창설 취지에 위배되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그 후에도 1729년의 「봉황대루상량문」에 승군대장 3명과 승병 300여명, 1779년에 기록된 「수성비」에도 승군 300여명, 1780년의 「선당수습상량문」에도 승장 3인과 300여명의 승병, 1803년의 「적목당상량문」에도 300여명의 승병, 1812년의 「심검당상량문」에도 300명의 명단 등을 볼 때 임진왜란이 끝난 1598년 이후 1812년까지 적어도 300여명의 승군편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수군은 홍국사를 중심으로 20여개의 산내 암자에 분산해 있으면서 수행과 호국의 책무를 병행하며 300여 년 간 존속하였다.¹⁹⁾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수군이 300여 년간 존속해왔음은 1815년에 간행된 『호좌수영지(湖左水營誌)』(해군사관학교본)과 1847년에 간행된 『호좌수영지(湖左水營誌)』(규장각본)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호좌수영지』에 따르면 전라좌수영의 편제와 좌수영 시설 내에 의승수군이 하나의 단위부대로서 운영되고 있었음을 잘 확인할 수 있다.²⁰⁾

19) 진옥, 같은 책, 86-87쪽.

20) 의승수군이 전라좌수영에 편제되어 실제 전투부대로 약 300년간 운영되어 온 사실은 『호좌수영지』(해사본-1815), 『호좌수영지』(규장각본-1847)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송은일, 「『호좌수영지』를 통해 본 전라좌수영의 편제와 시설」,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3,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47-73쪽; 신윤호, 「『호좌수영지』를 통해 본 전라좌수군의 운영과 충무공 현창」,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3,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74-97쪽.

문헌별 전라좌수영 군사편성의 비교²¹⁾

(단위: 명)

구분	만기요람 (1808)	호좌수영지 (해사본-1815)	호좌수영지 (규장각본-1847)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1	1	1
우후(虞候)	1	1	1
대솔군관(帶率軍官)			9
화사(畫師)			1
한학(漢學)			1
왜학(倭學)			1
대변군관(待變軍官)	170	170	338
원군관(元軍官)			150
지구관(知設官)	2	3	
기패관(旗牌官)	60	65	18
수성천총(守城千總)		2	
파총(把總)		4	
집사(執事)		1	3
기고관(旗鼓官)		1	1
초관(哨官)		8	5
군관(軍官)		600	711
중군(中軍)			1
좌·우성장(左·右城將)			2
좌성 좌·우치총 (佐城 左·右雉總)			2
우성 좌·우치총 (右城 左·右雉總)			2
성장(城將)			8

21) 신윤희, 앞의 글, 80-82쪽 참조.

타장(垛長)			16
서기(書記)			7
영장(領將)			4
의승장(義僧將)		1	1
의승군(義僧軍)		300	300
...
능로군(能櫓軍)	673	189	673
...
총계	18,396명	35,196명	17,595명

이 표에 따르면 전라좌수영 군사들의 숫자는 평상시 17,000명에서 35,000명 정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승수군의 숫자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1700년대 홍국사 소장 각종 유물자료에서도 30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외에도 「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湖左水營守城創設事蹟碑)」(1779)²²⁾에도 의승군 300여명이 성을 지키고 보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1815년과 1847년에 각각 발간된 『호좌수영지(湖左水營誌)』에도 의승장 1명과 의승군 300명이 편성되어 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라좌수군 편성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호좌수영지』에 기록된 ‘의승군’인데, 좌라좌수군으로서 정규군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점이다.”²³⁾

또 하나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의승청(義僧廳) 건물’의 존재다. 『호좌수영지』 군사편성표에서 ‘의승장’과 ‘의승군’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또한 좌라좌수영 시설물

22) 이 비석에는 1779년 당시 좌수영의 여러 시설들의 개축 상황, 운영 경비의 마련 방안 및 수량, 그리고 의승군의 존재와 활동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여수시 연등동 376번지 소재).

23) 신윤희, 앞의 글, 82쪽.

인 관아 건물, 병영과 막사 등의 건물배치도에 기록되어 있는 ‘의승청’ 건물의 존재를 통해서도 ‘의승장’과 ‘의승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의승청’은 전라좌수영내 건물 진남관 등 82동의 관아 건물 중 하나로 군사와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⁴⁾ 11칸의 면적으로 된 이 건물은 주로 의승장이 행정과 군사업무를 보던 곳이었는데, 홍국사 소속 의승장은 홍국사에서 멀지 않은 이곳 좌수영으로 뱃길로 출퇴근하면서 주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금오승장 뇌헌’도 홍국사에서 이곳 전라좌수영 관아에 있는 의승청을 오가며 의승군과 관련한 군사와 행정업무 등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1696년 어느날 전라좌수영 소속 300명의 의승군 부대를 지휘 하던 ‘금오승장’이 제자 의승수군 4명과 함께 탈영을 하여 ‘떠돌이 장사승’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우연히 ‘사기꾼’ 안용복과 합세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영향 하에 군령이 엄격했던 전라좌수영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리고 엄격한 승단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뇌헌 일행이 이러한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상에서 볼 때 1696년 안용복과 함께 도일한 금오승장 뇌헌을 포함한 5명의 승려들은 ‘떠돌이 장사승’이 아닌 전라좌수영 산하 정규군인 의승장과 의승수군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안용복과 뇌헌 일행은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TF팀》을 구성하여 위에서 언급한 조선정부의 특별한 임무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도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미스터리한 안용복 일행의 2차도일의 성격은 금오승장 뇌헌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의승수군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풀려지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안용복의 2차 도일로만 주로 소개되었던 1696년의 도일 사건은 안용복과 뇌헌이 주축을 이룬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의 공동작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송은일, 앞의 글, 6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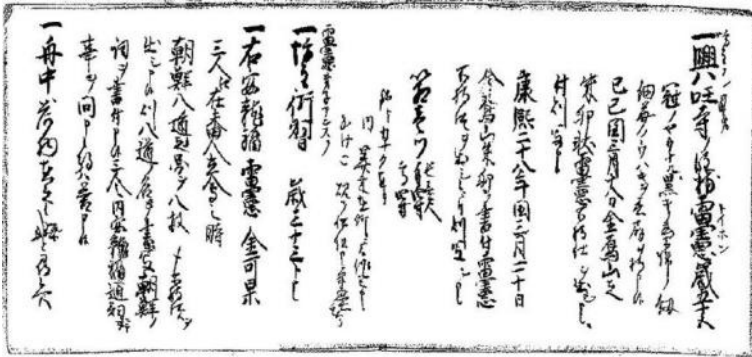
물론 이들의 배후에는 굳건한 영토수호의지를 가졌던 숙종 임금과 남구만 등의 주체적 국방론자들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 금오승장 뇌헌 관련 몇 가지 오해와 진실

이제 금오승장 뇌헌이란 인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고찰해보도록 하자. 승려 뇌헌은 ‘떠돌이 장사승’으로서 안용복과 함께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도일한 것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지금까지 뇌헌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 뇌헌이란 인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뇌헌이 안용복·뇌헌 일행의 2차 도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Key)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뇌헌과 그의 제자들의 신분은 전라좌수영 산하 흥국사 소속의 의승수군이다. 특히 뇌헌은 그 중에서도 금오승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뇌헌 일행이 일본에 도착한 후 이들의 신상을 기록한 최초의 기록은 『원록각서(元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拳之覺書)』(1696)이다. 먼저 이 『원록각서』의 기록에 금오승장 뇌헌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원록각서』 중 뇌헌 관련 기록》



《『원록각서』 중 뇌헌 관련 기록》 번역문

[승려]

홍국사의 주지 뇌헌. 나이 55세다. 관과 같은 검은 갓을 쓰고, 목면의 끈으로 목에 매고 있었다. 결이 고운 상의를 입고 손에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 기사(원록 2년, 1689) 윤3월 18일부가 있는 금오산의 주인장(朱印狀)²⁵⁾을 뇌헌이 소지하고 있었다. 그것을 제출했기에 베껴두었다. 또 강희 28년(1689) 윤 3월 28일부의 금오산 주인의 서류도, 뇌헌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제시하자, 즉시 베껴두었다.

상자 하나가 길이 1척(30Cm), 폭 4촌(12Cm), 높이 4촌이고 그 상자에는 쇠붙이의 자물쇠가 붙어 있다. 안을 보니, 대나무로 만든 산목(算木)이 있고, 또 그 안에 작은 상자에 싸인 벼루가 있고, 붓과 먹도 있었다.

25)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증명서.

『원록각서』 원문과 번역문은 국내에서 2종류가 소개되어 있다.²⁶⁾ 안용복 일행의 2차 도일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자료는 번역과 해석상 몇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과 해석상의 오류는 뇌헌과 관련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뇌헌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안용복 일행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고, 결국 1696년 2차 도일의 의도나 목적마저도 왜곡되게 판단할 소지가 있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잘못된 번역과 해석은 뇌헌이란 인물을 결정적으로 왜곡하게 만들었고, ‘떠돌이 장사승’이란 왜곡된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안용복·뇌헌 일행의 도일 목적 자체를 왜곡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뇌헌에게 씌어진 ‘떠돌이 장사승’의 이미지를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하며, 이는 결국 안용복·뇌헌 일행의 도일 목적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우선 이 자료에서 뇌헌과 관련한 부분만 검토해보면, 몇 가지의 번역 및 해석상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해석상의 문제는 흥국사를 흥왕사로 번역하면서 연구자들로 하여금 많은 혼돈을 초래하였다. 각주5)번에서도 언급했듯이 『원록각서』 원문(영남대본 237쪽, 권오엽·오니시본 22쪽)과 탈초문(영남대본 253쪽)에는 흥국사(興旺寺)로 되어 있으나, 번역문(영남대본, 291쪽, 권오엽·오니시본 23쪽, 53쪽)에는 흥왕사(興旺寺)로 오역되어 있어서 한동안 연구자들이 흥왕사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뇌헌이란 인물 또한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금오승장과 의승수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밝히기 어려웠다. 결국 흥국사라는 명칭이 확인됨으로써 전라좌수영 - 흥국사 - 의승수군 - 금오승장 뇌헌으로 이어지는 퍼즐을 올바르게 맞출 수 있게 되었다.

26) 『원록9병자년조선주작안일권지각서』, 『독도연구』 창간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5. 233-288쪽; 권오엽·오니시 토시테루 주해, 『원록각서』, 제이앤씨, 2009. 참조.

두 번째 해석상의 문제는 대나무로 만든 산목(算木) 또는 산가지에 대한 해석이다. 이 대나무 기구에 대한 해석은 뇌헌을 ‘떠돌이 장사승’으로 왜곡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원록각서』 영남대 번역문(291~292쪽)은 “상자 하나 길이 1척, 폭 4촌, 높이 4촌, 방울 장식(자물쇠)이 있음. 안에 산가지(算木: 수효를 셈하는 기구)가 있는데,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산가지는 주판(珠板)과 같은 것임. 팔린 상자에 버루를 넣었는데, 붓과 먹이 있음”으로 번역되어 있고, 권오엽·오니시 번역문(53쪽)에는 “상자 하나가 길이 1척(30Cm), 폭 4촌(12Cm), 높이 4촌이고 그 상자에는 자물쇠가 붙어 있다. 안을 보니, 대나무로 만든 산목(주판)이 있고, 또 그 안에 작은 상자에 싸인 버루가 있고, 붓과 먹도 있었다.”로 번역하고 있다.

『원록각서』 원문에 나오는 산목(算木)이라는 글자를 두 가지 번역본 모두 대나무로 만든 산목 또는 산가지로 번역하면서, 이 산목의 용도를 계산에 사용하는 주판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로 이 해석에서 뇌헌이란 인물을 결정적으로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안용복 일행을 조사하던 일본 관리들이 뇌헌이 소지하고 있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대나무 산가지를 ‘산목’으로 기록하였고, 번역자들은 이 대나무로 만든 ‘산목’을 계산에 사용하는 대나무, 즉 ‘주판’과 같은 것으로 오역함으로써, 결국 뇌헌에게 ‘떠돌이 장사승’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뇌헌이 소지하고 있었던 산목, 즉 산가지는 계산을 하는데 사용된 주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주역 점을 치기 위한 점술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사실 대나무 산가지는 오랫동안 민간에서 점술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민중들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 오랜 세월 애용되어 왔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나 한문을 가까이 두고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주역 점을 보기도 했다. 타인의 운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한 운세까지도 이 산가지를 이용해서 예측하고자 했다.

일반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뇌헌을 비롯한 승려들도 이 대나무 산가지를 평소 점을 치는 용도로 이용했을 것이다. 물론 빈번하게 이 산가지

를 이용한 주역 점을 치지는 않았겠지만, 사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신도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한번 씩 사용했을 것이다. 일엽편주에 의지해 망망대해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야 하는 안용복·뇌헌 일행에게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폭풍을 피해 과연 무사히 일본에 도착할 수 있을지, 도착한 후에는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기 위한 일본정부와의 송사는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국사의 큰스님이며 의승수군장으로서, 안용복과 함께 일행의 항해를 지휘했던 뇌헌은 일행의 안전을 기원하고,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고비마다 이 산가지를 이용해 점을 쳤던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뇌헌에게 씌워졌던 왜곡된 이미지, 즉 ‘떠돌이 장사승’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안용복·뇌헌 일행의 2차 도일은 안용복 개인의 의분을 풀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떠돌이 장사승’ 뇌헌 일행과 합세하여 감행한 것이 아니라, 안용복과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수군이 협력하여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독도)의 영유를 확약 받고자하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히려 최근의 관련 연구에서는 안용복 보다 뇌헌이 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설도 제시되고 있다.²⁷⁾ 『원록각서』에는 안용복과 뇌헌, 김사과 3인 중 일본 관리와의 문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뇌헌이었으며, 안용복은 통역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약 이 기록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안용복은 통역을 하고 문답 내용을 주도한 것은 뇌헌이 된다. 뇌헌이 결코 안용복의 꾀에 빠져서, 또는 떠돌이 상승으로서 사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 일본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27) 정태상, 앞의 논문, 41-42쪽.

6. 맺음 말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일본학자들은 1696년 안용복 일행의 2차 도일에 대해 ‘노비 출신의 포악한 성격의 안용복과 뇌헌 일행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떠돌이 장사승들을 꺾여 함께 도일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학자들은 안용복을 노비 출신 사기꾼으로 폄훼하면서 안용복·뇌헌 일행이 1.2차 도일을 통해 성취한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 업적까지도 평가절하 하는 인신공격의 오류에 빠져있다. 이러한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조선정부 차원에서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관리하려 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주장이다. 오히려 국방정책과 변방관리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 숙종 임금과 영의정 남구만 등 조선정부 관리들은 행정적으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1693년 안용복의 1차 도일, 1694년 수토사 장한상의 울릉도 파견, 특히 1696년 안용복·뇌헌 일행의 2차 도일은 이러한 숙종 당시의 조선정부의 주체적인 국방정책과 영토 관리 의지가 강화되는 시기와 부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선 조정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그 후 정조 임금 때에는 이복휴에 의해 울릉외도(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비석을 세우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던 것이다.²⁸⁾

그런데 조선 조정의 지시에 의해 안용복·뇌헌 일행이 도일했다면, 승선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의 군인들을 정규군인 관군이나 좌수영

28) 정조 17년(1793년) 10월 1일 자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는 당시 예조 정랑이었던 이복휴(李福休·1729-1800)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건의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이복휴는 "신이 본조(예조)의 등록을 살펴보니 울릉외도는 그 이름이 송도(松島)로, 바로 옛날의 우산국입니다"라면서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나무사자로 섬사람들을 겁주어 항복을 받았습시다. 지금 만일 송도(독도)에 비를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그 섬이 우리나라 땅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건의했다.

수군으로 구성하지 않고 왜 승려 신분인 의승수군을 파견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 정규군을 파견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 조정에서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알아서 건너간 것이라고 하면 조선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뇌헌 등 5인의 홍국사 소속 의승수군들은 안용복, 이인성 등 민간인 소송단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송하는데 책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할 수도 있는 조선 정부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셋째, 이들 일행은 일본 에도막부에 울릉도·자산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 목적도 있었지만,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찰 또는 정탐 목적도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되풀이 되는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 일본의 재침 의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안용복과 뇌헌 일행이 도일한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1696년 안용복과 함께 도일한 금오승장 뇌헌을 포함한 5명의 승려들은 ‘떠돌이 장사승’이 아닌 전라좌수영 산하 정규군인 의승장과 의승수군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안용복과 뇌헌 일행은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위에서 언급한 조선정부의 특별한 임무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도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미스터리한 안용복 일행의 2차 도일의 성격은 금오승장 뇌헌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의승수군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풀려지게 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떠돌이 장사승’이라는 뇌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원록각서』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번역과 해석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이충무공전서』.
 『일성록』.
 『죽도기사』.
 『죽도고』.
 『증보문헌비고』.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독도연구』창간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5).
 『원록각서』(권오엽·오니시 토시테루 주해, 제이앤씨, 2009).
- 강신엽, 「남구만의 국방사상」, 『민족문화』14, 한국고전번역원, 1991.
 고영섭, 「조선 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72, 2014.
 권오엽, 「안용복의 호패」, 『일본문화학보』64,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
 ———,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 『일본어문학』65, 한국일본어문화회, 2015.
 ———·오니시 토시테루 주해, 『원록각서』, 제이앤씨, 2009.
 권 정, 「독도에 관한 일본 고문서 연구-『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38,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4.
 ———, 「숙종실록 기록으로 본 안용복 -안용복 진술의 타당성에 관해-」, 『일본언어문학』19,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1.
 ———,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일본어문학』55, 한국일본어문화회, 2011.
 권혁성, 「순천승 뇌헌의 일본 도해: 호국승으로서의 뇌헌」, 『일어일문학』55, 2012.
 김덕수 편, 『임진왜란과 불교의승군』, 경서원, 1993.
 김병우, 「안용복 연구현황과 과제」, 『경주사학』34, 2011.12.
 김용태, 『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동국사학』, 2016.
 박지영, 「돛토리번 사료를 통해 본 울릉도 쟁계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25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8.12.
 성당제, 「약천 남구만의 고토 회복의지」, 『한문학보』10, 우리한문학회, 2004.
 송은일, 「『호좌수영지』를 통해 본 전라좌수영의 편제와 시설」, 『충무공 이순신과

- 한국해양』3,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 신윤희, 「『호좌수영지』를 통해 본 전라좌수군의 운영과 충무공 현장」,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3,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 양은용, 「임진왜란과 호남의 불교의승군」, 『한국불교』19집,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4.
- , 「임진왜란 이후 불교의승군의 동향 - 전주 송광사의 개창비 및 신출 복장기를 중심으로 -」, 『열린정신 인문학연구』4,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 유미림, 「‘안용복 밀사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독도연구』2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12.
- 윤재환, 「약천 남구만이 바라본 안용복의 의미」, 『동방한문학』69집, 동방한문화회, 2016.
- 이규철, 「약천 남구만의 북변 상소와 폐사군·후주진 설치 논의」, 『한국인물사연구』26,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 이 익, 최석기 옮김, 『성호사설』, 한길사, 1999.
- 정태상, 「안용복 2차 도일 당시 순천승 뇌헌의 역할」, 『세계역사와 문화연구』54집,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20.4.
- 진옥 편, 『호국의 성지 홍국사』, 우리출판사, 2003(개정판).
- 최영성, 『조선의 밀사 안용복』, 도서출판문사철, 2019.
- 최재목·이태우·박지영·정태만 편,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거문도·초도 사람들』, 영남대 독도연구소 자료총서9, 도서출판 선인, 2019.
- W. 딜타이, 손승남 옮김, 『해석학의 탄생』,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 W. 딜타이, 이한우 옮김,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2009.
- 토마스 쿤, 김명자·홍성욱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2014(제4판 3쇄).

<Abstract>

Hermeneutical Study on Ahn Yong-Bok, Noehun and their Party's arriving at Japan in 1696 and the Relation of Eui-Seung-Su-Gun

Lee, Tae-Woo

King Sukjong and Chosun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Nam Gu-Man, a prime minister of the Chosun dynasty, paid special attention to defense policy and guard the frontier area. The five monks including Noehun, the head of Gumo monk soldiers who went to Japan with Ahn Yong-bok in 1696, were not ‘the drifting merchant monk’ but the head of monk soldiers and regular monk soldiers(**Eui-Seung-Su-Gun**) under the Jeolla Jwasuyeong. The party of An Yong-bok and Noehun comprised “Civil and Official Task Force Team” for confirmation to the Korean-dominated Ulleungdo and Dokdo islands. And they went together to accomplish the purposes of special mission of the Chosun government. By the way, why did the Chosun government send Uiseungsugun, a Buddhist monk, instead of regular army or a Jeolla Jwasuyeong navy? The first reason is to avoid military and diplomatic disputes with Japan, which can be caused by the dispatch of regular troops. Second, the five members of Heungguksa Temple including Noecheon, were not only qualified to safely protect and escort civilian litigants such as Ahn Yong-bok and Lee In-Seong, but also the Chosun government's exquisite choice to avoid military and diplomatic disputes with Japan. Third, these party, from the Tokugawa shogunate of Japan, not only aims to be

proved that sovereignty over Ulleungdo and Dokdo is Korean, but at the same time they also aims at Japan's domestic spying or reconnaissance on the situation. The five monks, including Noecheon the head of Gumo monk soldier, who went with Ahn Yong-bok in 1696, were not 'the drifting merchant monk' but the head of monk soldiers and regular monk soldiers(**Eui-Seung-Su-Gun**) under the Jeolla Jwasuyeong. The conclusion is that The party of An Yong-bok and Noehun comprised "Civil and Official Task Force Team" for confirmation to the Korean-dominated Ulleungdo and Dokdo islands. And they went together to accomplish the purposes of special mission of the Chosun government.

Key words: Dokdo, Ulleungdo, Uiseungsugun, Noecheon(雷軒),
Ahn Yong-Bok, Heungguksa Temple, Hermeneutics

이 논문은 2020년 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일제강점기 일본어 자료에 나타난 ‘울릉도의 屬島로서의 독도’ 인식

윤 소 영*

〈목 차〉

1. 머리말
2.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일본역사지도』에 나타난 독도 인식의 맥락
3. 울릉도·독도 관련 일본어 저술의 검토
4. 시마네 현 사람들의 독도 인식
5. 맺음말

〈국문초록〉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기 이전, 일본의 지도와 역사지리교육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시대적인 특성상, 위와 같은 관점의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시기에 따라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속성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법제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영토화했다고 해도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인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와 독도 관련의 일본어 자료 속에 독도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2017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김남훈 독도 관련 기증자료 중,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역사지리부도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저술된 울릉도와 독도 관련 연구논문, 시마네 현 마쓰에 시 죽도연구소에서 필자가 직접 수집한 「죽도편입에 관하여」라는 문서군을 주목하고자 한다.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바 가즈모리(芝葛盛)의 『일본역사지도』(1922)에는 죽도(=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적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를 인지했음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地名의巨人’으로 불린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대일본지명사서』의 영향이 컸으며, 요시다 도고가 펴낸 『신편 일본독사지도』에 소개된 「한국병합 전후 일본영역도」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아가 시바 가즈모리의 관점은 연구 동료인 후지타 아키라(藤田明)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의 독도 관련 기술이 시바 가즈모리의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등의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에 비점함으로써 자연히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히바타 셋코(樋畑雪湖)는 직접적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단정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울릉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증언한 점, 독도가 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은 랑코도로, 조선인은 獨島라고 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지역의 소속과 명칭을 바꾸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간 인식은 이전의 방식과 습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23년 발간된 『島根縣誌』나 1945년 일본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대장에 ‘獨島’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의 존재감이 일본 측에도 인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작 독도를 영토 편제한 시마네 현에서는 1926년에 행정구역 개정으로 오키도가 폐지되고 오키지청이 수립된 후 독도 관련 행정 조치도 취해야 했지만 1953년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일본 측에서는 은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독도에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인식되었기에, 일본 측은 굳이 독도를 따로 떼어 내어 일본의 영토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는 그 행정적인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펴낸 저술에도 표출되었으며, 일본 측 공식 자료에도 ‘獨島’라는 명칭이 기록되었을 정도였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 죽도(竹島),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히바타 셋코(樋畑雪湖), 요시노 소(吉野操)

1. 머리말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905년 이전의 일본의 지도와 지리교육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¹⁾ 그러나 1905년 이후에는 독도를 일본의 신영토 다케시마로 일방적으로 편입 조치하고 시마네 현의 地方圖 속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²⁾ 이것은 일본 중앙의 지도 제작에도 반영되었다. 즉, 1908년에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사가 직접 조사하여 정정판으로 간행한 일본지도(120만분의 1지도)에는 오키 열도 서북방에 독도를 竹島라는 이름으로 작게 그려 넣었다.³⁾ 1925년에 모리야 수사비오(守屋 荒美雄)가 펴낸 『帝國精圖』의 제6도 「帝國區劃圖」에는 동해상에 울릉도와 竹島(=독도), 오키 열도를 표시하고 각각 울릉도는 경상북도, 竹島(=독도)는 시마네 소속임을 붉은 글씨로 적어 넣었다.⁴⁾

- 1) 유미림·최은석 『근대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윤소영, 「근대일본 관찬 地誌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46, 2013.12, 한철호,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 소학교 지리교과서의 縣 관할지 서술내용과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61, 2018.9, 한철호, 「일본내무성 지리국 출신 하타 세이지로(泰政治郎)의 오키·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90, 2019.9.
- 2) 오쿠하라 헤키운은 「죽도연혁고」(『역사지리』 제8권 6호, 1906.6)에서, 야마자키 나오마사(山崎直方) 등은 1907년에 펴낸 『대일본지지』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밝혔다. 그 후 시마네 현의 지리교육에서도 다케시마가 오키의 소관임을 교육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시마네 현의 지방도에는 독도를 竹島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박스를 만들어 지도 속에 표시했다. 윤소영, 위의 논문 및 독립기념관 소장 김남훈 기증 자료 중 시마네 현 지도류 참조.
- 3) 大阪毎日新聞社調査訂刻, 「大日本交通明細地圖」, 독립기념관 소장 김남훈 기증자료
- 4) 守屋 荒美雄, 『帝國精圖』, 제국서원, 1925, 제6도 「帝國區劃圖」, 독립기념관 김남훈 기증자료. 모리야 수사비오(1872-1938)는 오키야마 현에서 출생하여 1890년 오키야마 현 사범학교 소학교 간이과 교원 학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교원이 되었다. 1896년에 문부성 교원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문부성 地理地誌科 중등교원 면허장을 획득, 1898년에는 다시 문부성의 地理地文科, 역사과, 교육과의 중등교원검정시험에 합격했다. 1905년부터 중학교, 여학교, 사범학교용의 지도와 지리

이러한 점이 비추어본다면,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는 애당초 ‘독도의 신원 찾기’를 포기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1904년 니다카호(新高號)의 『행동일지』와 1906년 강원도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李明來의 보고서 속에 등장한 ‘본군 소속 獨島’는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한국 측 문헌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단지, 정병준의 연구가 밝혔듯이, 1947년 독도에서 어로에 종사하던 한국인 어부들이 일본인의 충격을 받은 사건이 『대구시보』 1947년 6월 20일자에 보도되면서부터 바로 ‘이 섬’을 다케시마가 아닌 ‘獨島’로 호명했다는 점⁵⁾은 시사적이다. 비록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저술한 글 속에 ‘독도’라는 이름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해도 독도의 존재와 이름이 구전되고 있었기에 해방공간에서 즉각적으로 ‘독도’로 호명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안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다룬 일본어 자료 속에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미림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독도 호칭을 주제로 하여 선행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유미림은 1917년에 울릉도 식물조사를 한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의 보고서, 다보하시 기요시와 쓰보이 구메조의 관련 논문, 시마네현 소장 『涉外關係綴』에 수록된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조사된 울릉도 재주 일본인 관련 구술자료 등을 활용하여 1905년 공식적인 ‘다케시마’ 명명 이후에도 어업인, 울릉도 거주자, 정부 관료, 학자에 따라 독도에 관한 호칭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했다.⁶⁾

교과서를 출판하고 1910년부터는 교과서 집필에만 전념했다. 1917년에 지리교과서와 학교용 지도장을 직접 저술, 제작, 판매하고자 제국서원을 창립했다. 또한 1925년에는 관동(關東) 상업고등학교, 1938년에는 제국제1고등여학교(현재의 吉祥여자 중고등학교)를 창립했다.

5)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97-104쪽.

본 연구는 유미림의 위의 연구를 참조하되, 일제강점기 일본어 자료 속에 ‘울릉도의 屬島로서의 독도’ 인식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⁷⁾ 주요 자료는 유미림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일본어 저술 자료를 재검토하는 한편, 2017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김남훈 독도 관련 기증자료 중의 일본어 역사지리부도류, 일본 시마네 현 마쓰에(松江) 시 죽도연구소에서 필자가 직접 수집한 『涉外關係綴』의 「죽도편입에 관하여」라는 문서군을 주목하고자 한다.

2.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일본역사지도』에 나타난 독도 인식의 맥락

1920년대에 왕성하게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역사학자 중에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1880-1955)⁸⁾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강사, 릿쿄(立教)대학교, 국학원대학교, 일본여자대학교 등에서 일본사를 강의하면서⁹⁾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집필했다. 그가 저술한 교과서류는 주로 메이지시원에서 간행되었다. 1897년에 『중학일본역사』 초판을, 1915년에 개정판을 발간했고 1917년에 수정재판이 발간했다. 그 외에 『新訂 여자일본사교과서 상하권』도 저술했다. 1922년에 교사 참고용으로 『일본역사교수용 비고(日本歴史教授用備考)』를, 1929년에 『신편 국사강요 교수용 비고』를 저술했다. 그리고 그 보조교재로 1922년 『일본역사지

6) 유미림,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독도 호칭」, 『영토해양연구』5, 2013.6 참조.

7) 일제강점기 발간된 일본어 연구논문은 박병섭 선생이 운영하는 반월성통신의 웹 게시자료를 이용했다.

8) 1880-1955 일본 근대 역사학자. 도쿄 출생. 시바 후지쓰네(芝葛鎮(ふじつね))의 장남. 동경제대 사료편찬계를 거쳐 1914년 궁내성 도서관 편수관 및 편수과장으로 1946년까지 근무. 일본천황 황족실록의 편수 등 황실사 연구에 종사. 일본 제실제도사 편수사업에 종사.

9) 『일본미술연감』 1956년판, 151-52쪽.

도』를 간행했다. 그 후 이 책은 1930년대까지 계속 증쇄되었다.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1905년에 울릉도와 독도(본 책에는 竹島로 기록) 주변에서 벌어진 러시아와 일본의 해전도를 소개했는데 뒤편 색인에는 이 러일전쟁 해전도의 페이지를 표시하고 ‘竹島(리앙코르도 島)는 朝鮮 소속’이라고 부기했기 때문이다.

이 기록에 대해 일본 시마네대학 교수인 후나스기(船杉力修)는 다케시마가 조선 관할이라고 적은 것은 “대일본제국의 조선지방, 즉 조선총독부 관할 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동일한 책에서 見島의 소속관계가 잘못 소개되어 있는 예를 들어 다케시마도 “정확한 소속을 몰라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궤변을 주장했다.¹⁰⁾ 어떤 해석을 하든, 이 자료의 핵심 정보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했다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역사지도』의 서문에는

이 지도는 중등 정도의 학교에서 일본역사의 참고용임과 동시에 일반 독사(讀史) 연구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편찬을 시도했다. 이 지도는 대체로 중등교육과정을 표준으로 하여 입안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다.

이 지도 편찬의 큰 방침은 단순히 역사 연혁 지도에 그치지 않고 늘古今을 대조하여 현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를 통하여 현대의 지형·지물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치할 때, 각각의 역사 관계와 주요한 지형 지점을 근거로 했다. 즉 자주색으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거기에 검은 색으로 역사적 관계를 나타냈다. 동일한 지도 중에 고금을 함께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별도의 지도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중략) 본 지도 말미에 50음 색인을 첨부하여 주요한 지명, 인명, 사적(史的) 명사를 배열하여 편리하게 검색하도록 했다.

본 지도 편찬에는 여러 선배의 연구에 의지한 바가 적지 않다. 그 중에 육군성 육지측량부가 실측한 여러 지도, 참모본부가 편찬한 「戰

10) 船杉力修, 「竹島の日本地図についての韓国側報道論文に対する反論 (2)」, 『島嶼研究ジャーナル』 3권2호, 2014.4, 113-114쪽.

史」 부도, 사료편찬계가 편찬한 「대일본사료」 편찬지도, 잡지 「역사지리」에 수록된 여러 지도,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박사의 「대일본지명사서」 및 「일본독사지도」등은 그 중요한 것이다. 기록하여 이에 사의를 표한다. (하략)¹¹⁾

이 지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책이 참조한 참고서들이다. 그 중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박사의 『大日本地名辭書』 및 『日本讀史地圖』가 포함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요시다 도고(1864-1918)는 대표적인 일본 근대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로 그의 대표적 저술이 『대일본지명사서』(총 13권)이다. 이 사전에는 일본과 조선의 문헌을 고증하여 조선 측 문헌에 보이는 우산도가 바로 일본인이 말한 마쓰시마(松島=독도)라고 지적하고 있다.¹²⁾ 또한 요시다 도고의 『日本讀史地圖』는 1898년에 가와다 다케시(河田巖),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다카하시 겐지(高橋健自)가 공저로 富山房에서 발간했다. 그 후 간행된 『신편 일본독사지도』에는 저간의 발간경위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보인다. 즉 요시다 도고의 제자 아시다 고레토(蘆田伊人, 1877-1960)¹³⁾가 쓴 「재판에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11) 芝葛盛, 『日本歴史地圖』, 明治書院, 1927, 緒言.

12) 이에 대해서는 윤소영,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 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12 ; 동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조선 연구」, 『일본사상』 29호, 한국일본사상학회, 2015.12 참조.

13) 아시다 고레토(蘆田伊人, 1877-1960). 일본 지리학의 선구자. 근세의 지지를 집대성한 「大日本地誌大系」의 편찬자이다. 1877년 후쿠이에서 출생. 1891년 후쿠이현 심상중학교에서 高橋健自에게 역사학을 배우고 역사지도 편찬을 도왔다. 1900년 와세다대학교 사학 및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吉田東伍에게 배우고 「日本讀史地圖」 편찬에 참여했다. 요시다 도고 사후 그 개정작업을 계속 추진했다. 1906년부터 동경제국대학 사료편찬계에 근무했다. 지도 관련 저서에 「福井県管内地図」, 「東京近傍勝地遊覧地図」, 「大日本地誌体系」, 「大日本讀史地圖」, 「御料地史稿」 등이 있다. 그의 지도 컬렉션은 현재 메이지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일본독사지도는 1895년 경 다카하시 겐지(高橋健自)씨가 후쿠이(福井) 중학교의 교유(敎諭)였을 때, 처음 저술을 생각했던 것인데 그 후 그는 河田鰐, 吉田東伍 두 사람과 연구를 함께 하면서 1897년 2월 처음 출판된 책이다. 나는 마침 이때 후쿠이중학교 학생이었고 다카하시 씨의 저술을 도왔다. 졸업 후 상경하여 와세다대학에서 요시다 박사에게 국사학을 배우고, 그 후 제국대학 史局에 들어가 후지타(藤田明君) 등과 역사지리를 연구했다. 그리고 다시 후지타 군과 이 지도의 改作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그 지도책이 완성되기도 전에 1915년 가을, 갑자기 후지타 군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요시다 박사 지도 하에 이를 완성하여 1917년 봄에 『신편 일본독사지도』로 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해 1918년 봄 요시다 박사가 또 급히 병으로 돌아가셔서 이후 5년간 이 지도는 마치 노를 잃어버린 배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무렵 富山房에서 이를 재판하고 싶으니 증보 정정을 해달라고 하였다. 돌아보면 1895년 애당초 다카하시 씨가 이 지도를 처음 고안한 이래 정말 인연이 깊었으므로 거절하지도 못하고 또 여러 곳에 오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정정하여 마침내 막부 말기 江戸灣 防備圖 하나를 추가하여 재판하게 되었다. 그리고 헤이안 조정 시대의 奥羽 지도에 대해서는 坪井九馬三 박사가 정정하는 데에 유익한 교시를 해주신 것에 삼가 감사함을 전한다.

1923년 9월, 아시다 고레토(蘆田伊人)¹⁴⁾

『일본독사지도』는 1895년부터 후쿠이중학교의 교사인 다카하시 겐지가 고안하여 이에 가와다 다케시, 요시다 도고가 협력하여 편찬을 개시하였고 당시 후쿠이 중학교 학생이던 아시다 고레토가 보조하여 1897년에 초판이 간행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아시다 고레토는 개정판을 준비하다가 동료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서 1915년 요시다 도고의 도움을 받아 1917년에 『신편 일본독사지도』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918년에 요시다 도고가 병사하자 아시다 고레토는 1927년에 개정

14) 문학박사 吉田東伍박사 저, 『신편 일본독사지도』, 동경,富山房, 1917년 2월 발행, 1923년 12월 증정 제4판 발행, 1927년 1월 증정 제8판 발행본, 「再版に就いて」

판을 발간했다. 1927년 증보개정8판 『신편 일본독사지도』의 저자를 보면 여전히 요시다 도고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17년에 『신편 일본독사지도』를 간행할 때 요시다 도고가 적은 자서오칙(自序五則)이 서문에 적혀 있다. 이를 보면 『신편 일본독사지도』를 어떤 관점과 원칙에 입각하여 편찬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1. 역사는 사회의 변천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대 前後의 因果를 아는 것이라고 해도 당시의 지리적 측면에서 그 역사 사실이 일어난 장소를 모른다면 결코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리상의 관계를 考究하는 것은 역사지리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는 단지 지리적 측면에서 역사 연구를 보완하는 것만은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 지리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는 점이 많다. 최근에 이런 종류의 지도가 2-3종이 있어서 세상에 보급되었지만 아직 널리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현재 교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역사 교수를 할 때에 좋은 연혁 지도가 없어서 가르치는 것도 추상적 설화에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어찌 큰 결함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편집을 시도한 것은 이 부분에 개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이 첫 번째 원칙은 내가 1897년 가와다, 다카하시 두 사람과 공동으로 『일본독사지도』를 간행할 때 선언한 것이다. 오늘의 시세는 지난날에 비해 어렵다. 도서는 백배 천배 만배 증가했다. 그런데 연혁 지도의 단행본은 몇 종류 되지 않아서 아직 세상에 널리 보급되지 않은 것은 지난날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는 즉 신편을 간행하는 까닭이다.
3. 지도는 가장 간명해야 한다. 또한 주로 역사관계의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것은 모두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古今의 명칭을 달리하고, 혹은 위치와 境界의 변경이 있는 것은 다른 색으로 하여 참고지명을 기록한다. 즉 흑색으로 역사 관계의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적색으로 현재의 지형 및 대조해야할 지점을 나타낸다.

4. 이 지도는 중등교육의 과정을 표준으로 하여 입안되었다고는 해도 부분적으로 상세한 부분이 있다. 이는 겹하여 일반인의 讀史 연구에도 이바지하고자 희망했기 때문이다.

	<p>域領ノ國帝本日後合併國韓</p> <p>域領ノ國帝本日後合併國韓ノ下</p> <p>域領ノ國帝本日後合併國韓ノ下年八十二治明</p> <p>域領ノ國帝本日後合併國韓ノ下年八十三治明</p> <p>域領ノ國帝本日後合併國韓ノ下年五十四治明</p>
<p>吉田東伍, 『신편 일본독사지도』, 동경, 富山房, 1927년 1월 증정 제8판, 「한국병합 후 일본제국의 영역」 확대도. 울릉도는 오렌지색으로 오기 섬은 분홍색으로 표시했다.</p>	<p>吉田東伍, 『신편 일본독사지도』, 동경, 富山房, 1927년 1월 증정 제8판 「韓國併合後日本帝國ノ領域」의 색깔 구분</p> <p>분홍색 : 시모노세키조약 이전의 영역</p> <p>노란색 : 1894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수득한 지역</p> <p>연두색 : 1905년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수득한 지역</p> <p>오렌지색 : 1912년 한국병합 후의 지역</p>

5. 신편의 續輯에는 후지타 아키라(藤田明, 고 사료편찬관)와 아시다 고레토(蘆田伊人) 두 사람이 정밀한 식견과 교묘한 고안으로 여러 가지 지도와 그림을 제작하여 제공했다. 그래서 전부 거의 두 사람이 이룬 성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후지타 씨는 작년 11월 일찍이 세상을 떠나 이 간행을 보지 못했다. 이에 인쇄의 결실을 봄에 따라 권두에 이 사실을 특기하여 고인을 사모하는 뜻을 영원히 남길 뿐이다. 또한 5와 6 도판에 대해서는 두 세 명의 대가의 정정을 청하여 그 도움을 받았다.

대정5년(1916) 12월 요시다 도고¹⁵⁾

15) 吉田東伍, 『신편 일본독사지도』, 동경, 富山房, 1927년 1월 증정 제8판, 「自序五則」

즉, 『일본독사지도』는 해당 시기의 역사를 공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려고 편찬된 교재이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적 전개와 그 역사가 이루어진 공간을 함께 파악했을 때 역사적 진상을 알 수 있다는 역사관에 토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역사적 변천과정, 명칭의 변경, 위치와 경계의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되는 지도가 메이지유신 후 폐번치현 상황을 지도로 표시한 제60도 「명치4년(1872) 使府藩縣」 지도와 제65도 「한국병합 후 일본제국 영역」 지도이다. 전자는

1868년 도쿠가와 씨가 대정을 봉환했다고는 해도 여러 번(藩)이 여전히 봉토를 사유하여 조정에 직예하는 府縣과 서로 섞여 있어서 아직 확립된 법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1872년 7월에 詔가 있어서 내지의 200여 번을 폐하고 현으로 하였다. 이에 비로소 유신의 홍포(鴻謨)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 지도는 그 12월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구(琉球) 藩이 아직 남아있어서 제목을 「使府藩縣」이라고 한다.¹⁶⁾

고 지도 내용을 설명했다. 유구번이 아직 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 명에 번(藩)을 남겨두었을 정도로 사료 고증을 철저히 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지도를 보면 시마네 현에 포함된 영역을 오키 섬까지로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이미 『대일본지명사서』 편찬지침에서 나타난 바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한국병합 후 일본제국 영역」 지도를 살펴보자.

이 지도에 대해 요시다 도고는 “1894·5년 및 1904·5년 두 전쟁의 결과 우리 판도가 점차 팽창한 형세를 표시한 것”¹⁷⁾ 이라고 설명을 달았다.

16) 吉田東伍, 『신편 일본독사지도』, 동경, 富山房, 1927년 1월 증정 제8판, 「新編日本讀史地圖略說」, 11쪽.

17) 吉田東伍, 『신편 일본독사지도』, 동경, 富山房, 1927년 1월 증정 제8판, 「新編日本讀史地圖略說」,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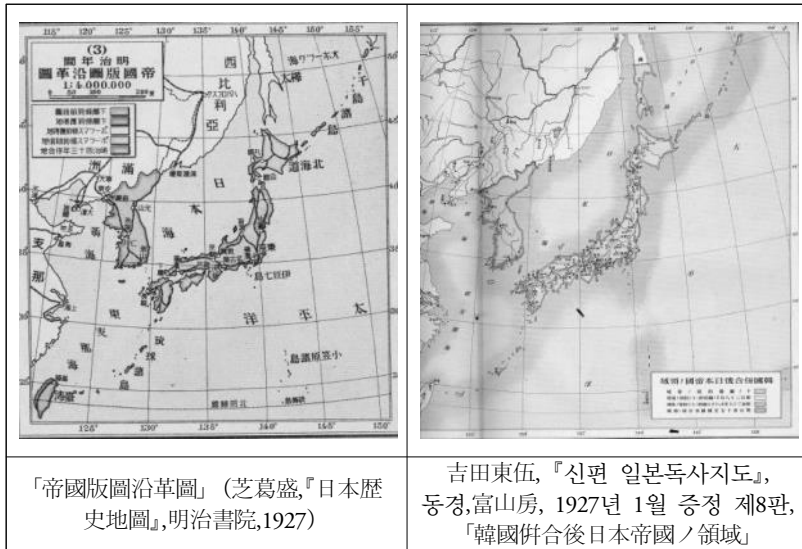
시기에 따른 일본 영토의 확장과정을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한 점이 주목된다.

이를 살펴보면, 청일전쟁 이전의 일본의 영역은 오키까지를 경계로 보았는데 한국병합 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을 일본의 영토로 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890년대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축적상 독도를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요시다 도고의 『대일본지명사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다. 그는 조선이 말하는 우산도가 바로 근세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를 가리킨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¹⁸⁾ 박병섭은 대한제국 내각 보좌관이었던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가 퇴임 후 일본에서 저술한 『조선개회사』(1901) 34쪽에서 “울릉도…옛 우산국이다.…대소 6개 섬이 있다. 그 중 가장 뛰어난 섬은 우산도(일본인은 마쓰시마라고 한다)“라고 기술한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¹⁹⁾, 이 부분도 요시다 도고의 독도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명과 경계 고증에 까다로웠던 요시다 도고이었던 만큼, 일본의 영토 확장 과정을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한 지도의 의미는 중요하다.

18) 윤소영,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연구』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12 참조.

19) 박병섭, 「이케우치 사토시의 죽도- 또 하나의 일한관계사」, 『독도연구』20, 2016.6, 248쪽.





다시,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로 돌아가자. 시바 가즈모리는 위의 요시다 도고가 소개한 한국병합 전후의 일본영토 영역도를 인용하여 게재하고 있다. 그는 제목을 「明治年間 帝國版圖 沿革圖」라고 제목을 바꾸었지만 지도의 내용은 요시다 도고가 소개한 것과 같다. 즉, 시바 가즈모리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요시다 도고의 『일본독사지도』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뿐 아니라 후지타 아키라(藤田明) 도 단독 저술인 『중등일본역사』(초급용)의 참조용으로 『중등일본역사부도』를 편찬했다.²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병합 후 일본제국영역지도」가 인용되어 요시다 도고의 위의 저술과 같은 색깔 구분으로 일본 영토 범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²¹⁾ 더욱이 후지타 아키라의 지도에는 조선에 대해 1905년부터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부터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20) 藤田明, 『中等教科日本歴史地圖』, 寶文館, 1915, 독립기념관 김남훈 기증자료.

21) 藤田明, 『中等教科日本歴史地圖』, 寶文館, 1915, 제18도.

그 이전의 일본 영토 범주는 오키까지로 한정하고 있어서 결국 러일전쟁과 한국병합을 거치면서 한국 영토 전체가 일본 영역에 흡수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해에서 벌어진 러시아와 일본의 해전을 상세히 소개한 지도는 울릉도와 함께 竹島(리앙쿠르록스)라고 기술하고 있어서 이 지도만으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지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지도는 시바 가즈모리가 펴낸 『일본역사지도』에도 그대로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시바 가즈모리는 이 책의 색인에서 조선 소속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비록 명칭은 ‘독도’가 아닌, ‘죽도’이지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지한 요시다 도고의 역사지리인식이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p>러일전쟁 당시 해전 양상 지도 芝葛盛의 『日本歴史地図』, 明治書院, (1927)</p>	<p>芝葛盛, 『日本歴史地図』, 明治書院, 1927, 색인. 죽도(조선)부분</p>

3. 울릉도·독도 관련 일본어 저술의 검토

해방 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논증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일본어 자료에 처음 착목하여 자료를 발굴한 학자는 황상기와 이한기이다.²²⁾ 그런데 이들에 의해 소개된 것 중에는 오독된 자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이한기가 지정한 샤쿠오 순조(釋尾春苐)의 『조선과 만주안내』 중 「조선편」 ‘제1절 위치·면적’을 보면

조선은 아세아 대륙의 동부에 튀어나온 반도로 동은 일본해를 바라보고 서는 황해를 건너 중국과 마주하고 남은 조선해협을 끼고 일본열도와 서로 호응하고 있다. 북은 압록강과 두만강 및 장백산맥에 의해 만주국 및 러시아령 연해주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동경 124도 11분에서 시작하여 동 130도 56분 23초로 끝나며, 북위 33도 6분 40초에서 동 43도 36초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중략) 조선의 동서남북단은 극동 - 울릉도, 竹島. 극남- 제주도, 마라도, 극서-압록강, 馬鞍島, 극북 -함북 穩城郡 柔浦面²³⁾

22) 황상기, 『독도영유권해설』, 근로학생사, 1954년 초판, 1965년 재판, 36쪽,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출판부, 1969, 263-264쪽. 독립기념관 소장 김남훈 기증자료.

황상기가 제시한 자료는 ① 『韓國水産誌』 (1910, 5) 제1집 제1편 지리 제7장 「죽도(Liancourt Rock)를 한국영토로 표시 ② 樋畑雪湖, 『地理歴史』 55권 6호, 1930.6 : 「울릉도와 죽도는 지금 조선 강원도에 속하여 조선영토로 동해 최동단에 속하여 있다.」고 함. ③. 『朝鮮沿岸水路誌』 (1933) 제3편 울릉도 급 죽도, ④ 일본여행협회 발행, 「旅費と費用概算」 : 「朝鮮の四極と面積」 중에 「경상북도 울릉도와 죽도, ⑤ 『朝鮮地理資料』 (조선총독부 1918년 11월) 울릉도와 죽도, ⑥ 『대일본백과사전』 (平凡社 발행) : 울릉도와 죽도 부분을 들었다. 이한기는 釋尾春苐 저 『朝鮮과 만주안내』 조선편(1935) 제1장 지리에서 조선의 동단은 울릉도, 죽도라고 기술한 점, 『한국수산지』(1908)와 『조선연안수로지』(1932년 일본해군성 발행) 제3편 조선동해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기술하여 독도를 조선에 부속한 섬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추가했다.

23) 釋尾春苐, 조선급만주사 편찬, 『朝鮮滿洲案内』, 1930, 1-2쪽.

라고 하여 극동 경계를 울릉도와 竹島라고 표기했는데, 이한기는 이 ‘竹島’를 독도로 간주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서 병기하고 있는 경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경 124도 11분에서 시작하여 동 130도 56분 23초로 끝난다.”는 대목에 주의한다면 ‘竹島’는 독도를 가리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울릉도 오른쪽에 있는 장방형의 죽서도의 위치가 동경 130도 56분 23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해군 수로부가 1933년에 발행한 『朝鮮沿岸水路誌』 제3편에 “조선동해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기술하여 독도를 조선에 부속한 섬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 『朝鮮沿岸水路誌』 제3편 「朝鮮東岸」에는 울릉도와 竹島(竹嶼), 그리고 竹島(=독도)가 기술되어 있다. 竹島의 위치는 1908년 측정에 의해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33초라고 적었다.²⁴⁾ 그런데 수로부가 간행한 일본 본토 주변을 다룬 『本州沿岸水路誌』에는 「隱岐列島及竹島」 항목에 독도가 “明治38年(1905) 시마네 현 관하에 편입되었다.”고 기술했다.²⁵⁾ 따라서 『朝鮮沿岸水路誌』의 기술만을 근거로 당시 수로부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지만,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했다고 해석하지 않고 지리적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했다’고 해석한다면 무리가 없다.

일제강점기는 기본적으로 독도를 일본에 강제 편입한 다음이고 한국 전체가 일본 영토가 된 시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도 관련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초점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지했는지 여부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저술된 울릉도와 독도 관련 논문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역사학자이자 도쿄제국대학 교수인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

24) 水路部, 『朝鮮沿岸水路誌』, 1933.1, 86-89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5) 水路部, 『本州沿岸水路誌』, 193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三, 1859-1936)가 쓴 「울릉도」라는 소논문이다.²⁶⁾ 관련되는 내용을 번역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본해의 서남부의 일본해 해전의 戰場으로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 약간 있다. (중략) 그 가장 큰 것은 이즈(伊豆)의 오시마(大島)보다 다소 작고, 조선 강원도 죽변만 바다 가운데에 있다. 이 섬의 동쪽에 조금 떨어져서 초생달 모양의 작고 험한 바위섬으로, 절벽 아래에서 쇠사슬을 당겨서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섬이 있다. 또 이 두 섬보다 훨씬 떨어져서 隱岐群島의 북서북 바다 가운데 '불만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위섬'²⁷⁾이 있다. 이상의 세 섬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일본인-인용주)이 그 최대의 섬을 안 것은 지금부터 900년 전이지만 다이쇼(大正)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문을 하는 자로 도항하여 실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고, 에도시대에 반드시 실지를 답사할 필요가 있었던 때조차 단지 대마도인이 전하고, 혹은 전해 들은 것에 의해 판단하고 만족한 듯하다. 마침내 오보에 오보가 겹치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중략) 그런데 대정6년(1917) 여름에 조선총독부는 축탁원 이학박사 中井猛之進 씨를 그 섬에 파견하여 섬 전체의 식물을 상세히 조사하게 했는데...다음해 대정7년(1918) 겨울에는 총독부에서 울릉도 5만분의 1 실측도를 공간하고 대정8년(1919) 4월에 총독부는 나카이 박사의 울릉도 식물조사보고서를 공간하고 박사는 섬의 명칭의 유래를 파헤쳤다. (중략) (나카이 씨는) 동도의 개척자로 거의 島長과도 같은 일을 하는 가타오카 기치베(片岡吉兵衛, 도동 거주) 및 南陽洞 山中 臺霞의 사람들에 반복 심문한 결과는 실로 다음과 같다. 리앙쿠르는 卵島로 러일전쟁 당시는 해군이 저탄소로 하고 지금은 랏코(아시카를 잘못 적은 것) 수렵장이 되어 수목은 결코 번성하지 않다는 것. 울릉도의 본도를 松島라 하고 그 동쪽 부속 섬중 최대의 섬을 竹島라 하는 것은 소나무가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松竹이라고 축하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노인으로부터 전해들은

26) 坪井九馬三, 「鬱陵島」, 『歴史地理』 38권 3호, 1921, 반월성통신(www.kr-jp.net) 원문제공자료.

27) 원문은 '無下の岩島'

것이라고 한다.²⁸⁾

라고 하였다. 쓰보이 구메조는 동해의 섬을 울릉도, 울릉도에서 2km 떨어진 뱃섬(죽서도), 竹島(=독도)라는 세 개의 섬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의 판단 근거는 1917년에 조선총독부의 의뢰로 울릉도 식물조사를 한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의 조사 결과였다. 이 글에서 당시 울릉도의 島長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가타오카 기치베(片岡吉兵衛)의 구술을 받아 독도를 卵島라 적고 그것이 정확한 명칭인 것처럼 믿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가타오카 기치베는 시마네 현 簸川郡 출신으로 1896년에 울릉도에 이주하여 1935년까지 40여년 간 어업과 상업에 종사하며 조선총독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인물이다.²⁹⁾ 쓰보이 구메조는

隱岐群島에서 떨어진 섬인 다마고시마(卵島)는 쓰카모토 (塚本明毅)의 『일본지리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바위섬은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卵島라고 부르는 것은 隱岐人인 片岡吉兵衛 씨의 증언으로 명백하다. 최근에 이 섬을 竹島로 개칭한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 함부로 옛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은 최근의 유행인 것 같은데, 특히 이 경우에는 근거리 사이에 같은 이름의 섬이 두 개 있는 것이 되어 매우 좋지 못하다. 속히 원래대로 되돌렸으면 한다.³⁰⁾

卵島란 이름은 리앙쿠르를 줄여서 부른 양코도, 란코도의 와전으로 생각되지만 쓰보이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은 채 가타오카 기치베의 진술을 맹신하여 리앙쿠르 록스의 일본의 원래 이름인 卵島로 되돌려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坪井九馬三, 「鬱陵島」, 『歴史地理』 38권 3호, 1921, 165-167쪽.

29) 윤소영, 「울릉도민 홍재현의 시마네현 방문(1898)과 그의 삶에 대한 재검토」, 『독도연구』 20, 2016.6 참조.

30) 坪井九馬三, 「鬱陵島」, 『歴史地理』 38권 3호, 1921, 169쪽.

쓰보이는 1930년에 「竹島에 관해서(竹島に就いて)」라는 글을 다시 작성하여 『역사지리』에 실고 있다. 즉 “일본지지제요 권50 은기의 도서 항목에 또한 서북방면에 송도 죽도의 두 섬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에서 제작한 지도를 보면 다주레(마쓰시마), 리앙쿠르 혹은 호넷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일까라고 상상이 되지만 隱岐에서 전해지는 전설과는 위치가 맞지 않는다. 조선 식물에 관해서 대권위자인 동경제국대학 이학부 교수 中井猛之進 박사는 대정6년 松島 즉 울릉을 답사 연구하였을 때, 송도의 도동에 거주하는 당시 거의 島長과도 같은 지위에 있던 가타오카 기치베 씨에게 반복 심문한 결과 일본해 서부의 세 개의 섬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한 지식을 얻어서 소생은 박사의 은혜로 그 신지식을 나누어 받았다. (중략) 일본지지제요에 게재되지 않은 은기의 제3부속도는 다마고시마(卵島)라고 하는 보잘 것 없는 섬으로...외국 지도의 리앙쿠르 또는 호넷은 이 바위섬을 가리킨다.

라 하여 다시 독도를 가타오카 기치베의 진술에 입각하여 리앙쿠르 록스가 다마고시마(卵島)라는 견해를 고수했다. 그리고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

울릉은 松島를 가리키는 韓名이다. (중략) 慶長年間(1596-1615;인용주)에는 조선인은 이 섬을 오로지 鬱島 혹은 竹島라고 부른 것 같다. 竹島라고 한 島名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발음도 분명하지 않은데, 이 이름은 대마도인의 사이에 불리다가 그로부터 조선 외교용의 島名이 되고 막부는 막부 말기까지도 그렇게 불렀다. 따라서 에도시대의 공문서에 竹島란 울릉을 가리키는 것이다. 울릉의 동쪽 바다에 작은 초생달 모양의 섬은 이 섬(울릉도)의 부속도로 竹島라고 한다. 이 竹島라는 이름은 韓名은 아니다. 은기로부터 건너간 이민이 본도를 松島로 부르고 부속도를 竹島라 부른 것으로 가타오카 씨는 명명의 유래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나카이 박사는 말했다.³¹⁾

31) 坪井九馬三, 「竹島に就いて」, 『歴史地理』 56권 1호, 1930, 34쪽, 반월성통신(www.kr-

울릉도를 일본인은 竹島라고 불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땃섬을 竹島라고 부르는 것은 울릉도를 松島라고 부르게 되면서 그와 짝을 이뤄 竹島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쓰보이는 리앙쿠르 록스의 일본명을 卵島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1930년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가 발표한 울릉도 관련 논문³²⁾에 대해 즉시 리앙쿠르 록스가 卵島라고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다.

다보하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울릉도의 명칭에 관하여- 쓰보이 박사의 교시에 대답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³³⁾ 이 논문에서 卵島라는 명칭은 나카이(中井) 교수의 보고에 처음 보이는 것으로 옛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울릉도에서 가까운 땃섬(죽도)은 “울릉도 부속 수십 개의 암초 중 제일 큰 것에 불과하며 독립한 섬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³⁴⁾고 지적했다. 그리고 “땃섬을 竹島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최근 울릉도에 이민 온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고 이전에는 이름이 없는 암초였다고 믿고 있다”³⁵⁾고 지적했다.

다보하시의 지적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에서는 종종 우산도를 현재의 죽서도(땃섬)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다보하시는 땃섬은 암초이지 섬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숙종실록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안용복이 우산도가 곧 松島라고 일갈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松島=우산도=리

jp.net) 원문제공자료.

32) 田保橋潔, 「鬱陵島その発見と領有」, 『青丘学叢』 3호, 1931.2. 반월성통신(www.kr-jp.net) 원문제공자료. 이 논문에서 다보하시는 안용복의 활약으로 인해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은 경위에 대해 소상히 적고 있다. 안용복이 일본어선을 추격하여 오키시마에 이르러 울릉도가 조선영토인데 일본인이 침범한 것의 불법을 힐책했다고 하였다.

33) 田保橋潔, 「鬱陵島の名稱に就いて(補)一坪井博士の示教に答ふ」, 『青丘学叢』 4호, 1931.5, 반월성통신(www.kr-jp.net) 원문제공자료.

34) 田保橋潔, 「鬱陵島の名稱に就いて(補)一坪井博士の示教に答ふ」, 105쪽.

35) 田保橋潔, 「鬱陵島の名稱に就いて(補)一坪井博士の示教に答ふ」, 108-109쪽.

양쿠르 록스’로 자연히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보하시 보다 앞서 안용복 관련 조선 측 자료를 읽고 울릉도에 대해 정리된 글을 발표한 이는 이마무라 도모(今村靫, 1870-1943)이다. 그는 1908년 조선에 건너온 이래 경찰관을 역임하면서 조선민속학 연구에 몰두했는데, 1928년에 간행한 『역사민속 조선만담』 속에 「鬱陵島紀事」라는 글을 수록했다. 그는 조선 민속학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마무라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 조선에서는 羽陵, 蔚陵, 鬱陵, 武陵, 芋陵, 羽溪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松島, 磯竹島, 竹島라고도 불렀다고 하였다.³⁶⁾ 원래 일본에서 울릉도를 竹島라 불렀고, ‘본도의 동남 약 55리에 있는 리앙코르도를 松島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혼동하는 바가 있어서 해군의 海圖에 본도(울릉도-인용주)를 松島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³⁷⁾ 이마무라 도모는 속종실록 등 조선 측 자료를 열람하여 안용복으로 인해 발단된 ‘울릉도 쟁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용복이 눈을 부라리며 왜 우리 지경을 침범하는가라고. 왜인은 대답하길, 원래 松島로 향하고 있으며 원래 가려고 했다고. 용복은 이어서 松島에 이르러 호통을 치며 말하길, 松島는 즉 芋山島라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우산도 우리 영토라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 솔가마를 부수어버려 왜인은 크게 놀라 달아났다.”³⁸⁾고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爭議에 대해 당시 일본에서는 매우 논의가 분분했던 모양이라고 하며 가이바라(貝原益軒)의 말을 인용하여 그는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단정했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즉

본 건의 외교 모습을 평하면, "일본이 언제나처럼 매우 졸렬한 방법

36) 今村靫, 「鬱陵島紀事」,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1928, 149쪽, 반월성통신(www.kr-jp.net) 원문제공자료.

37) 今村靫, 「鬱陵島紀事」,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1928, 150쪽.

38) 今村靫, 「鬱陵島紀事」,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1928, 157-158쪽.

이다. 사실상 일본의 인민을 부식하여 관리를 보내고 시설을 설치하여 묵묵히 있으면 자연히 일본의 영토가 될 것을 오히려 小刀細工을 부려서 조선의 명분을 부서버리고자 함정을 팠으니 실패로 끝난 것"³⁹⁾

이라고 하여 당시 일본 측이 울릉도를 조선 영토임을 인정한 것을 아쉽게 여겼다. 주목되는 점은 이마무라 도모가 안용복 일화를 소개하고 ‘리양쿠르 록스 = 松島 = 우산도’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보하시의 위의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된 점이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한 학자는 히바타 셋코(樋畑雪湖, 1858-1943)이다. 그것은 1930년 『역사지리』에 기고한 글로써 원제는 「일본해에 있어서의 다케시마(竹島)의 일선관계에 관하여(日本海に於ける竹島の日鮮關係に就いて)」이다. 관련 구절을 번역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竹島(리양코르도 島)는 울릉도와 함께 지금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고 있고 조선이 영유하는 토지(領分)로 일본해 중 가장 동부에 속하고 있다. 매우 협소한 도서이다. 지도에 의하면 북위 37도, 서경 132도 권내의 서남 구석에 위치하여 3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략) 울릉도에서 서쪽으로 약 1도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일본 영토에 가깝고 어업 등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 판도에 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이 이를 알게 된 것은 영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문록(임진왜란·인용주) 이후의 일이 아닐까 한다. 이에야스가 취한 日, 韓, 明의 무역정책에서 생각해봐도 통항일람이나 그 외 책자를 봐도 竹島에 관해 교섭한 문서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점은 그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부산 개항 등 무역을 희망하여 절충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마도 관리나 승려와 조선 동래부사 사이에 적당히 처리하여 조선의 판도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⁴⁰⁾

39) 今村軞, 「鬱陵島紀事」,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1928, 156쪽.

40) 樋畑雪湖, 「日本海に於ける竹島の日鮮關係に就いて」 『歴史地理』55-6, 1930.6, 590쪽.

고 하였다. 히바타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본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일본 영토로 삼지 못한 것이 매우 애석하다고 적었다. 시마네 현에 편입한 이후의 명칭인 ‘다케시마(리앙쿠르 島)’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한 점은 매우 주목된다. 이에 대해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는

히바타 셋코 씨의 「역사와 지리」의 기술은 메이지 이전의 다케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서술하고 있어서 히바타 씨 개인의 無知를 드러내는 것이 불과하고 이 논문이 발표된 1930년에 '다케시마'는 시마네 현에 속하고 결코 강원도에 속하고 있지 않다. 울릉도 자체도 경상북도에 속하고 있으며 강원도에 속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에 가득 찬 어처구니없는 논저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⁴¹⁾

고 폄하했다. 실제로 울릉도는 1900년 강원도 울도군에서 1907년 경상남도 관할로 변경되었고 1914년에 다시 경상북도 관할이 되었는데 히바타 셋코는 이러한 부분은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또한 히바타의 글에서 인용한 원 자료가 1837년 막부의 竹島(=울릉도) 도해를 엄금한 포고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오해도 확인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글이 리앙쿠르 록스가 곧 竹島라는 공간적 이해에 기반하여 작성되어 이 섬을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작성된 울릉도 관련 논문에는 오키를 제외한 동해의 섬을 울릉도, 땃섬, 리앙쿠르 록스(란도)로 세 개의 섬으로 인식한 경우와 울릉도와 독도의 두 개의 섬으로 인식한 경우로 대별된다. 그러나 쓰보이와 나카이의 卵島說은 가타오카 기치베라는 울릉도에 건너간 노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불과했다. 이것은 다

41)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시마네 현 총무부 총무과, 1965년 초판, 154-55쪽.

보하시의 비판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일본 측과 조선시대 문헌을 섭렵한 다보하시와 이마무라 등은 울릉도 독도의 2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다보하시가 ‘뎃섬은 암초이지 섬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4. 시마네 현 사람들의 독도 인식

1945년 해방 후 일본 외무성은 1947년 6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영자 홍보지를 발간하여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아울러 1953년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竹島の 영유』라는 소책자를 간행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논리를 구축했다.⁴²⁾ 이러한 시기에 독도와 관련된 현황과 각종 조사 지시가 일본외무성 가와카미 겐조 등에 의해 시마네 현 측에 하달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涉外關係綴』 등으로 편철되어 시마네 현 마쓰에 시에 있는 죽도연구소에 사본이 공개, 열람되고 있다. 이미 이 자료는 유미림의 연구(2013)에서 다룬 바 있지만, 이 글의 논점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에 살았던 시마네 현 출신의 일본인의 구술자료와 1926년 7월 隱岐島司가 폐지되고 隱岐支廳으로 변경된 이후의 독도 관리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竹島の 소속에 대하여」라는 일련의 자료군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구술자료를 살펴보면, 하마다(浜田) 시에 거주하는 1953년 당시 70세의 吉中周市 씨와 61세의 梶目槌松 씨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명치45년(1912) 5월 죽도의 鳥賊魚(오징어)가 좋다는 말을 듣고 가 보자는 것이 되어 湊 씨 (현존), 花部 씨가 갖고 있는 배 1척(각6톤 정

42) 정병준, 앞의 책, 46-47쪽, 川上健三,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1953.8, 일본국 회도서관 소장본.

도의 槽船)으로 각 5인이 타고 출발했다. 隱岐수산학교의 永井 教諭에게 부탁하여 도하치요마루에게 유도해 달라고 하여 浦郷에 갔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고 하여 죽도까지 유도해 주었다. 오후 5,6시에 浦郷을 출항하여 다음날 아침 8,9시에 죽도에 도착했다. 도중에 랑코도라는 작은 섬을 보았다. 가서보니 죽도는 울릉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지를 보낼 때는 竹島琴崎(친사키, 注:)지도에는 中嶺 친사키)라고 적어도, 울릉도 琴崎라고 적어도 도착했다. 10월까지 친사키를 근거지로 하여 4,5리 앞바다에 나가 조적어를 잡았다.⁴³⁾

고 한다. 하마다 시에 살고 있는 어부들 사이에서 竹島의 오징어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가보았더니, 竹島란 다름 아닌 울릉도였다는 것과, 가는 길에 랑코도를 봤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울릉도로 우편을 보낼 때 竹島 琴崎라고 해도, 울릉도 琴崎라고 적어도 도착한다는 내용도 흥미롭다. 당시 울릉도에 거주한 일본인이 일반적으로 울릉도를 지도상에 적힌 松島가 아닌, 竹島로 호칭했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울릉도에서 3살 무렵부터 살았고 울릉도에서 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해방 후 일본으로 철수한 眞野重光 씨의 증언은 더욱 주목된다.

3세 정도부터 명치 말부터 울릉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소학교장, 경성사범 6년, 대구에서 소학 교사 10년, 재차 울릉도에서 학교교사, 종전 후 일본에 철수했다. 소년시대 현지의 일본인은 울릉도를 竹島라고 불렀다. 랑코도는 <란코>라고 불렀다. 소학생인 나는 海圖로 울릉도가 松島가 된 것을 알고 있었다. 울진이나 죽변 만의 해안에서 울릉도는 보이지 않는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울릉도는 보인다. 해상에서 절반 정도 나와서는 울릉도는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는 △로 보인다. 어업은 오징어, 고등어 잠수이며 일본인이 오야붕이고 일본인, 조선인을 절반 정도씩 부리고 있었다. 조선인은 기술을 모르므로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다. 조선인 오야붕이 조선인을 부려 어업을 하기 시작한 것

43) 마쓰에 시 죽도연구소 소장 吉中周市·梶目槌松 구술자료, 『涉外關係綴』

은 소화10년 무렵부터이며 그것도 2,3인 뿐이었다. (중략) 울릉도에서 랑코는 잘 보인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조금 높은 곳에서 잘 보였다. 날씨가 좋고 흐리지 않은 날에는 확실하게 보였다. 삼각형이 두 개 보였다. 어업권의 관계로 울릉도에서 랑코에는 일반 어민은 가지 않았다. 오쿠무라가 잠수로 전복을 따러 매년 가는 것과 마쓰다가 미역을 따러 명치부터 소화까지 때때로 다녔다. 44)

眞野重光 씨는 海圖에는 울릉도를 松島로 표기했지만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은 竹島로 불렀다는 점, 독도는 ‘란코’라고 불렀으며, 울릉도에서 조금 높은 곳에서도 독도는 잘 보였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독도의 동도와 서도의 두 봉우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가타오카 기치베가 독도를 ‘란코’라고 불렀다는 부분과도 상통하는 내용이며,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 구술자료는 1953년 11월 12일 다무라(田村) 주사가 기안하여 외무성조약국 제1과 가와카미 겐조 사무관에게 「죽도에 관한 조사결과 송부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송달한 문서에 첨부된 자료였다는 점이 주목된다.⁴⁵⁾ 즉, 1953년 가와카미 겐조가 『죽도의 영유』에서 관념적으로 수식을 사용하여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울릉도에 살았던 일본인 소년은 이와 상반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가와카미 겐조에게는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자료는 보다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1905년 2월 22일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죽도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독도가 시마네 현 隱岐島 관할 하에 있는 도서가 되었지만, 그 후 1926년 7월 1일자로 島司와 島

44) 眞野重光(益田市 安田중학교 教諭) 구술자료, 『涉外關係綴』

45) 소화28년 11월 12일 廣報문서과 기안자 田村 주사, 「外務省條約局第1課川上事務官あて」, 『涉外關係綴』

廳이 폐지되고 오키 지청이 설치된 후에 竹島 소관 町村도 소속을 변경하는 인수인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자료이다. 중요한 자료이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竹島의 소속에 대하여

- ① 명치38년 2월 21일 縣 고시 40호에 의해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해졌지만 대정15년(1926) 7월 1일 지방제도 개혁에 따른 郡役所, 島廳 폐지에 의해 竹島는 어느 소관이 되었는지 문제이다.
- ② 島司, 島廳의 폐지에 따라 그 소관은 모두 知事에게 귀속한 것이며 7월 1일 시마네현 隱岐支廳이 설치되었는데 지청에 직접 島司, 島廳의 권한이 이관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고, 대정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明文으로 知事が 지청장에게 竹島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한, 竹島는 知事の 관할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島司, 島廳 폐지에 따라 그 소관은 모두 知事에게 귀속한 것이지만, 7월 1일부로 각종 縣令, 訓令 그 외에 의해 島司, 島廳이라고 한 것은 모두 지청장, 지청으로 바꾸어 해석하도록 했으니 명치38년 고시 40호의 島司를 지청장으로 바꾸어 해석함으로써 竹島는 지청장의 소관이 되어 여전히 支廳 관할이다.
- ④ 국세 외 제수입 징수원장에 의하면 대정14년 4월 30일 조정한 4원 70전 竹島 사용료를 동년 5월 14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소화2년(1927) 4월 26일 조정한 4원 70전, 소화3년(1928) 4월 21일 이래 소화 9년(1934)분까지 八幡長四郎이, 마찬가지로 소화10년(1935)부터 16(1941)년까지 橋岡(하시오카)忠重이 隱岐지청에 납부하고 있으니 ②③ 모두 어쨌든 竹島의 소관은 島司 시대부터 그대로 支廳에 인계되고 있다.
- ⑤ 관유물 貸下料, 地所 사용료 수납사무를 지청이 처리한 것은 단순히 재정상의 사무 위임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면 竹島 소관이 반드시 지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⑥ 이상은 島司 폐지 후의 竹島의 소관에 대해 齋藤 主事와 田村 주사

가 연구한 결과인데 요컨대 소속 결정은 정치적 고찰에 의해 어느 쪽이던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문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1926년 7월 이후 죽도(=독도) 관할에 대해 명확한 조치가 행정문서로 작성되지 않아 1953년 현재,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담당자인 吉野操 씨로부터 그간의 경위를 청취했다고 하며, 이 문서에는 (極秘)라고 적혀 있다.

1. 吉野操 씨 담화 개요

(현재 마쓰에 상호은행 근무, 소화12년(1937) 7월부터 소화17년(1942) 2월까지 시마네현 지방과에 主任屬으로 근무)

면회 일시 : 소화 28년(1953)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면회자 : 上手 主事, 田村 主事

나는 당시 지방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竹島의 오개촌(五箇村) 편입에 관한 사무에 관여했다.

당시 五箇村長으로부터 五箇村에서 가까운 竹島는 五箇村民이 어업권을 갖고 출어하고 있으므로 오개촌의 구역에 편입하고 싶다는 강한 요망이 있었다. 知事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촌장 일개의 요망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村會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어서 자문을 받기로 했다. 자문결과 촌회에서는 편입을 의결하여 답신해왔으므로 縣에서는 縣 參事會에 자문한 바, 통과했는데 이를 내무대신에게 신청하고자 했다.

러일전쟁 전에 아마도 명치36년(1903) 정도에 내무대신의 고시(관보에 없으면 당시의 내무성 예규집에 있을 것이다.)에 의해 일본영토로 편입되어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되어 관유지에도 있으니까 사전에 내무성에 품의를 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의 청원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村會에 자문하여 이를 편입한다는 것을 문서로 보고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먼저 문서에 의거하지 말고 구두로 내무성에 사정과 의향

을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문서로 보고하자는 의견이어서 소속 미정지를 정촌구역으로 편입하는 수속을 미루게 되었다.

또한 관할 지역⁴⁶⁾에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십 리나 떨어진 것을 가깝다고⁴⁷⁾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것도 문서로 내무성에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니 구두로 물어보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知事는 구두로 내무성의 의견을 듣고 다시 처리하기로 정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정한 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자신은 최근 신문지상에서 五箇村 竹島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언제 편입 수속을 취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또한 소화14년(1939)은 支那事變이 격화하고 전쟁 때문에 縣廳은 정신이 없어서 竹島는 무인도이고 그다지 강한 관심을 끌지 못하여 잊어버린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라 진술했다. 이 내용은 1926년 오키 지청이 설립된 후 당시 독도는 소속 미정지로 남아있었고, 담당관인 요시노(吉野操)는 1937년부터 1942년 2월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竹島를 오개촌 소속으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관련 행정업무는 미뤄지고, 지사의 교체 과정에서 누락되고 처리되지 못한 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1953년에 중앙정부로부터 독도 관련 조사를 하달 받은 다음에야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 요시노는 “竹島는 무인도이고 그다지 강한 관심을 끌지 못하여 잊어버린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한 점은 당시에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이 점은 촌회에서 독도를 고카무라의 관할지역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십 리나 떨어진 섬을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는 점과도 상통하는 사안이다. 일본인은 일제 강점 후 한국 고유 영토가 ‘일본제국’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동해에 떠

46) 원문은 地元모토(地元).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생활(세력)의 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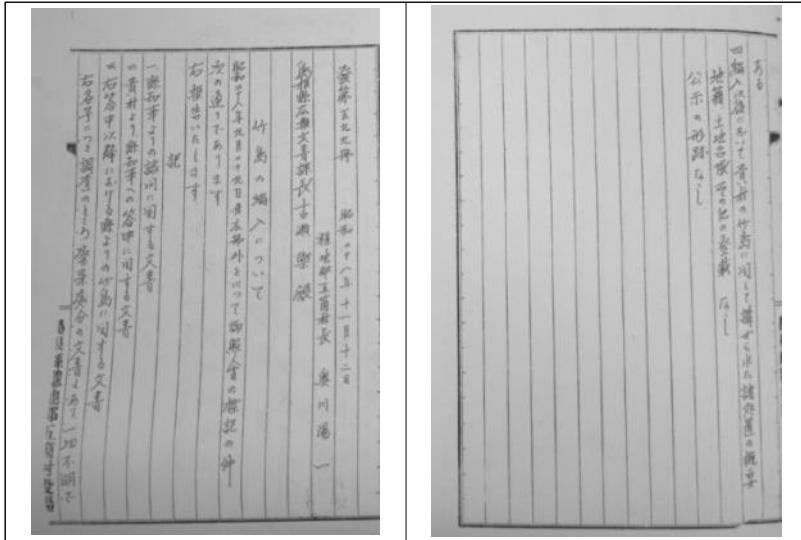
47) 원문은 지사키(地先). 뜻은 해안에서 보이는 정도의 앞바다

있는 무인도 독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나아가 요시노는 신문지상에서 “五箇村 竹島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언제 편입 수속을 취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즈음에 시마네 현 총무부 廣報文書課는 1953년 9월 15일자로 오개촌 촌장에게 죽도 편입의 시기와 수속 방법에 대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보냈다. 이에 대한 회신에는 죽도 편입 시기를 1939년 4월 24일로 하고, 편입 수속 방법은 “본 건은 현 지사로부터 오개촌 구역으로 편입에 관해 자문이 있었고 別紙와 같이 소화 14년(1939) 4월 24일 본 촌회의 의결을 거쳐 답신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적었고 1939년 4월 21일에 오개촌 촌회 소집 고지문 사본에는 안건에 「竹島를 오개촌에 편입하는 건」을 적고 있지만, 관련 원본 자료는 하나도 첨부되지 못했다.

1953년 9월 29일자로 시마네 현 총무부 광보문서과장 후루세 기요시(古瀨潔)가 온지군 오개촌장(五箇村長) 奥川陽一에게 ‘竹島 편입에 대하여 시마네 현 지사로부터 자문 받은 문서, 오개촌에서 시마네 현 지사에게 답신한 문서, 답신 이후 현에서 온 죽도에 관한 地籍, 토지대장 그 외 등재, 公示 문서 등이 있는지’에 대해 의뢰했는데 이에 대해 오개촌장은 1953년 11월 12일에 회신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 각호에 관해 조사한 바, 폐기처분문서도 있고, 전혀 불명이다. 편입 이후에 貴村의 죽도에 관하여 강구한 여러 처치의 개요, 지적, 토지대장, 그 외 등재 없음. 公示한 형적 없음.”이라고 회신했다.⁴⁸⁾ (아래 죽도연구소 소장 자료 이미지 참조)

48) 廣號外, 소화28년 9월 29일 시마네현 총무부 광보문서과장 古瀨, 온지군 오개촌장 오천양일 앞, 「竹島の編入について」, 『涉外關係綴』



즉, 오개촌장(五箇村長)의 명의로 행정구역 개편 후 죽도 편입과 관련된 공식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1953년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上手 主事, 田村 主事は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견을 첨부했다.

제2. 소견

1. 五箇村에 자문한 것은 三樹 지사였는데 三樹 지사는 14년 4월 17일 퇴관했고 4월 23일 森部隆 지사가 착임하여 사무 인계를 하고 五箇村會의 답신을 받은 것은 森部 지사이며 사무인계 직후의 혼란 중 이었고 생각된다. 또한 지사의 사무인계서 중에는 미완결 사무로서 본 건에 관해 기재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三樹 지사와 森部 지사와의 사이의 사무인계서는 書庫에 누락되어 있다.
2. 參事會에 자문을 했다고 吉野 씨는 말하는데, 참사회의록 및 참사회 결의록에 의하면 소화14년도에 정식 의제로서 竹島에 대해 다룬 형적은 없다. 따라서 吉野 씨의 말처럼 의안으로 제출되고 이것이 통

- 과했다는 것은 기억의 착오이며 실제로는 상기한 縣의 견해라는 것을
 잡담적 내지는 口頭로 말하여 참사회의 양해를 구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3. 森部 지사는 14년 4월 22일 작임, 15년 4월 퇴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상기한 縣의 사무상황이 있어서 구두에 의한 내무성과의 연락
 은 망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4. 이상과 같이 五箇村會의 편입의결만을 갖고서는 町村制 제3조에 입
 각하여 소속 미정지의 정촌구역 편입의 소속이 취해졌던 것은 아니
 며, 따라서 竹島를 五箇村 소속으로 삼는 근거는 아니라고 인정하
 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소화15년(1940) 8월 17일 공용 폐지가 되어 縣으로부터 마이즈
 루(舞鶴) 진수부에 해군재산으로 인계했을 때는 五箇村 竹島로서가
 아니었던 것 같으며, 16년 11월 28일의 마이즈루 진수부 사령장관
 이 五箇村 八幡長四郎에게 해군용지의 사용을 허가한 명령서에서
 도 [토지사용을 허가하는 위치는 시마네현 竹島 소재 해군용지]로
 되어 있다.
 管見한 바에 의하면 마츠에 재무부의 국유지대장에 20년 11월 1일
 해군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竹島 방어구에 관해서 비고란에 시마네
 현 穩地郡五箇村獨島라고 있는 것을 유일한 공문서로 하는데, 비고
 란의 기입이 20년 11월 이전의 해군의 기록에 입각하는 것인지 아
 닌지는 불명이다.
 6. 1953년 6월 19일 縣 告示 352호 공동어업권의 면허 및 동일, 公告한
 아시가 어업권의 허가는 모두 五箇村 竹島라고 되어 있는데 상술한
 경위에서 보면 하자(瑕疵)가 있는 행정행위가 되며 무효는 아니지
 만, 보정이 필요한 것이 된다.
 7. 竹島는 1926년 隱岐島司가 폐지되어 시마네현 지사의 직접 소관하
 는 바가 되고 별도로 隱岐支廳長에게 위임한 모습도 없으므로 현재
 에도 知事の 직할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어떤 경우든 급히 조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또한 吉野 씨의 명치36년이라는 것은 분명히 38년의 착오인데 내무
 성 고시 그 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극력 찾아볼 생각이다.

이에 의하면 1939년에 독도와 관련하여 오개촌(五箇村)의 參事會가 열린 회의록 등의 증빙도 없고, 또한 독도가 오개촌(五箇村) 소속으로 행정적으로 편입 조치도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 문제를 현재의 일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1989년에 편찬된 『五箇村誌』에는

소화14년 본촌의 의회에서 竹島를 五箇村의 구역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고, 大字久見의 일부로 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제2차 세계 대전 종결에 따라 관리는 대장성으로 이관되고 국유재산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⁴⁹⁾

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실상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왜 벌어진 것일까? 러일전쟁 당시 필요에 의해 시마네 현에 편입 조치한 무인도 독도는 일제강점기가 되자 더 이상 요시노가 증언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1926년 이후 시마네 현에서도 독도에 대해 별다른 의식이 없었기에 행정조치 등을 느슨하게 대처한 것이다. 그러다가 패망 후 한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분리되자 독도가 갑자기 일본에게 중요한 섬이 되어버리자, 급히 미봉과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앞의 자료에서 더욱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마츠에 재무부의 국유지대장에 1945년 11월 1일 해군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竹島 방어구에 관해서 비고란에 시마네현 穩地郡 五箇村 獨島”라 적혀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1923년에 편찬된 『島根縣誌』에도 “죽도를 조선에서는 獨島라고 쓴다.”고 소개되어 있는 것⁵⁰⁾을 보면, 獨島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측에도 엄연히 살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9) 『五箇村誌』, 島根縣隱岐郡五箇村役場, 1989, 255쪽. 독립기념관 소장본

50) 島根縣教育委員會 편찬, 『島根縣誌』, 島根縣教育會, 1923, 690쪽. 반월성통신 원문 제공자료

또한 일제강점기 한인들은 이 섬을 ‘독도’ 혹은 ‘독섬’으로 기억했기에 40년의 일제강점 시대를 지나 해방을 맞이하고 어수선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竹島’나 ‘양코도’가 아닌, 울릉도의 부속 섬 ‘獨島’로 호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울릉도와 독도 관련 일본어 자료를 통해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독도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에 죽도(=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한 것은 당시 ‘지명의 거인’으로 불린 요시다 도고의 『대일본지명사서』의 영향이 컸다. 또한 그러한 인식은 요시다 도고의 『신편 일본독사지도』에 소개된 「한국병합 전후 일본영역도」의 인식과도 일치한다. 게다가 요시다 도고가 이 책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독사지도』는 요시다 도고의 단독 편찬이 아니고 아시다 고레토(蘆田伊人)와 후지타 아키라(藤田明)의 협력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후지타 아키라의 단독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독도를 인식한 것은 특수한 사례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저술된 연구논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 이마무라 도모 등의 연구에서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각각 근대 이전의 竹島와 松島에 비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히바타 셋코(樋畑雪湖)는 직접적으로 이를 언급했다. 이미 국내에 잘 알려진 1936년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에 울릉도와 죽도(=독도)가 조선 구역에 포함된 것도 이러한 맥락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인식되었기에, 굳이 독도를 따로 떼어 내어 일본의 영토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펴낸 지리 관련 기술에서도 표출된 것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울릉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도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증언한 점, 독도가 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여전히 일본인은 랑코도, 조선인은 獨島라고 불렀다는 점은 행정구역상 소속 관계나 명칭 변경과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전의 방식과 호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1923년 발간된 『島根縣誌』나 1945년 일본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대장에 獨島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일제강점기에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일본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작 독도를 영토 편제한 시마네 현에서는 1926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키 도사가 폐지되고 오키 지청이 수립된 후 독도 소관 관련 행정조치도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53년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일본 측이 은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한국 전영토를 병탄한 이상 독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시마네현 마쓰에 시 죽도연구소 소장 『涉外關係綴』
오쿠하라 헤키운 「죽도연혁고」, 『장사지리』 제8권 6호, 1906.6.
大阪毎日新聞社調査訂刻, 「大日本交通明細地図」, 독립기념관 김남훈 기증자료
藤田明, 『中等教科日本歴史地圖』, 寶文館, 1915, 독립기념관 김남훈 기증자료.
坂本南岳, 「鬱陵島視察記 (10)」, 『부산일보』 1917.12.21.
문학박사 吉田東伍박사 저, 『신편 일본독사지도』, 富山房, 1927년 1월 증정 제8판
발행본
島根縣教育委員會 편찬, 『島根縣誌』, 島根縣教育會, 1923, 반월성통신(www.kr-jp.net) 원문제공자료
守屋 荒美雄, 『帝國精圖』, 제국서원, 1925, 독립기념관 김남훈 기증자료
芝葛盛, 『日本歴史地圖』, 明治書院, 1927, 독립기념관 김남훈 기증자료
釋尾春苒, 조선금만주사 편찬, 『朝鮮滿洲案内』, 1930.
水路部, 『조선연안수로지』, 1933.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水路部, 『本州沿岸水路誌』 193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日韓書房編輯部, 『新撰朝鮮地誌』, 日韓書房, 1912, 반월성통신(www.kr-jp.net) 원문
제공자료.
坪井九馬三, 「鬱陵島」, 『歴史地理』 38권 3호, 1921, 반월성통신(www.kr-jp.net) 원
문제공자료.
坪井九馬三, 「竹島に就いて」 『歴史地理』 56권 1호, 1930, 34쪽, 반월성통신(www.kr-j
p.net) 원문제공자료.
田保橋潔,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青丘学叢』 3호, 1931.2. 반월성통신(www.kr-j
p.net) 원문제공자료.
田保橋潔, 「鬱陵島の名稱に就いて(補)一坪井博士の示教に答ふ」, 『青丘学叢』 4호,
1931.5, 반월성통신(www.kr-jp.net) 원문제공자료.
今村軻, 「鬱陵島紀事」,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1928, 반월성통신(www.kr-j
p.net) 원문제공자료.
樋畑雪湖, 「日本海に於ける竹島の日鮮關係に就いて」, 『歴史地理』 55-6, 1930.6.
川上健三,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1953.8,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황상기, 『독도영유권해설』, 근로학생사, 1954년 초판, 1965년 재판, 독립기념관 김
남훈 기증자료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시마네 현 총무부 총무과, 1965년 초판

-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출판부, 1969, 독립기념관 김남훈 기증자료
『五箇村誌』, 島根縣隱岐郡五箇村役場, 1989, 255쪽. 독립기념관 소장본
-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 유미람·최은석 『근대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유미림,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독도 호칭」 『영토해양연구』 5, 2013.
- 윤소영, 「근대일본 관찬 地誌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2013.12.
- 윤소영,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12.
- 윤소영,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조선연구」, 『일본사상』 29호, 한국일본사상학회, 2015.12.
- 박병섭, 「이케우치 사토시의 죽도- 또 하나의 일한관계사」 『독도연구』 20, 2016.6.
- 한철호,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 소학교 지리교과서의 縣 관할지 서술내용과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61, 2018.9.
- 한철호, 「일본내무성 지리국 출신 하타 세이지로(奏政治郎)의 오키·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90, 2019.9.
- 船杉力修, 「竹島の日本地図についての韓国側報道論文に対する反論(2)」, 『島嶼研究ジャーナル』 3권2호, 2014.4.

<Abstract>

Recognition of Dokdo as an affiliated island of Ulleungdo as shown in Japanese materi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Yoon, So-Young

Until now, through the results of several previous studies, it is thought that it was fully revealed that Japan did not recognize Dokdo as a territory of Japan before it was forced to annex it to its territory in 1905. Howev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difficult to prove that Dokdo was Korean territory because all of the Korean territory became Japanese territory.

Nevertheless, history is not cut off from time to time, but still exists under continuity. Even if Japan, by law, made Dokdo one-sided as its territory, the perception that Dokdo is an island attached to Ulleungdo will not suddenly disappear.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Dokdo's perception appeared in Japanese materials related to Ulleungdo and Dokdo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onated by Nam Hoon Kim, donated to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in 2017, research papers related to Ulleungdo and Dokdo written by Japanese schol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tsue City, Shimane Prefecture. It is a document called "About the Incorporation of Takeshima" that I directly collected at the Takeshima Research Institut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hiba Kazumori's Japanese

History Map (1922) wrote Takeshima(=Dokdo) as the territory of Korea, revealing that it recognized Dokdo as an island attached to Ulleungdo. This was largely influenced by Yoshida Togo's "The Great Japanese geographic dictionary", which was called the Giant of Japanese Geography. This coincides with the perception of Japanese territorial map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annexation introduced in the "New Japanese history map" published by Yoshida Togo.

Furthermore, since Shiba Kazumori's perspective was reflected in the writings of research colleague Akira Fujita. Shiba Kazumori's perception was not limited to him.

An example of recognizing Dokdo as an affiliated island of Ulleungdo can also be found in research papers written by Japanese schol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other words, studies by Tabohashi Kiyoshi and Imamura Tomo revealed the perception of Dokdo as a sub-island of Ulleungdo by declaring Ulleungdo as Takeshima(竹島) and Dokdo as Matsushima(松島). Setko Hibata directly determined Dokdo as an island of Ulleungdo.

On the other hand, Japanese residents who lived in Ulleungd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estified that Dokdo was clearly visible on Ulleungdo on a clear day. Despite the fact that Dokdo was incorporated as a Japanese territory in Shimane Prefecture under the name of Takeshima(竹島), Japanese were known as Ryangkodo and Koreans were Dokdo(獨島). The fact that it is called is a part wher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revious methods and habits continue in life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system.

Also, it is recorded as Dokdo(獨島) in 『島根縣誌』 (1923) and the head of the State Treasury Department of Matsue, Japan (1945), indicating that Japan also recognized Dokdo as an attached island of Ulleungdo.

Furthermore, after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as changed from Oki island governor (島司) to the Oki branch office in 1926, it was left until 1953 without administrative measures for changing the region governing Dokdo.

Japan is hiding this fact, but this is an indicator that Japan can guess how Dokdo was perceiv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Korea was recognized as the “territory of Japan Empire” by the Korean Merge Treaty, so the Japanese side did not have to separate Dokdo and emphasize it as Japanese territory.

In such a situation, regardless of its name, the geographical recognition of Dokdo as a sub-island of Ulleungdo was naturally expressed in Japanese records related to geography. Even Japanese officials have indicated that the island was called “Dokdo(獨島)” by Koreans.

Key words: Ulleungdo, Dokdo(獨島), Jukdo(竹島), Shiba Kazumori (芝葛盛), Yoshida Togo (吉田東伍), Tabohashi Kiyoshi(田保橋潔), Imamura Tomo (今村軼), Hibata Setko (樋畑雪湖), Yoshino Sou(吉野操)

이 논문은 2020년 5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야마구치현 주민의 울릉도 침탈사건에 대한 연구*

박 지 영**

〈목 차〉

1. 머리말
2. 야마구치 현민의 울릉도 침탈
3. 야마구치 현민의 울릉도 침탈 경과
4. 야마구치현의 어업
5.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와 철수 조치
6.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18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관련해서 야마구치 현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먼저 야마구치 현 어민들의 에도시대 및 메이지 시대의 어로활동을 분석한 결과 야마구치 현의 어민들은 그들의 어로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동영역이 넓어졌으며, 특히 에도시대 말기에는 한반도 남부 해역과 울릉도로까지 그 활동영역이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확장이 1880년대의 울릉도 침탈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울릉도 침탈사건과 관련한 기존의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야키(榎本武揚)가 간여하여 울릉도 침탈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보다 더 앞선 에도시대부터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17-기획연구(공동)-18)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1880년대의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사건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침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3년 이상에 걸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목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일본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일본정부의 아전인수적인 판단이 이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인 울릉도 침입 및 독도 침탈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영유권, 야마구치현, 메이지 시대, 침탈

1. 머리말

1881년, 약 400명의 일본인이 울릉도로 건너와서 목재를 도벌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다 조선 측 수토관에게 적발되어 한일 양국 간에 외교 문제로 비화한 사건이 있었다. 그동안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주로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1881년에 울릉도를 침탈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출신이 아니었다. 당시 한일 양국은 울릉도로 건너온 일본인들의 처분을 둘러싸고 외교 교섭을 하는 한편, 고종은 이규원을 검찰사로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시켰다.

이때 울릉도에 있던 일본인은 약 400명이었으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야마구치현 주민이었다. 이들의 침탈행위는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행위로 이어진 사건으로 그러한 맥락에서 1881년 당시에 울릉도에 있던 야마구치현 주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울릉도로 건너오게 된 경위, 그리고 그들이 울릉도에서 했던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다.¹⁾

1) 1881년 사건과 관련해서는 송휘영,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항금지령』, 『독도연구』 제19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5, 송휘영, 「일제강점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880년대에 이루어진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탈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고찰한 후, 독도 문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 기존 연구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아마구치현의 주민이 메이지 시대에 울릉도에서 자행한 침탈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 어떻게 침해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1881년에 적발된 아마구치현 주민의 울릉도 침탈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마구치현 어업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들이 울릉도로 건너오게 된 경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도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아마구치현 주민에 대한 일본 측의 처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아마구치 현민의 울릉도 침탈

17세기 말의 안용복 사건이 원인이 되어 실시된 울릉도 수토제는 그 이후로도 1894년(고종31)까지 실시되었다. 조정의 명령을 받아 울릉도 수토를 위해 파견된 수토관²⁾이 1881년 봄에 울릉도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일본인들이 다수 벌목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였으므로 수토사는 바로 보고를 올렸으며, 이 사실은 강원도 관찰사 임한수를

기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 제46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3; 박병섭, 『한말 일본의 독도침입과 독도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朴炳涉, 「山陰地方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 『北東アジア文化研究』 제30号, 鳥取短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2009; 송병기, 「검찰사의 울릉도 파견과 개척」,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등의 연구가 있지만, 아마구치현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2) 1881년에 파견된 수토관의 성명은 분명하지 않지만, 『승정원일기』 고종 17(1880)년 12월 29일자 기록에 따르면 수토관으로 파견될 순서였던 삼척영장에 남준희(南俊熙)가 임명되었으므로, 수토관은 남준희인 것으로 추정된다.

거처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 보고되었다.

당시 울릉도에서 벌목하던 일본인들을 적발한 수토관은 그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도항 목적과 소속이 어디인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사건이 발각된 후에 야마구치현 당국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담당한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가 야마구치현 내에서 조사를 마친 후에 제출한 「복명서(復命書)」에 기술되어 있다.³⁾ 야마모토의 「복명서」에 따르면 수토관의 질문에 대해 일본인들은 “풍파로 인해 표착(漂着)한 사람들”이라고 허위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속지역도 의도적으로 허위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며, 그들이 벌목하고 있던 곳이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토관의 보고를 접한 통리기무아문은 이규원을 보내 울릉도를 검찰하도록 하고, 방수(防守)와 이민(移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을 받아들인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881년 6월에는 예조판서(禮曹判書) 심순택(沈舜澤)이 일본의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일본인의 국경침범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외교 서한을 보내, 울릉도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철수시키라고 요청했다. 조선 정부의 항의와 철수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무대보(外務大輔)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 명의의 8월 20일 자 외교 서한을 통해 조사 후에 조치하겠다는 답신을 보내고, 1881년 12월에 조선 주재 일본공사관을 통해 울릉도에서 벌목 중이던 일본

3) 山本修身, 「復命書」, 『明治十七年蔚陵島一件録』, 山口県文書館所藏(行政文書 戦前A 土木25) 이하 특별한 주석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明治十七年蔚陵島一件録』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로 한 것이다. 이 야마모토 오사미에 대해서 송휘영,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 도항금지령』」, 『독도연구』 제19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5, 89-90쪽에서는 “당시 벌목을 목적으로 잠입한 야마구치현 출신”의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야마구치 현의 관리이며, 울릉도에 벌목을 목적으로 잠입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후에 야마구치현으로 철수한 주민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인물이다.

인이 모두 철수했다는 답변을 보내는 등, 허식적인 문서 외교만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1882년 4월 30일에 검찰을 위해 울릉도에 도착한 이규원이 5월 11일까지 체류하면서 총 78명의 일본인을 적발한 것을 보면 모두 철수했다는 일본 측의 답변이 거짓이었던 것이 분명하다.⁴⁾ 1881년의 수토관과 마찬가지로 이규원은 울릉도를 검찰하던 과정에서 현지에 체류 중이던 일본인들을 조사했으며, 야마모토의 「복명서」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1882년에 이르러 조선국 검찰사 이규원(李奎遠), 군관 심의완(沈宜琬), 고종팔(高宗八), 서상학(徐相鶴) 등 수 명이 섬으로 건너와서 해안가에서 자국의 병사들을 훈련시켰다고 한다. 그 당시의 응대에서 “어렵을 제외하고 별목은 마음대로 해도 되며, 또 내년에도 도항해도 좋다”고 말했다.”라고 한다. “조선국에서는 해마다 약 3백 명 정도 씩 도항하여 다시마 등을 채취했으며, 가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 다만 “그중 4명가량은 인삼을 채취하기 위해 해당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한다. (중략) “그때도 조선인과 응대했는데, 답변을 한 자는 후지쓰 세켄(藤津政憲)이 설립한 아사히 조(旭組)의 부지배인인 에히메현(愛媛縣) 출신 우치다 히사나가(内田尙長)였으며, 그 응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한다.

조선인이 말하기를, “이 섬은 우리나라 영토이므로 외국인이 함부로 건너오거나 상륙하면 안 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상륙하여 게다가 수목 등을 벌채한 것은 일본 정부의 명령인가? 또는 그것을 모르고 도항한 것인가?”

일본인이 말하기를, “일본 정부의 명령은 아니지만 ‘만국공법’에 따르면 무인도는 발견한 사람이 3년간 그 땅에 거주하였을 때는 소유권이 있으므로 수목을 벌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선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귀국 정부에 조회할

4)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모두 이 섬을 떠나 앞으로 도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귀국 정부에 조회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다.”

일본인이 말하기를 “이 섬이 귀국의 영토라고 양국 정부에서 조약을 맺은 것이 있다면 선편이 도착하는 대로 떠날 것이지만, 이미 별채해 둔 목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선인이 말하기를 “그것은 가져가도 무방하다.”

이 대화 내용으로 보면 검찰사 이규원은 일본 정부의 명령을 받아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온 것인지를 확인했으며, 일본인은 일본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일본인의 주장 중에 나오는 “만국공법”에 따른다면 무인도는 발견한 사람이 3년간 그 땅에 거주하였을 때는 소유권이 있으므로 수목을 별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에게 이러한 허위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⁵⁾, ‘만국공법’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앞뒤의 기술내용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어렵을 제외하고 별목은 마음대로 해도 되며, 또 내년에도 도항해도 좋다”고 말한 이규원 일행이 뒤에서는 “우리나라 영토이므로 외국인이 함부로 건너오거나 상륙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고, “지금 모두 이 섬을 떠나 앞으로 도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귀국 후에 야마모토의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 함부로 건너오거나 상륙해서는 안 되는 곳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너와서 별목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5) 朴炳涉, 「山陰地方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 『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0号, 鳥取短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2009, 11-12쪽. 박병섭은 “해군경 에노모토는 국제법의 제1인자였는데 그는 울릉도가 무주지임을 구실로 삼아 민간인의 거주 실적을 축적하여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 계획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며 에노모토 다케야키(榎本武揚)를 지목하고 있다.

또 해마다 약 3백 명 정도의 조선인이 울릉도로 건너가서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고 가을에는 본토로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규원의 검찰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대적인 조선인들의 울릉도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과 거문도, 초도 등 전라도 어민들의 울릉도, 독도 진출에 대한 사실 규명이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규원이 당시에 적발한 울릉도 체류자들은 모두 218명이었는데, 그중에는 한국인도 140명이 끼어 있었다. 이들 한국인은 전라도의 초도와 삼도(거문도), 낙안 등지에 온 사람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강원도 평해 사람 14명, 경주, 연일, 함양 등에서 온 경상도 사람이 10명, 경기도 파주 사람이 1명이었다. 전라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목적은 선박건조와 미역채취였으며, 강원도, 경상도 등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목적은 인삼이나 약초 채취였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울릉도 도항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므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전라도 남해안의 어민들이 대대적으로 울릉도로 건너갔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아마구치 현민의 울릉도 침탈 경과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 따르면 1882년 5월에 울릉도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78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울릉도 사정을 조사한 아마구치 현의 하기 경찰서 순사 요코타니 사이치(横谷 佐一)가 기록한 ‘마쓰시마(松島⁶⁾) 정황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살펴보면 이규원의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6) 여기에서 적시된 “마쓰시마(松島)”는 현재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마쓰시마 정황서’

이번 달 13일 자로 조선 마쓰시마의 정황에 관해 조항을 나누어 문의하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곧바로 해당 섬의 정황을 들어보니 일 본인이 섬으로 건너간 인원수는 대략 400명이며 이를 8개의 조로 나누어 소위 아사히 조(旭組), 도쿄 조(東京組), 후쿠우라 조(福浦組), 마쓰오 조(松尾組), 하야세 조(早瀬組), 노무라 조(野村組), 마쓰오카 조(松岡組)로 부르고 있으며, 1개 조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해당 섬의 자중곡(字中谷)에 아사히 조가 있으며 지고루케(字コールケ)에 같은 조의 지조(支組)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는 대략 95-6명이라고 합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인물의 주소, 성명 및 소속 종업원과 기타 각 조 중의 중요한 인물 및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아래에 요약해서 기재해 둡니다.

야마구치현 오쓰 군(大津郡) 구후무라(久富村) 거주
아사히 조 대표 후지쓰 세이켄(藤津正憲)

에히메현(愛媛県) 거주

각 조에서 선출하여 부이사 겸 응접 담당으로 삼아 월 급여 50엔을 지급

부대표 우치다 나오나가(内田尚長)
오사카부(大阪府) 시모나라(下奈良) 거주
출납담당 후쿠스미 센타로(福隅仙太郎)
같은 부 준케이 마치(順慶町) 2정목(二丁目) 거주
출납담당 이이다 신키치(飯田信吉)
에히메현 거주
서기(書記) 하야시 쇼리(林尚吏)
오사카부 시모나라 거주
서기 모리타 이소지로(森田磯二郎)
시마네현(島根縣) 숫산토마치(出産当町) 아카마제키(赤間関) 거주
고용원 도이 세타로(土井請太郎)
야마구치현 아카마제키 거주
고용원 나카지마 신키치(中島新吉)

같은 현 미시마 군(見島郡) 미시마(見島) 거주
주주이며 해녀 대표임

고용원 나카야마 이와노스케(中山岩之助)

같은 현 아카마제키 거주

고용원 와다 히데키치(和田秀吉)

이상 11명

- (1) 해녀 14명 정도, 이들은 미시마 군 미시마 거주의 사람들임
- (2) 별목꾼 40명 정도(절반은 본 현의 사람들이지만 나머지는 세키슈(石州), 히로시마(廣島), 규슈(九州) 지방의 사람들임)
- (3) 인부 30명 정도(절반은 본 현 사람들이지만 나머지는 히로시마, 세키슈 지방 사람들임)

이상은 아사히 조에 소속된 종업원

- (4) 도쿄 조는 총원 약 70명으로 중요한 인물은 도쿄에 사는 도리우미 요조(鳥海要三)이며, 이 사람은 각 조가 선출한 이사로 월급 50엔을 받음
- (5) 후쿠우라 조는 총원 약 35-6명으로 중요한 인물은 본 현 아카마제키 후쿠우라 거주 아와지야(阿波路屋) 무언가라는 자임
- (6) 마쓰오 조는 총원 약 40명으로 중요한 인물은 도쿄 사람이지만 성명을 알지 못함
- (7) 하야세 조는 총원 약 70명으로 중요한 인물은 본 현 아카마제키 거주 하야세 이와히라 임
- (8) 노무라 조는 총원 약 50명으로 중요한 인물은 본 현 아쓰하기 군(厚荻郡) 모토야마(本山) 거주 노무라 무언가라는 자임
- (9) 마쓰오카 조는 총원 약 30명으로 중요한 인물은 본 현 요시키 군(吉敷郡) 고코오리(小郡) 아치스(阿知須) 거주 마쓰오카 무언가라는 자임

그 외 1조는 중요한 인물 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 (10) 해당 섬에 선박으로 왕래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므로 매년 3월경에서 9월경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모양이며, 또 각 조의 사정에 따르지만 대략 조별로 섬으로 건너간 후에 두 달에 한 번씩 선박이 왕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 즉 9월경에 이르면 각 조의 인원 모두 철수하여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도쿄 조만

작년 겨울철에도 섬에 체류하였다고 합니다.

- (11) 섬으로 건너간 사람은 각 조의 중요한 인물 등의 지휘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달리 그 근거로 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박이 왕복하는 중에 안전할 때는 많은 이익도 있는 모양새이지만 올해 최초로 건너간 아사히 조의 경우는 풍파로 인해 고생하여 결국 선장이 파손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 (12) 섬으로 건너온 조선사람 약 300명 중의 5명 정도가 해당 섬을 살피는 관리이며, 물론 겨울철에 이르면 대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해당 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선인도 없는 모양입니다. 위의 내용은 들은 것을 대략 정리한 것이며, 또 상세한 것은 뒷날 들어서 알게 되면 상신하겠습니다.

하기 경찰서 근무

1883(明治16)년 8월 16일 순사 요코타니 사이치(横谷佐一)

참고

이 탐문은 해당 섬에 도항한 아사히 조에 고용된 오사카부 평민 우메조노 유이쇼(梅園惟章)라는 사람이 귀국했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가서 청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7)

7) 『외무성기록(外務省記録)』 3문(門) 통상(通商), ‘8류(類) 제국신민이동(帝國臣民移動), ‘2항(項) 이민(移民)’의 4, 『조선국 울릉도에 불법으로 도항한 일본인을 데리고 온 처분 건 제1권(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第一卷)』에서 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松島景況書’

本月十三日付ヲ以テ朝鮮松島之景況條項
ヲ分チ御問合之趣敎承即チ該島之景況
聞知スルニ日本人渡島ノ員數凡四百名ニシテ
之ヲ八組ニ分ツ曰旭組東京組福浦組松尾
組早瀬組野村組松岡組外一組明唱不分明ナリ
該島字中谷ニ旭組アリ字コールケニ同支組アリ
其人員凡九拾五六名ナリシカ内重立タルモノ、住
所氏名及ヒ付屬スル稼業人員其他名組ノ内
重立タル者並ニ御參考トナル可ク事項左ニ概
畧記載致候

山口縣大津郡久富村居住

-
- 旭組頭取 藤津正憲
愛媛県居住
- 各組ノ公撰ニ依リ副理事兼応接掛トナル月給金五十円ナリ
- 副頭取 内田尚長
大阪府下奈良居住
- 出納掛 福隅仙太郎
同府順慶町二丁目居住
- 出納掛 飯田信吉
愛媛縣居住
- 書記 林 尚吏
大阪府下奈良居住
- 書記 森田磯二郎
島根縣出產当町赤間関居住
- 雇 土井請太郎
山口縣赤間関居住
- 雇 中島新吉
同縣見島郡見島居住
- 株主且海士頭取ナリ
- 雇 中山岩之助
同縣赤間関居住
- 雇 和田秀吉
- メ拾壹名
- 一 海士拾四名位是ハ見島郡見島居住ノモノナリ
 - 一 木挽四拾名位(半ハ本縣人ナリシカ余ハ石州廣島九州地方ノモノナリ)
 - 一 人夫三拾名位(半ハ本縣人ナリ余ハ廣島石州地方ノモノナリ)
- 以上ハ旭組付属稼業人
- 一 東京組総員凡七拾名ニシテ重立タルモノハ東京住鳥海要三ナリ是ハ各組ノ公撰ヲ以テ理事トナル月給五拾円ナリ
 - 一 福浦組総員凡三拾五六名重立タルモノハ本縣赤間関福浦居住阿波路屋某ナリ
 - 一 松尾組総員凡四拾名重立タルモノハ東京人ナリシカ氏名不詳
 - 一 早瀬組総員凡七拾名重立タル者ハ本縣赤間関居住早瀬岩平ナリ
 - 一 野村組総員凡五十名余重立タル者ハ本縣厚荻郡本山居住野村某ナリ
 - 一 松岡組総員凡三拾名余重立タルモノハ本縣吉敷郡小郡阿知須居住松岡某ナリ
- 外一組重立タル者等一切不分明ニ有之候
- 一 該島へ船舶ノ往来ハ至テ危険ナルニ付毎年三月頃ヨリ九月頃マテニ限ルヘク様子又各組ノ都合ニモ依ルヘキナレトモ大概各組トモニ渡島後隔月位ニ船舶ノ往復ヲナス由、而シテ最終月即チ九月頃ニ至レハ各組ノ人員一同引揚ケ帰国セル趣ニ有之、尤東京組

위의 1883년에 작성된 ‘마쓰시마 정황서’에는 당시 약 400명의 일본인이 울릉도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며, 이규원의 78명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1>은 요코타니의 ‘마쓰시마 정황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당시 울릉도 체류 일본인의 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표-1> 1883년 울릉도 체류 일본인 수

소속	인원(명)
아사히 조(旭組)	약 95-6
도쿄 조(東京組)	약 70
후쿠우라 조(福浦組)	약 35-6
마쓰오 조(松尾組)	약 40
하야세 조(早瀬組)	약 70
노무라 조(野村組)	약 50
마쓰오카 조(松岡組)	약 30
명칭 미상 조	미상
합계	약 390-401 이상

ノミ昨年冬季ニモ滯島セシ由トノ事ニ有之候
一 渡島ノモノハ各組重立タルモノ等ノ指揮ニ依リ稼業ニ従事スル義ニシテ他ニ其根據ト
スル事アル事ナシト、而シテ船舶往復中安全ナルトキハ多分ノ利益モ有之様子ナリシ
カ本年最始旭組渡島ノ際ハ至テ風波ニ難マレ終ニ船底損壞ニ立至リ多分ノ損耗ヲ致シ
タル様子ニ有之候
一 渡島ノ朝鮮人凡三百名内五名程該島看守ノ官吏アリト尤冬季ニ至レハ大概本国ニ歸ル
由、又該島ニ居住スルモノハ朝鮮人ニ於テモ無之様子ニ有之候
右ハ聞知致シタル概畧ニ有之尙詳細之義ハ後日聞知ノ上上申仕候也
萩警察署詰
明治十六年八月十六日 巡查 横谷佐一

参考
此探偵ハ該島ヘ渡航シ旭組ニ雇シ居タル
大阪府平民梅園惟章ナルモノ帰国シ
タルヲ聞キ同人ニ就テ聞取タル由ニ候

위의 표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아사히 조, 도쿄 조, 후쿠우라 조, 마쓰오 조, 하야세 조, 노무라 조, 마쓰오카 조, 명칭 미상 조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총인원은 명칭 미상 조를 제외하면 총 390명에서 401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할 수 있으며, 명칭 미상 조의 인원을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883년에 울릉도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은 약 400명에서 45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1882년에 이규원은 울릉도에 있던 일본인 모두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해야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1882년에 일단 일본으로 철수했던 일본인이 1883년에 다시 울릉도로 간 것인지, 아니면 1883년에 추가로 고용된 인원이 건너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들의 고용계약서인 ‘정약증서(定約証書)’를 살펴보면 그들은 울릉도로 건너간 후, 벌목작업을 하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것은 대략 9월경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⁸⁾ 하지만 야마모토의 「복명서」에 따르면 귀

8) 『외무성기록(外務省記録)』 3문(門) 통상(通商), ‘8류(類) 제국신민이동(帝國臣民移動), ‘2항(項) 이민(移民)의 4, ‘鬱陵島ニ於ケル本邦人ノ渡航並在留取締一件(附同島ノ警官駐在所設置一件)’에서 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

定約証書

- 一 松島着島ノ当日ヨリ一日賃金四拾錢極
- 一 賃金渡方ノ義ハ歸着後五日間ニ相渡可申候尤一日ニテモ延引ノ節ハ一日三拾錢ツ、相渡可申事
- 一 松島渡航ニ付航中乗組迄ハ有費航中乗組以後ハ雇主ヨリ方可候事
- 一 本人当主中へ送金等ハ時ニヨリ協議ノ上取計可申事
- 一 米油酒其外物品ハ買入相ニ一割増シテ以テ相渡可申事
- 一 松島滯在中ニ官ヨリ制禁ノ御布告堅ク相守リ可申ハ勿論都テ雇主ヨリ申聞セノ條ハ丁寧ニ承可致事
- 一 松島ニ於テ木材ハ勿論都テ物品ハ雇主ニ隠シ猥リニ私用為ス可ラス候事
- 一 滯島中萬一不平安生シ候トモ他人支配中へ加致間敷勿論歸國ノ上之而已ノ思立ヲ以テ渡島致間敷候事
- 一 松島引上之期限ハ九月中ト相定候事

국 시기를 놓쳐 겨울을 울릉도에서 지낸 후에 이듬해에 귀환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울릉도 체류 인원은 시기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인원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 450 명가량이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인이 울릉도로 벌목을 위해 도향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박병섭의 연구가 주로 인용되어오고 있다.⁹⁾ 그것은 야마모토 「복명서」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야마모토가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초에 일본인들이 그 섬에 도향한 발단은 몇 년 전 에노모토(榎本) 공사가 러시아로 도향하면서 발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에노모토의 처남 하야시 신지로(林紳二郎)[고 육군 군의관 하야시 도시(林紀)의 동생]와 교토부의 평민 지카마쓰 마쓰지로(近松松二郎), 이와사키(岩崎) 아무개가 도향하는 건을 발의하였다. 1878년에 우선 시험 삼아 지카마쓰 마쓰지로가 기선 다카오마루(高尾丸)를 타고 해당 섬으로 건너 갔다가 일단 귀국하였다. 그 후 벌목과 어렵에 종사한 것은 1879년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1880년에 도쿄 오쿠라 조(大倉組)와 협의하

一 休閒ノ節ハ木出シ人夫ノ中ニ使用スル事アルヘシ

一 前十条ノ外必用ノ廉ニ有之候節ハ双方申合当ノ協可致候事

右之通定約致處相違無之候、萬一違背廉有之節ハ曲者ヨリ損害金償ヲナスヘシ為後日各捺印上謄本兩貳通ヲ認メ各壹通ツ、有スルモノ也

旭組頭取

山口県大津郡久富村八十番地

雇主 藤津正憲

同県阿武郡萩戎町十五番地

雇主 江崎傳之口

同県大津郡日置中村百廿四番地

同 橋本源太郎

旭組出納係

大阪府大和國添上郡奈良

南城戸町五拾六番地

保証人 福場仙太郎

9) 朴炳涉, 「山陰地方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 『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0号, 鳥取短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2009.

고 그 조(組)가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군함 이와키호(磐城号)를 사용하여 인부와 직공 등을 섬으로 건너보냈다. 이 군함을 차용한 일과 관련해서는 에노모토(榎本)가 다키노(瀧野) 함장에게 의뢰하였다고 한다. 이후 수목(樹木)의 벌채 등에 종사하였지만 기대한 만큼의 이익이 없어 에노모토, 하야시, 지카마쓰 등은 각 3천 엔씩, 오후라 조는 1만 엔가량의 손해를 보았다. 결국 1881년 10월에 벌목사업을 중지하고 해군성의 용선(用船) 가이소마루(廻漕丸)를 사용하여 벌목한 수목 및 인부 등을 철수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이토 리이치(伊藤理一)가 지카마쓰와 협의하여 1882부터 전복채취를 그만두고 벌목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겨울, 봄부터 인부를 섬으로 보내고 아울러 벌목 기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대리인을 파견하고, 지휘하는 배는 본국에 있으면서 만반의 지휘를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야마모토의 기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박병섭 씨는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도항하여 벌목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가 러시아를 왕복할 때 발견한 울릉도 이야기를 그의 처남인 하야시 신지로(林紳二郎)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그 후 하야시와 이와사키(岩崎) 아무개¹¹⁾는 1879년부터 본격적으로 벌목과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그리고 1880년부터는 도쿄의 오후라조(大倉組)와 협의하여 군함 이와키호(磐城号)로 인부와 직공 등을 도항시켰는데, 그 과정에 해군성의 군함 이와키호를 사용한 일은 에노모토(榎本)가 함장 다키노(瀧野)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¹²⁾

10) 에노모토는 1874년 1월 18일부터 1879년 2월 11일까지 ‘가라후토·지시마 교환 조약(華太千島交換條約)’ 교섭을 위해 주러특명전권대사로 활약한 적이 있으므로 그때의 이야기일 것이다. 또한 군함 이와키호를 사용하여 인부와 직공 등을 울릉도로 도항시켰을 무렵에는 해군령(海軍卿, 1880.2.28.~1881.4.7.) 직위에 있었다.

11) 여기서 이와사키(岩崎) 아무개의 본명은 이와사키 다다테루(岩崎忠照)인 것으로 보인다. 야마모토의 복명서와 이규원의 검찰일기에 기록된 표목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 朴炳涉, 「山陰地方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 『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0号, 鳥取短期

하지만 야마구치현 주민들의 울릉도 도항에 관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다. 그것은 1883년 11월 1일에 외무성과 내무성에 제출한 야마구치현의 상신서에 실린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원래 해당 섬의 건은 본 현에서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며, 북해(동해)의 격랑(激浪) 속에 고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봄, 여름철 파도가 온화할 때는 돛배로 왕복이 가능할 정도이므로, 유신(維新) 전부터 도항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것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¹³⁾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야마구치현 주민들은 유신 전, 즉 에도시대부터 울릉도로 도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696년의 에도막부의 도해금지 지시와 1837년의 도해금지 지시가 그다지 철저하게 지켜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에서 울릉도는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먼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봄, 여름철에는 돛배로 왕복이 가능할 정도였으며, 울릉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에도시대 때부터 일본인 어민들이 울릉도 근방까지 출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례를 이어받아 지속해서 울릉도로 도항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수토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문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야마구치현 주민들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울릉도로 건너가서 한국의 자원을 침탈하고 있었으나, 188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자본투입을 통한 울릉도 벌목사업이 추진되자 거기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일본 정부가 개입한 조직적이며, 의도적인

大学北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2009, 11-12쪽.

13) 「朝鮮国蔚陵島ヨリ帰国人民御処分之件ニ付上申」, 『明治十七年蔚陵島一件録』, 山口県文書館所蔵(行政文書 戦前A 土木25)

영토 침입으로 보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없지만, 해군경인 에노모토가 해군의 군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묵인 수준의 개입은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마구치현 주민들의 울릉도 도항이 어떤 계기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마구치현 어업의 역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4. 아마구치현의 어업

1) 메이지 유신 이전의 아마구치현 어업

일본의 어업이 발달한 것은 에도시대에 들어선 이후이며, 특히 에도 시대 중기 이후에 낚시와 어망을 활용한 어업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망 어업이 눈에 띄게 발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에도시대 어촌은 ‘향촌제(郷村制)’를 기반으로 하여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 속에서 농어촌 경제가 성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마구치현(山口縣)의 전신인 조슈번(長州藩, 하기(萩) 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의 경우는 하나의 촌락일지라도 농촌과 어촌의 거주 구역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지배 계층인 쇼야(庄屋)도 별도로 존재한 곳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농촌과 어촌 모두 본백성(本百姓)이라고 불리는 계층만이 공식 구성원으로 공조(貢租)를 부담하였으며, 그 외의 농어민은 모두 단순한 노동력제공자에 불과했다.¹⁴⁾

한편 에도시대 일본의 지방 도시였던 쇼카마치(城下町)의 발달로 인

14) 이하 아마구치 현 어업과 관련해서는 宮本常一 外, 『日本の民俗, 山口』, 第一法規出版, 1974, 新宅勇, 『萩藩近世漁村の研究』, 大村印刷, 1979., 宮本常一編, 『日本の海洋民』, 未來社, 1989, 小川国治編, 『山口県の歴史』, 山川出版社, 1998, 楠美一陽, 『山口県豊浦郡水産史』, マツノ書店, 1980, 河野良輔, 『日本近代捕鯨發祥の地』, (財)西日本文化協會, 1995, 宮本常一編, 『日本村・海をひらいた人々』, 筑摩書房, 1995를 참조하여 정리했다.

해 상품 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으며, 상업과 교통, 운수의 발달은 각지에 발생한 생선 도매상에 대한 수산물의 수송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에도시대를 통틀어 상품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식품과 비료로 사용되는 수산물 수요가 증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 기술의 발달도 함께 촉진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에도시대 조슈번의 촌락은 ‘지가타(地方)’라고 불리는 순수 농촌 지역과, 농업을 주로 하면서 가끔 어업을 하는 ‘해변지방(海邊地方)’, 반농반어(半農半漁)지역인 ‘하우라(端浦)’, 그리고 순수 어촌지역인 ‘다테우라(立浦)’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촌의 내부는 ‘다테우라’와 ‘하우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다테우라’가 공식적인 행정단위로 번주에게 세금을 납입하고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즉 조슈번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고모노나리(小物成)’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납입하는 ‘아미누시(網主)’나 ‘센토(船頭)’에게 앞바다 및 주변 해역에 대한 관행적인 어업권이나 어망권을 인정해 주었다.

또 사회제도적으로는 지방을 관리하는 ‘고오리부교(郡奉行)’ 아래에 ‘사이반(宰判)’이라고 불리는 행정단위 별로 ‘다이칸쇼(代官所)’가 있었으며, 농촌에는 ‘쇼야역좌(庄屋役座)’라고 불리는 조직이, 그리고 어촌에는 ‘우라시마역좌(浦島役座)’라는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어업의 허가 및 단속 업무는 대관에게 일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라시마역좌’에서 결정하여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에도시대의 야마구치현 어업사는 어로기술인 어법(漁法)의 역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법의 발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에도시대의 어법은 크게 정어리망 어법, 대부망(大敷網) 어법, 도미 어법, 포경어법, 송어망 어법, 예인망(曳引網) 어법, 낚시 어법, 연승식(延繩式) 어법, 잠수 어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성립시기가 아시카가(足利) 시대에서 센코쿠(戰國)시대에 걸쳐서 성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정어리망 어법의 경우는 와카사(若狹), 단고(丹後), 이즈미(和泉), 세쓰(攝津), 기이(紀伊) 지방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에도시대에 들어서자 정어리를 말린 것이 비료로 사용되게 되어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전파경로는 태평양 연안에서 오사카 만 연안이나 기슈(紀州)지방으로부터 동쪽으로는 보소(房總), 히타치(常陸)지방까지 전해졌으며, 서쪽으로는 도사(土佐), 나가토(長門), 히젠(肥前), 사쓰마(薩摩)지방까지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와카사나 단고에서 에치젠(越前), 에치고(越後)지방을 거쳐 쓰가루(津輕)지방의 해안까지 전달되는 경로도 있었다.

야마구치현에 정어리망 어법이 전달된 것은 1645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성황을 이루었으나, 거듭된 흉어로 인해 1791년경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망 어법은 정어리망 어법과 비슷한 것으로 에도시대의 정치망(定置網) 어법의 일종이다. 생선군이 어망에 걸리면 입구에 나가있는 어선에 연락을 하여 어망의 입구를 끌어올려 생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잡는 어법으로 야마구치현의 도요우라 군(豊浦郡)이 발상지이며, 야마구치현에서 일본 각지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일본 전국에 널리 존재하던 어법 중의 하나이다. 야마구치현에서는 1668년경에 이 어법이 도입되었으며, 나중에는 어법을 활용하여 주변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출장 어민들은 생선이 잘 잡힐 만한 곳을 발견하면 그곳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빌려서 정치망을 설치하고 거주하면서 조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망 어법은 시기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생선이 오지 않을 때는 다른 어법을 활용한 조업을 하기도 했다.

도미 어법은 대부망 어법이 실시되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1615경부터 시작되어 1625년에는 야마구치현 전역에서 이 어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어법은 쫓기면 군집하는 도미의 습성을 잘 이용한 어법으로 도미를 쫓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여 육지 쪽으로 몰아넣은 후에 육지 쪽에서 어망을 끌어당겨서 도미를 잡

는 것이다. 이러한 어법은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메이지 시대를 거쳐 195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야마구치 지방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새로운 어법이 퍼져나가면서 전통적인 어법으로 조업하고 있던 어민들과 갈등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어민 간의 갈등이 어촌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포경은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야요이 시대의 유적지에서도 석기와 함께 고래 뼈로 만든 생활용품이 발견되고 있어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래와 관련해서 일본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잡은 고래를 분배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야마구치 지방에서는 1657년에 규정을 반포한 적이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번 직할지의 경우는 번이 3분의 2, 어민이 3분의 1을 갖고, 영지의 경우는 번, 영주, 어민이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 갖는다. 이처럼 고래를 이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래를 포획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 전국적으로는 무로마치(室町) 시대 말기부터였으며, 야마구치 지방의 경우는 1661년경부터 조직적인 포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야마구치 지방에서는 포경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인식되어 포경업자의 육성, 포경자금 대여, 시설 정비, 경영지도, 포상 수여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고래를 전혀 잡지 못하는 해도 있어서 포경업자들은 번 당국의 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곤란할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에도시대 말기에는 점차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포경업을 포기하는 어촌도 발생했으며, 포경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술자를 고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에도시대 말기와 메이지 시대 초기에 이르러 미국과 러시아의 포경선이 진출하자 일본의 포경산업은 쇠락하고 말았다.

승어망 어법이 야마구치 지방에 도입된 것은 1620년대였다. 도입된 후에 승어망 어법은 착실하게 정착하여 순조롭게 발전하였으며, 야마구치 지방의 어획량을 올리는 어법으로 성장하였다. 승어는 성장하면

70-80cm까지 성장하는 중형 물고기로 에도시대에는 어획대상 중에 큰 비중을 지닌 물고기였다. 일본에서 송어는 성장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다르지만 야마구치 지방에서는 그 생김새 때문에 바다잉어라고 불렸다.

예인망 어법은 일본에서 헤이안(平安) 시대에 이미 성립되었던 어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에도시대 중, 후기에는 일본 전국으로 전파되어 조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야마구치 지방에서는 에도시대 초기에 예인망 어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히로시마 지방의 어민들이 와서 전파한 것이다.

낙시 어법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사이에 중국에서 수입된 천잠사(天蠶絲)를 낙시 줄로 이용하여 주로 삼치와 같은 물고기를 잡는 어법을 말한다. 어법으로는 에도시대 초기에 확립되었으며, 일본 전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는데 이 전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와(阿波) 지방의 도노우라(堂ノ浦) 어민들이다. 이들은 오사카에서 천잠사를 구입한 후에 작은 어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천잠사를 판매하면서 각 지방에서 낙시 어법을 선보였다. 낙시 어법이 야마구치현에 도입된 것은 1740년대였으며, 야마구치 어민들은 낙시어법을 활용하여 쓰시마 주변 해역까지 진출하여 방어 및 도미를 잡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연승식 어법은 긴 줄에 낙시바늘을 끼워서 바다 속으로 늘어뜨려 물고기를 잡는 어법으로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사용되고 있던 것이다. 야마구치 지방에 연승식 어법이 언제쯤 도입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에도시대 초기인 16세기이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세기에 야마구치 지방에서 방어잡이 어법으로 성장한 연승식 어법을 활용하여 어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어하였으며, 멀리 쓰시마 지방까지 출어하여 성황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잠수 어법은 사람이 잠수를 하여 물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법으로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된 어법이다.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도 일본 사람들이 물속으로 잠수하여 물고기와 전복을 잡고 몸에 문신을

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의 잠수 어업이 통레이지만 야마구치 지방에는 남성이 잠수하여 어업활동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어법들이 발달함에 따라 연근해뿐만 아니라 먼 바다로도 출어가 가능하게 된 야마구치 지방의 어민들은 에도시대 말기에는 쓰시마 및 한반도의 남부해안까지 출어하여 고기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술한 것처럼 에도막부의 금지명령을 어기고 울릉도로도 빈번하게 건너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이러한 어로 활동은 한반도와 밀접한 심리환경을 조성했으며,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어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갔다.

2) 메이지 시대 초기의 야마구치현 어업

에도시대에는 쇄국정책으로 인해 모든 어업이 영세한 연근해 어업이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연안 어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으므로 메이지 시대 중기에 이르자 이미 연안의 수산자원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 그 때문에 어장은 점차 먼 바다로 이동을 하였으며, 어구 재료도 발달하게 되어 근해 어업이 나날이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메이지 정부는 연안 어업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1897년에는 ‘원양어업 장려법’을 공포하고 서구의 원양어업 기술을 도입하거나 어선의 대형화, 동력화를 통해 원양어업을 장려했기 때문에 특히 포경업 등의 바다짐승 어업 등을 포함해서 기타 원양어업도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의 어업정책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안어업의 정리, 근해어업의 발전, 원양어업의 장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1901년에 공포된 ‘어업법’과 1910년에 공포된 ‘어업조합령’으로 인해 어업질서기반이 확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지조개정(地租改正)을 통해 토지와 관련이 없는 석고제(石高制) 공조(貢租)나 기타 잡세를 전부 폐지하였으나, 동시에 ‘해면관유(海面官有)’ 정책을 선언했다. 종래의 어업에 관한 권리나 관행을 일체 부정하고 신청을 받아 요금을 징수하는 새로운 어업제도 실시를 강행했다. 이것이 ‘해면관유, 차구제도(借區制度)’로 불리는 것으로 ‘태정관포고 제23호(1875년 2월 20일)’ 및 동 포고 제195호, 동 지시 제215호(1875년 12월 19일)로 선포되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어업 및 어민들 사이에 어장의 쟁탈을 둘러싸고 분쟁이 격화되자 메이지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아 ‘해면관유, 차구제도’를 폐지하고 어업에 대한 관행을 인정하여 사태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

야마구치현은 1875년에 정부의 지시를 받자마자 각 어업에 대한 신청을 출원하고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았다. 그렇지만 관행적인 공조체계가 해체되기 시작하자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업규칙이 폐지되었으며, 그로 인해 종래의 어업질서가 흔들려서 다른 지역의 어업권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어업권 침범으로 인한 분쟁은 몇 년간 지속되어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고생하였다고 전해진다.¹⁵⁾

1879년에는 ‘지방세규칙’이 제정되어 어업에 관한 종래의 공조는 잡종세 속으로 포함되게 되었으며, 그 후 어업세로 설정되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지방세 잡종세에 어업세를 포함시켜 징수하였으며, 어업자는 반드시 신청을 하고 면허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면허 소지자들 사이에 관행적인 어업권에 대한 분쟁이 속출했으며 어업질서를 재편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1880년에는 잡종세에서 분리하여 어업세를 설정했으며, 1882년과 1884년의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정업종과 세금액을 개정했다.

1888년의 야마구치현 어촌 숫자는 모두 177개 촌이었으며, 어업종사자 수는 총 13,702호였다. 그리고 어업종사자 수는 총 27,318명이었으

15) 山口県文書官編, 『山口県政史(上巻)(下巻)』, 大村印刷, 1971.

며, 어선 수는 총 11,689척이었다. 해삼과 전복, 오징어를 말린 제품은 에도시대에도 막부가 청나라와의 무역물품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품으로 야마구치 지방도 유력한 산지 중의 하나였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서도 그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으며, 청나라에 대한 수출도 이어졌다. 또한 포경업 또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메이지 시대 초기에 이러한 재편성 과정을 거치면서 연안어업의 어구와 어법이 개량되자 일본의 어선들의 한반도 근해 출어가 활발해졌는데, 이미 에도시대에 쓰시마 근해와 울릉도 근해까지 출어했던 야마구치현의 어민들도 한반도 근해로 출어하여 우리나라의 수산 자원을 침탈하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1878년에 이미 3명의 야마구치 현 어민이 한국 근해로 출어를 했으며, 1887년 이후로는 매년 160척 내외의 선단을 구성하여 한국 근해로 출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야마구치현의 어민들도 이러한 대규모 선단에 포함되어 한국의 수산자원을 침탈했으나, 그 대상 지역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쪽의 바다가 위주였지만, 울릉도와 독도 쪽의 경우도 에도시대 때부터 이어진 출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단에는 모선이 있어 식료품과 식수, 땀감, 염장재료 등을 싣고 가서 각 어선에게 공급했으며, 어획물을 모선이 싣고 시모노세키항으로 돌아와서 판매했다.¹⁶⁾

이처럼 야마구치현은 에도시대 말기 경에는 이미 한반도의 남쪽 바다 및 울릉도 근해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침탈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들의 수탈행위가 1881년에 적발된 울릉도 침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어민들이 어로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울릉도의 삼림자원이 풍부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약 400명에 이르는 일본인이 울릉도로 무단으로 건너와서 벌목을 하였는데, 그중 절반이상이 야마구치현 주민이었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16) 下関市史編修委員会編, 『下関市史(市制施行-終戦)』, 下関市, 1983.

5.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와 철수 조치

1881년에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도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본인들에 대한 처분은 1883년에 확정되었다. 1883년 3월 1일 일본의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에 위치한 일본 명칭 마쓰시마(일명 다케시마) 조선 명칭 울릉도의 건은 이전부터 양국 정부가 의정(議定)한 일도 있어 일본 민인이 함부로 도항, 상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못 아는 자가 없도록 각 지방장관이 유달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그 성(省)에서 지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시합니다.¹⁷⁾

1883(明治16)년 3월 1일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

일본정부는 1881년의 한국 측의 항의와 1882년의 항의 서한에 대해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1882년 11월 2일에 제물포조약의 비준을 위해 일본을 찾은 수신사(修信使) 박영효(朴泳孝)의 항의와 요구를 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마구치현을 비롯한 일본 각 지방의 조사 보고서들 통해 약 400명가량의 일본인이 불법으로 체류하며 벌목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일본정부는 내무경을 통해 위와 같은 지시를 각 부현(府縣)에 지시하도록 하달했다. 그리고 내무경은 이 지시를 위반하는 자는 ‘일본 형법 제373조’에 의거해서 처벌하겠다는 지시를 하달했다.

17) 「事項一〇 朝鮮國蔚陵島ニ邦人渡航禁止ノ件」(「蔚陵島渡航禁止の件」『日本外交文書』16卷)

北緯三十七度三十分東經百三十度四十九分ニ位スル日本称松島(一名竹島)朝鮮称蔚陵島ノ儀ハ従前彼我政府議定ノ儀モ有之日本人民妄ニ渡航上陸不相成候條心得違ノ者無之様各地方長官ニ於ケ諭達可致旨其省ヨリ可相達此旨及内達候也

明治十六年三月一日 太政大臣三條實美

‘형법 제373조’

산림에서 죽목(竹木), 광물(礦物), 기타 산물을 몰래 채취하거나 또는 하천,택지(澤池), 늪, 호수, 바다에서 사람이 기르거나 또는 영업 관련 산물을 몰래 채취한 자는 또한 앞의 조와 같다.(참조 제372조 전야(田野)에서 곡류(穀類), 채류(采類), 기타 산물을 몰래 채취한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금고에 처한다)¹⁸⁾

그리고 같은 날인 1883년 3월 1일에 산조는 사법경에게 울릉도에서 밀무역을 한 사람은 ‘일한무역규칙 제9조’에 의거해서 처벌하고, 중경죄를 저지른 자는 일본 형법에 따라서 처분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했다.

이번에 별지와 같이 내무경에게 지시하였으므로 위의 내용을 위반하고 해당 섬에서 밀상(密商)을 하는 자는 일한무역규칙 제9칙에 비추어 중경죄를 범한 자는 우리 형법에 비추어 처분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각 재판소장에게 내훈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뜻을 내달합니다.

1883(明治16)년 3월 1일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

사법경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님¹⁹⁾

18) 刑法 第三百七十三條

山林ニ於テ竹木礦物其他ノ産物ヲ竊取シ又ハ川澤池沼湖海ニ於テ人ノ生養シ若クハ營業ニ関スル産物ヲ竊取シタル者ハ亦前條ニ同シ(参照第三百七十二條田野ニ於テ穀類采類其他ノ産物ヲ竊取シタル者ハ一月以上一年以下ノ重禁錮ニ處ス)

- 19) 『외무성기록(外務省記録)』 3문(門) 통상(通商), ‘8류(類) 제국신민이동(帝國臣民移動), ‘2항(項) 이민(移民)의 4, 『조선국 울릉도에 불법으로 도항한 일본인을 데리고 온 처분 건 제3권(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第三卷)』에서 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般別紙ノ通內務卿へ相達候ニ付右ニ違犯シ
於該島密商ヲナス者ハ日韓貿易規則第九則
ニ照シ重輕罪ヲ犯ス者ハ我刑法ニ照シ處分可致
旨各裁判所長へ內訓可致置此旨及內達候也

明治十六年三月一日 太政大臣三條實美

司法卿大木喬任殿

위의 내용에 나오는 ‘일한무역규칙 제9조’는 다음과 같으며, 일본 정부는 이 규칙에 근거해 일본인을 처분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처벌규정이 없다.

‘일한무역규칙 제9조’

일본국 선박이 만약 통상이 허락되지 않은 조선국의 항구에 이르러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해당 지방관이 적발한 경우는 인근 관리관에서 인도할 것, 관리관은 그가 취득한 금전과 물건을 모두 압수하여 조선국 관청에 교부할 것²⁰⁾

하지만 이러한 일본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 불법체류 중이던 일본인의 철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일본 내무성은 선박과 관리를 파견하여 그들을 강제적으로 송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송환을 위해 파견된 것이 내무성의 소서기관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였다. 히가키가 귀국 후에 제출한 「복명서」²¹⁾에 따르면 히가키는 외무성 직원 1명, 내무성 직원 2명, 경찰관제자 26명과 함께 1883년 9월 27일에 도쿄를 출발했으며, 10월 2일에 아카마제키(赤間關, 현재의 시노모세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울릉도에 관해 잘 아는 사람 몇 명을 안내인으로 고용하고 10월 6일에 출항하여 7일에 울릉도에 도착했다.

울릉도에 도착한 히가키는 불법체류 중이던 일본인들에게 귀국할 것을 종용했으나, 그들이 별목한 목재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20) 日韓貿易規則 第九條

日本國船隻若シ通商ヲ許サ、ル朝鮮國ノ港口ニ至リ私ニ買賣ヲ為スヲ該地方官見届タル時ハ最寄管理官

ニ引渡スヘシ管理官ハ其所得ノ錢物一切取上朝鮮國官廳ニ交付スヘシ

21) 「檜垣直枝復命書」, 『외무성기록(外務省記録)』 3문(門) 통상(通商), ‘8류(類) 제국신민이동(帝國臣民移動)’, ‘2항(項) 이민(移民)의 4, 『조선국 울릉도에 불법으로 도항한 일본인을 데리고 온 처분 건 제3권(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第三卷)』

요구하여 설득에 시간이 걸렸다. 그 와중에 조선 측 대표로 배충은(裴忠隱)이라는 사람과 접촉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히가키는 일본인들의 귀국을 설득하던 중에 폭풍우로 인해 10월 8일에 원산으로 대피했다가 14일에 다시 울릉도로 돌아가서 일본인들을 승선시키고 15일에 아카마제키로 돌아왔다. 그들이 귀국할 당시에 울릉도의 도장인 전석규(全錫奎)는 도별한 목재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도록 허락했으며, 전석규는 이 행위로 인해 훗날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전석규의 이 행동이 일본인들이 귀국 후에 처벌을 회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히가키와 함께 귀국한 일본인은 총 255명이었으며, 그중에 야마구치현 주민이 과반수를 넘는 135명이었다. 아카마제키에 도착한 야마구치현 주민은 현지에 있는 사원에 유치되었으며, 그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친족들이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의 경우는 각 현의 경찰에 통보하여 송치되었다. 야마구치현 주민의 경우는 오쓰 군(大津郡) 출신이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아부 군(阿武郡) 22명, 아카마제키 구(赤間關區) 19명, 요시키 군(吉敷郡) 17명, 미네 군(美祢郡) 9명, 쓰노 군(都濃郡) 6명, 사와 군(佐波郡) 5명, 아사 군(厚狹郡) 4명, 구가 군(玖珂郡) 3명, 도요우라 군(豊浦郡) 1명, 구마게 군(熊毛郡) 1명이며, 총 13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망자가 1명 있어서 134명으로 집계되었다.

울릉도에서 송환된 일본인들은 그 후 각자 지방재판소에 회부되었지만 모두 “무죄방면(無罪放免)” 처분을 받았다. 재판소가 무죄판결의 근거로 든 것은 ① 벌목은 조선 관리가 허락한 것, ② 일본정부가 울릉도가 조선국 소속이라는 것을 알린 것은 1883년 3월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도항한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것, ③ 일본형법 373조는 일본 국내에서 벌어진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것, ④ ‘일한무역규칙 제9조’에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일본의 재판소는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벌목을 자행한 행위에 대해 국내법 규정만을 근거로 아전인수적

인 판결을 내려 “무죄방면”한 것이다.

야마구치현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에도시대 때부터 관습적으로 도항해 왔으며, 1883년 3월의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상신서를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서 일본 측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근거 중에는 별목을 조선 측 관리가 허락했다는 것은 울릉도 도장 전석규의 방임행위가 그 발단이 되었으며, 이것은 당시의 우리나라 지방 관리들의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재판소의 “무죄방면”이라는 행위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과 나아가 독도로의 도항으로 이어졌으며, 1901년에는 울릉도에 약 550명이나 되는 일본인이 체류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했다²²⁾. 따라서 1883년에 있었던 일본 사법부의 잘못된 처분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울릉도, 독도 불법도항 및 불법 어업행위를 조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18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관련해서 야마구치 현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야마구치 현 어민들의 에도시대 및 메이지 시대의 어로활동을 분석한 결과 야마구치 현의 어민들은 그들의 어로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동영역이 넓어졌으며, 특히 에도시대 말기에는 한반도 남부 해역과 울릉도로까지 그 활동영역이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확장이 1880년대의 울릉도 침탈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울릉도 침탈사건이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의 간여가 계기가 되어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주장 보다는 에도시대 말기에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

22) 外務省通商局『通商彙纂』第234号, 元眞社, 明治35年10月16日. 44쪽.

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이 자행한 1880년대의 울릉도 침탈사건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침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3년 이상에 걸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목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일본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일본정부의 아전인수적인 판단이 이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인 울릉도 침입 및 독도 침탈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明治十七年蔚陵島一件録』, 山口県文書館所蔵(行政文書 戦前A 土木25)

『外務省記録』 ‘3門 通商’, ‘8類 帝国臣民移動’, ‘2項 移民 4’, ‘朝鮮國蔚陵島へ犯禁
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第一卷’

『外務省記録』 ‘3門 通商’, ‘8類 帝国臣民移動’, ‘2項 移民 4’, ‘鬱陵島ニ於ケル本邦
人ノ渡航並在留取締一件(附同島ノ警官駐在所設置一件)’

송휘영,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 도함금지령』, 『독도연구』 제19
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5,

송휘영, 「일제강점기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
제46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3

박병섭, 『한말 일본의 독도침입과 독도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朴炳涉, 「山陰地方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 『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0号, 鳥取短
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2009

송병기, 「검찰사의 울릉도 파견과 개척」,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
판부, 2007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宮本常一 外, 『日本の民俗, 山口』, 第一法規出版, 1974

新宅勇, 『萩藩近世漁村の研究』, 大村印刷, 1979

宮本常一編, 『日本の海洋民』, 未來社, 1989

小川国治編, 『山口県の歴史』, 山川出版社, 1998

楠美一陽, 『山口県豊浦郡水産史』, マツノ書店, 1980

河野良輔, 『日本近代捕鯨發祥の地』, (財)西日本文化協會, 1995

宮本常一編, 『日本村海をひらいた人々』, 筑摩書房, 1995

山口県文書官編, 『山口県政史(上巻)(下巻)』, 大村印刷, 1971.

下関市史編修委員会編, 『下関市史(市制施行-終戦)』, 下関市, 1983.

外務省通商局『通商彙纂』第234号, 元眞社, 明治35年10月16日.

<Abstract>

A Study on the Incidence of Ulleungdo by Residents of Yamaguchi Prefecture

Park, Ji-Young

This paper focuses on Yamaguchi Prefecture's data regarding the Japanese invasion of Ulleungdo before and after 1880. In the process, we first analyzed the fishing activities of Yamaguchi prefecture's fishermen during the Edo period and Meiji period, and found that the fishermen of Yamaguchi prefecture expanded their activiti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ir fishing skills. The area of activity was extended. This expansion of activity means that the Ulleungdo invasion occurred in the 1880s. Therefore, it was understood that Japanese invasion of Ulleungdo was taking place from the Edo era earlier than the assertion that the U.N. Takeo Enomoto Takeaki incident related to Ulleungdo invasion occurred.

In the cas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Ulleungdo in the 1880s, they were engaged in a highly organized invasion, and for three or more years, they were lumbered and sent to Japan without permission. However, their actions were found not guilty because they did not violate Japanese domestic law, and in the end, the Japanese government's subjugative judgment was believed to have helped to promote the invasion of Ulleungdo and the invasion of Dokdo by the Japanese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ey words: Ulleungdo, Dokdo Territory, Yamaguchi Prefecture, Meiji Period, Invasion

이 논문은 2020년 5월 1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북한의 독도와 동해 관련 고지도 자료 연구에 대한 고찰

-조선, 일본,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중심으로-

서 인 원*

〈목 차〉

1. 서론
2. 조선고지도에 표기된 독도
3. 일본고지도에 표기된 독도
4. 서양고지도에 표기된 독도
5. 동해명칭에 대한 연구
6.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우익적인 행보를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독도 도발 정책에 대한 대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영유권 강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독도 연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북한의 독도연구 서적인 『옛지도로 보는 독도』, 『독도이야기』, 『울릉도를 지킨 안릉복』, 「특집: 북한의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2호』

* 행정안전부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팀장
/ gentle7821@hanmail.net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연구하고 있는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 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고찰하였다.

북한에서 독도가 표기된 조선, 동서양 고지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경위와 독도 명칭 변화, 위치에 대해 분석하면서 한국이 일관되게 독도의 관할권을 행사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고지도에서 조선 고지도를 그대로 답습했을 때는 독도의 위치, 명칭의 혼란은 없었지만 서양고지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번안했을 때 독도의 위치, 명칭의 혼란을 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것을 입증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독도의 위치, 명칭은 황여전람도 영향으로 표기되었으나 19C 이후 서양함대의 실측에 의해 독도 명칭이 서양식으로 바뀌었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서는 동해를 'Sea of Korea'로 표기하고 일본 고지도에서도 동해를 조선해 표기하고 있는 것은 동해가 한국 고유의 명칭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동해 명칭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과 러일전쟁 승리에 의해 희생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동해는 한국이 개척하고 이용하여 명명된 고유 명칭으로 대항해시대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지명 발생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지명이다.

북한의 독도 연구와 동서양 고지도 연구를 보면 북한은 독도영유권, 동해 명칭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 표기와 독도 영유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협력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분쟁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독도, 북한, 고지도, 동해, 서양고지도, 일본고지도, 조선고지도

1. 서론

한국은 남북한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국제사회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같은 입장을 내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리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독도 현황과 동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

보를 하고 있으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일본의 영토분쟁 정책에 대한 대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영유권 강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독도 연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독도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 병기와 독도 영유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남북한 협력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분쟁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독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1996년 8월 12일에 외무부 대변인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이종현실장이 일본 영유 주장에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¹⁾ 그 내용은 한국 측의 주장과 공통점이 많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독도에 대해 남북한은 같은 시각을 보이며 대외문제에서도 유일하게 견해를 같이 하고 있어 통일 전 영토문제를 한민족 공동의 통일대비책에 주요정책으로 포함시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한다고 했다.²⁾

북한의 학교 지리교육이 이데올로기적 특수성을 띠고 있음에도, 남북한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독도 관련 내용에서 공통적인 관점을 포착할 수 있다³⁾고 분석했다. 그리고 북한의 지리교육을 통한 북한의 영토교육에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의식과 강한 수호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런 영토교육은 일종의 사상교육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⁴⁾

1)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1996.8.17

2) 양태진, 「남북한의 한국영토문제 인식에 관한 고찰-특히 북한측의 국경영토문제에 대한 대응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1996.

3) 이상균·유수진,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과 민족적 표상으로서의 독도」, 『영토해양연구』, Vol. 7, 2014, 74-97쪽.

4) 이상균·최희,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영토해양연구』, Vol. 9, 2015, 44-73쪽.

한국 내 북한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분석에서 독도의 지리적 특징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⁵⁾ 『독도연구 제2호⁶⁾』에서의 북한 논문들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에 대해 연구하여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대응하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조선, 일본, 서양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연구에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지리지에서 나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독도영유권을 반박하였고, 특히 19세기 일본 고지도 80여종, 서양고지도에서 역사적 경위를 설명하면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⁷⁾ 그러나 북한의 고지도 연구는 질적, 양적 분석에서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고지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동해 표기 연구에서 동해는 자연물과 함께 생활해 온 인류의 문화 인식에 의해 명명되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고유명사이며⁸⁾ 북한에서도 동해는 삼국시대이전시기부터 한민족들이 동해 개척 과정에서 동해라는 바다명칭으로 고착되어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동해 명칭 사용의 역사적 전통성을 말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남북한은 독도의 주요쟁점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독도에 대한 입장과 대외정책에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상이점을 찾기가 어렵으나 북한에서 독도를 사상교육 측면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점은 다르다. 그러나 북한 독도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북한이 연구한 고지도에 대한 분석이

5) 이상균·유수진, 앞의 책 88쪽.

6) 영남대 독도연구소, 「특집 북한의 독도 연구」, 『독도연구 제2호』, 2006.12.

7) 이상태,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제10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1. 6, 7-62쪽, 이상태, 「일본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영유권」, 『독도연구 제15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3. 12, 57-96쪽,

8) 이상태, 「歷史 文獻上的 東海 表記에 대하여」, 『사학연구』, (50), 1995, 473-486쪽.

전무하여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 관련 자료에 대해 분석하면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연구로 남북한 학술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를 위해 북한의 독도연구 단행본인 『옛지도로 보는 독도』, 『독도이야기』, 논문인 「특집: 북한의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2호』와 북한 수로국 발간 동해명칭 표기 관련 연구보고서인 「The proper geographical name “East Sea” for the sea area located to the east of Korean Peninsula which has long history of two millennia」 등을 통해 북한에서 연구하고 있는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 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북한에서 독도와 관련된 단행본은 총 5권으로 소설 『울릉도』⁹⁾, 소설 『독도와 파도』¹⁰⁾, 『옛지도로 보는 독도』, 『독도이야기』, 그림책 『울릉도를 지킨 안룡복』이 있어¹¹⁾ 단행본과 연구논문은 한국에 비해 양적, 질적 연구가 떨어지지만 국제사회에서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북한 독도 연구의 동향과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소설을 제외한 역사학적, 국제법적, 지리학적 연구 단행본과 대표적인 연구논문을 선정해서 북한에서 고지도에 표기된 독도와 동해에 대해 분석한다. 『옛지도로 보는 독도』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부교수 김은택과 배영일이 저술했고, 다양한 조선고지도, 일본고지도, 서양고지도와 해도가 수록되어 있어 북한에서의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에 대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독도이야기』는 사회과학원 소장 조희승과 연구사 황명철이 저술했고 이 책에서는 독도의 역사학적, 국제법적, 지리학적 연구가 포함되어 있고 동해명칭에 대한 연구와 동해 표기 서양고지도 목록이 있다. 주로 독도 관련 연구나 논문 집필은 전영률을 필두로 조희승, 황명철 등 사회과학연구원 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자들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수인 김은택 등이 있다.¹²⁾

9) 리성덕, 『울릉도』, 문예출판사, 1990.

10) 박춘명, 『(중편사화) 독도의 파도』, 평양출판사, 2008.

11) 홍성근, 「북한의 독도연구 및 저술현황분석」 『북한학연구 제14권 제2호』,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8, 151쪽.

상기의 자료를 통해 북한에서 독도가 표기된 동서양, 조선 고지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동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명칭에 대한 역사적 경위와 서양의 인식을 분석하여 동해가 한국 고유의 명칭임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의 독도와 동해 표기 고지도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 독도 영유권 강화와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II. 조선 고지도에 표기된 독도

북한에서 『옛지도로 보는 독도』을 발행한 목적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불법성과 모순점을 증명하고 독도가 한민족의 고유 영토임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독도가 예로부터 조선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이 자료가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모순점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¹³⁾ 이 도서에 나오는 조선 고지도를 지도명, 제작년도, 독도명칭, 위치, 제작국, 사이즈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조선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위치, 명칭, 지도제작 기술의 변화 등을 보면 조선은 독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12) 홍성근, 앞의 책, 155쪽, 162쪽.

13) 김윤택·배영일, 『옛지도로 보는 독도』, 평양출판사, 2010, 2쪽.

<표 1> 조선 고지도에 표기된 독도¹⁴⁾

번호	지도명	제작년도	독도명칭·위치	제작국·제작자	사이즈 (cm)
1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1530	우산도/울릉도 좌	조선	20.7×17.0
2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1530	우산도/울릉도 좌	조선	20.7×17.7
3	천하도1 조선전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좌	조선	28.0×27.5
4	천하도1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0.7×26.7
5	천하도2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0.7×26.7
6	천하도3 강원도	조선 초	자산도/울릉도 하	조선	34.2×26.0
7	천하도4 조선전도	조선 초	방산도/울릉도 좌	조선	28.5×33.3
8	천하도4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상	조선	27.8×33.6
9	세계지도첩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2.0×32.0
10	세계지도첩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42.2×24.4
11	천하지도1 조선국	조선 초	무명 /울릉도 좌	조선	33.5×29.0
12	천하지도1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2.6×29.0
13	천하지도2 강원도	조선 초	자산도/울릉도 하	조선	33.0×28.0
14	여지도1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4.4×28.5
15	여지도2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1.6×27.0
16	진유여지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1.5×26.5
17	와유편조선전첩 조선전도	조선 초	방산도/울릉도 좌	조선	28.5×35.5

14)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8-62쪽 고지도를 정리한 표.

18	와유편조선전첩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좌	조선	33.7×38.2
19	조선팔역도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3.3×28.0
20	조선지도 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좌	조선	30.0×26.2
21	여지도여 강원도	조선 초	자산도/울릉도 하	조선	34.7×29.1
22	관동강원도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3.2×27.9
23	천하제도 강원도	조선 초	자산도/울릉도 하	조선	34.2×28.0
24	여지승람 강원도26관관동	조선 초	우산도/울릉도 좌	조선	31.7×26.5
25	천하만국대총도 조선전도	17C	무명/울릉도 좌	조선	56.0×85.0
26	천하만국대총도 강원도	17C	자산도/울릉도 하	조선	35.9×29.0
27	조선전도	17C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61.7×99.0
28	동국여지도 조선전도	17C	우산도/울릉도 좌상	조선	20.0×30.0
29	천하도첩 팔도총국	17C	우산도/울릉도 좌	조선	37.0×29.0
30	천하도첩 강원도	17C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37.0×29.0
31	조선팔로지도	17C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29.0×74.0
32	조선전도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16C 말 ~17C 초	우산도/울릉도 좌	조선	28.5×43.0
33	조선본동아시아지도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17C 초	정산도/울릉도 좌	조선	195×185
34	여지도3 팔도총도	17C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18.0×26.0
35	여지도3 강원총도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17C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29.0×37.0

36	여도	18C 초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95.0×153.7
37	천하지도3 조선총도	18C 초	방산도/울릉도 좌	조선	30.0×36.5
38	팔도전도	18C 초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61.5×98.3
39	천하도4 동국도	18C 말	우산도/울릉도 좌	조선	61.7×111.8
40	동국대전도	18C 중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139×271
41	강원도	18C 중	자산도/울릉도 하	조선	35.3×28.8
42	조선전도	18C 말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56.0×99.0
43	천하지도4 강원도	18C 말	우산도/울릉도 하	조선	29.0×31.5
44	조선팔도지도 강원도도	18C중~ 19C 초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20.3×30.6
45	해좌전도	1820년경	우산도/울릉도 우	정상기	54.0×97.0
46	여지도 강원도	19C 초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38.5×28.5
47	팔도전도 강원도	19C 초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61.0×81.0
48	동국전도	19C 초	우산도/울릉도 우	정상기	56.0×98.3
49	대조선국전도	1890년대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18.0×26.0
50	대조선국전도 강원도도	1890년대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26.0×18.0
51	팔도전도	19C 말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58.0×135.0
52	동여도 대조선국전도	19C 말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21.0×30.5
53	대한지지 대한전도	1906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23.5×33.5
54	대한지지 강원도도	1906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24.3×18.5
55	대한여지도	19C 말 ~20C 초	우산도/울릉도 우	조선	82.4×152.3

상기의 표. 1에서 독도를 표기한 고지도는 지도의 형태와 제작수준에 따라 대체로 15-16세기, 17세기, 18-19세기 중엽, 19세기 말-20세기 초로 나눌 수 있다.

15-16세기 고지도들은 대체로 남북이 압축되고 동서가 넓어 압록강, 두만강이 일직선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네모형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한반도에 대한 자연 지리적 견해와 지도 제작 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 고지도에 표기된 독도는 우산도로 표기되고 있으며 주로 울릉도 왼쪽에 비교적 크게 그려져 있다. 북한에서 이 시기 독도를 울릉도 왼쪽에 크게 그리고 강원도에 가깝게 그린 것은 당시 지도 제작의 목적의 하나가 소유권, 관할권 주장에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¹⁵⁾고 주장하고 있다. 번호 51번 ‘팔도전도’는 조선의 행정 및 자연지리에 대해 구체적인 해설문이 수록되어 있고 백리척이 동해안에 그려져 지도 내용을 정확한 측정치에 의해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울릉도 지도 아래에 울릉도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울릉도 오른쪽에 우산도를 가깝게 그려 넣어 조선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다.

17세기 고지도는 지도제작 수준이 발전하면서 중부와 남부지방이 남북방향으로 길어지고 그 대신 북부지방이 압축되어 압록강과 두만강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가 더 길어진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시기 지도들에 독도는 우산도로 표기되고 울릉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¹⁶⁾

조선 8도 고을, 산, 강들의 행정·지리적 면모를 보여주고 수도에서의 거리를 표시하고 있다. 오색으로 조선전도에 채색하면서 음양오행 사상으로 표현된 오방색으로 방위를 나타내고 있다. 32번 ‘조선전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으로 조선전도가 오방색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독도가 울릉도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5)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6쪽.

16)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7쪽.

1606년 제작 운천지도, 17세기 제작 여지도, 조선지도, 천하지도, 1727년 제작 해좌전도에는 강원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울릉과 우산, 울릉과 우도, 울릉과 자산 등으로 기록된 2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¹⁷⁾

18-19세기 중엽 고지도들은 오늘날의 한반도의 형태를 가진 형태로 실지 답사에 기초해서 정확한 축척비를 가지고 그린 결과 산줄기와 강줄기가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해당 고을들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 행정 및 자연지리도로서 면모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¹⁸⁾ 이 시기 지도들에 독도는 우산도, 방산도(方山島), 자산도(子山島), 간산도(干山島), 평산도(平山島), 정산도(丁山島)로 표기되면서 울릉도의 동서남북 각이한 위치에 그려져 있다. 도별로 산맥과 강줄기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교통, 통신, 운수 등이 표기 되어 자연 지리적 표기가 상세하다.

번호 37의 ‘천하지도 조선총도’에서는 단군 이래 조선의 역대 국가들의 건국과 역사를 간단히 기록하였고, 한백겸, 이수광, 남구만 등 당시 여러 문인들의 조선 역사지리에 대한 견해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독도를 방산도라고 표기하고 울릉도 왼쪽에 울릉도보다 크게 그려 넣어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강조하는 지도이다.

번호 42, 45, 48는 측정단위인 백리척을 기초하여 그려진 지도로 지도 상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려진 지도이기 때문에 한반도 윤곽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된 지도이다. 이 지도들은 우산도를 울릉도 오른쪽에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있다. 번호 48은 ‘국재기미분야(國在箕尾分野)’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위치에 해당되는 별자리를 나타낸 것으로 지도가 천문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도이다.¹⁹⁾

19세기 말-20세기 초 지도들은 제작 수준이 더 발전하여 오늘날의 한반도의 모습이 정확한 경도, 위도 좌표 속에 표기되었다. 이 시기의 독도

17)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 『독도연구 제2호』, 2006.12, 12-13쪽.

18)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7쪽.

19)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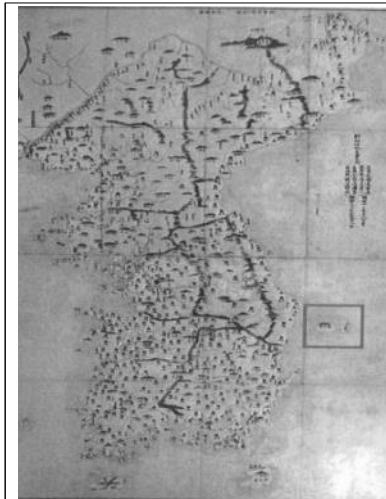
는 우산도로 표기되어 울릉도의 동쪽 또는 동남쪽에 비교적 정확히 위치하고 있다.



3. 천하도1 조선전도²⁰⁾



25. 천하만국대총도 조선전도²¹⁾



42. 조선전도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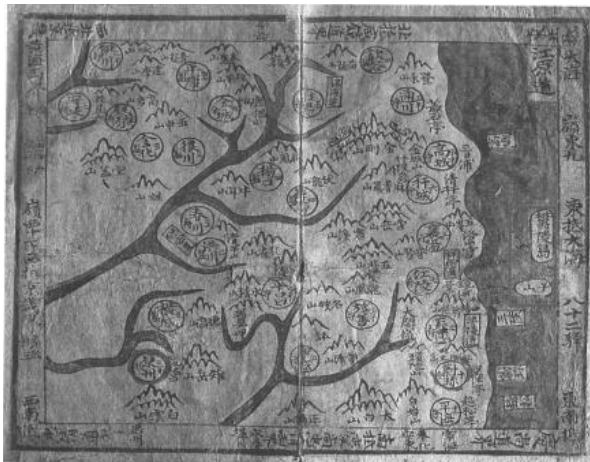


51. 팔도전도²³⁾

20)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10쪽.

‘천하도의 강원도’는 도내행정, 자연지리지도로 고을들을 연결하는 도로들을 붉은 선으로 그려 당시 교통통신망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7의 천하도의 조선전도는 제주도, 거제도, 대마도, 울릉도, 방산도(독도) 등을 빨간색으로 색칠해서 조선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16번 진유여지 강원도, 17번 와유편조선전첩 조선전도, 18번 와유편조선전첩 강원도는 김호동²⁴⁾, 양보경²⁵⁾ 논문에 나오는 한국 고지도 목록과 비교했을 때, 남한이 소유하지 않는 새로운 고지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고지도에서도 독도를 우산도, 방산도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고 있다.



16. 진유여지 강원도

-
- 21)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32쪽.
 - 22)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49쪽.
 - 23)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58쪽.
 - 24) 영남대 독도연구소, 김호동 「한국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의 영유권」,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의 영유권』, 2013.9.6, 9-35쪽.
 - 25) 양보경,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문제 대책을 위한 토론회, 2005.4.



17. 와유편조선전첩 조선전도



그림18. 와유편조선전첩 강원도 23

위에서 소개한 모든 지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점은 강원도 동쪽 바다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섬은 두 개밖에 없으며 그 이름이 울릉도와 우산도로 되어 있다.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든 지도에 같은 위치와 일정한 거리로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시대 지리지 등의 역사 자료들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역사기록 자료들에서도 증명된 것처럼 우산도는 독도를 나타내는 섬이다.²⁶⁾

북한의 지도 연구는 시대별 독도 위치 변화, 명칭, 지도 제작 발달사에 대한 연구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사는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조선은 도서(島嶼)를 같은 색으로 색칠해서 영유권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부속섬으로 울릉도 부근에 그린 것은 조선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6) 영남대 독도연구소, 앞의 책, 13쪽.

북한에서 독도가 표기된 조선 고지도에 대한 연구를 한국에서 고지도 관련 연구 서적인 『한국 고지도의 역사』²⁷⁾,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²⁸⁾, 『The Artistry of Early Korean Cartography』²⁹⁾,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³⁰⁾등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고지도 연구는 한국의 고지도 연구와 양상이 비슷하며 표. 1에 정리한 지도 목록은 한국에서도 대부분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이다. 특히 시대별 독도 위치 변화, 명칭, 지도 제작 발달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사는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조선은 도서(島嶼)를 같은 색으로 색칠해서 영유권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부속섬으로 울릉도 부근에 그린 것은 조선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상태 고지도 연구에서는 울릉도·독도, 동해 관련 지리서와 역사적 경위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독도가 한국의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조선시대 고지도에서 나타난 독도 표기에 대한 연구는 남한과 일치하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연구와 국제사회에서의 홍보활동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Ⅲ. 일본 고지도에 표기된 독도

북한 저서『옛지도로 보는 독도』에 나오는 일본 고지도를 지도명, 제작년도, 독도명칭, 위치, 제작국, 사이즈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일본 고지도에서는 19세기까지 조선전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독도의 위치와

27) 개리 레드야드 저/ 장상훈 역, 『한국 고지도의 역사』, 소나무, 2011.

28) 정재정,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0.

29) Han Youngwoo, Ahn Hwijoon, Bae Woosung, *The Artistry of Early Korean Cartography*,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1999.

30)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명칭에 대한 혼란은 없었으나 19세기말부터 서양 고지도를 번안하면서 독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한 혼란이 생겼다. 이런 독도의 위치와 명칭의 혼란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닌 것을 충분히 증명해 준다.

<표. 2> 일본 고지도에 표기된 독도³¹⁾

번호	지도명	제작 년도	독도명칭·위치	제작국· 제작자	사이즈 (cm)
1	팔도총도	1592	우산도/울릉도 좌	일본/ 九鬼嘉隆	미상
2	조선경도일본대판 서국해변항로지도	1748	우산도/울릉도 하	일본/ 尾陽片岡	64.5×49.5
3	일본여지로정전도	1775	마츠시마/울릉도 우	일본/長久 保 赤水	130×84
4	조선팔도지도	1785	천산국(울릉도)	일본/ 林子平	50.0×73.0
5	삼국통람여지노정 전도	1785	다케시마(울릉도)	일본/ 林子平	51.0×72.0
6	일본변계약도	1832	Mats-sima/울릉도 상	일본/ 시볼트	35.0×27.0
7	조선국세견전도	1873	우산도/울릉도 하	일본/ 染崎延房	71.5×100.5
8	오기팔도조선국세 견전도	1874	우산도/울릉도 좌	일본/ 石田旭山	47.2×98.4
9	개정신찬조선전도	1875	울릉도·독도 모양 그림	일본/ 松田敦朝	42.0×48.0
10	조선여지전도	1875	알고노트섬과 마츠시마(울릉도)	일본/ 關口備正	34.6×62.0
11	장중일본전도	1876	마츠시마/울릉도 하	일본/ 樫原義長	48.0×35.0
12	청국여지전도	1880	다케시마(알고노 트섬 위치), 마츠시마(울릉도)	일본	92.5×71.0
13	조선전도	1882	다케시마(알고노 트섬 위치), 마츠시마(울릉도)	일본육군 참모국	33.6×47.2

31)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81~99쪽 고지도를 정리한 표.

14	조선국세도	1882	우산도/울릉도 좌	일본/福城 駒多郎	35.5×44.5
15	조선여지도	1884	다케시마(알고노 트섬 위치), 마츠시마(울릉도)	일본/清水 常太郎	77.1×105.1
16	대일본해륙전도부 조선류큐전도 조선국전도	1877	다케시마(알고노 트섬 위치), 마츠시마(울릉도)	일본/ 森琴石	68.0×143
17	조선여지도	1894	다케시마(알고노 트섬 위치), 마츠시마(울릉도)	일본	62.0×90.0
18	상밀대일본신지도	1896	다케시마(알고노 트섬 위치), 마츠시마(울릉도)	일본	56.0×79.0
19	대일본분현지도 조선전도	1908	다케시마/울릉도 우	일본/ 伊藤政三	54.0×59.0

‘일본여지도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를 비롯하여 일본 관찬지도와 민간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그려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키섬을 일본열도의 서북 경계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이다.³²⁾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중 포인트 1에서 일본이 오래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고지도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가쿠보 세키수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지도정전도’의 해적판으로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다.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간행한 『삼국통람도설』 ‘삼국접양지도’는 국경과 영토를 명백하게 표시하기 위해 나라별로 채색하였는데 조선은 노란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구별하였다.³³⁾ 하야시는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그려 넣고 다케시마(울릉도)와 작은 부속섬을 조선

32)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79쪽.

33)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 『독도연구 제2호』, 2006.12, 17쪽, 64쪽.

반도와 같은 노란색으로 채색함으로 두섬이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두 섬 옆에 조선의 소유라고 기록하여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지도가 제작될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마츠시마,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으며 이 지도의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그 오른쪽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섬은 명백히 독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북한은 1877년 태정관지령에 포함된 ‘이소다케시마약도’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국토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시마네현은 1876년 10월 16일「일본해내 다케시마(울릉도)와 일도(독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여 독도와 울릉도의 소속에 관해 문의했다. 이때 일본 내무성은 5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소속에 대해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울릉도와 그외 일도(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고 조선영토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마네현의 지적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명령했다.³⁵⁾ 그리고 일본이 1870년대부터 조선침략과 대륙침략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작한 조선국전도(1886년)를 비롯한 지도들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로 명백히 기입하고 있다.³⁶⁾

34)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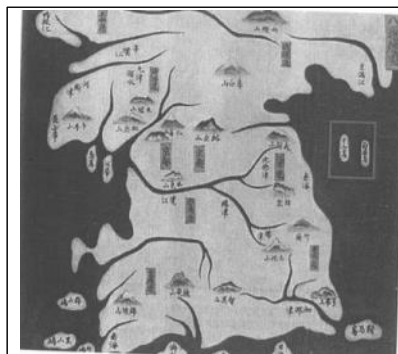
35) 內務省,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何」, 國立公文書館 所藏(A07060000300), 1877.3.

36)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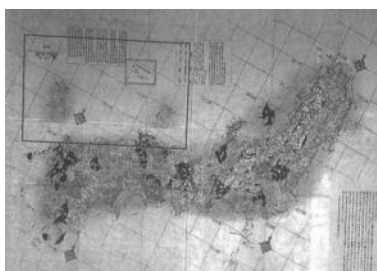
37)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81쪽.

38)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83쪽.

39)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85쪽.



1. 팔도총도³⁷⁾



3. 일본여지도정전도³⁸⁾



5.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³⁹⁾



7. 조선국세견전도⁴⁰⁾

표. 2의 지도. 1은 1592년 산다번사(三田藩士) 선조인 구키 요시다카(九鬼嘉隆)가 임진왜란 때 ‘조선국지리도부도팔도총도’를 필사한 것으로 현재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다.⁴¹⁾ 이 지도는 일본이 ‘조선전도’를

40)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87쪽.

41) 小林茂, 『外邦圖-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中公新書, 2011, 40쪽, 영남대 독도연구소, 앞의 책, 63쪽.

그대로 필사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였고 독도의 명칭에 대한 혼란도 없었다.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조선 지도는 대개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를 의존하여 필사했기 때문에 적어도 울릉도·독도의 명칭과 위치에 오류를 보이지 않는다. 독도의 위치가 오류가 발생된 것은 잘못된 영국 해도를 신뢰했고, 영국 해도에 나타난 알고노트섬(가상의 섬)을 다케시마로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표. 2의 번호 10, 12, 13, 15, 16, 17, 18 등의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를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런 오류는 육군참모국의 대부분 지도가 측량지도가 아닌 편찬지도가 많기 때문이고, 잘못된 수로국 지도를 육군측량부가 양도받아 조선전도를 제작했기 때문이다.⁴²⁾ 그리고 일본 육군이 정확한 지도를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었던 방법은 외국에서 정식으로 측량된 실측도를 입수하여 일본어로 재빠르게 번안(飜案)해서 복제하여 외방도로 발행했기 때문이다.⁴³⁾

상기의 번호 7의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는 메이지유신 이후 정한론이 등장하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작성된 지도이다. 이 지도의 발문을 보면 이 지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부록 『조선사정 제1집 2권, 제2집 2권』 두 권을 읽으라고 할 정도로 조선 침략을 위해 제작된 군사작전 지도이다. 조선 영토를 도별로 채색한 이 지도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칠하고 있다. 울진 앞 바다 울릉도를 그리고 하단에 우산도로 표시했다. 따라서 19세기말까지의 지도들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었다.

19세기 말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1875년 강화도사건을 전

42) 陸軍省參謀本部, 「朝鮮国近海実測図讓渡の件」國立公文書館 所藏, 1882.8(C0708096 1800).

43) 竹内正浩, 『地図で読み解く日本の戦争』, ちくま新書, 2013, 105쪽.

후로 일본 육군성 참모국은 ‘조선전도’를 발행했다. 이 지도에 다케시마(알고노트섬), 마츠시마(울릉도)를 표기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임을 인식하였지만 독도의 명칭과 위치를 혼돈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882년의 육군참모국의 13번의 ‘조선전도’의 한반도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 오류는 호남 서해안 부분에서 나온다. 이 지도에서는 금강 하구 장항 부근에서 해안선이 수직으로 내려가지 않고 ‘ㄱ’字를 그리며 내륙지역을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한반도는 함경도 북부가 지나치게 북쪽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그렸으며, 전라도의 서부 해안이 동쪽으로 들어와 군산이 전주 쪽으로 밀려 장항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이 지도는 1875년 육군참모국의 ‘아시아동부여지도’를 잘못 답습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지리적 위치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16번의 ‘대일본해륙전도부조선류큐전도 조선국전도’는 경도와 위도 속에 국경과 도별경계, 군, 현, 도로망 등이 근대적인 표시법에 의해 그려져 비교적 정확성과 객관성을 띠고 있다.⁴⁴⁾ 1877년 초판과 1886년 증판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독도를 잘못 된 위치에 표기하고 있다. 울릉도를 마츠시마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으며 또다른 가상의 섬인 알고노트섬을 그리고 있다. 19세기말까지 일본은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전도에 독도의 위치를 잘못 그리고 있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반증해주고 있다.

44)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96쪽.

45)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93쪽.



13. 조선전도⁴⁵⁾



19. 대일본분현지도 조선전도⁴⁶⁾

1882년 기무라가 제작한 동판 조선국전도도 일본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마츠시마(독도)는 조선 본토와 같은 연한 회색으로 표시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다 같이 조선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⁴⁷⁾

19번 상기의 지도인 ‘대일본분현지도의 조선전도’는 1908년에 초판한 지도로 울릉도(마츠시마),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1905년 시마네현 독도 영토편입의 불법성을 입증해 주는 지도이다.

일본 해군성은 ‘조선동해안도’를 여러 차례 증판하면서 1905년까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또한 일본 해군성은 1886년 세계수로지인 『환영수로지』를 편찬했는데 여기서도 독도를 리앙쿠르트암이라는 이름으로 조선동해안에 수록하였고 그 이후 1889년 『환영수로지』 편찬을 중지하고 『조선수로지』, 『일본수로지』 등으로 나라별로 수로지를 편찬할

46)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99쪽.

47)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 『독도연구 제2호』, 2006.12, 64쪽.

때에도 독도를 『조선수로지』에 포함시켰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수로지에 포함시킨 것은 1907년 『일본수로지』 제4권 해도에 오키제도 북방에 작은 점을 그려 넣어 독도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9년과 1933년 일본 문부성 검정교과서의 일본역사지도와 1934년 『신일본도첩』에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또한 1936년 일본 육지측량부 제작 ‘지도구역일람표(20만분의 1크기)’에 독도를 조선영토로 포함시킨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 구획으로 묶어 조선 본토 소속으로 표기한 것은 독도가 일제강점기에도 시마네현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북한이 1920년대, 1930년대 일제가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통치체제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침략주의를 표방한 시기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해놓지 못한 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1923년 일본 해군성 발간 『조선연안수로지』, 1938년 일본 여행협회 발행 『여비와 비용 계산』, 1945년 제작 『조선연안수로지 제2편』, 1951년 일본 문부성 교재 ‘현대지도’ 등 수많은 지리기록과 지도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⁵⁰⁾

북한은 일본 고지도가 독도를 한국 고유의 영토로 증명하고 있으며 이런 고지도들은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입각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 명칭 혼란 이전에는 일본이 조선전도를 그대로 복사하면서 일관되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서양고지

48) 영남대 독도연구소, 앞의 책, 65쪽.

49) 조희승·황명철, 『독도이야기』, 사회과학출판사 주체, 2007, 96, 83쪽.

50) 영남대 독도연구소, 위의 책, 17~18쪽.

도를 답습하면서 일본 고지도에서의 독도명칭과 위치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의 일본 고지도 연구는 한국의 연구 서적인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이상태의 「일본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영유권」 등과 비교했을 때, 남북한은 일본 고지도에서 독도를 한국 고유의 영토로 증명한 고지도가 대부분이며 이런 고지도들은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입각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IV.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독도

북한 저서 『옛지도로 보는 독도』에 나오는 서양 고지도를 지도명, 제작년도, 독도명칭, 위치, 제작국, 사이즈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독도의 위치, 명칭은 프랑스 선교사 제작 중국 고지도 영향으로 표기되었으나 19C 이후 서양함대의 실측에 의해 독도 명칭은 서양식으로 표기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표. 3>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독도⁵¹⁾

번호	지도명	제작 년도	독도명칭	제작국· 제작자	사이즈 (cm)
1	황여전람도 조선전도	1721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천산도) , FanLingTao(울릉도) 표기	유럽선교사	43.0×58.0
2	ROYAUME DE CORÉE	1732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	프랑스/당빌 (D'Anville, J. B)	37.0×51.0
3	CARTE DE LA CORÉE	1735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	프랑스/작크 벨랭(Jaques Bellin)	16.0×29.0

51)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116~145쪽 고지도를 정리한 표.

4	Carte De L'Empire Du JAPON	1735	일본지도에 울릉도·독도가 없음/MER DE CORÉE	프랑스/작크 벨랭(Jaques Bellin)	52.0×40.0
5	CARTE DELLA PROVINCE de Quantong ou Lyantong ET DU ROYAUME DE KAULI OU CORÉE	1746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 /MER DE CORÉE	프랑스/작크 벨랭(Jaques Bellin)	21.0×26.0
6	CARTE DE JAPON et de la Corée	1748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	프랑스/조지 루이스(George Louis Le Rouge)	28.0×21.0
7	et des Royaumes de COREE ET DE IAPAN	1749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	프랑스/당빌 (D'Anville, J. B)	51.0×79.0
8	L'Empire Du JAPON	1750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MER DE CORÉE·MER DE JAPON병기	프랑스/로버 츠(Robert de Vaugondy)	53.5×48.0
9	CARTE DELLA PROVINCE de Quantong ou Lyantong ET DU ROYAUME DE KAULI OU CORÉE	1752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MER DE CORÉE·MEER VON KOREA	프랑스/당빌 (D'Anville, J. B)	24.7×33.2
10	A MAP OF CHINESE TARTARY with COREA	1774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 /COREAN SEA	영국/ 턴(Dunn, S)	44.5×31.0

11	CARTE DE LA TARTARIE CHINOISE	1792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	프랑스/본 (BONNE, Rigobert)	53.8×62.8
12	CHINA	1794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 /COREAN SEA	영국/로버츠 &제임스(Ro bert Laurie & James Whittle)	63.0×47.5
13	Chart of Discoveries, Made in 1787, in the Seas of China and Tartary, Sheet II.	1797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다출레(울릉도) 병기 /SEA OF JAPAN	영국/로빈슨 (G.G. &J. Robinson)	39.0×50.0
14	Carte des TROIS ROYAUMES	1832	다케시마(울릉도)는 한국의 영역임 (Takenosima á la Corée)	독일/클라프 로트(J.Klapr oth)	26.8×31.2
15	Carte de l'Empire Chinois et du Japon.	1837	동해연안 근처 TchianChanTao, FanLingTao 표기, 알고노트, 다출레 표기	프랑스/피레 (Pierre M. Lapie)	45.0×65.0
16	조선전도(Cart e de la Corée) (프랑스국립도 서관소장)	1846	울릉도(Oulangto), 우산(Ousan)	조선/ 김대건	45.0×65.0
17	해좌전도 (프랑스국립도 서관소장)	19C 중	울릉도(Oul neung to), 우산(Ousan)	조선	60.0×97.0
18	La Corée	1866	울릉도(Ul leng to), 우산(Usan)	프랑스/로니	10.0×16.0
19	수로지 항해지침 조선 및 미국	1995	Ullung Do, Liancourt Rocks(Dok To)(Take Shima)	미국/국방지 도제작소	
20	태평양전도	1851	다케시마(알고노트), 마츠시마(울릉도), Rocher du Liancourt(리양쿠르트 락)	프랑스해군	

21	조선동해안도	1857 1882	마츠시마(울릉도), 메넬라이, 올리부차	러시아해군	63.0×94.0
22	일본열도	1859	알고노트, 다줄레(마츠시마:울릉 도), 호넷(Hornet Is.: 독도)	영국해군/ 와일드	83.0×63.0
23	일본지도	1859	알고노트,마츠시마(울 릉도), 호넷(Hornet Is.: 독도)	네덜란드	
24	일본-니폰, 규슈, 시코쿠, 및 조선일부	1863	마츠시마·다줄레 (울릉도), 리앙쿠르트락·호넷·메 넬라이/올리부차(독도)	영국해군	95.0×65.0
25	일본-니폰, 규슈, 시코쿠, 및 조선연안일부	1876	마츠시마·다줄레 (울릉도), 리앙쿠르트락(독도)	영국해군	95.0×65.0
26	아시아동안일 본, 시베리아,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해, 조선, 남부 일본	1894	마츠시마·다줄레 (울릉도), 리앙쿠르트락·호넷·메 넬라이/올리부차(독도)	프랑스해군	

한국이 유럽 고지도에 그려진 것은 16세기 중엽부터이며 독도가 직접 표기된 것은 18세기 전반기부터이다. 이 고지도는 유럽국가들이 동양 침략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비교적 객관적이며 정확성을 띠고 있다.⁵²⁾ 자본주의가 발달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은 동양 침략을 위해 동아시아국가와 조선 지도를 제작하면서 이러한 고지도들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제작하였다.

유럽 제작 고지도에서 최초로 독도와 울릉도를 표시한 것은 1732년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이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Atlas of the Chinese Empire)’의 조선왕국도를 ‘La Chine’으로 제작하면서 독도와 울릉도를 중

52)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114쪽.

국식 발음으로 ‘TchianChanTao(독도)’, ‘FanLingTao(울릉도)’로 표기하고 있다.⁵³⁾ 황여전람도는 청나라의 강희제가 프랑스인 Jesuit 신부들에게 명하여 10년에 걸쳐 완성한 지도며 이것을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1713년(숙종39) 목극등(穆克登)은 황제 특별사절로 조선을 방문하여 황제의 명으로 조선국왕에게 정확하고 최신 지도를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은 안보상 문제로 상세하지도 않고 너무 간략한 지도가 아닌 이미 제작된 지도를 보냈다.⁵⁴⁾ 이 지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의 창덕궁에서 경위도를 계산한 지도이며, 이때 목극등이 가져간 조선 지도가 1717년 중국 최초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의 조선 부분에 활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18세기까지는 당벌의 조선왕국도의 영향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이 중국식 발음인 ‘TchianChanTao’, ‘FanLingTao’로 표기되었으나 19세기 중엽부터 서양함대 실측에 의한 서양식 명칭인 ‘리앙쿠르트 락(Liancourt Rocks)’, ‘메넬라이(Menelai)·올리부차(Olivutsa)’, ‘호넷(Honet)’ 등으로 표기하게 되었다.⁵⁵⁾

53)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114쪽.

54) 김기혁, 「황여전람도 조선도의 모본(母本) 지도 형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2015, 173쪽.

55)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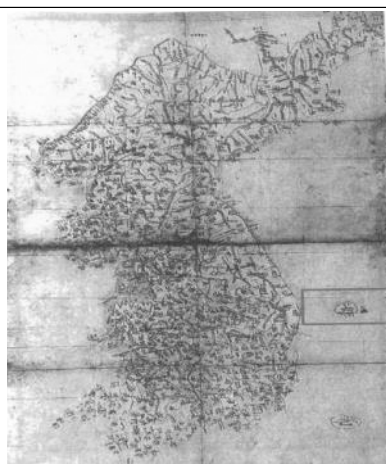
56)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116쪽.

57)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1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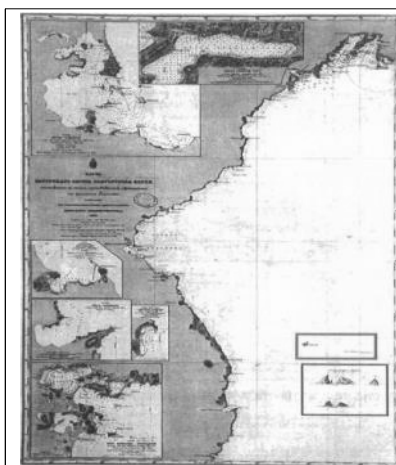
58) 김윤택·배영일, 위의 책, 1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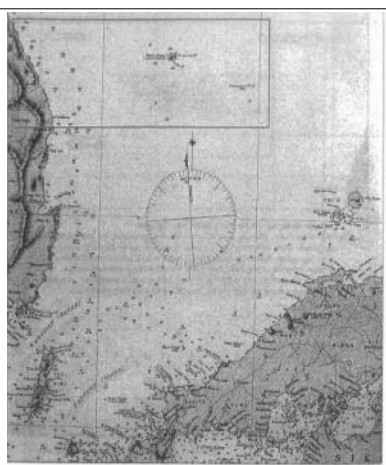
1. 황여전람도 조선전도⁵⁶⁾



17. 해좌전도⁵⁷⁾



21. 조선동해안도⁵⁸⁾



24. 일본·니폰, 규슈, 시코쿠, 및
조선연안일부⁵⁹⁾

18C 후반 프랑스의 라페루즈 탐험대가 울릉도를 탐사한 이후 'FanLingTao'와 'TchianChanTao'가 'Dagelet(울릉도)'와 함께 새로 병기되기

59)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143쪽.

시작하였다.

1791년 영국 탐험가 제임스 콜넷(James Colnett)의 측량이 라페르즈함대와 같은 정밀성이 없어 경위도 위치의 오산으로 지도제작자들은 하나의 울릉도를 ‘다즐레섬(Dagelet)’과 ‘알고노트섬(Argonaute)’이라는 두 개의 섬을 그려놓았다.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트(Liancourt)호가 극동시베리아의 캄차카반도로 항행 중 해도에 없는 섬을 발견하고 자기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트 락’으로 명명하였다. 독도가 서양지도에 표기된 것이 최초이며, 이 발견으로 알고노트섬의 지명도 없어지게 되었다.

프랑스 해도국 수로과가 발간한 수로지(1851년 간행)에 의하면 포경선 리앙쿠르트호가 1849년 1월 27일 다즐레섬 부근에서 기존 지도와 항해지침서에도 표시되어있지 않는 암석을 발견했다고 한다. 다즐레섬을 북동 1/2 북방향으로 바라보는 지점에서 선박은 이 암석을 측정했다. 이 암석은 북위 31도 2분, 동경 131도 46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⁶⁰⁾ 프랑스 해도국은 1851년에 발간한 ‘태평양전도’에 독도를 ‘리앙쿠르트 락’이란 이름으로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였다.

1854년 푸차틴(Putiachin) 극동함대가 해도에 없는 독도를 발견하고 귀로에 올리부차호에 측량을 명령했다. 이에 올리부차호는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소도를 스케치해서 러시아 수로지에 실었다. 독도를 ‘메날라이·올리부차’로 명명한 푸차틴 함대는 최초로 경위도 뿐 만아니라 실사도를 그려 독도를 조선동해안도에 넣어 한국영토임을 표시하였다. 러시아군함이 그린 세점의 독도그림을 일본 서북해안도에는 넣지 않고 공간을 넓혀가면서까지 ‘조선동해안도’에 넣어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⁶¹⁾

60) 조희승·황명철, 앞의 책, 75쪽.

61) 조희승·황명철, 위의 책, p.82,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140쪽, 영남대 독도연구소, 앞의 책, 17쪽, 64쪽.

유럽에서 제작된 19세기의 해도 중 조선과 일본, 중국을 그린 동아시아 해도에는 대부분이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 제작되었다.⁶²⁾ 특히 1857년, 1882년 러시아해군의 ‘조선동해안도’에 독도가 한반도에 그려져 있어 그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유럽식 명칭들은 유럽인들이 동해를 항해하다가 실측에 의해 붙인 이름들로서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인들이 제작한 고지도에서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고유의 영토임을 더욱 확고하게 실증해준다.⁶³⁾

그리고 북한에서는 서양 고지도에서 독도의 명칭 변화에 대한 지도사를 정리하고 있으며 심층있는 지도 연구보다는 서양고지도의 전체적이고 개론적인 수준에서 독도 명칭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서양 고지도 연구는 이진명 (2005)『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8. 지도 및 해도-전도 및 부분도에 나오는 서양 고지도를 비교했을 때, 1-6, 14, 15, 18-26번 지도는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에 나오는 서양 고지도와 동일하며 북한은 서양 고지도 연구에 있어 이 도서의 지도를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V. 동해 명칭에 대한 연구

북한은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동해에 대한 호칭과 표기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는 동해바다에 있는 섬으로 동해의 개척을 떠나서는 독도를 발견할 수도 영유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독도문제는 동해의 개척문제와

62) 조희승·황명철, 앞의 책, 138쪽.

63) 김윤택·배영일, 앞의 책, 115쪽.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⁶⁴⁾

삼국유사의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로 신라 사람들의 동해개척의 보여주는 자료로 소개하면서 2세기중엽 신라 사람들은 동해해변가라는 고유명사화된 바다이름을 부르고 있다⁶⁵⁾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역사적 근거로 한민족들은 동해개척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고 그 영유권을 행사해 왔으며 일본열도의 진출도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고지도들에서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였던 것⁶⁶⁾이라 주장하고 있다.

동해는 삼국시대이전시기부터 조선말까지 사용되어 동해라는 바다명칭으로 고착되어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동해 명칭 사용의 역사적 전통성을 말하고 있다.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조선왕족실록』 등 역대 관찬 역사지리책들에서는 물론 사찬저서들에서도 동해는 한결같이 동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울릉도, 삼봉도가 동해 가운데 있다고 하였고,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영동 9읍이 모두 동해상에 있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는 서해, 동해, 남해가 명기되어 있으며 18세기 제작된 ‘여지도의 조선일본류큐국도’에는 동해가 표기 되어 있다.

1794년 가츠라가와 호슈(桂川甫周)의 ‘아시아전도’, 미츠구리 쇼고(箕作省吾)가 제작한 ‘신제여지전도’에서 한반도의 동해를 조선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1904년 흑룡회가 작성한 ‘만한신도’에서 원산앞바다를 조선해만이라고 표기하고 있다.⁶⁷⁾ 가츠라 호슈(桂川甫周)의 ‘아시아전도’는 1792년 러시아 사절 락스맨(Adam Laxman)과 함께 귀국한 다이 고쿠야 코다유(大黒屋光太夫)의 견문을 바탕으로 1794년 가츠라 호슈가

64) 조희승·황명철, 위의 책, 26쪽.

65) 조희승·황명철, 앞의 책, 31쪽.

66) 조희승·황명철, 위의 책, 32쪽.

67) 조희승·황명철, 위의 책, 150쪽.

저술하여 막부에 바친 지도로 1993년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저명한 지도이다.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근세세계지도 중 야마시타 존토(山下存統)의 ‘열부제도부일궁도(閣浮提晷附日宮圖: 1808년)’는 불교계 세계지도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⁶⁸⁾

다카하시 가게야스의 ‘일본변계약도’ 지도에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1810년 에도막부의 위임에 따라 유럽지도에 기초하여 만든 동관지도인 ‘신정만국전도’, 1872년 하시모토 교쿠란(橋本玉蘭)의 ‘대일본사신전도’에서도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 1809)’,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1844)’ 등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지도가 동해 수역을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은 ‘일본해’ 명칭이 일본에서조차 확립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⁶⁹⁾ 이 지도는 1797-1804년경 아로 스미스(Arrowsmith, Aaron)가 제작한 ‘Chart of the World on Mercator’s Projection’와 아시아지도(1801년)를 참고로 만든 세계 제1급 지도이다.⁷⁰⁾ 이 세계지도에는 동해를 ‘Gulf of Corea’로 표기하고 있다.

동해는 한국의 고유 명칭으로 고대부터 일제강점기전까지 일관되게 사용되어온 전통적인 바다이름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한국해라는 표기가 널리 사용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북한 저서『독도 이야기』에 나오는 서양 고지도의 지도명, 제작자, 제작년도, 동해명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4-8). 서양 고지도에서 동해를 ‘Gulf of Corea, Sea of Korea, Oriental Sea’로 표기된 것은 동해가 한국의 고유 명칭임을 알 수 있고 일본 고지도에서도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어 동해가 한국 고유 명

68) 영남대 독도연구소, 앞의 책, 78쪽

69) 대한민국 외교부, 동해명칭, http://www.mofa.go.kr/trade/keyissue/eastsea/index.jsp?mofat=001&menu=m_30_40_30(검색일:2017.10.30.)

70) 帝京大学地名研究会, 『地名発生と機能-日本海地名の研究』, インフォテック, 2010, 86쪽.

칭임을 입증하고 있다.

〈표 4〉 동해가 동방해로 표기된 고지도⁷¹⁾

번호	명칭	제작자	연도
11	ROYAUME DE JAPON	Briet, P	1650
12	DESCRIPTION DE LA TARTARIE	Sanson, N	1654
13	LA PARTIE ORIENTALE DE L'ASIE	De Fer, M	1705
14	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	De L'Isle, G	1705
15	MAPPE-MONDE	De L'Isle, G	1707
16	NOUVELLE CARTE DE L'ASIE	Chatelain, H. A	1719
17	IMPERII RUSSICI et TATARIAE UNIVERSAE	Hase, J. M	1730
18	ASIA	Hase, J. M	1744

〈표 5〉 동해가 MER DE CORÉE로 표기된 고지도

번호	명칭	제작자	연도
19	L'EMPIRE DE LA CHINE	Bellin, J. N	1748
20	CARTE DE KATAY ou EMPIRE DE KIN	Bellin, J. N	1749
21	L'ASIE divisée en ses principauz Empires et Royaumes	De Vangondy, R	1749
22	CARTE DE L'ASIE	De Vangondy, R	1750
23	SIBERIE ou RUSSIE ASIATIQUE, TARTARIE CHINOISE, PAYS DES ELUTS ET ISLES DE JAPON	De Vangondy, R & Dussy, E	1755
24	L'ASIE divisée EN SES PRINCIPAUZ ETATS	Janvier, J	1759
25	L'ASIE DRESSÉE	Danet, G	1760
26	CARTE D'ASIE	De L'Isle, G & Buache, P	1762
27	L'ASIE divisée en ses Principauz Etats	Janvier. J & Santini, F	1778
28	CARTE NOUVELLE D'ASIE	De Prértot, P	1787
29	ASIE divisée en ses principaux Etats, Empires & Royaumes	De Vaugondy, R & Delamarche. C.	1791

71) 조희승·황명철, 앞의 책, 33-36쪽, Hydrigraphic Department D.P.R.K Pyongyang, 「The proper geographical name “East Sea” for the sea area located to the east of Korean Peninsula which has long history of two millennia」, 2010.6.20., 24-25쪽.

		F	
30	SIPERIE Partie de L'EMPIRE CHINOIS ILES DU JAPON	Delamarche, C. F	1811

<표 6> 동해가 SEA OF COREA, SEA OF KOREA, COREAN SEA로 표기된 고지도

번호	명칭	제작자	연도
31	CHINA	Moll, H	1714
32	A MAP of QUAN-TONG or LEA-TONGE PROVINCE: and the KINGDOM of KAU-LI or COREA	Kitchin, T	1745
33	A New & Accurate MAP of the EMPIRE OF CHINA	Gibson, J	1750
34	Asia	Gibson, J	1752
35	A MAP OF CHINESE TARTARY with COREA	Dunn, S	1774
36	BOWLES' NEW ONE-SHEET MAP OF ASIA, DIVIDED INTO ITS EMPIRES, KINGDOMS, STATES, and other SUBDIVISIONS	Palairret, J. & Bowles, C	1791
37	THE EMPIRE OF JAPAN DIVIDED INTO SEVEN PRINCIPAL PARTS and subdivided into Sixty-Six Kingdoms; with THE KINGDOM OF COREA	Dunn, S	1794
38	CHINA	Wilkinson, R	1794
39	THE EMPIRE OF CHINA, WITH ITS PRINCIPAL DIVISIONS	Dunn, S	1794
40	ASIA	-	1807

<표 7> 동해가 기타 유럽어로 표기된 고지도

번호	명칭	제작자	연도
41	DAS KAISERTHUM CHINA	Bellin, J. N	1748
42	KORT OVER KATAY el, KONGERIGET KIN	Bellin, J. N	1750
43	L'ASIA divisa NE' SUOI PRINCIPALI STATI Di Nouva Projezione	Zatta, A	1777
44	Nieuwe en Naukeurige Kaart van ASIA	Bowen, E & Bachiene, W. A	1773

<표 8> 동해가 GULF OF COREA로 표기된 고지도

번호	명칭	제작자	연도
45	ASIA, DIVIDED INTO ITS PRINCIPAL STATES	Dunn, S	1774
46	AN Accurate MAP of the RUSSIAN EMPIRE both in EUROPE and ASIA	Dolly, C	1785
47	ASIA	Russel, J	1795
48	ASIA for Morison's NEW MODERN GAZETTEER	-	1807
49	ASIA	Faden, W	1808
50	ASIA	Bonatti, M & Di Pietro, M	1820
51	MAP OF ASIA	Wyld, J	1846

1615년 포르투갈의 ‘아시아전도’를 비롯하여 20세기 전까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작된 지도가 모두 한국해로 표기하였다. 서양 고지도 60점을 사진으로 편집한 ‘SEA OF KOREA’(2004)라는 도록에 수록된 고지도 대부분이 동해를 일본해가 아니라 ‘한국해(CORAI, CORIA, COREE)’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뿐 만 아니라 스위프트의 장편소설 ‘걸리버 여행기’에도 동해를 한국해로 밝혔고, 1771년 영국에서 편찬된 ‘대영백과사전’에도 동해를 한국해로 밝혔다.⁷²⁾

1727년 네덜란드인 캄페르가 제작한 일본 지도와 1752년 제작된 베링의 일본지도에서는 일본 열도 동쪽의 태평양쪽 연해를 일본해로, 한반도 동해지역을 한국해로 표기하고 있다.⁷³⁾

로버츠(G. Robert)는 샌슨(N. Sanson)과는 종제의 혈육이고, 아들 보곤디(D. Robert de Vaugondy)과 함께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도제작자이다.⁷⁴⁾ 이들 지도는 당벌의 La China 지도첩(1735년)의 영향으로 동해

72) 조희승·황명철, 앞의 책, 151쪽.

73) 조희승·황명철, 위의 책, 151쪽.

74) 帝京大学地名研究会, 『地名発生と機能-日本海地名の研究』, インフォテック, 2010,

를 한국해(MER DE CORÉE)로 표기하고 있다.

지도제작자 보엔(E. Bowen)은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지도업자로 ‘보엔 세계지도첩’을 발행했다. 이 일본지도는 캠펔·쇼히차(Kampfer-Scheuchzer)의 일본지도에 준해서 만든 벨링(J. N. Bellin)의 일본지도를 참고로 만들었다.⁷⁵⁾ 일본지도로써는 런던 경도를 사용한 최초의 지도이다. 벨링의 영향을 받은 보엔도 동해를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하고 있다.

표. 4-8의 서양고지도에서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어 한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되어왔던 것이 증명되며, 북한수로국 발간 동해 연구보고서에서 유럽 고지도 205장에서 동해를 Corea Gulf, Corean Sea, Korea Sea, Mer de Coree, Mer Orientale, Sea of Corea, Sea of Orientale, Gulf of Corea⁷⁶⁾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동해가 한국 고유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라페루즈 함대가 캄차카에 기항했을 때 러시아 통역 드 르셉스에게 육로로 시베리아 경유하여 항해일지를 프랑스본국에 옮기도록 하였다. 드 르셉스가 가지고 귀국한 항해기록은 그 후 호주 분량까지 합쳐 프랑스혁명정부에 의해 1797년에 출판되었다.⁷⁷⁾ 라페루즈는 본문 중에서는 한국해와 일본해를 병기했지만 출판된 라페루즈 ‘세계주항기’ 아틀라스 제39지도(Chart of Discoveries)와 제46지도에는 일본해라는 이름이 동해 중앙에 표기되어 있다. 라페루즈는 동해 수역을 한국해와 일본해로 병기했으나 출판과정에서 한국해가 빠지는 오류를 범해 지도상에는 일본해만 나타나게 되었다.⁷⁸⁾ 이런 잘못된 표기가 그 당시 영국의 아로스미스가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서 일본해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1832년 시볼트는 ‘Nippon’의 일본변계약도를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

74쪽.

75) 帝京大学地名研究会, 위의 책, 76쪽.

76) Hydrographic Department D.P.R.K Pyongyang, op. cit., 26-36쪽.

77) 帝京大学地名研究会, 위의 책, 80쪽.

78) 谷治正孝, 「日本海名称の定着過程と地図」, 『地図情報 第23巻 第2号 通巻86号』, 地図情報センター, 2003, 6쪽.

景保)의 ‘일본변계약도’를 복사해서 실었다. 이 지도는 시볼트가 1828년의 에도막부에 알현시 천문방(天文方)이라는 지도제작의 최고책임자인 다카하시 가게야스로부터 받은 지도였다.⁷⁹⁾

시볼트는 다카하시의 일본변계약도 동해에 해당하는 곳을 조선해로 표시된 것을 일본열도 북쪽 근해에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런 잘못된 시볼트의 표기는 미국 페리제독이 제작한 『일본원정기(1855년)』의 일본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851년 페리제독은 일본 원정을 가기 전에 시볼트의 ‘NIPPON’을 고가로 구입하고 직접 자문을 얻었다. 페리함대는 시볼트의 지도를 바탕으로 직접 측량한 결과를 다소 정정하여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일본원정기』에 삽입하였다.

17-18세기의 서양지도와 일본지도를 통해 동해 호칭에 대한 역사적 경위 설명이 있으며 18세기 말까지는 조선해 호칭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⁸⁰⁾ 일본은 고대부터 계속해서 일본해를 북해라고 부르는 습관으로 일본인 의식에는 일본해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에서 동해에 대한 표기는 17세기 은주시청합기에서 북해로 표기하였고 19세기말이후 일본서해, 한국·일본양해, 일본해 등으로 점차 바뀌어갔으며 에도막부시기에 오늘날의 태평양을 대일본해, 일본해, 일본동해로 표기하였고 오늘날의 일본해 즉 동해를 메이지시대 초기까지만 하여도 조선해로 표기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한다.⁸¹⁾ 1929년 일본은 종주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동해를 일본해로 국제수로기구에 등록함으로써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은 일본의 조선침략정책과 제국주의적 영토팽창정책의 산물이다. 1893년에 발간된 『일본수산잡지』에서 세키자와 아키기요(關澤明清)는 이미 일본해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이상 그 수역의

79) 二宮陸雄, 『幕府天文方書物奉行 高橋景保一件』, 愛育社, 2005, 241, 268쪽.

80) 芳井研一, 「朝鮮海・東海と日本海・縁海の呼称をめぐる歴史的経緯」, 『環日本海研究所年報 第9号』2002.3.

81) 조희승·황명철, 앞의 책, 151쪽.

해상 주권도 일본이 점유한 것⁸²⁾으로 주장하면서 동해에의 적극적인 침략을 권장하였으며 아시ата평양전쟁시기 일본이 태평양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일본정계와 군부에서는 태평양을 대일본해로 개칭하자는 설이 나오고 태평양, 인도양을 제압하여 신일본해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⁸³⁾는 여론도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일본해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지리교과서에서 문명화라는 척도로서 일본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⁸⁴⁾ 1906년부터 문명화 교육 일환으로 일본해를 『국어독본』에 표기하면서 동해표기가 없어지기 시작하여 1910년에는 본격적으로 일본해를 사용했다.⁸⁵⁾

일본해의 호칭이 일반적으로 보급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러일전쟁 시 러시아 발틱함대와 일본 연합함대가 쓰시마해협과 오키노시마 부근에서 쓰시마오키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에 이 해전을 일본해해전이라고 호칭한 데서 유래된다.⁸⁶⁾ 그러나 도쿄아사히신문에서 쓰시마오키해전 이후의 당초 보도에서는 쓰시마해협과 쓰시마부근에서의 전투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쓰시마오키해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⁸⁷⁾ 동해가 일본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일본 영해라고는 생각하게 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였고 1910년 조선총독부가 동해 사용을 금지시켰다.⁸⁸⁾

17C-18C의 서양고지도, 일본고지도에서 동해를 한국해 또는 조선해라고 표기해 왔으나 메이지유신이후 일본이 조선침략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문명화 교육 일환으로 동해표기를 없애고 일본해를 사용케 하였다.

82) 關澤明清, 「日本海の漁業はどうか」, 『日本水産雑誌』, 大日本水産会, 1893.

83) 조희승·황명철, 앞의 책, 152쪽.

84) 芳井研一, 앞의 책, 79쪽.

85) 芳井研一, 위의 책, 91쪽.

86) 「第一艦隊戦闘詳報」防衛庁防衛研究所圖書館所藏

87) 박병섭, 「러일전쟁과 독도의 가치」, 『독도연구』,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1.6, 221쪽.

88) 芳井研一, 위의 책, 88쪽.

VI. 결론 및 제언

북한의 동해명칭 표기 정당성에 대해 첫째로 지명 발생 발전의 합법칙성을 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척하고 이용하여 명명된 고유 명칭이며 대항해시대부터 20C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동해로 인정받아 지명 발생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지명이라 주장하고 있다.⁸⁹⁾

둘째로 북한은 바다이름 명명의 국제적 관례에 따라 바다 주변 대륙 쪽의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0여 개의 세계 바다 이름은 대부분 이런 관례에 의하여 명명된 것이며 세계에는 한국 동해와 같은 연안해(沿岸海)가 18개가 있는데 그중 12개가 ‘중국 동해’, ‘오호츠크해’, ‘아라비아해’, ‘동시베리아해’와 같이 대륙 쪽의 유명하였던 지명들에서 유래되었고 한다.⁹⁰⁾

셋째로 일본해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침략되어 만들어진 지명으로 그 정당성이 결여되고 현재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해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게 그 역사 지리적 의미와 오늘날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명명한 원칙적이고도 공정한 지명이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해’를 없애고 ‘조선동해’를 국제적인 표준 지명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이 정당하며 일본이 ‘일본해’ 표기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인류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⁹¹⁾

한국 정부는 ‘동해’표기의 중요성 및 병기의 합리성에 대해 ‘동해’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왔으며, 현재도 7,500만명의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애국가의 첫 구절에 나올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명표기 관련 국제규범을 인용하

89) 영남대 독도연구소, 앞의 책, 80쪽.

90) 영남대 독도연구소, 위의 책, 82쪽.

91) 영남대 독도연구소, 위의 책, 83쪽.

여 동해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4개국에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동 국가들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해수역에서 여러 국가가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공유하고 있어⁹²⁾ 동해 표기가 국제적 관례에 있어 정당하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동해’ 표기보다 ‘일본해(Sea of Japan)’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초판을 발간했을 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국제사회에 동해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을 강조했다.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한국은 ‘Sea of Japan’의 명칭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유래한 호칭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동해(East Sea)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8년 제7차 회의에서 남한 대표단의 기조연설에 이어 북한도 일본해라는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남북이 한 목소리로 일본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동해·일본해 병기문제로써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동해·일본해 병기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이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에 의해 해결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렇게 남북한이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나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 호소해 나가면 동해·일본해 병기가 국제지도책에 표기되어 확산될 것이다.

북한의 서양 고지도와 일본 고지도 목록에서의 동해 명칭에 대한 분석에서 동해 표기 고지도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의 연구가 유사하기 때

92) 대한민국 외교부, 동해명칭,

http://www.mofa.go.kr/trade/keyissue/eastsea/index.jsp?mofat=001&menu=m_30_40_30(검색일:2017.10.30.)

문에 남북한은 서양고지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켜 남북한이 국제기구나 국제수로기구에서 동해 표기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일본의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일치하나 동해 명칭에 대해 한국은 동해, 북한은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로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국제적 명칭으로 통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저서 『독도이야기』, 『옛지도로 보는 독도』에 나오는 동해 바다 명칭은 조선동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법은 북한방식의 민족주의적 뉘앙스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바다 이름에 국적이 함께 표기하는 것은 표기 방향성과 기준점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침이다.

광복 후 북한에서 동해 이름을 ‘조선동해’라 개칭하였다. 일제 침략에서 강압적으로 폐지당한 본래의 이름을 찾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조선해’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고 지명의미의 보존과 대륙 쪽의 지명으로 명명해 온 국제적인 관례를 반영하여 ‘조선동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⁹³⁾ 그리고 ‘조선동해’는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이용해온 조선인들의 견해와 관점이 반영되어 명명된 ‘동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명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조선해’를 계승한 것으로 지명발생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걸쳐 이루어진 정당한 지명이라 주장하고 있다.⁹⁴⁾

동해명칭의 영문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1992년 이래 일관되게 ‘East Sea’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우리말로 ‘조선동해’라 하나, 영어로는 ‘Sea of Korea’, ‘East Sea of Korea’, 또는 ‘East Sea’를 혼용하고 있어 그 입장이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수로국이 2010년 6월 작성하여 S-23(“Limits of Oceans and Seas”)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회의 시 참

93) 영남대 독도연구소, 앞의 책, 77쪽.

94) 영남대 독도연구소, 위의 책, 80쪽.

가국들에게 배포한 문서⁹⁵⁾에도 ‘East Sea’와 ‘East Sea of Korea’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최된 지명관련 국제회의나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접촉한 북한대표단들은 한국이 ‘East Sea’로 주장하는데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자신들도 발언 시 ‘East Sea’로 하는 경우가 많다.⁹⁶⁾ 그리고 일부 북한 학자는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 약칭 동해(East Sea)로 주장하는⁹⁷⁾ 경우도 있어 동해 명칭을 통일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동해병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같은 용어, 같은 주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한은 조선, 동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독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경위와 독도 명칭 변화, 위치에 대해 분석하면서 조선이 일관되게 독도의 관할권을 행사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조선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위치, 명칭, 지도제작 기술의 변화 등을 보면 조선은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하나의 부속섬으로 그리거나 같은 색으로 표기하고 크게 그리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일본 고지도에서는 조선 고지도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 고지도의 답습에 의한 독도의 위치와 명칭의 혼란이 가속된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닌 것을 반증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독도의 위치, 명칭은 황여전람도 영향으로 표기되었으나 19C 이후 서양함대의 실측에 의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입증해 주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서는 동해를 ‘Sea of Korea’로 표기하고 일본 고지도에서

95) Hydrigraphic Department D.P.R.K Pyongyang, op. cit..

96) 유의상, 「북한의 독도, 동해표기 등 해양법 연구의 분석과 남북한 협력방안」,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홍익표국회의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서울, 2017, 73쪽.

97) 사공 준, 「조선동해호칭문제소고(2)－일본해호칭문제비판－」, 4쪽.

도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동해가 한국 고유의 명칭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동해 명칭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과 러일전쟁 승리로 동해가 일본해로 변화하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동해가 희생되었던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동해는 한국이 개척하고 이용하여 명명된 고유 명칭으로 대항해시대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지명 발생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지명이다.

북한의 독도 연구와 동서양 고지도 연구를 보면 독도영유권, 동해 명칭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축적하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북한의 독도에 대한 연구는 남한과 궁극적으로 같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외문제에 있어 유일하게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남북한의 이론적 근거와 주장이 근접하게 된 배경은 독도와 동해표기 관련 학술교류가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 학자들은 한국의 동해연구회가 주최하는 ‘동해명칭 국제세미나’에 두 차례(2002년 블라디보스톡, 2003년 상하이)참석하였으며, 2004년 2월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남북공동학술토론회⁹⁸⁾에 남한 학자들이 참석하였고, 2007년 7월 개성에서 개최된 제9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관련 남북실무 회담에 남한 학자가 참석하여 양측 간에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⁹⁹⁾

이런 연구와 교류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국제기구나 국제수로기구에 서 동해 표기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야 한다. 2019년 1월 18일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에 대해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것을

98) 한국일보. 2004년. 2월 25일자, 남북 학술 토론회

<http://www.koreasea.net/news20040225.htm>(검색일: 2017.11.20)

99) 유의상, 앞의 책, 72쪽.

요구했다. 1998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일본해 표기 부당성을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해야 한다. 남북한의 동해 명칭 표기 주장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으로 남북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독도문제에 있어 남북한이 학술대회 교류를 활성화하여 협력, 화해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남북한에 흩어져 있는 사료를 공동 발굴하여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남북 공동 연구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남북한의 활동과 협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한 홍보를 해나가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분쟁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처럼 역사현장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북한 시민들이 울릉도·독도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남북한간 독도 관련 역사와 문화교류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윤택·배영일, 『옛지도로 보는 독도』, 평양출판사, 2010.
- 배진수·양주, 「북한 노동신문의 독도기사(1948~2008)현황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2009.6, pp.119~149.
- 서인원, 「일본 육지측량부 지도제작과 독도영유권 인식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14, pp.64~101.
- 양태진, 「남북한의 한국영토문제 인식에 관한 고찰-특히 북한측의 국경영토문제에 대한 대응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1996.
- 영남대 독도연구소, 「특집 북한의 독도 연구」, 『독도연구 제2호』, 2006.12.
- 이상균·유수진,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과 민족적 표상으로서의 독도」, 『영토해양연구』, Vol. 7, 2014, pp.74~97.
- 이상균·최희,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영토해양연구』, Vol. 9, 2015, pp.44~73.
- 이상태,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제10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1. 6, 7~62쪽,
- 이상태, 「일본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영유권」, 『독도연구 제15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3. 12, 57~96쪽,
- 이상태, 「歷史 文獻上の 東海 表記에 대하여」, 『사학연구』, (50), 1995, 473~486쪽.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 정재정,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조희승·황명철, 『독도이야기』, 사회과학출판사 주체 96, 2007.
- 최홍식, 『울릉도를 지킨 안릉복』, 조선출판물수출입 주체93, 2004.
- 최서면, 「유럽지도에 나타난 최초의 조선」,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1983.
- 최서면, 「대항해시대 해도속의 조선; 원색지도와 지도를 통해 본 동서교섭사」, 『월간조선』 제4권 제6호 통권39호, 조선일보사, 1983.
- 최서면, 「지도로 본 독도」, 『영토문제연구 창간호』, 1983.
- 홍성근, 「북한의 독도연구 및 저술현황분석」 『북한학연구 제14권 제2호』,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8
- 小林茂, 『外邦圖-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中公新書, 2011.
- 谷治正孝, 「日本海名称の定着過程と地図」, 『地図情報 第23巻 第2号 通巻86号』, 地図情報センター, 2003.

- 帝京大学地名研究会, 『地名発生と機能-日本海地名の研究』, インフォテック, 2010.
- 二宮陸雄, 『幕府天文方書物奉行 高橋景保一件』, 愛育社, 2005.
- 芳井研一, 「朝鮮海・東海と日本海・緑海の呼称をめぐる歴史的経緯」, 『環日本海研究
所年報 第9号』, 2002.3.
- 竹内正浩, 『地図で読み解く日本の戦争』, ちくま新書, 2013.
- 關澤明清, 「日本海の漁業はどうか」, 『日本水産雑誌』, 大日本水産会, 1893.
- 内務省,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ニ編纂方伺」, 國立公文書館 소장, 1877.3(A07060
000300).
- Hydrigraphic Department D.P.R.K Pyongyang, 「The proper geographical name “East
Sea” for the sea area located to the east of Korean Peninsula which has long
history of two millennia」, 2010.6.20.

관련 사이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http://www.ndl.go.jp/>)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s://www.jacar.go.jp/>)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

<Abstract>

**Analysis on Studies about Old Maps of Dokdo and East
Sea in North Korean
-Focused on Dokdo and the East Sea in the Korean, Japanese, and
Western Old Maps-**

Seo, In-Won

Japan has escalating the right wing nationalism recently, and strengthen the claims Dokdo islets to solve the problem by lawsuit i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wo Koreas requires cooperation and needed for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Dokdo research in order to strengthen Korean sovereign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ovide for the Japanese policy of Dokdo provocation.

We analysis on North Korea's Dokdo policies and Dokdo research through the books of "Dokdo seen as old maps", "Dokdo Story", "Ahn Ryongbok kept Ulleungdo", "Dokdo Research No. 2" etc. Also We analysis Dokdo research of the present situation through North Korea's Dokdo research on the old maps.

North Korean studies was analyzed the historical documents, old maps proved that Dokdo is Korean historical territory.

The official document and the old maps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prove that Dokdo is Korean historical territory and this studies can proves Japanese injustice and contradictions of territorial claims.

North Korea has analyzed the historical inspector, change the name, location of Dokdo in the map of Choseon(朝鮮) and the Western old maps

demonstrated that Korea has exercised effective jurisdiction over Dokdo. The Western old maps can proves East Sea which is marked as 'Sea of Korea' on the old maps, and Japanese old maps can proves East sea by the name of Korea Sea.

Two Koreas should strive to practice Dokdo policy actively based on North Korea's Dokdo research for strengthening the appellation of East Sea and the dominium of Dokd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 words: Dokdo, North Korea, Old Maps, East sea, The Western old maps, Japanese old maps, Choseon old maps

이 논문은 2020년 5월 1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겐로쿠(元禄)·덴포(天保)·메이지(明治) 도해금지령의 규범 형성절차 및 형식의 법적 의미*

최 철 영**

〈목 차〉

- I. 서론
- II. 시대별 도해금지령의 입안과정과 질의응답서 분석
- III. 시대별 도해금지령과 부속 또는 참고지도의 의미
- IV. 시대별 도해금지령의 규범적 성격
- V. 결론

〈국문초록〉

한국정부는 독도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측 자료근거로서 겐로쿠(元禄) 도해금지령(1696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덴포(天保)시대 이마즈야 하치에몬 사건 이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1837년) 그리고 메이지시대(明治) 태정관지령 이후 태정관의 지령에 의한 내무경의 독도 도해금지유달(1883년) 등 역사적으로 약 200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되었다.

일본정부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은 시대별 배경에 따라 규범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의 도항을 금지하는 규범의 형식으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마쓰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국가

* 이 글은 대구대학교 2019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의 의지를 반복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도해금지령은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에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아 행정절차상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 규범적 공문서로서 세 차례 도해금지령이 단지 일본 국민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문구에 그치지 않고 도해금지 대상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를 첨부하거나 참고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도해금지령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외교정책의 국내선언적 성격, 사법판결의 이행규범성격, 그리고 법률로서 태정관지령의 위임에 따른 이행입법이라는 근대적 입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형성과정과 형식의 유사성 및 규범성 확보라는 특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한국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은 일본정부가 겐로쿠시대 이래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정립한 다양한 성격의 규범을 통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국의 영역이 아닌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관행의 근거형성, 그에 기초한 관습법의 확인 그리고 이를 성문화하는 입법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도해금지령, 울릉도쟁계, 하치에몬 사건, 태정관지령, 독도영토주권

I. 서론

한국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영토주권의 근거로서 세종실록지리지(1454), 동국문헌비고와 여지도(1770),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제41호(1900), 대한제국 울도군수 심홍택 보고서와 의정부참정대신의 지령(1906) 등을 우리나라의 공적 자료로서 제시하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국내규범적 자료로서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면허(1625)와 울릉도쟁계에 따른 다케시마 도해금지령(1696), 조선국고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1877), 시마네현고시 제40호(1905)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성격의 문서로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677과 1033(1946),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1951) 등을 제시하고 있다.¹⁾

한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독도영토주권의 근거들 중 일본정부가 울릉도쟁계를 마무리하면서 1695년 일본 막부 집정의 질문서에 대한 돗토리번의 답변서에 기초하여 공포한 겐로쿠(元禄) 도해금지령(1696년)은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으로서 울릉도 및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국민들이 도해하지 못하도록 알림으로써 두 섬이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공문서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덴포(天保)시대 이마즈야 하치에몬 사건에 대한 막부 평정소의 판결 이후에 다케시마 도해금지령(1837년)을 전국에 공포하여 겐로쿠 도해금지령에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부여한 바 있으며,²⁾ 메이지시대(明治)에도 1877년 태정관지령 이후 태정관이 내무령에게 독도 도해금지유달(1883년)의 법령을 전국의 각 지방에 내리도록 하는 등 역사적으로 세 차례에³⁾ 걸쳐 각기 다른 배경과 법적 성격을 갖는 공문서의 형식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포하였다.

일본정부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은 약200년의 기간 동안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마쓰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국가의 의지를 반복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 이들 도해금지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에 독도 영유권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문서로서 질의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주고받아 행정절차상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규범적 공문서로서 세 차례 도해금지령이 도해금지 대상이 울릉도만이 아니라 독도도 포함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를 첨부하거나 참

1)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2) 하마다번 주민을 포함하는 모든 일본 국민의 울릉도와 독도 도항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1837년 2월 21일 다케시마 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御觸). 유미림, 『일본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2015, 32쪽.

3) 일본정부의 울릉도 도항금지가 3차례 있었다는 지적은 송휘영,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도항 금지의 건, 『독도연구』 제27호, 2019.12. 471-472쪽. 송휘영은 위의 3차례 도항금지를 외교문서의 표제에 따라 ‘울릉도’ 도항 금지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지도를 고려하면 울릉도 및 독도 도항금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고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공통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각각의 도해금지령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검토 또는 일본인의 도해목적의 중심으로 하는 협소한 고찰을 넘어서서 역사적 연계성에 기초하여 각각의 도해금지령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로서 절차적 및 형식적 공통점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행위로서 도해금지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성격의 차이 그리고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울릉도쟁계 관련 일본 막부와 돗토리번의 질의 및 회신문서를 기초로 한 막부의 대외적 정책결정의 이행의지표명으로서 겐로쿠(元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이마즈야 하치에몬의 다케시마(울릉도) 밀항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막부의 수사기관인 오사카마치봉행소와 쓰시마 번이 주고받은 질의 및 회신문서와 이에 따른 막부 평정소의 사법적 판결의 후속조치로서 덴포(天保)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그리고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정부의 최고의 사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竹島外一嶋)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식적 정부지령문의 입법과정에서 태정관과 내무성 그리고 시네마 현이 주고받은 질의 및 회신 문서와 이후 태정관지령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근대적 법규범으로서 도해금지유달 등 일본 측의 역사적 공문서 자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문서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시대별 도해금지령의 입안과정과 질의응답서 분석

1. 겐로쿠(元禄) 도해금지령과 울릉도쟁계의 독도영유권소재 확인

(1) 1695년 일본막부 집정의 질문서

조선정부는 1694년 8월 울릉도 쟁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쓰시마번과

의 교섭방침을 전환했다.⁴⁾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본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취해 왔던 조선의 울릉도와 일본의 다케시마라는 ‘2島2名’의 입장을 변경하여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가 조선의 울릉도라는 ‘1島2名’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범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1695년 쓰시마 번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로주(老中) 아베 분고노카미는 조선이 말하는 ‘1도2명’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케시마(울릉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 있었던 돗토리번의 에도 번저(藩邸)에 다케시마 및 주변 섬들의 소속이나 실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7개항의 질의를 했다.⁵⁾

- 一 .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된 다케시마는 언제부터 양국에 부속되어 있었는가? 선조가 영지를 받기 이전부터였는가?
- 一 . 다케시마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섬인가? 사람은 살지 않는가?
- 一 . 다케시마에 어럽을 위해 사람이 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왔는가? 매년 오는가? 아니면 가끔씩 오는가? 어떤 어럽을 하는 것인가? 배도 많이 오는가?
- 一 . 3,4년 전에 조선인이 와서 어럽을 해서 당시 인질로 두 명을 잡아 왔다고 했다. 그 이전에도 가끔씩 왔는가? 아니면 전혀 오지 않다가 그때 2년 연속으로 온 것인가?
- 一 . (최근) 1,2년은 오지 않았는가?
- 一 . 예전에 왔을 때는 몇 척이었으며, 사람은 몇 명 정도가 왔었는가?
- 一 . 다케시마 외에 양국(이나바, 호키)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 또 (있다면) 그 곳도 어럽을 위해 양국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4) 울릉도쟁계 관련 조선과 일본의 서계에 의한 교섭과정에 관해서는 최철영·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제63권 제4호, 2018. 252-255쪽.

5) 나이토우 세이추우, 권오엽·권정(역), 『나이토우 세이추우의 독도논리』, 2011, 131쪽.

(2) 일본막부 집정의 질문서에 대한 돗토리번의 회답서

이와 같은 막부의 질의에 대하여 돗토리번의 에도 유수거(留守居) 고타니 이해(小谷伊兵衛)는 1695년 12월 25일에 다음과 같은 회답서를 보냈다.⁶⁾

- 一. 다케시마는 이나바나 호키에 부속된 것이 아닙니다. 호키국 요나고의 조닌 오야 구에몬과 무라카와 이치베라는 자가 도해해서 어업을 행하는 것은,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영국(領國:영지)을 다스릴 때 봉서로 쇼군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도해한 적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 一. 다케시마는 둘레가 8·9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지 않습니다.
- 一. 다케시마로 어렵하러 갈 때는 2·3월 무렵에 요나고를 출항해서 매년 갑니다. 그 섬에서 전복과 강치 어업을 하는 크고 작은 배 모두 2척이 갑니다.
- 一. 4년 전 임신년(1692, 겐로쿠 5), 조선인이 그 섬에 와 있을 때 선두들이 가서 마주쳤다는 것은 당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해 계유년(1693)에도 조선인이 와 있는 동안에 선두들이 가서 마주쳐서 조선인 두 명을 데리고 요나고로 되돌아왔으며 그 것도 보고를 올리고 나가사키로 보냈습니다. 갑술년(1694)에는 난풍을 만나 그 섬에 착안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도해해보니 이국인이 많이 보였기에 착안하지 않고 돌아올 때 마쓰시마(독도)에서 전복을 조금 채취했습니다. 이를 보고 드립니다.
- 一. 임신년에 조선인이 왔을 때, 선박 11척 중에서 6척이 난풍을 만나 나머지 5척이 그 섬에 머물렀는데 사람 수는 53명이었습니다. 계유년에는 선박 3척에 42명이 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배가 많고 사람도 많이 보였습니다. 접안하지 않아서 분명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 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그 밖에 두 지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

6) 위의 책, 132-133쪽.

(3) 돗토리번 회답서의 의미

다케시마 외의 섬이 있는지를 묻는 막부의 질문에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이나바와 호키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막부와 돗토리번 모두 다케시마(울릉도)외에 마쓰시마(독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조선인이 지속적으로 당해 섬에서 어업활동을 해왔고, 이나바나 호키에 부속된 섬이 아닌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주변 해역에서의 어로는 조선 어부들에게 권리가 있으므로,⁷⁾ 이들이 있으면 조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일본 어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인들이 마쓰시마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조금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조선인들이 오기 전에 전복을 일부 채취했다는 것은 마쓰시마 그 자체를 어업적 목적을 가지고 도항하지는 않으며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하나의 어로활동 대상해역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 덴포(天保) 도해금지령과 하치에몬 판결의 법적 확신부여

(1) 하치에몬 사건의 개요

덴포 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은 1836년(天保7) 이와미국(国) 하마다(浜田)에서 해운업을 하던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 八右衛門)의 다케시마(울릉도) 밀항이 발각되어 처벌된 사건이다.

하치에몬은 에도의 하마다 번저에 에조(홋카이도)로 향해 때 볼 수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다케시마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섬에서 벌목이나

7) 1614년 동래부사 윤수겸, 박경업과 쓰시마번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 본인의 도항과 거주를 금지한다는 것을 확인한 외교문서를 교환한 바가 있다. 박지영, 돗토리번 사료를 통해 본 ‘울릉도 쟁계’: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2010-2018)』, 2018, 12, 187쪽.

어렵을 하고 하마다 번에 특허 세금을 바치고 싶다는 청원을 했다. 그러나 에도 번저는 막부의 재정감사를 담당하는 간조긴미야쿠(勘定吟味役)에게 보낸 문의의 회신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회답에 기초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⁸⁾

청원이 각하된 하치에몬은 포기하지 않고 하마다에 있는 가로(家老) 오카다 다노모 저택의 하시모토 산베에게 부탁을 했다. 산베는 오카다 다모노와 상의하고, 오카다 등은 번주의 정치적 활동으로 궁핍해져 있던 하마다 번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⁹⁾ 하치에몬의 다케시마 도해를 내락했다. 하치에몬은 하시모토 및 오사카에 있는 번의 연공미 및 특산물 등을 보관하고 거래하는 기관인 쿠라야시키(蔵屋敷)의 도움을 얻어 오사카 상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¹⁰⁾ 도해선을 만들었다. 1833년 하치에몬은 다케시마로 건너가 벌목을 하였으나 3년 후 밀항이 적발되어 오사카의 봉행소(奉行所)에 체포되었다. 봉행소의 조사 결과 밀항에 하마다번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을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評定所)에¹¹⁾ 맡겼다. 평정소는 일본 각지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1836년 12월 23일 최종판결을 하였다. 평정소의 판결은 하치에몬 등 사형 2명, 무기징역 2명, 물건몰수와 중추방 2명, 경추방 2명, 직책박탈과 연금 2명, 연금 6명, 주대은(酒代銀)몰수와 중질책 2명, 수수료압수와 중질책 2명, 중질책 2명, 벌금 3관문 1명 등이었다.¹²⁾ 또한 밀항 당시의

8) 박병섭a, ‘덴포 다케시마일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 2018.12. 223쪽.

9) 하마다번은 잦은 화재와 수재로 어려움이 있었고, 번주인 마쓰다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유동지출이 많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권정, 권오엽, 竹島渡海一件記全을 통해 본 도해와 밀무역, 『일본문화학보』77, 2018. 51쪽.

10) 이계항,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의 울릉도독도 도해사건“, 『학림』 제39집, 2017, 137쪽.

11) (일본) 國史大辭典編纂委員會, 『國史大辭典 第11巻』, 1990, 1021頁.

12) 유미림,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와 쟁점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8

하마다 번주에게는 영구 칩거를 명령하고, 사건의 처리를 마친 막부는 1837년에 전국적으로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2) 하치에몬 사건에서 막부의 질의와 쓰시마번의 회신

하치에몬을 조사한 평정소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소속을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막부는 두 섬이 모두 조선의 울릉도인지 아니면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는 조선 외의 영역인지, 일본 및 조선로부터 거리 등을 포함하는 이들 도서에 대한 상황과 지리를 쓰시마 번에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쓰시마 번은 각(覺)의¹³⁾ 형식으로 “겐로쿠 연간에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님께서 하문하셨을때,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곳에도 일본인들이 건너가 어업을 했다는 아랫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올렸다고 서류에 적혀있습니다. (마쓰시마도)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건너가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시킨 섬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확실한 답변은 올리기 어렵습니다. 조선의 지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울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회신하며 조선 지도를 함께 막부에 제출하였다.¹⁴⁾ 쓰시마 번의 회답은 막부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로 판단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평정소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의 부속지도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¹⁵⁾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의 본토와 마찬가지로

권, 2017, 273쪽.

13) 통상적으로 각(覺)은 현안문제에 대한 개조식의 실무문서를 지칭한다. 이훈, 조선후기 대일외교창구 관련 실무문서의 수량과 수록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4, 2009, 237-238쪽.

14) 박병섭a, 덴포 다케시마일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 2018.12. 228쪽.

15) 박병섭b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문제, 『독도연구』제13호, 2012, 141-147쪽.

로 붉은 색으로 채색하고 조선의 영토 일부도 그려 넣었다.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와 대체로 동일한 글씨 막부의 외교기록 통항일람속집(通航一覽統輯)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¹⁶⁾ 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공식 문서증거라고 할 수 있다.

(3) 평정소 질의와 쓰시마번 회신의 의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평정소의 판결문에 산배가 가까운 마쓰시마에 간다는 도해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갈 방법이 있다고 시사했으므로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어 있어도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마쓰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 있다.¹⁷⁾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가까운 마쓰시마”는 일본에 가까운 섬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위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이며, 오사카마치 봉행소의 다케시마 방각도에 보이는 ‘위’는 다케시마, 즉 조선의 울릉도를 의미한다. 이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다케시마 대하원을 비롯한 많은 일본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영토소속 인식에¹⁸⁾ 기초하여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하나의 군도(群島)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다케시마에 대한 도해금지령은 다케시마 군도의 일부로서 마쓰시마에 대한 도해 또한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하치에몬이 마쓰시마 도해를 명목으로 주장했으나 평정소가 막부를 통해 쓰시마 번에 보낸 질의서에 대하여 쓰시마번이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도해하여 어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 섬이라는 회신을 제출하여 결국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다케시마 뿐만

16) 박병섭,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종언, 『제2회 독도국제포럼 자료집』, 2019, 108쪽.

17) 田村清三郎, 『竹島問題の研究』, 1955, 23頁, 박병섭, 위의 글, 107쪽에서 재인용.

18) 영토획득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론에 관하여는 최철영, 1905년 일본 정부 각의결정의 무주지선점론, 『일본의 도고영유권 주장의 허상』, 2018, 146-149쪽 참조.

아니라 마쓰시마 또한 도해가 금지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서 하치에몬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주장에서 다케시마는 도해가 금지되어 마쓰시마로 도해했다고 하여 마쓰시마는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일본 외무성에 의하여 그대로 답습되어 1956년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 후에도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반복되었다.

3. 메이지 도해금지유달과 태정관지령(1877년)의 시행

(1) 메이지 도해금지유달의 근거 법령으로서 1877년 태정관지령²⁰⁾

일본의 내무성은 1876년 전국적인 규모의 지적(地籍)편찬사업을 추진하였다. 내무성은 지적 편찬사업을 위해 지리료의 관리를 시마네현에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시마네현을 순회하던 중 시마네현에 울릉도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는 조회문을 보냈다.²¹⁾ 조회문은 1876년 10월 5일 지리료 12등 출사(出仕) 다지리 겐신과 지리대속(地理大属) 스기야마 에이조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시마네현의 지적편제계에 보낸 것이다.²²⁾

귀 관할인 오키국 모 방향에 종래 다케시마로 불려 온 고도(孤島)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래 옛 돗토리 번의 상선이 왕복한 항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두로 조사하거나 협의한 것도 있는데

19) 池内敏, 『竹島 - もうひとつの韓日關係史』, 2016, 87頁.

20) 1987년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가 발표한 「1905년 일본의 죽도영토편입」이라는 논문은 ‘죽도외 1도(竹島外一島)’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지령한 ‘태정관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소개하였다. 동 논문을 통해 ‘태정관지령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전기가 되었다.

21) 유미림, 『일본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2015, 48쪽.

22) 이성환 외, 『일본 태정관과 독도』, 2016, 132쪽.

다 지적편제에 관한 지방관 심득서 제5조의²³⁾ 취지도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5조에 비추어 오래된 기록(旧紀)과 고지도 등을 조사하여 본 성에 무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조회하는 바입니다.

이는 내무성 지리료의 관리 두 사람이 지적편찬을 위한 현장답사과정에서 다케시마의 소속에 관한 정보가 돗토리 현지에서도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시마네현과 구두로 협의를 한 뒤 이를 내무성에 조회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2) 시마네현의 질의서

1876년(메이지9) 10월 16일 시마네현은 부속문서를 첨부하여 죽도와 일도(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이 지적에 편제하기를 희망하는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의 지적편찬 방법에 관한 문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라는 공식적 행정 질의 문서를 내무성에 보냈다.²⁴⁾ 이 질의서는 돗토리 현의 현령 사토 노부히로의 대리 시마네현 참사 사카이 지로가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를 수신으로 하여 보낸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성(내무성) 지리료의 관원이 지적 편찬을 위한 사전 조사에 임하기 위해 본 현을 순회할 때,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를 조사하는 건에 관해 별지<을 제28호>와 같이 조회를 했습니다. 본도는 에이로쿠(永祿) 연간(1558-1570)에 발견했다고 하지만, 과거 돗토리번 시절 겐나(元和) 4년(1618)부터 겐로쿠(元祿) 8년(1695)까지 약78년간 돗토리번의 호키국 요나고마치(米子町)의 상인 오야 구에몬과 무라카와 이치베라

23) 지적편제 지방관 심득서, 메이지 9(1876)년 5월 내무성 달(達) 병(丙) 제25호 제5조. 도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지세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방위, 거리, 넓이 등을 조사하여 대략의 목적을 세워 보고하여야 한다.

24) 이성환 외, 『일본 태정관과 독도』, 2016, 132쪽.

는 자가 막부의 허가를 얻어 해마다 도해하여 섬의 동식물을 신고 와서 내지에서 매각했음은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래된 문서(旧書)와 오래된 자료(旧狀) 등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별지로 원유(原由)의 대략과 도면²⁵⁾ 등을 첨부하여 우선 상신합니다. 이번에 섬 전체를 조사한 뒤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만 본디 본 현의 관할이 확정된 곳도 아닌데다 북쪽으로 100여리나 떨어져 있으며, 항로도 불분명하여 보통의 범선 등은 오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오야 아무개와 무라카와 아무개가 전하는 기록에 기초하여 추후 상세히 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략을 헤아려 보건대, 관내 오키국의 북서쪽에 해당되며 산음(山陰) 일대의 서부에 속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한다면, 본 현의 국도(國圖)에²⁶⁾ 기재하고 지적에 편입하는 건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지령을 내려주시기를 양망합니다.

이 문의서는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질의서의 주문(主文)에 해당된다. 이 질의서에는 내무성 지리료의 관리들이 보낸 조회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케시마 “외 일도”를 추가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시마네현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하나의 판도에 있는 섬으로서 “외일도”인 마쓰시마(독도)가 다케시마(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²⁷⁾ 각각 독립적인 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로 병렬적인 명칭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되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한 섬’으로서 “외 일도”라는 서술을 한 것이다.

시마네현이 별지로 첨부한 구기는 이른바 ‘원유의 대략’으로서 본래 오야가의 문헌 및 오야가의 문헌에 근거하여 돗토리번이 작성한 문서이

25) 여기서 언급한 도면이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이다. 기죽도약도는 시마네현의 질의서에 함께 편철되어 내무성에 제출되었다.

26) 국도(國圖)는 지역의 행정단위인 국(國)의 율령행정(律令行政)의 수단으로 사용된 지도를 말하기 때문에 공식 인증지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7) 유미림, 『일본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2015, 50쪽.

다. ‘원유의 대략’은 첫째, 다케시마의 명칭과 위치 등에 관한 ‘유래의 개략’, 둘째, 1618년으로 추정되는 막부의 무라카와와 오야 가문에 대한 ‘도해허가서’, 셋째, 울릉도쟁계와 관련된 ‘도해금지의 경위’, 넷째, 조선이 다케시마가 조선에 가깝다는 이유로 조선 땅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주 말해왔다는 사실과 일본 막부는 조선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선 어민들의 다케시마 어업을 허용하고자 했으나 조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도해금지령이 내려졌다는 ‘막부의 도해금지령’ 등으로 구성되어있다.²⁸⁾

(3) 태정관지령과 도해금지유달

‘태정관지령문’에는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이외에도 대장경(大藏卿) 겸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사법경 겸직 오키다카토(大木喬任) 그리고 외무경 겸직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등 3명의 참의(參議)가 날인하여, 대장성·사법성·외무성과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²⁹⁾ 태정관제 하에서 내무성은 법령 전달을 통할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태정관이 내무성에 지령하면 그것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에 지령의 내용을 기재하여 회신하는 형태로 부속 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와³⁰⁾ 함께 태정관지령을 내렸다.

태정관지령의 공포 이후 태정대신은 1883년 3월 1일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에 자리 잡은 일본이 일컫는 송도(일명 죽도), 조선이 일컫는 울릉도는 종전에 피아 정부 간에 의정한 바가 있다. 일본 인민이 함부로 도항하여 상륙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는 사람

28) 원유의 대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미림, 『일본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2015, 52-56쪽.

29) 김명기, 국제법상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영토해양연구』 제12권, 2016.12, 7-8쪽.

30) 위의 글, 6쪽.

이 없도록 각 지방장관이 유달(諭達)할 것을 그 성(내무성)에서 시달하도록” 내무경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에게 내달하였다. 이러한 태정관 유달이 내려진 배경은³¹⁾ 1882년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에 대한 조선정부의 항의를 받은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의 상신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노우에 카오루는 1882년 12월 16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국 소속 울릉도(우리나라 사람은 죽도, 또는 송도라 한다)에 도항하여 함부로 벌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조선 정부로부터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금지하겠다고 회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별지 갑호와 같이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도항자가 있게 되면 조선 정부에 대해 교제상 모양새가 나쁠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금령이 인민에게 미치지 못함을 보여줄 염려조차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정부에는 죽첨 변리공사를 파견하여 도항을 금지하겠다는 답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참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을호 초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내무경이 각 부현에 유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른쪽의 유달 건은 최근 경성변란에 대하여 조선 정부와 조약을 교환하고자 하여 조선의 사절도 체경 중이므로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인식되어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달문 가운데 이 섬에 관해서는 조선 정부와 의정했던 연월을 삽입해 둌으로써 옛날부터 조선국에 속해 있었으며, 새삼 오늘날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케 할 것이며, 유달에는 단지 이 섬의 위치를 명시하여 도항을 금지하는 것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절차상 발령 건도 조선 사절이 귀국한 후가 되도록 할 것”을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參條實美)에게 상신하였다.³²⁾

31) 도해금지유달의 성립배경으로서 일본인의 울릉도침입과 당시 조선의 대응에 관해서는 송휘영,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 『독도연구』제26호, 2019, 383쪽.

이에 따라 내무성은 1883년 3월 31일 태정대신에게 받은 울릉도 도항 금지문서를 입법적 근거로 각 부현장관(府縣長官)에게 울릉도 도항금지 훈령문을 태정관의 유달(諭達)로 공포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을 철저하게 금지하였다.³³⁾

Ⅲ. 시대별 도해금지령과 부속 또는 참고지도의 의미

일본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첨부 또는 참고한 지도들은 국가가 발행한 지도는 아니지만 국가의 공문서와 함께 제시되었기에 공적으로 승인(approve)된 공식지도라고 할 수 있다.³⁴⁾

1. 겐로쿠(元祿) 도해금지령과 다케시마 회도

겐로쿠(元祿) 도해금지령의 입안과정에서 고타니 이해는 회답서와 함께 지도를 제출하였다. 고타니가 제출한 지도는 당시 오야무라카미 집안이 소장한 회도를 고타니 이해가 필사한 다케시마 회도(小谷伊兵衛ヨリ差出候竹嶋之繪圖)이다.³⁵⁾ 고타니가 그린 회도에는 후쿠우라에서 마쓰시마까지가 80리 정도, 마쓰시마에서 이소다케시마까지가 40리 정도, 마쓰시마에서 조선국까지가 80-90리 정도로 나타나 있다.³⁶⁾

32) 도해금지유달의 입안과정에서 태정대신이 사법경 및 내무경에 내린 내달안의 원문은 송휘영,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도항 금지의 건, 『독도연구』 제27호, 2019.12. 475-477쪽.

33) 송휘영,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도항 금지의 건, 『독도연구』 제27호, 2019.12. 478쪽.

34) Weissberg Guenter, 1963,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 Reappraisal," AJIL, vol. 57, p.781.

35) 박병섭,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논총 제62호, 2018, 299쪽.

36) 유미림, 『일본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2015, 57쪽.

돗토리번의 에도 유수거 고타니 이해의 회답서와 지도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지방정부의 공적 문서로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회답서는 중앙정부인 막부의 공적인 질의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식적 회답공문이고 다케시마 회도는 공문과 함께 제출된 부속 또는 첨부지도로서 공문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회답공문은 제1항에서 “다케시마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 부속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제7항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 기타 양국(이나바국과 호키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라고 하여 이나바국과 호키국을 관할하는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포함하여 자기 번에 소속된 섬이 없다고 명시하고 다케시마 회도는 이러한 내용을 시각적인 그림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돗토리번의 어민들은 울릉도와 독도에 불법적으로 출어하였으나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인들과 마주치는 경우 돗토리 번의 회답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수하는 결정을 해온 것이다.

2. 덴포(天保) 도해금지령과 죽도방각도

덴포 다케시마일건과 관련된 문헌으로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사법행정기관인 오사카 봉행소의 취조과정에서 진술을 기록한 도해일건기는 1차적 역사자료일 뿐만 아니라 법적 증거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⁷⁾ 도해일건기는 덴포 시기 일본의 사법행정기관이었던 오사카 마치봉행이 직접 하치에몬을 취조한 것으로 엄정한 사법적 조사과정의 기록이며 당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법적 문서다.

하치에몬을 처음 조사한 오사카마치 봉행소가 마쓰시마를 조선의 영

37) 유미림,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와 쟁점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제58호, 2017, 254쪽.

토로 보았다는 근거는 오사카봉행소가 작성한 하치에몬의 공술조서인 다케시마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에 첨부된 다케시마방각도(竹島方角図)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명확하게 조선영토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⁸⁾

죽도방각도는 하치에몬이 직접그린 회도로서 회도 자체에 ‘죽도방각도’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죽도방각도에는 “앞의 진술서의 진술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험 삼아 지도를 그렸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하치에몬이 체포된 1836년에 작성된 것이다. 회도에는 조선국과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동일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³⁹⁾ 당시 지도에서의 채색은 국가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 메이지 도해금지유달과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태정대신은 1877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와 함께 내린 태정관지령에 기초하여 1883년 3월 1일 송도(일명 죽도)에 일본 인민이 함부로 도항하여 상륙하지 않도록 각 지방장관이 유달(諭達)할 것을 내무경에게 내달하였다. ‘기죽도약도’는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 참사 사카이 지로(境二郎)가 내무성에 제출한 품의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에 첨부한 ‘기죽도약도(시마네현 기죽도약도)’를 일본내무성이 1877년 3월 1일에 태정관에 일본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 1도 지적 편찬방사에 첨부하여 ‘기죽도약도(내무성 기죽도약도)’로 제출하였으며,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이 이를 “다케시마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에 ‘기죽도약도(태정관지령문 기죽도약도)’를 부속하여 하달한 것으로 모두 동일한 것

38) 竹内猛, 竹嶋編入當時の日本人の領土認識, 『郷土石見』, 2014, 53쪽. 박병섭, 앞의 글, 107쪽.

39) 유미림,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와 쟁점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제58호, 2017, 269쪽.

이다.⁴⁰⁾

태정관지령의 ‘기죽도약도’(磯竹島略図)는 ‘태정관지령문’의 14개 부속문과 같이 ‘태정관지령문’에 부속되어 일본의 정부공문 원본철로서 역할을 하던『공문록』(公文録)에 수록되어 있다. ‘기죽도약도’는 단순한 ‘부속’ 문서가 아니라 태정관지령문과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지위를 갖는다.⁴¹⁾ 따라서 정부문서 원본철인『공문록』에 등재된 것은 일본국내에 한정된 고시가 아니라 국제적 공시의 의미를 갖는다.⁴²⁾

울릉도와 독도를 대상으로 한 기죽도약도는 일본 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에 첨부된 것이므로 ‘태정관지령문’의 주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정부공문의 원본을 묶은『공문록』에 등재되어 공시되었으므로 ‘기죽도약도’의 국내적 인증지도로서 공식적 증명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일본 정부는 태정관지령문 주문의 죽도 외 1도가 독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태정관지령의 시행을 위한 메이지도해금지유달은 태정관지령과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에 기초하여 울릉도 및 독도에의 도해금지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40) 김명기, 국제법상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영토해양연구』 제12권, 2016.12, 9쪽.

41) ICJ는 부르키나파소/말리 경계분쟁사건에서 지도 스스로가 영토적 권원, 즉 영토에 대한 권리를 성립시키려는 법적 문서로서 효력을 국제법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지도가 공식문서에 첨부되어 있어서 그 문서의 필수적 일부분을 이루는 때에는 국가 혹은 관련된 국가의 의지가 물리적으로 표현된 경우로 보았다. ICJ Reports, 1986, p.582, para.54.

42) 『공문록』은 1868년부터 1885년 12월까지 태정관이 접수한 정부 각 조직 및 지방군현으로부터 접수한 문서를 관청별, 연월별로 수록한 일본 메이지 전기의 정부공문의 원부로 전 4,10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명기, 국제법상 태정관지령문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영토해양연구』 제11권, 2016. 6, 38-39쪽.

Ⅳ. 시대별 도해금지령의 규범적 성격

1. 외교적 합의의 국내선언행위로서 겐로쿠(元祿) 도해금지령

(1) 도해금지령의 하달

1696년 1월 28일 에도막부는 오쿠보 카가노카미, 아베 분고노카미, 토다 야마시로노카미, 쓰치야 사가미노카미의 노중 4명이 나란히 서명하여, 요나고 주민 2명에게 허가했던⁴³⁾ 죽도도해를 취소하고 도해를 금지하는 취지를 돗토리 번주 마쓰다이라 호우키노카미에게 시달하였다.⁴⁴⁾ 안용복의 도일 및 이후 울릉도쟁계가 진행되어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의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답변서에 기초하여 조치된 이 도해금지령은 돗토리번의 어민들을 대상으로 효력을 갖는 조치였다.

도해금지 통고의 근거는 울릉도가 이나바에 속한다고 해도 일본인이 거주하는 일이 없고,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요나고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원했기 때문에 허용하였지만, 안용복의 도일로 인하여 문제가 된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니 이나바에서의 거리는 160리 정도이고, 조선과의 거리는 40리 정도로서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당시의 영토소속 결정의 관행적 원칙에 근거해 볼 때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독도 도해금지령의 하달은 안용복 도일사건을 무마하여⁴⁵⁾ 낙착시키려는 일본 막부의 외교정책이 반영된 결과였다.⁴⁶⁾

43) 독도에 대한 도해면허 또는 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박병섭,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논총 제62호, 2018, 293쪽-294쪽.

44) 나이토우 세이추우, 권오엽·권정(역), 『나이토우 세이추우의 독도논리』, 2011, 128쪽.

45) 외교정책의 측면에서 도해금지령을 통해 나타난 일본 막부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방침이 울릉도쟁계과정에서 조선의 좌의정 목래선, 우의정 민암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한다. 즉 조선왕조실록 숙종조 19년

1696년에 돗토리 번에 내려진 막부의 로주 봉서, 소위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은 다음과 같다.

몇 년 전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이나바호키 지방을 영지로 하였을 때 문의한 호키지방 요나고의 조닌 무라카와 이치배오야 진키치가 다케시마로 도해하였으며, 지금까지 어렵게 했을 지라도 향후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황송하게 말씀드립니다.⁴⁷⁾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케시마 도해가 금지되면 “다케시마로 갈 때 길목에 있는 까닭에 들어서 어렵게 하는” 부수적인 어렵활동 해역으로서 마쓰시마의 도해 또한 포괄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애당초 마쓰시마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해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다케시마(울릉도)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비하여 부수적 의미의 어로활동만 가능한 섬인 마쓰시마(독도)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막부의 질의서에 대하여 돗토리 번의 회답서는 ‘마쓰시마’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돗토리번의 회답서

11월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정부의 울릉도쟁계와 관련된 내부 입장으로서는 “3백년 동안 비워 놓았던 땅인데 이로 인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우호를 상실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조선의 입장과 막부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田保橋潔, 鬱陵島 發見과 領有, 靑丘學叢 第3号, 昭和 6年, 20頁. 나이토우 세이추우, 권오엽·권정(역), 『나이토우 세이추우의 독도 논리』, 2011, 134쪽에서 재인용.

- 46) 『通航一覽』, 卷137, 27頁. “일본 막부가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한다고 하면 빼앗을 수 있지만 별 쓸모없는 작은 섬을 원인으로 하여 조선의 호감을 잃는 것은 일본 막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람이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이는 노중 아베 분고노카미의 도해금지령 배경설명 취지이다. 위의 책, 134쪽.

- 47) ‘竹島渡海禁止令’, 『伯耆志』, 413쪽. 박지영, 돗토리번 사료를 통해 본 ‘울릉도쟁계’: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2010-2018)』, 2018.12. 191쪽.

에 기초한 막부의 도해금지령은 당연히(ipsso facto) 마쓰시마에 대한 도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하치에몬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바 있다.

막부의 도해금지령을 시달받은 돗토리번의 인식은 “막부 당국도 처음에는 다케시마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돗토리번의 출어민을 위해 쓰시마를 통해 조선과 교섭하게 하였으나 다케시마는 울릉도로 옛날에는 조선의 속도였다. 출어자가 정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돗토리 번이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어 오히려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무사히 문제를 낙착시키려고 한 것 같다”라고⁴⁸⁾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돗토리 번의 이해는 울릉도와 독도가 오래 전부터 조선의 영토라는 점이 분명해져서 일본 막부가 이를 인정하고 무사히 문제를 낙착시키려고 했음을⁴⁹⁾ 보여주는 것이다.

(2) 겐로쿠 도해금지령의 외교정책 선언적 성격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일본의 막부가 보낸 질의서와 이에 대한 돗토리 번의 회답서에 기초하여 일본 막부가 도해금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조선에 보냈다는 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조선에 전달한 정보, 외교사건의 전개과정, 외교목적, 요구조건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죽도기사(竹嶋記事)⁵⁰⁾ 등에 의하여 증명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문서는 향후 외교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식적인 증거자료로 남는다는 점, 정책의 형성과정과 외교목적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부 공문서이다.⁵¹⁾

48) 『竹島渡海禁止並渡海沿革』, 鳥取藩史, 第6卷, 98頁.

49) 장순순, 17세기 후반 ‘울릉도쟁계’의 종결과 대마도, 『한일관계사연구』 45호, 2013, 210쪽.

50) 최철영, 「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 『독도연구』 22호, 2017, 69-96쪽.

51)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25, 2009, 9, 299쪽.

또한 겐로쿠 도해금지령은 다케시마의 도해금지는 명확하게 언급하였으나 마쓰시마는 표현하지 않아 일본측은 도해금지령을 통해 도해가 금지된 섬은 다케시마(울릉도)이며 마쓰시마(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겐로쿠 도해금지령을 통해 생계가 어려워진 오야무라카와 가문이 1740년 막부의 3대 봉행소인 사사봉행소(寺社奉行所), 간조봉행소(勘定奉行所), 나가사키봉행소(長崎奉行所) 등에 제출한 청원서에는⁵²⁾ “다케시마·마쓰시마 두 섬에 대한 도해금지령이 내린 이후에는 호키지방의 요나고 성주가 불쌍히 여겨서”(竹嶋松嶋兩嶋渡海禁制ニ被爲仰出候以後ハ伯州米子之御城主ヨリ御憐愍)라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도해금지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막부의 행정과 치안을 관리하던 관공서인 봉행소에서 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³⁾ 다만, 겐로쿠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쟁계를 통한 조선과의 합의에 따라 일본 어민의 울릉도와 독도 도해를 금지한다는 외교정책의 국내적 선언과 함께 부작위의 행위를 통한 관행을 형성하게된 표지적 문서로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⁵⁴⁾

2. 사법부 판결의 이행규범으로서 덴포 도해금지령

(1) 막부 평정소판결의 전국적 고시

1837년 막부 평정소를 통해 하치에몬 사건을 마무리한 막부는 다케시

52) 『村川家文書』, 「延享元年子五月於江戸表奉願上候一件」, 원문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독도관계일본고문서4』, 2017, 249-255쪽.

53) 박지영, 돗토리번 사료를 통해 본 ‘울릉도쟁계’: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2010-2018)』, 2018.12. 196-197쪽.

54) 관습국제법 형성을 구성하는 국가의 실행은 실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각종 태도나 견해 표명 역시 실행의 개념에 포함된다. 정인섭, 『국제법강의』, 2019, 43쪽.

마 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알리는 고찰(高札)을 전국의 여러 곳에 세웠다. 이 고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섬(다케시마)은 예전에는 하쿠슈(伯州)의 요나고 사람들이 도해하여 어렵 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겐로쿠 연간에 조선국에 건네주신 이후로 도해 정지를 명하신 장소다. 무릇 이국(異國) 도해는 엄중히 금지된 일이므로 향후 위의 섬도 마찬가지로 명심하여 도해하지 말아야 한다.⁵⁵⁾

이 고찰은 겐로쿠연간 이후 울릉도 및 독도 도해 정지명령이 있었음과 함께 도해가 ‘엄중히 금지’되었음을 강조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법기관으로서 평정소가 대외정책 선언적 성격의 겐로쿠시대 도해금지에 법적 의무로서의 확신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덴포 도해금지령의 사법판결 이행규범적 성격

막부는 겐로쿠 연간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근거로한 평정소의 판결에 따라 덴포 8년 이를 전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덴포 도해금지령과 관련하여 일본 측은 이 안에 마쓰시마 이름이 없으므로 그 후도 마쓰시마 도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⁵⁶⁾ 또한 마쓰시마 도해가 금지되었지만 이는 곧바로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쓰시마는 일본도 아니고 이국도 아닌 장소, 즉 경계영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⁵⁷⁾ 물론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 도해를 금지하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하치에몬 사건의 사법적 처리과정에서 평정소가 겐로쿠 다케시마

55) 『御徒方萬年記』의 원문내용은 박병섭a, ‘덴포 다케시마일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 2018.12. 229쪽 각주 40참조.

56) 박병섭a, 위의 글. 216-217쪽.

57) 池内敏, 『竹島 - もうひとつの韓日關係史』, 2016, 138頁. 박병섭a, 위의 글. 219쪽에서 재인용.

도해금령에 기초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쓰시마번의 답변서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발령된 이상,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은 겐로쿠 다케시마 금지령의 울릉도와 독도 도해금지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사법부의 가장 무거운 처벌을 통해 유죄판결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관습법의 존재 확인행위를⁵⁸⁾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3. 근대적 입법행위로서 메이지 도해금지 유달

(1) 1877년 태정관 지령의 하달

내무성은 시마네현이 제출한 ‘다케시마 일건’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경위를 기록한 외교문서까지 검토하고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영토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 문제이므로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태정 우대신과 참의는 내무성의 품의서에 근거하여 태정관 본국이 작성한 지령안(指令案)을 검토하여 승인하였다. 지령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면의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태정관 본국이 지령안을 작성할 때 기초한 것은 내무성이 제출한 품의서와 첨부문서이다. 태정관은 내무성이 보고한 바에 따라 1692년 조선인의 입도 이래 울릉도쟁계를 통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58) 존재하는 관행에 대하여 법적 확신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가 법원(court)의 판결이다.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Fifth ed.), 1999, p.7.

막부가 확인하면 되었지만 내무성의 문건은 지령의 안(案)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태정관의 ‘지령’문으로서 문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지령을 하달하였다.

문의한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⁵⁹⁾

(2) 도해금지 유달의 근대 입법적 성격

일본의 태정관제는 여러 차례 변경과정을 거쳐 1873년의 개혁 이후 입법은 원로원과 지방관 회의가 맡고, 사법은 대심원이 담당하며, 행정은 태정관과 정원(正院)이 책임을 지고 참의가 각 성의 경을 겸임하는 중앙정부체제로 변경되었다. 당시 태정관제에서는 행정법령이 포고와 포달, 어달, 달이라는 형식으로 공포되었으며, 1877년 당시 지령은 공포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부여되는 법령의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⁶⁰⁾ 태정관제 하에서 내무성은 법령 전달을 통할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태정관이 내무성에 지령하면 그 것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에 지령의 내용을 기재하여 회신하는 형태로 지령을 내려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다.⁶¹⁾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는 국가의 법령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태정관지령의 공포 이후 이를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규범으로서 도해금지 유달(諭達)은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서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이 잦아짐에 따라 천연자원이 풍부한 울릉도가 주목받던 중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가 출자하여 무기상인 오오쿠라

59) 태정관지령문의 핵심인 지령안은 다음과 같다.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 可相心得事”

60) 유미림, 『일본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2015, 101쪽.

61) 유미림, 위의 책, 102쪽.

(大倉)재벌과 함께 울릉도에서의 벌목사업을 시작한데서 기인한다.⁶²⁾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을 알게 된 조선정부는 1882년 일본에 항의하고 울릉도에 이규원을 검찰사로 파견해 일본인들의 실태와 울릉도 개척의 가능성을 조사하고,⁶³⁾ 쇄환정책을 전환하여 1883년에 백성 54명을 울릉도로 보내 울릉도의 개척을 시작했다.⁶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조선 정부의 항의를 받은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의 상신을 받은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參條實美)는⁶⁵⁾ 상신한 내용을 승낙하고 조선 사절이 귀국한 후인 다음 해 1883년 3월 1일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에 자리잡은 일본이 일컫는 송도(일명 죽도), 조선이 일컫는 울릉도는 종전에 피아 정부 간에 의정한 바가 있다. 일본 인민이 함부로 도항하여 상륙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 지방장관이 유달할 것을 그 성(내무성)에서 시달하도록” 내무경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에게 내달하였다. 또한 태정대신은 유달을 어기는 자는 일한무역규칙 제9칙과 형법 제373조에 따라 처분하도록 사법경이 각 재판소에 내훈하도록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와⁶⁶⁾ 함께 사법경 오키 타카토(大木喬任)에게도 전달

62) 이때 인부의 수송 등에는 일본의 국기를 계양한 해군군함을 사용했다. 해군의 울릉도 침입을 계기로 야마구치현(山口縣)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침입하여 느티나무 등을 베어가는 자들이 속출했으며, 그 숫자는 약 400명에 달했다. 그들은 울릉도에 ‘일본제국 마쓰시마’라는 표목까지 세웠다. 박병섭d,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통권 35호, 2010, 199-223쪽.

63) 명을 받은 이규원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인들 6, 7명이 오두막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들과 필담을 나누었다. 그 내용은 이규원 『울릉도 검찰일기·계초본』에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메이지17년 울릉도일건록(明治十七年蔚陵島一件録)』 등에 기록됐다. 두 자료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박병섭d, 위의 글, 199-223쪽.

64) 조선의 울릉도개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송희영,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도항 금지의 건, 『독도연구』 제27호, 2019.12. 472-473쪽.

65) 도해금지유달의 입안과정에서 태정대신이 사법경 및 내무경에 내린 내달안의 원문은 송희영,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도항 금지의 건, 『독도연구』 제27호, 2019.12. 475-478쪽.

하였다.

내무성은 1883년 3월 31일 태정대신에게 받은 울릉도 도항금지문서를 입법적 근거로 각 부현장관(府縣長官)에게 『죽도판도소속고』와 함께 울릉도 도항금지훈령문을 태정관의 유달(諭達)로 공포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하였다. 울릉도 도항금지 훈령문은 표면적으로 울릉도에 대한 도항금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울릉도쟁계와 겐로쿠 도해금지령(1696)관련 당시의 외교문서와 내부분서를 광범위하고 상세히 검토한 결과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명시된 기죽도약도가 포함된 태정관지령의 후속 이행조치라는 점과 오사카평정소가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령에 기초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쓰시마번의 답변서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이 판결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공포된 덴포 도해금지령 등의 배경과 내용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독도를 포함하는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것이다.

일본정부가 태정관의 유달(諭達)을 발포하고 난 뒤 울릉도에 남아있던 일본인 전원을 귀국시키고, 도해금지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는⁶⁷⁾ 사실은 태정관의 도해금지 유달이 “종전에 피아 정부 간에 의정한 바”를 형사법적 강제력의 수단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법규범이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하는 도해금지령은 제1차 겐로

66) 죽도판도소속고는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에 위치한 일본명칭 송도(松島) 일명 죽도(竹島), 조선명칭 울릉도의 건은 이전부터 우리 정부가 의정(議定)한 바도 있다”는 내용이다. 송휘영,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도항 금지의 건, 『독도연구』 제27호, 2019.12. 478쪽.

67) 그들은 귀국 후 금령을 어기고 밀상을 한 혐의로 무역규칙 제 9칙에 따라, 수목을 벌목한 자는 형법 제 373조에 근거하여 형사재판에 기소됐다.

쿠 다케시마 도해금령, 제2차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령 뿐만 아니라 태정관지령 이후에 메이지 도해금지 유달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학자인 이케우치 사토시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령,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령, 메이지 시대 태정관지령 등의 세 가지 문서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우리나라(일본) 역대 중앙정부가 그때마다 되풀이해서 확인해 왔다”고 진술하였다.⁶⁸⁾

이들 도해금지령은 첫째, 국가행위(act of state)가 갖는 확정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확한 행정행위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질의 회신이라는 매우 정교한 절차적 확인행정을 했다. 즉, 울릉도쟁계관련 일본 막부 집정의 질문서에 대한 돗토리번의 답변서 및 하치에몬 사건을 심리하던 평정소의 질의서에 대한 쓰시마번의 답변서 그리고 1877년 내무성이 시마네현에 보낸 질의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를 근거로 내무성이 태정관의 질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질의응답 공문서로써 명확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고 시행한 귀결이었다.

둘째, 도해금지령과 관련하여 국내적으로 주고받은 공적 질의회신 행정문서 및 내달문에 공통적으로 지도를 첨부하거나 참고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인 막부의 최고기관과 지방정부인 돗토리번 간의 질의 및 답변에 부속된 다케시마 회도(竹嶋之繪圖), 덴포 도해금지령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봉행소와 쓰시마번의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쓰시마번이 첨부한 조선지도와 오사카봉행소가 작성한 하치에몬의 공술조서인 다케시마도해일건기에 부속된 다케시마방각도(竹塲方角図) 그리고 메이지 도해금지 유달의 입법근거인 태정관지령에 부속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는 일본정부가 자국의 영역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지방정

68) 池内敏b, 『竹島 - もうひとつの韓日關係史』, 2016, 183쪽. 박병섭c, ‘덴포 다케시마 일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 2018.12. 217쪽에서 재인용.

부인 시마네현과 주고받은 공식적 행정문서에 포함된 부속지도로서 행정문서의 일부를 이루어 확고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지도는 당시 지도상 국가 간의 영역을 표시하는 일반적 방법으로서 채색(彩色)을 통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고 문서의 본문과 동일하게 이들 도서가 일본의 관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ICJ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서 국가 기관간의 질의 및 회신 공식문서 그리고 지도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도서영토의 주권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⁶⁹⁾ 따라서 일본 중앙정부가 세 차례의 도해금지령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오래된 문서와 자료 그리고 지도 등을 참고하거나 첨부하였고, 이에 기초해서 중앙정부의 내무성 또한 고금의 외교문서 등을 검토하고 나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일본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여 도해금지령을 공포하였다는 사실은 현대 국제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셋째, 울릉도와 독도의 한국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쟁계에 따른 외교적 합의를 국내적으로 고시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도해금지의 부작위를 통한 관습형성의 기초를 제공한 겐로쿠 도해금지령, 하치에몬 사건에서 평정소(平定所)가 일본인의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도해를 법령위반으로 판단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여 겐로쿠 도해금지령에 따른 도해금지 부작위행위에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부여하여 조일 양국간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확인한 덴포 도해금지령, 그리고 근대적 정부체제

69) ICJ는 1999년 카시킬리/세두두 섬 관련 사건에서 “위에 언급된 다양한 행정적 그리고 외교상 문서로부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1947년 이전에는 베쉴이나랜드와 카프리비 스트립을 통치하는 세력 간에 당해 섬 지역 상 경계선에 관하여 상이점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2) 당시 지도에 따르면 경계선은 초베강의 남쪽 수로에 위치한다고 추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판시하여 행정문서와 지도의 증거력을 높게 판단하였다.

를 갖춘 이후 태정관이 행정입법으로서 지령을 통해 다케시마외 일건(독도)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도해를 금지하는 태정관 유달이라는 성문 법규범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권 정, 권오엽, 竹島渡海一件記全을 통해 본 도해와 밀무역, 『일본문화학보』77, 2018.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제25호, 2009. 9.
- 김명기, 국제법상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영토해양연구』제12권, 2016.12.
- 박병섭,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종언, 『제2회 독도국제포럼 자료집』, 2019.
- 박병섭, ‘덴포 다케시마일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 2018.12.
- 박병섭, 일본정부의 독도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논총』제62호, 2018, 299쪽.
- 박병섭,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문제, 『독도연구』제13호, 2012.
- 박병섭,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통권 35호, 2010.
- 박지영, 돛토리번 사료를 통해 본 ‘울릉도 쟁계’: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2010-2018)』, 2018, 12.
- 송휘영,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 『독도연구』제26호, 2019.
- 송휘영,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도항 금지의 건, 『독도연구』제27호, 2019.
- 유미림, 『일본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5.
- 유미림,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와 쟁점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제58호, 2017.
- 이계황,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의 울릉도·독도 도해사건, 『학림』제39집, 2017.
- 이성환 외, 『일본 태정관과 독도』, 지성인, 2016.
- 이 훈, 조선후기 대일외교창구 관련 실무문서의 수량과 수록실태, 『한일관계사연구』34호, 2009.
- 장순순, 17세기 후반 ‘울릉도쟁계’의 종결과 대마도, 『한일관계사연구』45호, 2013.
- 장순순, 17세기 조일관계와 ‘울릉도 쟁계’,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84, 2012.9.
-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9.
- 최철영, 「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 『독도연구』22호, 2017.
- 최철영·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제63권 제4호, 2018.

- 최철영, 1905년 일본정부 각의결정의 무주지선점론, 『일본의 도고영유권 주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2018.
-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독도관계일본고문서4』, 2017.
- Frontier Dispute(Burkina Faso/Republic of Mali) ICJ Reports, 1986.
- Guenther Weissberg,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 Reappraisal,” AJIL, vol. 57, 1963.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Fifth ed.), 1999.
- 나이트우 세이추우, 권오엽·권정(역), 『나이트우 세이추우의 독도논리』, 2011.
- 田保橋潔, 鬱陵島 發見과 領有, 靑丘學叢 第3号, 昭和 6年.
- 田村清三郎, 竹島問題の研究, 1955.
- 池内敏, 『竹島 - もうひとつの韓日關係史』, 2016.
- 竹島渡海禁止並渡海沿革, 鳥取藩史, 第6卷.
- 太政官 編, 1877, 『公文錄』, 內務省之部, 1877年 3月 17日條 “日本海內竹島外 一島 地籍編纂方何”,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digital.archives.go.jp>).
- 國史大辭典編纂委員會, 國史大辭典 제11권, 1990.

<Abstract>

Legal Meaning of Procedural and Structural Consistency of Genroku(元祿), Denpo(天保), Meiji(明治) Era Directives on Prohibition of Marine Passage to Ulleungdo

Choi, Cheol-Young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internet homepage shows only Japanese Genroku(元祿) Era Directive on Prohibition of Marine Passage to Ulleungdo of 1696 as an evidence to testify Korean territoriality of Dokdo. The Edo Shogunate issued a directive prohibiting all Japanese from making passage to Ulleungdo, confirming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Korean territory. However, Japanese government promulgate normative Order on Prohibition of Marine Passage to Ulleungdo including Dokdo two more times. Another two Order on Prohibition of Marine Passage are Denpo(天保) Era Directive on Prohibition of Marine Passage to Ulleungdo of 1837 after Imazuya Hachiemong incident and Meiji(明治) Dajokan Ordinance of 1883 after Dajokan Order of 1877. In 1877, Dajokan Order stated that "Regarding Takeshima(Ulleungdo) and one other island(Dokdo)... bear in mind that our country(Japan) has nothing to do with them. Meiji 10 March 29. Grand Council of State was Japan'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during the Meiji period. The Dajokan instructed the Japanese Home Ministry to bear in mind that Ulleungdo and Dokdo have no relation to Japan.

These three Prohibitions of Marine Passage to Ulleungdo and Dokdo were promulgated as normative order which were enforced in national wide range

as well as stated repeatedly the national-will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not the territory of Japan. In terms of documentary formalities, these governmental document have three commons in procedural and structural formation. First, in the process of enactment, for the exactness of contents and definite effectiveness, Japanese government asked the exactness of issues to local government Shimane Prefecture and received a written answer which was considered in the final orders. Second,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range of prohibition, those Directives are appendixd maps and, in the maps, Korean territory was shaded in red and Japanese territory in blue. Definitely, Ulleungdo and Dokdo were both shaded in red, indicating Korea Territory. Third, each of these documents had normative effectiveness in common but different normative nature such as order for the execution of diplomatic arrangement, order for the carrying out the decision of court and executive ordinance following Dajokan Order because of historical background of its promulgation.

Key words: Prohibition of Marine Passage, Ulleungdo Disputes, Hachiemong Incident, Dajokan Order, Territoriality of Dokdo

이 논문은 2020년 5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한 연구*

이 동 원**

〈목 차〉

- I. 서론
- II.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상반된 학설과 현재판결
- III.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
- IV. 결론

〈국문초록〉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형성된 것에 기인하며, 이러한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반영하지 못한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1999년 1월 22일 조약 제1477호로 발효된 협정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어업권과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인정되던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협약으로

* 이 논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을 집중 조명하는 연구로, 동 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한 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 중 박덕배, 『동북아 해양영토전 : 보이지 않는 외교전쟁의 기록』(서울:블루&노트, 2013). 은 회고록 중심으로 되어 있고, 김영구,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재정립」, 『독도영유권 연구논집(독도연구총서9)』(서울:독도연구보전협회, 2002), pp.83-124. 은 연구논문으로 되어 있다. 한정된 앞의 자료를 논문연구에 활용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회고록의 사실관계 중심으로 기술된 부분에 대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선문대 전임연구교수

써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실패한 협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동 협정이 체결된 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협정수역 내의 어업」에 관하여만 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협정수역 내의 어업 + 영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학자들간에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자를 주장하는 견해는 한국정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며, 이들은 동 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써 독도영유권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옹호견해는 동 협정이 종료(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반면 후자를 주장하는 견해는 동 협정은 어업 외에도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 협정을 종료(파기)하고 새롭게 어업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후자의 견해에 찬성하였다. 그 근거로서 1965년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공해상에서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배타적 전관어업수역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의 동등한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공동관리수역에서 단지 영해 12해리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권리를 인정할 어떠한 배타성이나 특약이 인정된 것이 없으므로, 독도영유권이 훼손된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과 관련하여, 김영삼정부 하에서는 한국에 불리한 어업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분리협상, 잠정수역 수용, 독도에 대해서는 전관수역을 불인정하고, 영해 12해리만 갖는 현상유지를 수용하였으며, 공동관리수역 내에 독도를 위치케 하여 한일 양국의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는 안을 사실상 합의하고, 김대중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합의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해 김영삼정부 또는 김대중정부 중 어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소재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영삼정부에서 기본적 사항이 사실상 합의된 후 김대중정부에서 재확인된 후 법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체결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주제어: 독도영유권, 신한일어업협정, 공동관리수역, 특정수역, 전관수역, 전관어업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독도상공비행, 영공침공, 이격거리, 러시아비행궤적

I. 서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¹⁾(이하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함)은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하고, 1965년 12월 18일 발효

1) 외교부, 「양자조약」, 『외교정책』, http://www.mofa.go.kr/www/wpge/m_3834/contents.do, 최종검색 2019.10.10.

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66호)을 전면개정
 한 것으로, 새롭게 제정한 협정(agreement)이 아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
 정한 협정은 아닐지라도 전면개정하여 사실상 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구한일어업협정」에 대응하여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불리 우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신한일어업협정 제17조는 “1965년 6월 22
 일 도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면개정으
 로 구한일어업협정의 일부 승계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신한일어업
 협정 제17조에서 효력상실 규정을 두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98
 년 11월 23일 제54회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
 에서 서명하고, 1999년 1월 6일 제197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 1999년
 1월 22일 조약 제1477호로 발효되었으며, 관보에는 1999년 1월 27일 게
 재되었다. 구한일어업협정이 전면개정됨으로 인하여 구한일어업협정의
 효력상실과 함께 부속협정들도 폐기되었다. 예컨대 1965년 12월 18일 체
 결된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조약 제170호), 1966년 10월 18일 체
 결된 「1965년 6월 22일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을 실시하기 위한 약정」(조약 제224호), 1965년 12월
 18일 체결된 「제주도 양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공문」(조약
 제169호), 1965년 12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
 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조약 제167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영문
 본이 없으며,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여 두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제16조제1항에서 비준과 비준서 교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22일 서울에서 비준서 교환
 으로 발효되었다. 여기서의 신한일어업협정은 전문 및 본문 17개조, 부
 속서 I 및 부속서 II, 합의의사록, 양측 외교장관 서한 등 부속문서로 구
 성되어 있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6조제2항은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

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2019년 현재에도 신한일어업협정은 효력이 계속발생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보(파기통보) 한 적이 없으므로 현재도 그 효력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한일간 「협정수역 내의 어업」에 관하여만 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협정수역 내의 어업 + 영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파생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협정수역은 동 협정 제1조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동 협정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어업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의견 다름이 있다. 한국정부²⁾와 헌법재판소 판결³⁾, 국내의 옹호설⁴⁾은 신한일어업

2) 한국외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미결된 상태에서 우선 잠정적인 어업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문제와는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협정은 영해 이원의 배타적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도가 동해 중간수역안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도와 그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므로 그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외교부,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 99헌마139, 142, 156, 160 중합).”

3) 헌법재판소, 2001.3.21. 99헌마139·142·156·160 (병합) 전원재판부.

4) 박춘호,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서울:우리영토, 2006), pp.151-62; 박춘호, 상계서, 「명백한 우리 독도 성숙한 대응을」, pp.163-164; 강병근 외40인,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서울:우리영토, 2006), pp.169-171; 이창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법정정책적 고찰」,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서울:우리영토, 2006), pp.173-186; 이창위, 상계서, 「한일 어업협정 폐기후 재협상 반대 현실적 이득없

협정 체결로 어업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신한일어업협정의 제목 및 전문, 제15조의 명시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판설⁵⁾은 이 협정의 체결로 어업에 관한 한정된 범위를 넘어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와 새 조약의 체결을 주장한다. 그밖에 양자의 의견을 절충설⁶⁾ 하는 견해가 있다. 현재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효력발생이 어업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영유권을 포함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바로 동 협정상 협정수역 내에는 독도가 위치하기 때문이며, 어떤 경우에도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철저한 검토를 요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의 효력발생과 관련해서는 옹호설과 비판설 모두에서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대안제시에 관한 연구논문도 많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해서는 연구논문⁷⁾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일부 체결과정을 알 수 있는 참고자료⁸⁾가 존재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

고 분쟁만 초해」, pp.187-188; 이창위, 상계서, 「냉정하게 일본을 바라보자」, pp.189-191.

- 5)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서울:우리영토, 2007), pp.1-234; 김명기,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이에 대한 국제법상 대책방안 모색」, 『바른 한일어업협정안』(서울:우리영토, 2007), pp.11-29; 이장희, 「한일어업협정 폐기안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방향」, 『바른 한일어업협정안』(서울:우리영토, 2007), pp.31-41; 제성호,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서울:우리영토, 2007), pp.9-33; 김영구,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재정립」, 『독도영유권 연구논집(독도연구총서9)』(서울:독도연구보전협회, 2002), pp.83-124.
- 6) 김선표, 「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에 관한 세미나』2002.1.28, p.46.
- 7) 박덕배, 『동북아 해양영토전 : 보이지 않는 외교전쟁의 기록』(서울:블루&노트, 2013); 김영구,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재정립」, 『독도영유권 연구논집(독도연구총서9)』(서울:독도연구보전협회, 2002), pp.83-124.
- 8) 김동조, 『냉전시대의 우리 외교』(서울:문화일보, 2000); 옥영수 외2, 「신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어업대책」(정책자료 98-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12 ; 조갑제, 「내무덤에 침을 뱉아라」, 《조선일보》 1999년 11월 8일자; 《부

결과정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김영삼정부에서 시작했으나 김대중정부에서 종결된 협정(agreement)이라는 점이며, 둘째 양 정부에 대한 인물의 성격만큼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해석을 함으로써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때 보라도 동 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합리적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의 체결과정을 폭넓고 깊이 있게 해설하고 있는 연구는 사실상 회수되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먼저 옹호설과 비판설의 대표적 견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체결 배경과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체결과정에 대해 가능하면 실증기록을 중심으로 객관성·합리성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체결과정에서는 제시안이나 또는 합의를 기초로 그 법적 의미나 효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II.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상반된 학설과 헌재판결

1. 상반된 대표적 학설⁹⁾

1) 옹호설

(1) 옹호견해¹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에 깊이 관여한 인물의 견해는 동 협정 제15조의

산일보》1997년 10월 11일자.

9)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연구자 임의로 옹호설 및 비판설로 개념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주장에 대한 견해가 다수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 몇몇 견해만 게재한다.

명시적 규정과 같이 어업만을 위한 협정이라고 다음과 같이 옹호설을 주장한다.

『 20. ... 양국은 1999년에 우선 어업만을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였다.

...

21. 이 중간수역에 안에 독도가 들어 있다는 사실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이 점을 오해하여 독도영유권 문제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협정 제1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협정은 어업 이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고, 나아가서 2001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 역시 이 점을 분명히 판시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다. ...

22.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의 신 어업협정은 독도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¹⁰⁾

『새 한일어업협정에 독도가 소위 중간수역에 들어있으니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두고 타협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그 협정 제15조를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합의를 앞두고 어업만을 위한 잠정조치에 불과한 것이다.』¹¹⁾

(2) 옹호견해2

국제법학자 41인¹²⁾은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10) 박춘호,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서울:우리영토, 2006), pp.155-56.

11) 박춘호, 「명백한 우리 독도 성숙한 대응을」,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서울:우리영토, 2006), pp.163-164, 《동아일보》 2004년 1월 12일자 재인용.

12) 국제법학자 41인은 다음과 같다(독도본부,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서울:우리영토, 2006), pp.169-171). : 『강병근, 권문상, 김대순, 김대원, 김득주, 김병렬, 김부찬, 김석현, 김성순, 김찬규, 김채형, 노계현, 박기

견해”(2005.4.5)를 통해 동 협정에 의해 독도 영유권이 훼손된 바 없다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독도문제가 불거진 후 뜻밖에도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따라서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생략.

2. 우리는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 영유권이 훼손된 바가 전무함을 확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은 영토문제가 아닌 어업문제만을 다루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나.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포함한 그 밖의 국제법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님은 협정 제15조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협정상 중간수역이란 말은 없으며 설명의 편의상 이 용어를 쓴다 해도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도와 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 중간수역이다.

라. 생략

3. 우리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어떠한 이유로도 폐기되어서는 안됨을 확신한다. …』

(3) 옹호견해3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적극 옹호견해는 동 협정의 중간수역은 어업 문제 만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라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독도를 포함하는 동해 중간수역은 양국이 경제수역의 경제획정을 확보하고 어업문제 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한 특정수역이라고 할 수

갑, 박노형, 박배근, 박지현, 박찬호, 박현진, 백봉흠, 백충현, 성재호, 여영무, 오병선, 이석용, 이석우, 이영준, 이용희, 이원갑, 이재형, 이준범, 이창위, 장신, 정갑용, 정경수, 정일영, 최영택, 최은범, 최재훈, 최종화, 한상희, 한형건』

있다.』¹³⁾

2) 비판설

(1) 비판견해1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권리가 한국과 동등해졌다고 주장한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 이 조항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국제협정의 틀 내에서 공인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등가의 가치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¹⁴⁾

(2) 비판견해2

어업권과 영유권 문제는 불가분리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국제법상 어업권은 영토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업권과 영유권문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가 없다.』¹⁵⁾

(3) 비판견해3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배제하여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도를 내포하는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13) 이창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서울:우리영토, 2006), p.184.

14) 제성호,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서울:우리영토, 2006), p.15.

15) 이장희,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도지배를 훼손했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서울:우리영토, 2006), p.38.

을 배제한 것(부속서I 제2항)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배제한 것으로 이는 어업문제가 아닌 영토문제를 다룬 것이다.』¹⁶⁾

(4) 비판견해4

일본에게 강력한 주권적 반론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합의된 잠정조치 수역 안에 독도와 같이 영토분쟁이 있는 육지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이 제한되는 사례의 축적은 영유권의 귀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의 영유권에 도전하는 당사국, 즉 일본에게 강력한 주권적 반론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구역의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이 제한된 사례의 법적 효과는 치유되지 않는다.』¹⁷⁾

(5) 비판견해5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간접적으로 부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 협정상 “독도와 그 영해”가 대한민국의 소위 “배타적 경제수역(=협정수역)”에서 탈락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간접적으로 부인되고 있다. 왜야하면, 전술한 바 있지만, 동 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영해”는 그 존재자체가 몇 조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⁸⁾

16) 김명기,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서울:우리영토, 2007), p.19.

17) 김영구,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재정립」, 『독도영유권 연구논집』 독도연구총서9, (서울:독도연구보존협회, 2002), p.116.

18) 나홍주,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했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서울:우리영토, 2006), p.56.

2. 현재판결

헌법재판소는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옹호설의 입장이다.

『해양법협약』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영해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5-57조 참조), 이에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국내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 제1항 및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¹⁹⁾

3. 검토

위의 견해 중 옹호설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비판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독도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65년어업협정’이라 함) 제1조제1항 “양 체결국은 ...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인정한다. 단, 일방 체결국 ...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은 타방 체결국과

19) 현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판례집』13-1, 676 [각하].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독도는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전관어업수역이 인정된 상태에서²⁰⁾, 제2조 공동규제수역 내에 있었다. 이 시기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발효²¹⁾되기 전이며, 한일에 대해서도 발효되기 이전이다. 따라서 독도는 공동규제수역에 있었으나 ‘65년어업협정’ 전문의 규정과 같이 공해 내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섬으로써 일본에게 해양법상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없었다. 특히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에서 독도에 대해 어떤 규정도 명시하지 못함으로써 침묵에 의한 묵인하는 법적 효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한국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었다. 다만, 일본이 독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고 있었으나 단지 권리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 즉, 양자조약이나 국제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없으므로, 판결을 통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는 권리에 불과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었고, 1996년 한일에 대해서도 발효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독도는 한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수역에 위치하며, 동 협약 제56조제1항(a)²²⁾에 근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는 연안국인 한일의 주권적

20)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 하에서는 울릉도 역시 독도와 동일하게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전관어업수역을 갖고 있음으로써 독도는 울릉도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 합의사항』, 대한민국정부, 1965, p.58). 하지만 신한일어업협정 체제 하에서는 울릉도는 12해리 영해와 35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갖고 있으나 독도는 12해리 영해만 갖고 있어서 울릉도와 구별되는 법적 지위에 있다.

21) 「유엔해양법협약」은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었고, 한국은 1996년 2월 28일, 일본은 1996년 6월 20일 각각 발효되었다.

22)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제1항(a)는 다음과 같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has : (a)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nd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s, whether living or

권리(sovvereign rights)가 동등하게 인정된다. 한일 양국의 동등한 권리가 미치는 중첩수역 내에 위치한 섬의 경우에 한국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해 경계확정을 하여 한국측 영역에 넣거나 독도의 법적 지위를 특별하게 한국측에 인정하는 양자조약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에 인정하는 또는 우월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특약은 없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일의 주권적 권리가 동등하게 미치는 수역에 공동관리수역(협정수역)을 정하고, 그 협정수역 내에 독도가 위치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현재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점유라고 권리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첫째 독도에 대해 한일은 국제법상 법적으로 동등한 주권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점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전에 없던 창설적 권리가 발생한 것이며, 둘째 독도에 대한 한국의 우월적 지위는 없어졌다. 셋째 일본의 권리주장은 단지 판결을 통해 획득하는 그런 단순한 권리주장이 아니라 해양법협약에 근거한 법적인 권리, 즉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넷째 한국이 그런 권리를 스스로 인정해 준 것이고, 다섯째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나 일본이 한국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본측에서 볼 때 일본의 섬을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독도의 12해리 영해 인정은 다케시마의 12해리 영해를 인정한 것이 된다.

non-living, of the 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with regard to other activities for the economic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the zone, such as the production of energy from the water, currents and winds).」

III.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

1.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²³⁾

- 1)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해양의주권에대한대통령의 선언」(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²⁴⁾ 여기서의 평화선에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속함을 선언하고,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 2)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국 연안 12해리를 어업전관수역으로 하고 이 수역안에서는 연안국이 전속적 어업활동 수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 수역에서는 공해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보장하였다.²⁵⁾ 다만 한반도 주변수역의 일정범위를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하여, 거기에서는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서만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을 가지기로 하였다.
- 3) 1994년 11월 16일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었고, 동 협약 제57조²⁶⁾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인정되어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세계해양법질서가 형성되게 되었다.²⁷⁾ 이에 따라 한일어업수역도 새로운

23)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은 헌법재판소 판결 「2001. 3. 21. 99 헌마 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다.

24) 일본은 1952년 1월 28일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일방적인 해양주권의 선언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다.

25) 65년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 체결국이 타방 체결국에 동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1년간 효력을 존속하기로 되어 있었다(동 협정 제10조 제2항).

26)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not extend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협정체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일본은 한국에 65년협정의 개편을 공식요청하였고, 이에 1996년 5월 1차 어업실무자회담을 시작으로 65년협정의 개정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개시되었다.

- 4) 1996년 6월에는 한·일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비준 하였고,²⁸⁾ 동 협약은 한일 당사국을 모두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 5) 한국은 1997년 10월 제9차 실무자회의에서 결정적으로 일본측이 주장하는 잠정적 합의수역 설치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은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협정체결을 미루다가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종전 65년협정의 파기를 한국에 통고하였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999년 1월 22일에는 동

-
- 27)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에 따라 한국도 국내법을 국제법에 일치시키기 위해 1995년 12월에 종전의 「영해법」을 「영해및접속수역법」으로 개정하여 12해리 영해 외측에 접속수역을 설정하고, 기선으로부터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접속수역의 범위로 하였다. 일본도 1996년 6월에 종전의 「영해법」을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2해리 영해 외측에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설정하였다. 그 외에도 영해를 종전의 “저조시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통상기선)로 하도록 되었던 것을 “곶이나 섬의 선단부를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12해리”(=직선기선)로 개정하여, 종전의 이른바 ‘통상기선’으로부터 이른바 ‘직선기선’을 채용하였다.
 - 28)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과 「배타적경제수역에있어서의 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관한법률」(각각 1996. 6. 14. 제정, 동년 7. 20. 시행) 을,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법」(1996. 8. 8 제정, 동년 9. 10 시행)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1996. 8. 8 제정, 1997. 8. 7 시행) 을 각 제정·공포하였다.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제1항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하며, 제2항 대항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본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규정하고 다만 대항하는 국가간의 경계는 중간선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양국이 합의한 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하였다(「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

협정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 6) 한일 양국은 1998년 4월부터 다시 어업실무자회담을 재개하여 1998년 9월까지 7차례의 어업실무자회담을 거듭한 끝에 동년 10월초 최종적인 협정문안이 채택되고, 1998년 11월 28일에는 일본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으로 한일 양국간에 서명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후 1999년 1월 22일에 조약 제1477호로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김영삼정부의 협상 ‘체결과정’²⁹⁾

1) 전기 : 1994년부터 1996년까지 - 협의의 시작단계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 베이에서 서명과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UNCLOS)³⁰⁾ 체제(regime)의 수용 및 편승은 이미 한일 양국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일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국의 법령정비를 거쳐 영해 및 EEZ 확보와 차선책으로써 어업권 확보를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수립된 상태에서 협상에 임했다.

29)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은 양국 정상 간의 협의와 수석대표, 실무진, 국회의원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하여 협상함으로써 실제 차수를 두는 것이 어렵고, 실제 기록도 수석대표간 회의를 의미하는지 실무진 협의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여러 기록을 통하여 이를 구별하기 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30)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lso called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or the Law of the Sea treaty, is the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resulted from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II), which took place between 1973 and 1982(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Convention_on_the_Law_of_the_Sea). Done at Montego Bay, Jamaica, December 10, 1982. Entered into force, November 10, 1994. Entered into force for the Republic of Korea, February 28, 1996.

1996년 2월 10일경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郎) 총리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baselines)을 독도로부터 200해리(nm)로 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당시 격분한 김영삼대통령이 반발하여, “소위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는 발언³¹⁾을 하게 된다.³²⁾ 이 발언은 김영삼정부의 제1차 대일 강경정책이며, 김영삼정부의 제2차 대일강경정책은 1997년 12월 최종타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본이 조기타결을 주장하자 한국정부가 전속관할수역의 범위를 34해리 및 잠정합의수역의 동측한계 136°를 고집하여 일본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 때이고, 제3차 대일강경정책은 1998년 1월 24일 있었다.³³⁾

1996년 초 한국의 기본입장은 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은 동시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었고, 일관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이 그대로 1996년 5월부터 시작된 한일 회담의 기본입장으로 전달되어 재확인된 것으로

31) 《조선일보》 1996년 2월 11일자;김영구,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재정립」, 『독도영유권 연구논집』독도연구총서9, (서울:독도연구보전협회, 2002), p.99.

32)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은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는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일본) 총무청 장관의 1995년 11월 발언에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강경하게 응수했고, 일본의 반발을 불렀다. 《국민일보》 2015년 11월 22일, <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010090577&code=61111111&cp=du>.

33) 김영삼정부의 대일강경정책은 3차에 걸쳐 행해졌으며 다음과 같다. 제1차 강경정책은 1996년 4월 11일 총선을 의식하여 한국민의 반일감정을 읽은 국민 여론에 편승한 발언(속칭 “사이다발언”)이고, 제2차 강경정책은 1997년 12월 일본의 조기타결 압박에 대해 동측한계선의 동경 136° 고수이다. “금융위기 사태로 국민의 신망을 상실해가고 있었던 당시(1997.12.)에 또 하나의 정치적 악재가 될 수 있는 ... 한일어업협정의 최종 타결을 차기정부로 미루어 보자는 속셈이었다”고 추정된다. 제3차 대일강경정책은 1998년 1월 24일 일본의 구어업협정 파기통보로 격앙해진 김영삼정부는 주변수역, 특히 대화퇴어장에 대한 ‘어업자유규제조치’를 해제시켰다. 이로써 한국 어부들이 일본측 수역에서 극한적 어로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일본 어부들과 물리적 마찰, 대치, 충돌이 예견되었고, 한국측의 감정적 보복조치가 분명했다(김영구,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재정립」, 『독도영유권 연구논집』 독도연구총서9, (서울:독도연구보전협회, 2002), pp.99-101, 103-105, 107).

볼 수 있다.

1996년 3월 2일부터 개최된 아셈(ASEM) 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을 만난 일본의 하시모토 수상은 “신 해양법협약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독도영유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였다.³⁴⁾” 그러나 이 때 양 정상은 조속히 EEZ 경계획정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고, 4월에는 양국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어업회담과 경계획정을 병행하기로 합의하였다.³⁵⁾

1996년 5월 9일~10일 동경에서³⁶⁾ 1차 회의³⁷⁾부터 신한일어업협정에 임하는 전략은 한일이 각기 달랐다. 처음 한국측 의도는 1965년 어업협정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을 병행하는 것이 목표이고, 일본의 의도는 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을 분리하여 어업협정을 먼저 타결하는 것이 목표였다.³⁸⁾ 왜 한국은 양자의 병행회담을 주장하고 일본은 분리회담을 주장했는가? 분리입장은 어업협정을 EEZ 경계획정과 분리하여 회담할 경우 경계획정은 영토문제로써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데 반해 어업협정은 비교적 쉽게 타결 가능성이 높고, 어업협정에서는 잠정수역을 설치하여 문제가 되는 섬에 대한 지위를 배제함으로써 어업에 충실한 협정임을 내세워 자국민들의 감정을 무마시킬 수

34) 김영구, 위의 논문, p.101.

35) 박덕배, 『동북아 해양영토전:보이지 않는 외교전쟁의 기록』(서울:블루&노트, 2013), p.45.

36)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37) 1996년 5월 제1차 회의 때부터 한일 양측은 경계획정을 위한 회의와 어업협정의 개정 교섭을 병행하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은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잠정적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교섭에 합의하였다. 사실상 경계획정은 체결되기 어려우므로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쉽게 타결할 수 있는 어업협정을 잠정협정형식으로 먼저 체결하여 합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특히 한국은 잠정협정형식으로 체결되는 어업협정이 한 번 체결되면 반영구적이어서 독도영유권을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예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8) 박덕배, 앞의 책, p.32.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병행입장은 어업협정이라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섬이 포함되는 반영구적 영토협정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자극하여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1996년 5월 1차 회의, 1996년 8월 2차 회의, 1996년 11월 3차 회의, 1997년 3월 회의,³⁹⁾ 1997년 4월부터 6월 회의까지 한국은 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 병행을 주장한다.

1996년 6월 23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과 다시 만난 하시모토 총리는 같은 말로 압박을 가하고, 김영삼대통령이 “영유권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의 문제로 하여 해결하자”라고 일본이 원하는 대답을 하였다.⁴⁰⁾ 영유권문제와 어업협정을 분리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체제 하에서는 독도영유권이 훼손되는 분명하다. 양자의 분리 협상과 최종 타결에서 독도영유권이 훼손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 부분에 대해 “김동조 전 주일대사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의 발언에 김영삼 한국 대통령이 말려들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김대통령과 한국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연한 자세... 운운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고하고 있다.⁴¹⁾”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측 협상실무진은 1997년 8월 이전까지 양자의 병행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8월 8일~9일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열리고, 1996년 11월 7일~

39) 1997년 3월 6일 회의에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측이 분리 협상하였다 는 주장은 오류로 지적된다. 이후에도 1997년 8월 이전까지는 실무진에서 병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구, 앞의 논문, p.102). 오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의 양보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영유권 문제를 전제로 하는)와 어업문제를 분리 협상 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40) 김영구, 앞의 논문, p.102.

41) 김동조, 『냉전시대의 우리 외교』(서울:문화일보, 2000), p.202;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아라」, 《조선일보》 1999년 11월 8일자;김영구, 위의 논문, p.102.

8일 동경의 3차 회의⁴²⁾에서 한국 측은 병행 추진원칙 고수와 일본 측에 협정수역의 구체적 제시를 요구하였다.⁴³⁾ 일본은 1996년 11월부터 시작하여 1997년 내내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1965년 어업협정 종료를 통보하겠다는 뜻을 시사하였다.⁴⁴⁾ 따라서 한국에서 1997년 12월 금융위기(IMF구제금융)는 1965년 어업협정 종료에 대한 결정적 동기를 마련해 준 것일 뿐 금융위기(IMF구제금융)가 발생하여 갑자기 돌변함으로써 일본이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후기 : 1997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 협의사실상 마무리 단계

1997년 1월 일본 벳뿌에서 개최된 한일정상 및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전년도 김영삼대통령이 제주 정상회담에서 발언(1996.6.23.)한 양보를 통해 얻어진 한일간 경색된 분위기의 개선에 대한 기본합의가 있었다.⁴⁵⁾

1997년 3월 6일~7일 서울에서⁴⁶⁾ 일본 측은 1996년 5월 이후 계속하여 회담대표를 맡고 있는 오시마 겐조 대표가 전년 11월 한국이 요구한 구체적인 협정수역 제시에 대응하여 협정수역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에도 유사한 잠정수역안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자, 한국 측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훼손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였다.⁴⁷⁾한

42)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43) 1996년 11월 제3차 회의에서 일본은 국내법인 EEZ법 적용 및 구 협정 종료에 관한 일방조치를 주장하고, 한국 측은 경제회정 및 어업협정 병행을 주장하면서 일본측에 구체적 협정수역 제시를 요구하였다(박덕배, 앞의 책, pp.21-22).

44) 박덕배, 위의 책, pp.21, 32.

45) 김영구, 앞의 논문, p.102.

46)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47) 이 때 “한국 측은 수석대표를 이원형에서 신정승 심의관으로, 교체수석은 박규석에서 박재영으로 전면 교체”하였고, 일본은 “남북대륙붕 1-6점 북부대륙붕 경계 1-35좌표, 양국 본토로부터 80해리 폭, 북위 38도 37분 동경 134도로 둘러싸인 수역을 잠정수역으로 하는 협정수역안을 제의”하였다(박덕배, 앞의 책, p.22).

국은 계속해서 1997년 4월~6월 회의에서도 양자 병행회담을 주장하고, 일본은 압박카드로 통상기선을 직선기선으로 변경하여 한국어선을 나포한다.⁴⁸⁾ 결국 한국은 일본측의 요구대로 양자 분리회담을 수용하게 된다. 1997년 4월 30일~5월 1일 동경에서 2차 회의 및 6월 13일 서울에서 3차 회의⁴⁹⁾가 있었으며, 1997년 8월 13일~14일 동경의 4차 회의에서 한국측은 EEZ 경계획정과 어업문제를 분리하자는 양국 정상간의 합의(1996.6.23.)에 따르기로 하고, “울릉도와 오키군도의 중간선을 잠정경계선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⁵⁰⁾”한다. 한국측의 울릉도기점 제시는 신한일어업협정이 1998년 최종 타결 때까지도 유지했으며, 2006년 4월 한국정부가 이를 철회하고 독도기점으로 선포할 때까지 사용되었다.⁵¹⁾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를 영토기점으로 삼

48) 1997년 4월~6월 일본 측은 경계획정 이전까지는 잠정적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어업협정 조기타결을 압박하였으나 한국 측은 경계획정 후 어업수역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잠정적 조치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강경 입장으로 선화하였다. 한국 측은 실무협상단은 이때까지는 병행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통상기선에서 직선기선으로 변경하여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한국어선을 나포하면서 한일 협상은 급랭, 중단되었으나, 일본이 7월 1일 피납선원을 석방하고, 7월 8일 어선나포를 방지하는 협상을 하면서 재개되었다.

49)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50) 박덕배, 위의 책, p.22.

51) 신용하 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독도 기점을 택하지 않고 울릉도 기점을 선언했지만 합의는 안 해줬다’며, ‘그러나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에 울릉도 기점에 의거한 어업협정을 합의해 줘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자로 주장하면서 독도 이름을 지우고 다케시마 이름을 올리는 등 맹렬한 활동을 했고, 우리는 침묵외교를 강요당했다’고 지적”한다. 신 교수의 지적 사항 중 “울릉도 기점을 선언했지만 합의는 안 해줬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선을 잠정경계선으로 제의했으나 일본은 한국측의 잠정경계선이 독도 동쪽(일본쪽)에 획정됨으로 독도가 한국측에 속하여 한국에 유리하다고 거부하여 결렬된 것이지 김영삼정부가 합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 교수의 해석은 다소 틀린 부분이 있다(신용하, 「독도 기점 포기한 사람들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 《조선일보》 2008년 7월 22일자 15:12,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2/2008072201146.html).

은 것은 당연하다.

〈그림 1〉 울릉도 기점과 독도 기점의 차이



※ 출처 : 《조선일보》 2006년 6월 6일자 A4 자료.

한국측의 제의에 대해 아부나카 미토지로 일본 측 수석대표는 한국 측의 울릉도 오키군도 중간선으로 잠정경계선을 할 경우 독도 동측(일본쪽)에 경계선이 설정되어 독도가 한국 측 경계 내에 위치하여 양국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용불가 하다고 주장하고, 독도 영해 12해리의 ‘현상 유지’를 제의한다. 이때 제시된 일본측 제안에서 독도가 영해 12해리만 갖는 것으로 하는 ‘현상 유지’는 최종 협상타결 때까지 그대로 변동없이 진행하게 된다. 즉, 이후 회담에서 한일 양측은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함으로써 독도에 대해 더 이상의 진전된 협상은 할 수 없었다. 어느 일방 제약국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타방 제약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현상유지’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에서는 독도가 공해수역에 위치하여 일본의 권리주장만 있었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1997년 협상 당시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EEZ 중첩수역에서 일본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국제법의 발달로 법적 환경이 바뀐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합의가 ‘현상 유지’ 합의이다. 즉, 해양법의 발달로 독도 주변수역의 법적 환경이 바뀌었는데, 여기서의 ‘현상 유지’는 1965년 머물러 있다. 둘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영토 주장과 일본영토 주장,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즉, 영토분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로 있어서도 김영삼정부는 1997년 말경 회담에서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분쟁을 전제로 일단 한국의 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영유권 귀속은 불명이며,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는 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불법점유를 부정하고 있다. 넷째,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지 명확하게 결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이 점유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독도가 일본의 섬으로 판명될 경우 한국의 세금으로 일본섬을 관리해 준 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비약이 가능하다. 다섯째, 한일 양국은 독도영유권 귀속에 영향을 주는 상대국에 의한 어떠한 제안 및 결정은 수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는 a) 한국측 주장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는 ‘모자’(母子)의 섬,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도는 울릉도에서 분리된 독립된 섬이며, b) 신한일어업협정이 최종 타결된 것과 같이 울릉도 전관어업수역 35해리+독도 영해 12해리 일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섬의 전관수역이나 영해가 커질 경우 두 섬의 거리가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 87.4km보다 커져 양섬이 분리되지 않고 붙게 됨으로써 한국측이 유리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영해 12해리는 유엔해

양법협약 제121조상 암석(rocks) 그 자체의 법적 효과로써, (돌)섬의 법적 지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일 뿐이다. 즉, 독도가 되었든 다케시마가 되었든 관계없이 암석(rocks)에 부여된 통상적 효과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각각 자국에 유리한 해석, 주장이 가능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가 12해리 영해를 가진 것이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케시마가 12해리 영해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가능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독도가 현상유지를 통해 영해 12해리를 갖는 것이 전제된다면 영토로부터 설정되는 전관어업수역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즉, 울릉도에서 독도간 거리가 87.4km이고, 독도에 인정되는 12해리(22.224km)를 빼면 다음과 같다.

$$「87.4\text{km} - 12\text{해리}(22.224\text{km}) = 35.192\text{해리}(65.176\text{km})」$$

따라서 울릉도에 전관어업수역을 설치할 경우 최대 폭은 35.192해리(nm)이다. 울릉도에 설정될 전관어업수역의 폭이 최대 35.192해리(nm)라는 사실은 한일 양측이 모두 잘 알고 있었으며, 답을 알고 시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이 전관어업수역으로 35해리(nm)를 주장하고, 한국이 34해리(nm)를 주장한 사실에서 일본은 이미 정답을 정해두고 시작하여 최종 협상타결에서도 35해리(nm)로 합의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해 김대중정부에서 1998년 9월 15일 사토 고오코 일본 의원과 김선길 장관의 신라호텔 회의에서 한 주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울릉도로부터 35해리 어업관할권과 독도의 12해리 영해의 폭을 생각해보면 중복(중첩)되지 않으므로 일본 주장인 35해리가 범위라고 생각한다.』⁵²⁾

52) 박덕배, 위의 책, p.47.

일본의 의도가 몇 단계나 앞서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화퇴어장에 협상을 집중하느라 독도는 협상에서 무시할 정도로 등한시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독도를 생각했다면 34해리가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되지 않도록 35해리가 넘는 울릉도 전관수역을 주장했어야 하고,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구어업협정 상태의 유지, 즉 ‘현상유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유엔해양법협약」체제 하에서의 법적 지위의 변동을 특약으로 요구했어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 협상체결 과정에서 한일, 특히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너무 편안한 협상을 한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처음부터 답이 정해지고, 누구도 그 선을 넘어서는 주장을 하거나 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7년 8월 13일~14일 동경에서 4차 회의가 있었고,⁵³⁾ 1997년 9월 10일~11일 서울의 5차 회의에서 한국측은 울릉도와 오키군도 중간선을 제시하고, 일본측은 구어업협정상의 공동규제선을 잠정수역으로 설정하고, 중간에 특정수역(독도와 영해 12해리)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 “경제수역 외측의 특정수역에서 상호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는 공해존치수역 방안을 제의⁵⁴⁾”한다. 이 방식이 일중간 합의한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첫째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관할권 행사의 유보수역 설치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영역을 어업수역이라는 명칭만 바꾸어 일본이 동등하게 관할권을 유보하는 수역으로 설정해 줄 것을 제안한 것이며, 둘째 공해존치수역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1997년 당시는 이미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독도는 양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써 공해수역이 될 수 없는 수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53)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54) 한국측 교체수석은 박재영에서 안국전 국제협력관으로 교체되었고, 일본측은 자신들의 제안한 방식이 일중간 합의한 잠정수역 방식임을 설명하였다(박덕배, 앞의 책, pp.22, 45).

공해수역으로 하자는 말의 저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전의 구어업협정 상태에서의 공동규제수역 정도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석해 본다.

1997년 10월 8일~11일 동경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이 제안한 독도를 포함하여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는 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⁵⁵⁾ 일본의 잠정조치수역 안에 대해 한국은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한국은 잠정경계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울릉도와 오키군도 중간선으로 독도의 동쪽에 중간선이 획정된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한국에 포함된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구어업협정상 공동규제수역선을 잠정수역으로 하고, 독도수역을 특별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영토로부터 24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⁵⁶⁾ 이 경우 ‘24해리 경제수역’은 아마 전관수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⁵⁷⁾ 여기서 영토로부터 24해리 폭의 확대는 이후 한국측 34해리와 일본측 35해리로 변경되어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얼마든지 확대의 폭에 대한 수용이 가능한 선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중요한 사항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제안한 ‘현상 유지’ 의사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 독도수역이 이미 공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측을 현혹하게 하기 위해 ‘현상유지’ 의사를 제안하고 있다.

1997년 11월 26일~29일 7차 실무자회의 및 수석대표 회의에서 동측

55) 《부산일보》 1997년 10월 11일자; 김영구, 앞의 논문, p.102.

56) 한일이 독도 수역을 특별수역으로 설정하는 의도는 구어업협정 상태의 독도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는 한국에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57) 이 때 일본은 한국이 제안한 영토로부터 24해리 폭의 확대와 독도의 지위에 관한 ‘현상 유지’ 의사를 다시 제안함으로써 일본은 화답하였고, 그밖에도 한국측은 6차 회의에서 “잠정수역의 폭을 영토로부터 24해리, 동쪽한계선은 동경 136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일본측은 “동경 135도까지 수용을 시사한다(박덕배, 앞의 책, pp.23, 46).”

한계선을 제외하고는 의견접근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⁵⁸⁾

- i) 전속관할수역의 폭에 대하여 한국은 모든 연안으로부터 당초 24해리 주장에서 34해리로 의견접근이 이뤄졌고, 일본은 모든 연안으로부터 당초 80해리 주장에서 35해리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 ii) 「독도 = ‘현상유지’」로, 12해리 영해만 설정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따라서,

한국기준 : 34해리+12 = 46해리(85.192km)

일본기준 : 35해리+12 = 47해리(87.044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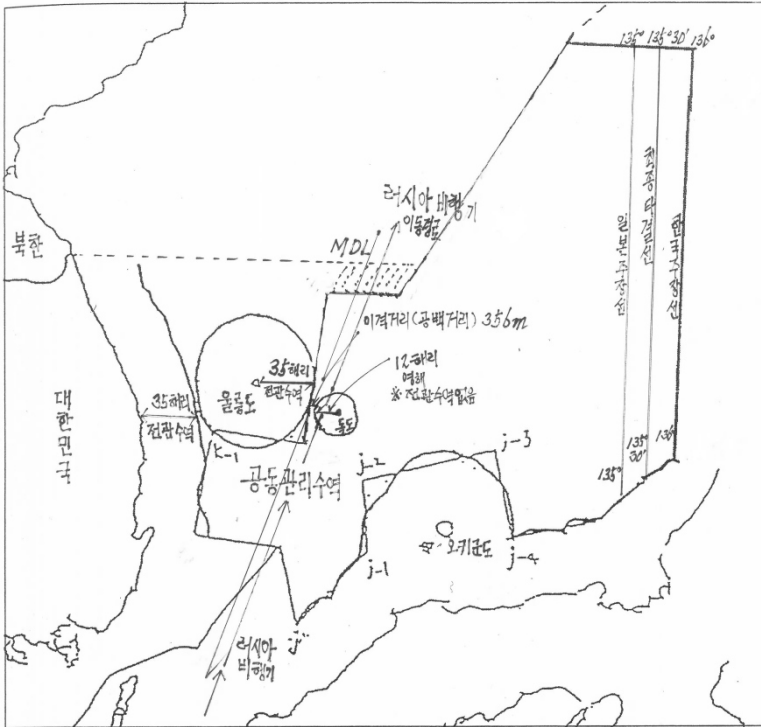
가 된다. 이후 독도는 한일의 수석대표간 회의에서 「연안(울릉도)에서 35해리+독도 12해리」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이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표 1》과 같은 이격거리가 발생한다.

《표 1》 울릉도와 독도간 이격거리(공백거리) 계산

※ 독도와 울릉도 간 거리는 87.4km(동북아역사재단·외교부경상북도 기준)
 ※ 울릉도 독도간 거리,
 「87.4Km- [(울릉도 35해리 × 1.852 = 64.82km) + (독도 12해리 × 1.852 = 22.224km)] = 356m」
 의 울릉도 독도간 ‘이격거리’ (공백거리)가 발생한다.

‘이격거리’(공백거리)의 법적 의미는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58) 1997년 11월 자료 분석은 「김영구, 앞의 논문, pp.103-104」과 「박덕배, 위의 책, pp.23-24」을 모두 참고하여 연구자의 의견을 보충한 것이다.



〈그림 2〉 울릉도와 독도 사이 이격거리(공백거리)

※출처 : 이 지도는 「박덕배, 앞의 책, p.51, 그림 1-5」를 보충 및 수정하여 작성함 것임.

첫째 독도가 울릉도 부속섬이라는 법적 지위를 잃었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고, 언제나 한단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움직여 왔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는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 울도의 행정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여기에 근거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인 것을 주장해 왔다. 그에 따라 국제법상 부속섬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해왔으나 이격거리를 만들어 법적으로 떼어 놓음으로써 이제 별개의 섬, 즉 독립섬이 되어 한단위가거나 부속섬의 지위를 잃은 것이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체제(regime) 하에서는 법적으로 한반도에서 울릉도·독도로 이어지는 한국 영토주권의 연속성과 단일성·동일성이 울릉도에서 단절되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에 대해 일본이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울릉도와 분리하는 것은 일본과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유엔해양법협약」체제 하에서 독도가 울릉도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서 한국의 영토가 되기 위한 법적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울릉도에 인정되는 35해리가 독도는 12해리만 인정되고, 울릉도는 35해리는 전관어업수역이지만 독도 12해리는 어업과 관련이 없는 보통 암석(rocks)에 부속되는 영해에 불과하고, 전관어업수역이 아닌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된 것, 특히 독도의 영해 12해리에 대한 한국의 귀속 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등은 일본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한국과 동등하게 차별없이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법적 지위는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중간수역 내에 위치한 독도는 울릉도와 완전 별개의 섬이 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이격거리와 관련, 러시아 비행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 23일 중국의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정찰기 1대 등 5대가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⁵⁹⁾에 침입하여 독도상공을 비행하였다.⁶⁰⁾ 여기에 대응하여

59)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공군이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영공(territorial sky) 방위를 위하여 영공 외곽의 공해(high sea) 상공(airspace)에 설정하는 공역(空域)을 말한다.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극동방위 목적으로 설정했다. 방공식별구역에 비행계획 없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영공 침범의 위협에서부터 항공기에 군사적 예방조치(경고 사격, 경고 통신, 격추)를 하는 경우가 있다(에듀윌시사상식, 「한국방공식별구역」, 『

한국공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10대를 긴급투입하여,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1대에 대해서는 플레어(Flare, 적외선 유도미사일을 교란하는 불꽃)를 발사하고, 경고사격을 가했다.⁶¹⁾ 여기서의 영공은 독도 영토와 독도 주변 영해 12해리(22.224km)의 상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영공은 자위권(self-defence)⁶²⁾ 행사가 가능한 법역이다. 그러므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영공에 중첩될 경우는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제외되는 상공은 중첩되지 않는 한국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상공의 경우이다.



〈그림 3〉 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입궤적

※ 출처 : 이 사진은 원본 「뉴시스」, 전제 「글로벌경제신문」을 게재재 합니다.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1909060>).

- 60) 관련 기사내용은, 이승원, 「러 정찰기 두차례 독도 영공 침공...軍 F-15k 360발 경고 사격」, 《글로벌경제신문》 2019년 7월 23일자 16:12. 를 참고한 것이다.
- 61) 이승원, 위의 기사.
- 62) 자위권(self-defence)은 안보리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과는 별도로 유엔헌장 제 51조를 근거로 국가가 유일의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무력사용권이다(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서울:삼영사, 2013), p.1499).

따라서 EEZ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경고방송이나 대응출격 등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격추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할 수 없다. 이는 영공이 아닌 EEZ 상공의 비행은 1919년 「파리협약」과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ICA), 1982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III) 제58조제1항⁶³⁾ 및 제87조제1항(b)⁶⁴⁾ “모든 국가는 …배타적경제수역(공해 포함)에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⁶⁵⁾)의 법률위원회는 앞서의 법적 근거에 의

63)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enjoy,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freedoms referred to in article 87 of navigation and over flight and of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compatible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64)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제1항(b)는 다음과 같다. : 『The high seas are open to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Freedom of the high seas is exercised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is Convention and by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It comprises, inter alia, both for coastal and land-locked States : (b) freedom of overflight.』

65) ICAO :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 UN specialized agency, established by States in 1944 to manage the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hicago Convention). ICAO works with the Convention's 193 Member States and industry groups to reach consensus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and policies in support of a safe, efficient, secure, economically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ivil aviation sector. These SARPs and policies are used by ICAO Member States to ensure that their local civi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s conform to global norms, which in turn permits more than 100,000 daily flights in aviation's global network to operate safely and reliably in every region of the world. In addition to its core work resolving consensus-driven international SARPs and policies among its Member States and industry, and among many other priorities and programmes, ICAO also coordinates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for States in support of numerous aviation development objectives; produces global plans to coordinate multilateral

해 공해 상공의 비행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⁶⁶⁾ 하지만 영공을 침범한 경우에는 주권국의 경고와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격추 등의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러시아 폭격기 등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이격거리 356m가 존재하는 근처로 비행하였고, 정확한 궤적은 알 수 없다. 다만, “독도기점으로 7노티컬마일⁶⁷⁾(약 12.9km)과 8.5노티컬마일(약 15.7km)”⁶⁸⁾까지 접근하여 비행한 적으로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이격거리 356m를 염두에 두고 집중비행한 것은 아닌가 하며, 이격거리 356m를 목표로 한 비행이 아니더라도 울릉도 35해리(nm) 영공이 아닌 독도 쪽 중간수역이면 법적 효과는 동일하다. 여기서는 상세한 언급보다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항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이격거리 356m가 존재하고, 국제법상 한일의 동등한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중간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 상공은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섬도 한국의 섬도 아닌 어느 국가의 섬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영공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한국이 독자적·일방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예컨대 격추할 경우에는 선결적으로 섬의 소유권(영유권) 관계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독도 영유권이 한국 소유로 결정되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타국 영공의 비행기에 대한 격추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즉, 러시아는 일본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대응논리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소유로 인식했다는 대응논리가 가

strategic progress for safety and air navigation; monitors and reports on numerous air transport sector performance metrics; and audits States' civil aviation oversight capabilities in the areas of safety and security.”<https://www.icao.int/about-icao/Pages/default.aspx>.

66) 신창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합의」, 『Strategy 21』통권 제33호. vol.17, 2014, p.153.

67) ‘1노티컬마일’은 1해리(nm)을 말하는 것으로, ‘1 nautical miles = 1.852km’이다.

68) 이승원, 앞의 기사.

능하다. 둘째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는 한일 양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위치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상 EEZ 상공은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역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영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독도상공의 비행은 EEZ 상공에 대한 비행으로써의 성질이 강하여 국제법상 허용된 공역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이 신한일어업협정을 잘못 체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이격거리 356m 발생으로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상실되어 이전과는 달리 명확하게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영공비행이 아닌 EEZ 상공 비행으로 인식케 하는 착오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는 울릉도 영공비행이 아닌 독도 상공을 비행하여 한일간 분쟁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획된 비행이 많이 있을 수 있다.

iii) 잠정수역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한국은 공해수역(어업위원회를 통한 자원협력)을 강조했으나 일본은 기국주의에 의한 공동관리수역으로 간주하는 주장을 하였다.

iv) 잠정수역의 폭은 한국이 모든 연안에서 34해리 외측(전관수역 외측)을 제시하고, 일본은 모든 연안에서 35해리 외측(전관수역 외측) 주장했으며, 동부한계선은 일본쪽 어장과 관련 있으므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는데, 한국은 동경 136° 주장을 견지하고,⁶⁹⁾ 일본은 당초 134°에서

69) 1997년 말까지 동쪽한계선 한국의 136°와 일본의 135°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 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관해 재미있는 주장이 있어서 소개한다(김영구, 앞의 논문, pp.104-105). : 『한국이 주장한 ‘동경 136°안’은 독도로부터 200해리 범위를 고수한다는 상징적 의도가 숨어 있었으며, 표면적으로는 ‘대화되어장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사 「잠정합의수역」의 동측경계선으로 ‘동경 136°안’이 채택된 경우라도 그것이 독도에서 200해리 EEZ가 확보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또 협정수역의 북측한계가 38°37'선으로 전제되고 있었으므로 136°가 되든 135°가 되든 이것은 38°37'선 이북에 위

135°로 주장 후퇴하였으며, 북부한계선은 한국이: 북위 38°37'와 북부조업자제선을 한계선으로 하는 의견에 접근하고, 일본은 대화퇴수역의 기존조업실적의 인정이 가능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남부한계선(대한해협 주변)은 한국이 북부대륙붕경계 좌표1-35를 이용 어업수역설정하자고 제의하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의 좌표1-33까지 이용하자고 제의하였다.

특히, 영해기선에 관하여 한국은 통상기선을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양국 합의로 결정되는 기선을 주장하였다.

1997년 11월 26일~29일 서울에서 열린 7차 회의⁷⁰⁾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조기 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은 국내 1차 협상타결 시한으로 1997년 7월 20일이 도과하자, 2차 협상타결⁷¹⁾ 시한을 11월12월로 정해두고 있었으나 11월이 경과하자 3차 협상타결 시한으로 1998년 1월 23일 구어업협정의 파기를 통보하고, 남은 1년을 최종 협상타결 시한으로 정해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11월 7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자 2차 협상타결 시한, 11월 또는 12월을 지키려고 분주하고 있었으나 김영삼대통령은 잘해야 본전이 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최종 타결권을 오히려 차기 김대중정부로 넘길 생각을 하고, 일본이 수궁할 수 없는 동쪽한계선 136° 고집하고 나선 것으로 여러 정황상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은 7차 회의 이후 1997년 12월 고무라 외무차관이 2번 오고, 오부치 신임외무장관이 1번 오는 등 조기타결을 주장하면서 설득하던 일본정부가 갑자기 김영삼정부 말기 1998년 1월 23일 구어업협정 파

치한 대화퇴어장과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70)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71) 일본이 일본국내의 신한일어업협정 협상타결 시한을 정해 둔 것은 사실로 보이며, 그 중 2차 협상타결 시한에 관해서는 김영구 교수는 1997년 12월 31일을, 박덕배 당시 수산정책국장은 11월 30일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서 그 시한이 다르지만 그 시기 2차 시한을 정해 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기를 통보해 온 것이다. 일본은 비등한 일본국내 어민들의 여론과 한국의 IMF 구제금융에 의한 외환위기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본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이용하여는 속셈이었던 것이 충분히 보인다.

1997년 12월 3일 김영삼대통령 말기 - IMF관리 :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곧 이어 1997년 12월 18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97년 12월 말경 회의에서 고무라 일본외무성 차관과 유종하 장관간에 동쪽한계선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일본은 135°, 한국은 136°를 주장하는데, 양측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국이 일단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 즉 현상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동의하였다.⁷²⁾이 사실은 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에 부속되는 파생효과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주장과는 상치(반대)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또는 한국의 우월적 권리를 인정하는 어떤 특약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 ‘현상유지’ 합의는 독도가 암석(rocks)으로서 영해 12해리 외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제3항⁷³⁾의 관할수역(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있기는 있지만 단지 한국이 점유하고 있을 뿐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것으로, 따라서 어업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나 다름없이 취급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한일은 독도의 지위와 관련, ‘현상유지’ 합의의 의미를 구어업협정 상태에서 독도가 영해 12

72) 박덕배, 앞의 책, pp.32-33.

73)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제3항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해리 및 해당 수역이 공동규제수역 내에 위치하였으나 법상은 공해수역인 것을 의미하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1997년 6월 이후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이미 한일 양국에 발효된 상태로 독도가 영해 12해리를 갖고 공동관리수역 내에 위치하는 것만으로는 1965년과 같이 공해수역과 같은 법적 취급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즉, 이미 동 협약의 발효로 중첩수역에서는 한일 양국의 주권적 권리가 발생하고, 주권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공해수역과는 구별됨으로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기 이전에는 독도수역은 공해수역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 ‘현상유지의 합의’는 일본의 미혹(迷惑, delusion)에 빠진 것으로, 한국은 법의 착시현상에 빠진 것이다.

1997년 12월 29일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⁷⁴⁾에는 사전확인 사항으로, 국제법 원칙 부응과 독도문제, 전통적 연안어업 인정을 전제로, 한일간 쟁점이 된 어업수역의 폭과 동쪽한계선 설정이 논의의 중심이었다.⁷⁵⁾ 1997년 11월 7차 회의 때부터 제시된 양측의 한국측 연안 34해리 동경 136°주장과 일본측 연안 35해리 주장과 동경 135°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독도 주변수역에서는 기존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기존합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재확인하였다.⁷⁶⁾ 그러나 이 때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결렬됨으로써⁷⁷⁾ 한국측도 구어업협정의 파기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⁸⁾

74) 한국측은 유종하 외무장관, 김태지 대사, 장승우 차관, 김하중 특보, 유광석 아태국장, 신정승 아태심외관, 박준우 동북아 과장, 신현석 경제기과과장, 유의상 동북아 서기관, 주중철 동북아1과 서기관이 참여하고, 일본측은 오부치 외상, 오구라 카즈오 대사, 시마다 미즈오 수산청장관, 아나미 코레시기 아시아국장 등이 참여했다(박덕배, 앞의 책, p.33).

75) 한국측은 어업협정에 관한 조업실적과 대화되 어로보장 등 어민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일본은 잠정수역을 먼저 정하고 어업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을 하였다(박덕배, 위의 책, p.34).

76) 《연합뉴스》 1997년 12월 29일자.

77)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서, 이 때 회담의 도면과 함께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1998년 1월 15일 한국 내부 회의⁷⁹⁾에서 독도 때문에 한일간 경계획정이 어려우므로 어업협정을 먼저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체결되는 잠정어업협정은 말이 잠정어업협정일 뿐 독도 경계와 관련된 반영구적인 협정, 즉 영토경계협정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1998년 1월 18일 일본은 구어업협정의 공식적인 파기의사를 전달하기 이전에 한국측에 파기를 사전에 전달해왔고, 한국측은 내부에서 많은 회의를 하여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종적으로 자율규제합의사항을 파기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확정하여 정리하였다.⁸⁰⁾

78) 한국 국내의 언론을 통하여, “일본은 오부치 외상이 귀국하는 대로 정부부처 및 당정 간 협의를 거쳐 현행 어업협정의 파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연합뉴스》 1997년 12월 29일자)이라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일본이 일찍이 협상 초기부터 구어업협정 파기를 예고하면서 압박해 왔으므로, 이때에는 더욱 파기의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한국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일본 고무라 외무차관이 방한 최종 쟁점이 된 동쪽한계선에 대한 합의를 압박하고, 비공식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절충한 동경 135°30'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덕배, 앞의 책, p.24)는 기록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밀회동이 사실일 경우는 이때 사실상 신한일어업협정은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밀회동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일본 외무차관이 귀국 후 김대중 차기정권에서 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구어업협정의 파기 가능성 매우 높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그러나 여기에 관해 「박덕배, 앞의 책, p.35」에서는 “1997년 말 전권을 갖고 온 고무라 차관과의 회담을 통하여 사실상 앞에서 이견이 있다고 보도된 부분이 사실은 합의되었”고, 한일 양국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절차까지 의견이 접근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비밀회동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고 미래 어느 순간 많은 회담자료가 공개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서는 사실상 합의에 대해 일본측의 경우, 수상과 외상은 동의했으나 농수산 대신과 수산의원은 반대하고, 농수산 대신은 자리를 걷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던 하시모토 총리가 번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국 내부회의에서 토론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79) 한국은 유종하 장관, 조정제 장관 및 의원 간 EEZ 소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80) 박덕배, 앞의 책, pp.36-37.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한국에 대해 1965년 어업협정을 종료(파기) 통보를 하였다. 일본이 구어업협정을 파기하기 이전에 한일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추측되며,⁸¹⁾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일방파기보다는 합의로 종료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본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일방파기안을 선택했다.⁸²⁾

1965년 구어업협정 제10조제2항 “본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 계약국이 타방 계약국에 본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1998년 1월 23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1999년 1월 22일까지 구어업협정이 효력을 갖게 되고 1999년 1월 23일에는 무협정의 상태가 된다.⁸³⁾ 일본은 일찍이 협상 초기부터 압박카드로 협정 종료를 시사해 왔으나 한국은 설마 한 것으로 추정된다.⁸⁴⁾ 그런 상황에서 일본국내의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⁸⁵⁾ 한국에서 IMF 구제금융에 의한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결정적으로 구어업협정 파기카드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일방적 구어업협정 파기 행위는 한일관계가 선린우호관계에 기반한 것에 비춰 볼 때 “국제사회의 기본적 신뢰의무⁸⁶⁾” 위반이 된다. 다음날(1월 24일) 김영삼정부는 보

81) 이 부분은 앞으로 공개될 자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82) 박덕배, 앞의 책, p.36.

83) 일본이 구어업협정의 파기(종료)를 통보함으로 인해 1년 이내에 새로운 어업협정으로 대체하지 못할 경우 독도영유권 분쟁은 가시화되고, 일본쪽에서 활동하던 한국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과는 달리 상황이 오히려 한국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한국정부는 적극적 타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전 상황과는 반대로 무협정 상태를 피해야 하는 한국은 쫓기는 입장이 되었다.

84) 일본은 협상 초기부터 자신들의 협상타결 시한에 맞춰보려고 압박카드로 구어업협정 파기를 계속해서 암시하였지만 한국은 구어업협정을 일본이 쉽게 종료통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박덕배, 앞의 책, p.31).

85) 일본 어민들은 “자국 인근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에 의해서 그 어족자원을 부당하게 수탈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일본어민들의 불만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종의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김영구, 앞의 논문, p.107).

복조치로서 한국어민의 일본수역에서의 어로활동에 대한 ‘어업자율규제 조치’를 전격 해제함으로써 일본어민들과 마찰 충돌이 발생하였다.⁸⁷⁾ 김영삼정부의 ‘어업자율규제조치’ 해제는 다음 정부인 김대중정부에서 1998년 7월 1일 순조로운 협상(일본측의 양보기대)을 위해 행정지도형식으로 다시 규제조치를 재개하였다.

〈표 2〉 신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

일 자	정 부	협상내용
1996.5.	김영삼정부	한국 병행 주장, 일본 분리 주장
1996.6.	김영삼대통령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 분리 대답
1996.11.	김영삼정부	일본측에 협정수역 구체적 제시요구
1997.3.6.	김영삼정부	일본측 구체적 협정수역 및 잠정수역안 제시
1997.08.	김영삼정부	한국측 어업과 영토문제 분리 협상 한국측 울릉도와 오키군도 중간선을 잠정경계선으로 제시 일본측 독도 영해 12해리 ‘현상 유지’ 제의
1997.9.	김영삼정부	일본측 구공동규제수역을 잠정수역으로 하고, 독도 특정수역 설치하여 상호 관할권 유보 제안
1997.11.	김영삼정부	한일잠정 합의 - 울릉도 34/35해리 내측 전관수역, 외측 잠정수역 설치 - 독도 12해리 영해만 설정 : 전관수역 없음
1997.12.03.	김영삼정부	정부 말기 - IMF 관리 외환위기
1997.12.18.	김영삼정부	김대중 대통령 당선

86) 김영구, 위의 논문.

87) 김영삼정부의 제1차 1996.4.11, 제2차 1997.12, 제3차 1998.1.24., “대일강경조치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어업협정의 내용을 국익에 맞게 관철하기 위한 전략이나, 정책초점이 있었다기 보다는 비등하는 국민의 반일감정에 정치적으로 영합할 수 있는 극적인 방도를 찾는 데에 몰두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구, 위의 논문, p.108).

1997.12. 말	김영삼정부	한일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전제하에 현상유지 합의
1998.1.23.	김영삼정부	정부 말기 - 일본 기존 한일협상 파기
1998.2.25.	김대중대통령 취임	
1998.4.29.	김대중정부	전의 김영삼정부 한일협상 사항확인
1998.7.3	김대중정부	한국측 독도 영해 12해리 ‘현상유지’ 불변 주장
1998.9.22.	김대중정부	김대중대통령 방일예정으로 정치적 담판에 의한 해결
1998.10.9.	김대중정부	신한일어업협정 양측 수석대표 가서명
1998.11.28.	김대중정부	신한일어업협정 양측 외무장관 서명
1999.1.6.	김대중정부	신한일어업협정 국회비준동의
1999.1.22.	김대중정부	신한일어업협정 비준서 교환 효력발생

※ 출처 : 연구자가 임의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3. 김대중정부의 협상 - 1998년 1월부터 1999년 1월 22일 : 법률 상 마무리 단계

1998년 2월 25일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이미 취임전부터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전년 12월 3일 발생한 IMF구제금융에 따른 금융위기 극복이고, 둘째 신한일어업협정의 마무리 작업이었다.

1998년 4월 29일~30일 동경에서 열린 김대중정부 1차 회의,⁸⁸⁾ 한국측은 수석대표를 교체⁸⁹⁾하고, 신정부의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997년 말 이미 김영삼정부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내용에 대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한 확인

88)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89) 외무부 신정승 아태심의를관을 윤병세 심의를관으로 수석대표를 교체하였다.

작업이 시작되었다.⁹⁰⁾ 그밖에 동쪽한계선 한국 136° 일본 135°, 전관수역의 폭 한국 34해리 일본 35해리 등의 확인이 이뤄졌다. 이 때 한국측은 동쪽한계선의 136°를 확보함으로써 일본 대화퇴어장에서 한국의 대게잡이 및 장어통발어업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 울릉도 34해리(한국측 주장, 일본은 35해리)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서쪽한계선을 동쪽한계선에 대응하여 양보선으로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이 어업협정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주장하는 전관어업수역 35해리를 36해리로 주장함으로써 독도영유권 협정에 중점을 두었어야 한다. 울릉도 전관어업수역이 36해리가 될 경우 「울릉도 36해리 + 독도 12해리 = 38해리(88.896km)」가 되어 독도와 울릉도 간에 이격거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는 울릉도에서 독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을 양자협정으로 인정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6월 일본자민당 국제어업문제 특별위원장 사토오 교오코⁹¹⁾가 전달 5월 말 박정수 외교부 장관의 방일에 대응, 방한하여 ‘어업자율규제조치’ 해제에 대한 정지를 주장하였고, 1998년 7월 2일 김대중정부는 조용히 이를 철회하였다.⁹²⁾

1998년 7월 2일~3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회의⁹³⁾에서, 2일 한국측은 동쪽한계선(136°)에 대응하여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서쪽한계선을 제의하고, 일본측은 그보다는 동쪽한계선(135°)을 서쪽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하며, 계속된 회의에서 일본은 또다른 방법은 연안으로부터 해리 폭을 35해리보다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⁹⁴⁾ 3일 한국측은 한국

90) 박덕배, 앞의 책, pp.24, 42.

91) 사토오 교오코 일본자민당 의원은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에 주역을 맡았으며, 한일간 어업협상에서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주장을 펴온 대표적인 인사” 이다(김영구, 앞의 논문, p.111).

92) 김영구, 위의 논문.

93)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이 제의한 서쪽한계선 수정과 직선기선보다는 관할권행사가 용이하도록 동일한 면적을 협정수역으로 정하자고 제의하고, 특히 독도 영해 12해리 불변, ‘현상유지 합의’를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일본은 구체적인 개념도를 요구하고, 1997년 12월 협상(김영삼정부 말기협상)한 결과보다 한국측 면적만 늘어난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다.⁹⁵⁾

1998년 7월 23일~24일 동경에서 3차 회의가 열리고, 1998년 8월 19일~21일 서울에서 열린 4차 회의⁹⁶⁾에서는 중간수역에 관한 「부속서 I. 제2조 나. 라. 마.」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실상 일본측의 제의를 수용하고, 제주남부수역은 1997년 11월 김영삼정부 말기 의견접근 이뤄진 중간수역 설정에 대해 합의하고, 동쪽한계선은 한국측이 동경 135°30′을 대각선으로 제안하고, 일본은 동경 135°를 강경한 자세로 고수한다. 계속된 회의에서 일본은 동쪽한계선을 동경 135°에서 서쪽으로 30′이동하여 134°30′을 주장하여 앞서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한다. 여기에 대응하여 1998년 8월 31일~9월 2일 동경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한국측은 동쪽한계선에 대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만 성과는 없었다.⁹⁷⁾

1998년 9월 17일~18일 서울에서 열린 6차 회의⁹⁸⁾에서 일본측은 한국측이 제시한 서쪽한계선을 부정하고, 동쪽한계선을 동경 135°로 하고 북

94) 박덕배, 앞의 책, p.25. 이 경우 일본의 연안으로부터 35해리 확대 주장에 울릉도를 포함시키려는 의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본이 만약 그런 의사가 있었으면 울릉도는 제외하고 본토로부터 35해리 확대를 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이유는 일본이 확대하려는 전관수역에 울릉도가 포함될 경우 35해리 이상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붙어서 한국영토로 인정됨으로써 일본이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95) 박덕배, 앞의 책, p.42.

96)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97) 한국측은 “서쪽한계선을 주장하면서 협정 종료 전까지 주장해온 동쪽한계선 동경 136°를 부분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이나 서쪽한계선을 포기하되 동경 136°를 수직으로 올려 대화퇴수역의 대부분이 잠정조치수역에 포함되는 안을 제시한다(박덕배, 앞의 책, p.26).”

98)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

위 38°37'이북에서는 한일러 3국간 등거리 점까지 사선으로 잠정수역을 설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⁹⁹⁾

1998년 9월 22일~26일 김대중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동경에서 7차 어업실무자회의¹⁰⁰⁾ 및 김봉호 국회의장 방일에 의한 정치적 담판¹⁰¹⁾이 행해졌다. 정치적 담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동쪽한계선은 동경 135°30', 북위38°37'이북에서는 한일러의 등거리점인 동경 131°40'까지 사선으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1998년 10월 7일~9일¹⁰²⁾ 8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져 10월 9일 윤병세 수석대표와 야부나가 수석대표 간에 가서명¹⁰³⁾이 되었다.¹⁰⁴⁾한

99) 박덕배, 앞의 책, p.26.

100) 이 부분에 대해,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에서는 1998년 9월 28일~29일 서울에서 제7차 회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01) 김봉호 국회의장의 방일을 계기로 신한일어업협정의 동쪽한계선은 극적으로 타결되었으며, 이때가 1998년 9월 24일이다(김영구, 앞의 논문, p.111).

102) 이 부분에 대해, 「옥영수 외2, 앞의 논문, p.12 <표 II-2>」에서는 1998년 10월 4일~8일 동경에서 제8차 회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9일 새벽까지 협상한 것으로 봐서는 9일이 맞는 것 같다.

103) 가서명일에 대하여는 1998년 10월 8일(김영구, 앞의 논문, p.111; 옥영수 외2, 위의 논문, p.12) 또는 10월 7일(박덕배, 앞의 책, p.27)이 있으나 최종 타결이 10월 9일 새벽 04:30분에 한일대표단 각 5명씩 참석하여 합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봐서 10월 9일로 타당해 보인다.

104) 1998년 10월 9일 김대중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열린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회의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최종 타결되어 매우 중요함으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박덕배, 앞의 책, pp.80-85」 정리한 것이다. 10월 7일 회의는 오전에 실무과장 회의로, 한국측 정해웅 과장과 일본측 스키야마 과장이 회의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일본 뉴오타니 아나미 식당에서 김봉호 국회의장과 사토 의원이 통역 및 배석 없이 정치적 담판을 하여 동쪽한계선을 한일 주장을 절충선으로 정하고, 오후 3시 일본 제국호텔 11층에서는 수석대표 회의로, 윤병세 수석대표와 야부나가 수석대표가 회의를 하였다. 10월 8일 회의는 한일 장관회의로, 한국측은 김선길 장관이 참여하여 어업쿼터에 대해 논쟁하였고, 10시부터는 일본측 신조부장관과 한국측 천인봉, 박덕배 수산정책국장이 참여하였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일본 영빈관에서 김선길 해수부장관, 홍순영 외교부장관, 김봉호 의원, 윤병세, 문봉주, 정해웅, 천인봉, 박덕배 등이 참석하여 내부회의가 열렸다.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다시

일은 이미 이전 7월 2일 4차 회의 때 김대중대통령의 10월 방일을 계획하고, 이 때 신한일어업협정의 최종 협상타결 시한으로 정하자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 최종합의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동쪽한계선은 한일간 주장의 절충선인 동경 135°30'에서 직선으로 북방한계선 NLL과 만나는 좌표 이북에서는 북일러 3국 등거리 점까지 사선으로 올려 중간수역으로 하였고, 울릉도는 35해리 어업전관수역로 하고 독도는 어업전관수역이 아닌 영해 12해리만 갖고, 중간수역 내에 두었다.¹⁰⁵⁾한일은 동등하게 자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유보수역, 이른바 한국명 '중간수역', 일본명 '잠정수역'을 정해두고 있다. 유보수역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전속적 관할권이 배제되는 수역이며, 독도는 그 유보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수역 내에 위치하는 섬은 한일이 각기 자국에 유리한, 그리고 가능한 모든 해석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한국에 대해 어떠한 국제법상 인정되는 우월적 권리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독도/다케시마가 자국의 영토라는 법적 해석을 이젠 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여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창설적으로 획득했다. 따라서 한국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도 한일이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설정된 중간수역은 한일의 중간선을 중심으로 양측

회의가 개최되어 다음날(9일) 오전 4시 30분에 타결되어 끝났다. 8일 오후 2시 뉴오타니호텔 1258호에서 한일 수산실무자간 협의로, 신조, 천인봉, 박종국, 박덕배가 참석하고,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수산당국자회의에서 신조, 천인봉이 협의하고, 오후 4시 45분부터 5시 10분까지 뉴오타니호텔 1258호에서 한국측 내부 전략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문봉주, 윤병세, 정해웅, 주중철, 박덕배, 박종국, 천인봉, 김선길장관이다. 오후 5시 20분부터 뉴오타니호텔 1258호에서 김선길 장관과 나카가와 대신 간 협의가 있었고, 주중철 통역과 핫토리 통역이 참여했다. 회의는 다음날(9일) 3시까지 지속되었고, 9일 오전 3시부터는 양측 대표단 각 5명씩 참석하여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 4시 30분에 끝났다.

105) 박덕배, 앞의 책, pp.50-51.

수역을 포함하여 설정된 수역으로써 비록 그 수역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역일지라도 한일이 경계획정을 하기 이전에는 반영구적 성질을 가진 것이다. 또한 어업수역일지라도 사실상 경계획정의 기초가 되는 수역이며, 따라서 한 번 훼손된 영유권은 하자가 다시는 치유되지 않는다.

김대중정부는 이후 1998년 11월 28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일본 가고시마에서 서명하고, 1999년 1월 6일 제197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동의를 받아, 1999년 1월 22일 조약 제1477호로 발효시켰으며, 관보에는 1999년 1월 27일 게재되었다.

IV. 결론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어업권과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인정되던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협약으로써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실패한 협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와 체결과정에 대한 보충적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일명 “신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22일 조약 제1477호로 발효된 협정이다. 동 협정이 체결된 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협정수역 내의 어업」에 관하여만 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협정수역 내의 어업 + 영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학자들간에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자를 주장하는 견해는 한국정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며, 이들은 동 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써 독도영유권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옹호견해는 동 협정이 종료(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반면 후자를 주장하는 견해는 동 협정은 어업 외에도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 협정을 종료(파기)하고 새롭게 어업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후자의 견해에 찬성하였다. 그 근거로서 1965년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공해상에서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배타적 전관 어업수역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의 동등한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공동관리수역에서 단지 영해 12해리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권리를 인정할 어떠한 배타성이나 특약이 인정된 것이 없으므로, 독도영유권이 훼손된 것으로 본다.

둘째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형성된 것에 기인하며, 이러한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반영하지 못한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셋째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과 관련하여, 김영삼정부 하에서는 한국에 불리한 어업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분리협상, 잠정수역 수용, 독도에 대해서는 전관수역을 불인정하고, 영해 12해리만 갖는 현상유지를 수용하였으며, 공동관리수역 내에 독도를 위치케 하여 한일 양국의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는 안을 사실상 합의하고, 김대중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합의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해 김영삼정부 또는 김대중정부 중 어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소재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영삼정부에서 기본적 사항이 사실상 합의된 후 김대중정부에서 재확인된 후 법적으로 체결되었다.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체결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따라서 김영삼정부 또는 김대중정부 중 어느 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소재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서울:삼영사, 2013.
- 김동조, 『냉전시대의 우리 외교』 서울:문화일보, 2000.
-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서울:우리영토, 2007.
-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 합의사항』, 대한민국정부, 1965.
- 독도본부,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논리들과 그 비판』 서울:우리영토, 2006.
- 박덕배, 『동북아 해양영토전 : 보이지 않는 외교전쟁의 기록』 서울:블루&노트, 2013.

2. 논문

- 강병근 외40인,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서울:우리영토, 2006.
- 김명기,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이에 대한 국제법상 대책방안 모색」, 『바른 한일 어업협정안』서울:우리영토, 2007.
- _____,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서울:우리영토, 2007.
- 김선표, 「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에 관한 세미나』2002.1.28.
- 김영구,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재정립」, 『독도영유권 연구논집』독도연구총서9, 서울:독도연구보전협회, 2002.
- 나홍주,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했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서울:우리영토, 2006.
- 박춘호,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명백한 우리 독도 성숙한 대응을」,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서울:우리영토, 2006.
- 외교부,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
- 신창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합의」, 『Strategy 21』통권 제33호. vol.17, 2014.
- 옥영수 외2, 「신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어업대책」정책자료 98-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12

- 이장희,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도지배를 훼손했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서울:우리영토, 2006.
- _____, 「한일어업협정 폐기안 초안작성을 위한 기본방향」, 『바른 한일어업협정안』 서울:우리영토, 2007.
- 이창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한일 어업협정 폐기후 재협상 반대 현실적 이득없고 분쟁만 초해」, 「냉정하게 일본을 바라보자」, 『독도 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서울:우리영토, 2006.
- 제성호,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서울:우리영토, 2006.
- _____,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서울:우리영토, 2007.

3. 신문자료

- 《국민일보》 2015년 11월 22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90577&code=611111111&cp=du>.
- 《동아일보》 2004년 1월 12일자.
- 《부산일보》 1997년 10월 11일자.
- 신용하, 「독도 기점 포기한 사람들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 《조선일보》 2008년 7월 22일자 15: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2/2008072201146.html.
- 《연합뉴스》 1997년 12월 29일자.
- 이승원, 「러 정찰기 두차례 독도 영공 침공...軍 F-15k 360발 경고 사격」, 《글로벌경제신문》 2019년 7월 23일자 16:12.
-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아라」, 《조선일보》 1999년 11월 8일자.
- 《조선일보》 1996년 2월 11일자.

4. 인터넷자료

- 외교부, 「양자조약」, 『외교정책』, http://www.mofa.go.kr/www/wpge/m_3834/contents.do.
- 에듀윌시사상식, 「한국방공식별구역」,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1909060>.

5. 법령 및 판결자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헌법재판소, 『판례집』13-1, 676,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

<Abstract>

A Study on the Conclusion Process of the New Korea - Japan Fisheries Agreement

Lee. Dong-Won

In 1999,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as made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agreement was made because 「UNCLOS III」, effective in 1999, formed a new marine law order in the world and because it was necessary to revise the old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made at 1995 in a large scale. At that time, it didn't reflect new marine law order.

The official title of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as 「An Agreement about Fisheries between Korea and Japan」, effective on January 22, 1999, by Treaty No. 1477.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nfringed the fisheries right wielded exclusively by Korea and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recognized predominately by Korea comparatively. So, the agreement was known to be failed by the scholars who criticized it and by the public. After the agreement was made, the opinions were divided by the scholars into two opinions, whether the agreement had a binding force concerning 「Fisheries within agreed area」 or 「Fisheries within agreed area + *dominium*」. Even now, the opinions are divided so continuously. Those who assert the former are Korean government, Constitutional Court, and some scholars. They assert that the agreement is concerned on fisheries and not effective in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They want the agreement to persist without termination. But, those who assert the latter express their points of view that the agreement had to be terminated (cancelled) and that

new agreement had to be made. This study consents to the opinions of the latter. As for the bases, the fisheries agreement made in 1965 stipulated that 12 nautical miles exclusive fisheries zone of Dokdo was recognized from the baselines at the high seas. But,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made in 1999 stipulated that only the territorial sea 12 nautical miles was recognized from joint regulatory water area where the governing rights of Korea and Japan were effective at the same level.

This agreement doesn't recognized any exclusivity or special promise about the right of Korea.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to be infringed.

As for a core of this study,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under Kim Young Sam Government stipulated the unfavorable condition of Korea; exclusive economic zone was separated and provisional zone was accepted. As for Dokdo, exclusive waters zone was not recognized and only the right of the territorial sea 12 nautical miles was accepted. In fact, the two countries stipulated Dokdo within joint regulation waters zone and the governing right of Dokdo was put off. Under Kim Dae Jung Government, the subjects were agreed legally.

In the conclusion process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re are no stipulation concerning which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agreement. Kim Young Sam Government made the agreement about basic matters, and Kim Dae Jung Government confirmed them. Afterwards, the matters were agreed legally. So, the progress of the agreement making is unclear.

Key words: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joint control waters zone, special waters zone,

exclusive zone, exclusive fisheries zone, exclusive economic zone(EEZ), Dokdo airspace flying, territorial sky invasion, separation distance, Russia flying trajectory.

이 논문은 2020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독도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그 실태*

-『시로 만나는 독도』를 중심으로-

김 은 령**

〈목 차〉

- I. 들어가기
- II. ‘독도 시’가 가진 효용성과 참여 작가의 동향
- III. 작품에 나타난 편향성과 교학적인 측면
- IV. 나가기

〈국문초록〉

‘독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며, 여전히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과 대치상태에 있다. 이러한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독도 지키기의 일환으로 문학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다. 그동안의 독도에 대한 문학 작품은 대부분 교육차원의 동화나, 학술 차원의 역사적 고증이 주를 이룬 역사교양 소설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출간된 동화나 소설의 경우는 목적을 가진 도서로 그 수용계층의 한계성에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작가의 순수한 마음의 노래인 시(詩)의 경우는 그 해석을 달리 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9S1A5B8A0 2103036)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

** 한국작가회의

수 있다. 이 글은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등단작가와 문학의 독자인 일반인이 독도에 대해 쓴 시를 취합하여 엮은 『시로 만나는 독도』에 수록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도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시로 만나는 독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작가의 다양성과 주제에 대한 편향성이었다. 독도에 대한 시를 쓴 작가들은 기존 유명한 시인에서부터 등단하여 현재 문단에서 활동하는 문인(시인)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에서부터 해방정국까지 겪은 80대까지의 폭 넓은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직업면에서는 주부, 기업인, 직장인, 공직자, 학생, 연애인, 예술가, 종교인, 정치인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처럼 작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애국’에 함몰된 작품이라는 한계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도를 수호하자,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라는 구호성의 글쓰기에서 ‘독도 사랑’의 효용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효용성은 시가 대중화되어 대중들이 향유할 때 그 ‘효용’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독도 시’가 ‘대중 시’가 되기 위해서 시인들이 독도를 애국의 기재를 넘어 문학의 기재로 재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문학의 기재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독도 시’는 시가 가지는 특징이나 시의 미학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문학적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독도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독도 시, 독도 수호, 문학기재, 효용성, 편향성.

1. 들어가기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영토임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면 “지증왕 13년(512)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¹⁾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고려사(高麗史)』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도 독도의 지명인 우산(于山)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에서는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²⁾라는 기록이 있어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설명하고

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6월.

2)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울진현.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정동(방향)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 씌면 바라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 불렀다.”³⁾ 라는 기록으로 보아 ‘무릉’은 울릉도를 말하며, 무릉과 붙어 있는 ‘우산’은 독도임을 분명히 알 수 가 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증명되었고, 당시 우리어민들이 독도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였던 정황은 역사적 사건⁴⁾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일본의 비양심적 언행으로 여전히 영토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국가적 문제는 충분히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문학의 본령이 사회현상을 이야기하여 긍정의 상태로 계도해 나가는 것에 있음을 상기 할 때, 독도 관련 문학 작품도 이러한 문학의 본령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은 언어를 조합해 이루어진 예술이며, 기록물이다. 이 예술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인쇄매체가 필요하다. 2017년의 『문예연감』에 따르면 2016년 발간된 문학잡지는 총 670종이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는 시로 489종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의 73.0%에 이른다. 이어서 수필과 산문을 주로 다룬 잡지가 91종으로 13.6%, 평론 및 인문연구서를 주로 다룬 잡지가 76종으로 11.3%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소설이 주를 이룬 잡지는 13종으로 1.9%를 차지했고, 희곡과 시나리오를 주로 다룬 잡지는 발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책권수로 살펴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발간된 문학잡지는 총 1,853권으로 이중 시를 주로 다룬 잡지가 1,330권에 달하며 7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 장르에서 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세종실록지리지」, 울진현 조

4) 1948년 6월8일과 1952년 9월 5일에 있었던 독도에 대한 미군의 폭격사건(이태우,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경과와 발생배경」, 『독도연구』 제20호, 영남대독도연구소, 2016. 참조)

독도에 대한 관심을 문학장르에서 볼 때, 시인들이 들려주는 ‘독도 시’는 그 문제를 상기시키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시는 여러 매체에 발표되고 있으나 문단에 등록된 매체인 문학잡지나 문학관련 지면에 ‘독도’라는 주제로 발표된 ‘독도 시’는 아직 그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⁵⁾

이러한 때에 아주 소략하지만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나름의 의의를 가진 ‘독도’를 노래한 시를 취합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⁶⁾ 그리고 개인이 독도관련 시편만 모아 출간한 시집도 눈여겨 볼만하다.⁷⁾ ‘독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며, 여전히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과의 대치상태에 있다. 하지만 독도는 엄연히 우리민족의 숨결이 닿아 있는 우리의 국토이다. 이러한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독도 지키기의 일환에서 문학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가? 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문학’에서 독도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문학을 언어의 예술로 정의 할 때, 문학의 소재는 언어이며 그 언어를 조합해 조직화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문학’의 관점에서 논한다고 한다면 독도에 대한 문학적 논의는 문학작품으로 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순수문학 작품은 많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독도에 대한 문학 작품은 대부분 교육차원의 동화나, 학술 차원의 역사적 고증이 주

5) 수십만 명의 시인과, 수백 종의 매체, 그리고 긴 기간 동안에 발표된 시 중에서 독도와 관련된 시를 취합하여 통계를 낸다는 것은 전문적인 연구를 요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 과제로 두기로 한다.

6)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한민족 독도서관에서 발행한 『독도 시 200선』1.2권(한민족 독도서관, 『독도 시 200선』1, p브릿지, 2011., 『독도 시 200선』2, p브릿지, 2012.) 등이 있다.

7) 한민족독도서관 관장인 천숙녀 시인의 시집이 그 예이다. (천숙녀, 『평화의 섬, 독도』, ㈜건강신문사, 2017.)

를 이룬 역사교양 소설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출간된 동화나 소설의 경우는 그래도 목적을 가진 도서로 그 수용계층이 있고,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작가의 순수한 마음의 노래인 시(詩)의 경우는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글은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등단작가와 문학의 독자인 일반인이 독도에 대해 쓴 시를 취합하여 엮은 『시로 만나는 독도』에 수록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도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그 실태’를 살펴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독도 시’가 가진 효용성과 참여 작가의 동향

1. ‘독도 시’에 내포된 애국심

문학의 범주에서 시는 다양함에 선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양함에는 작가, 내용, 소재, 배경, 시대 등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중화되었을 때 효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시 100년은 크게 보아 시대 현실 및 사회 역사에 대응하는 현실주의 시와 문학자체의 제반문제, 즉 언어나 상상력 탐구 및 예술성을 추구하는 예술주의 시가 갈항 하는 가운데 전개돼 왔으며, 분화해온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시의 대중화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현대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양상과 향유 방식을 ‘문화사회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시의 실질적 수용자(소비자)인 독자의 성향과 소비형태, 시에 대한 인식을 통계 분석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그 자료들 중에서 눈에 띄어 볼만한 것이 임현순의 연구 자료이다.⁹⁾ 임현순이 낸 통계자료에서 시

8) 김재홍, 「20세기 한국시의 근대의식 형성과 전개」,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p.27.

9) 임현순, 『한국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 대중시 형성의 문화적 요인과 현대시의 대중화 문제연구-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독자들의 한국현대시 수용과 인식의 특성」, 한국시학회, 2007.

의 대중성에 관한 것으로 ‘시의 대중성’, ‘시의 대중적 요소’, ‘시의 비 친숙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자.

이 자료에 따르면, 성별, 연령, 학력을 기준으로 시에 대한 ‘대중성’, ‘인식과 대중적 요소’, ‘비 친숙성에 대한 이유’를 통계로 나타내었다. 임현순이 발표한 통계를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표 1〉 시의 대중성

조사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고
성별	여성	13.0%	42.0%	35.5%	8.9%	0.6%	100
	남성	21.7%	41.1%	25.6%	10.1%	1.6%	100
연령	10대	19.7%	31.6%	34.2%	11.8%	2.6%	100
	20대	14.1%	45.2%	30.4%	10.3%	0	100
	30대	13.5%	56.8%	24.3%	2.7%	2.7%	100
	40대 이상	22.4%	34.7%	34.7%	8.2%	0	100
학력	고교생	21.4%	31.4%	31.4%	12.9%	2.9%	100
	대학생	15.6%	44.8%	30.2%	9.4%	0	100
	대졸 이상	10.1%	48.3%	31.5%	9.0%	1.1%	100
	고졸 이하	25.6%	38.5%	30.8%	5.1%	0	100

〈표 2〉 시의 대중적 요소

조사대상		단어	운율	반복성	완결성	감수성	느낌	표현	기타	%
성별	여성	10.4	19.0	3.1	6.1	18.4	31.9	2.5	8.6	100
	남성	8.2	26.2	9.0	4.9	11.5	34.4	1.6	4.1	100

10) 임현순의 논문 「한국 대중시 형성의 문화적 요인과 현대시의 대중화 문제연구-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독자들의 한국현대시 수용과 인식의 특성」의 <표 5>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임현순, 앞의 논문 pp.12-13.)

연령	10대	9.3	37.3	5.3	4.0	6.7	32.0	1.3	4.0	100
	20대	5.3	18.2	5.3	4.5	24.2	31.1	2.3	9.1	100
	30대	8.6	22.9	5.7	8.6	8.6	40.0	2.9	2.9	100
	40대 이상	23.3	7.0	7.0	9.3	9.3	37.2	2.3	4.7	100
학력	고교생	10.1	37.7	5.8	2.9	4.3	34.8	1.4	2.9	100
	대학생	5.3	20.2	4.3	3.2	24.5	30.9	1.1	10.6	100
	대졸이상	8.4	16.9	7.2	8.4	15.7	33.7	3.6	6.0	100
	고졸이하	20.0	5.7	5.7	8.6	14.3	40.0	2.9	2.9	100

<표 3> 시의 비친숙 이유

조사대상		운율	합축성	서정성	학습 영향	서술방법	기타	비고
성별	여성	1.9	46.9	7.5	28.1	3.1	12.5	100
	남성	4.8	40.8	8.0	33.6	1.6	11..2	100
연령	10대	8.2	38.4	1.4	45.2	0	6.8	100
	20대	1.5	39.2	7.7	36.2	3.1	12.3	100
	30대	2.9	65.7	11.4	11.4	2.9	5.7	100
	40대 이상	0	51.1	15.6	4.4	4.4	24.4	100
학력	고교생	9.0	37.3	1.5	46.3	0	6.0	100
	대학생	0	36.2	9.6	40.4	3.2	10.6	100
	대졸이상	0	55.9	11.8	5.9	5.9	20.6	100
	고졸이하	0	55.9	11.8	5.9	5.9	20.6	100

위의 <표>를 살펴보면 시에 대한 대중성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의 대중성 여부에서 시가 ‘대중적인 장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답이 성별에서 여성이 55%, 남성이 62.8%로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10대에서 51.3%, 20대에서 59.3%, 30대에서 70.3%, 40대 이상에서 57.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력에서 살펴보면 고등학생그룹에서 52.8%, 대학생그룹에서 60.4%, 대졸이상에서 58.4%, 고졸이하에서 64.1%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소의 편차는 가지고 있지만 성별,

연령대와 큰 상관관계 없이 시는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여기에서 짚어 볼수 있는 것은 문학의 정수라고 하는 시를 공감하는 것에는 학력이 별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졸이상의 학력 소지자와 고졸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가지는 시에 대한 인식은 5.7%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시가 대중화 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표 3>을 살펴보자.

<표 3>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학력의 격차에서 보이는 통계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운율과 함축성, 그리고 서정성을 골격으로 한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를 보면 시가 대중화 되지 못하는 이유에서는 학력의 유무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위 <표 3>에서 보면, 가장 큰 격차로 볼 수 있는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 그룹과 고졸이하의 학력소지자 그룹이 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모든 항목에서 똑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학자가 그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조사대상 개개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는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라는 장르 자체가 대중화에는 아주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중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운율과 감수성, 그리고 느낌을 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

응답자들은 “운율”, “서정성”, “서술방법이 산문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운율”, “서정성”이 독자들이 선호하는 시의 고유한 특성임을 알 수 있으나, “서술방식이 산문과 구분되지 않는다.”의 경우는 동일한 방식의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시인을 알고 있는가?”, “최근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을 알고 있는가?”, “최근 시단 동향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 성별, 연령, 학력 구분 없이

응답자의 90.0% 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였고, 좋아하는 시인과 그 이유를 묻는 추가 인터뷰 질문에서도 김소월, 윤동주(각 13명), 천상병, 한용운(각 7명), 이상(6명), 이육사, 김춘수(각 3명) 등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류시화(9명), 이해인(7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시인을 선호한다고 1명 이상의 응답자가 대답한 경우가 드물었다.¹¹⁾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한국현대시의 대중성은 현재 문학기향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문단에서 시적역량을 갖추고 우수한 작품 활동을 하는 시인은 부지기수에 달한다. 앞장에서도 밝혔듯이 그리고 그들이 발표하는 작품은 전체 문학작품의 2017년을 기준하면 73.0%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출판의 동향일 뿐 시집출간이 곧 ‘시의 대중화’라는 공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가 대중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독도 시’의 출현은 문학적 관점에서와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시로 만나는 독도』에는 390편의 독도를 노래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작품이 가지는 주제는 몇 가지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그 주제를 우선 세 가지로 분별하여 보면, 첫째가 ‘독도는 우리 땅’이며, 둘째가 ‘독도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셋째가 ‘독도 수호’이다. 이들 세 가지 주제의 공통은 ‘독도에 대한 애심(愛心) 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국토에 대한 애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시로 만나는 독도』에 수록되어 있는 390여 목소리의 독도를 노래한 시 작품들은 작품성을 배제하고 보아야 한다. 이들 작품의 작자는 사회 각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문단의 유명한 시인에서부터 성직자,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모든 분야에 속해 있다. 시적 역량을 충분히 갖춘 시인에서부터 어린 학생

11) 임현순 앞의 논문 p.11.

들까지 그 참여범위가 방대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록된 시는 시 쓰기를 전문으로 하는 시인과, 전문가적인 문학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에 관심이 있고 시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쓴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애국심’이다. 독도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는 섬이다. 우리 국민에게는 당연한 우리의 영토이며, 국가로서는 반드시 수호해야 할 땅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독도’에 대하여, 시로 그 타당성과 당위성을 노래한 것은 바로 애국심의 발로이다.

작가의 주장인 생각을 정제하여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이다. 이러한 시는 서정이며, 감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켜, 그것에 공감하거나 동의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시가 가진 효용성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는 독도에 대하여 시를 쓰는 그 행위는 바로 애국심이며, ‘독도 시’는 그 애국심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참여 작가의 동향

『시로 만나는 독도』에는 총 388명이 쓴 독도를 노래한 시작품 390편의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를 쓰는, 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 작품을 수록한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여기에 작품을 수록한 작가를 등단을 하고 정식적인 시인의 호칭을 가진 사람과 일반인들로 구분하여 보았다. 참여 작가 총 388명 중 시인으로 작품활동과 문단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211명이고, 문단이력을 가지지 않은 기존의 독자층에 속하였던 순수일반인이 177명이었다.

먼저 시인으로 적을 두고 있는 211명의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하겠다. 이들의 등단 매체와 장르를 살펴보면 등단매체로는 문예지(잡지)를 비롯하여 신문의 신춘문예와 기타 시집 발간, 백일장 수상 등임

을 알 수 있으며, 문학 장르는 시(자유시)와 시조를 주된 분야로 하여 동시, 수필, 소설 등 문학의 각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보자.

<표 4> 등단작가의 동향

등단관련 정보		비고
등단매체	문예지(잡지)	122명
	일간지(신문)	31명
	기타	58명
등단작품	시	85명
	시조	81명
	동시	5명
	수필	7명
	소설	1명
	기타	32명
등단시기	1960년대	6명
	1970년대	4명
	1980년대	15명
	1990년대	12명
	2000년대	36명
	2010년대	15명
	기타	35명

위 <표1>에서 보면 참여 작가의 문학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기본적으로 등단의 절차를 걸친 순수 문학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의 등단 매체를 보면 과반 이상이 문예지를 통해 문단활동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간지를 통한 <신춘문예> 출신이 1/4에 해당하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시와 시조로 문단활동을 시작한 작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수필이나 소설로 문단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두 장르를 합하여 8명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학 작가그룹에서 시인이 압도적인 영향도 있지만, 문학작품을 쓴다고 해서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

도 하다.

그리고 참여 작가의 등단시기를 살펴보면 80년대가 15명으로 7% 정도이고, 80년대 이전과 90년대가 10명대로 4.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90년대 이후에 등단한 작가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압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여 작가의 문단경력이 짧을수록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사실은 『詩로 만나는 독도』에 참여한 작가들 중 대중적 인지도를 확연히 실감할 수 있는 시인, 즉 그의 작품이나 이름이 시인으로서 문학에 관심을 가진 다수의 사람에게 바로 인지되어 있거나, 문단에서 그의 문학적 역량을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작가는 눈에 띄게 적었다. 현재 실제로 문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작가는 겨우 25명 내외에 불과하다.¹²⁾ 물론 필자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고, 필자 개인이 가진 독단적 시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등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가 31명이나 달하고 있음에도 문단경력 20년차이며, 꾸준히 문단 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가 보기에조차 생소한 이름의 작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시의 대중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땅’, ‘수호하자’, ‘사랑한다’ 등 주제가 확연한 하나의 사물에 대한 자신의 감성이나 서정을 시를 쓰지 않은 시인들의 심리와 함께 시가 가진 대중성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현재 한국시단에서 발표되거나 쓰여진 시가 『詩로 만나는 독도』에 수록된 것만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앞의 책이 독도를 키워드로 하여 시로 쓴 작품을 애써 찾아서 엮은 것을 생각 할 때, 이는 기존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도에 대한 문제는 시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이 부분은 지극히 필자의 개인 소견임을 밝힌다.

이와 대비하여 독자층인 일반인들의 참여는 연령, 직업별, 소속 등 굉장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볼 때 10대에서 80대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직업을 살펴보면 종교인, 정치인, 회사원, 사업가, 문화예술인, 주부, 학생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보면, 종교인(3), 정치인(12), 기업운영 또는 회사원(52), 문화예술계(11), 학생(14), 공공기관(4), 교육자(6), 언론(10), 주부(6), 독도관련기관이나 직책(37), 기타(22)로 분포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운영 또는 회사원에 속하는 그룹(29.4%), 독도와 관련된 곳에 속하는 그룹(20.9%), 학생그룹(7.9%), 정치관련 그룹(6.7%), 문화예술관련(6.3%), 언론관련(5.7%), 교육자와 주부 그룹이 각각(3.4%), 공공기관 관계자(2.2%), 종교인(1.7%) 순서로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타에서(12.4%)가 나타난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기업이나 회사원그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유추해보면 대부분 독도관련이나, 국가적 사업군에 속해 있거나, 그들이 속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독도’를 접하는 기회와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환경요인에 속해 있음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 독도방문 후에 자신들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참여도가 높은 그룹이 독도와 관계되는 곳¹³⁾에 속해있는 그룹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독도의 수호와 사랑하는 것을 기본적인 소명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독도에 대한 감회나 애심을 글로 표현한다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학적 감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독도 시’는 자연적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참여도가 높은 그룹이 학생이다. 사실 학생그룹은 별도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인 초·중·

13) 여기에서는 ‘독도 탐방대’, ‘한민족 독도사관’, ‘독도수호 운동본부’, ‘독도사랑 국민연합’ 등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교와 중고등 학교에서는 한번쯤 독도에 대한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의 시작품은 참여 작가의 동향에 제외하여 별도로 논의 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문학적 관점에서 독도를 연구하는 하나의 소재로 남겨 두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詩로 만나는 독도』에 참여한 일반인 작가그룹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룹이 정치인 그룹이다. 전체 177명의 수에서 앞에 설명한 기업인과 회사원 그룹, 그리고 독도관련그룹과 학생그룹을 제외하면 참여수가 가장 많다. 숫자의 개념에서는 문화예술인그룹과는 단 한 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시가 문화예술의 한 장르임을 상기 할 때 정치인 그룹이 문화예술그룹을 앞서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독도’라는 주제가 문학적 관점에서의 시적 소재라기 보다는 ‘독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정치적 플러스요인을 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는 감정의 발로이며 생각의 외침이다. 시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시인들이 각자가 고수하고자하는 그 ‘무엇’을 위한 외침으로 존재한다면, 독도는 굳이 문학적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외칠 수 있는 시적 소재임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를 주제로 한 문학장르에서 시를 변별하여 그 작가들의 동향을 보면 기존의 현대한국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의 수가 십만 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독도에 관한 작품을 쓴 시인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작가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면, 독도라는 명제가 시적소재로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반면 일반인들이 독도에 대한 소회를 시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독도’라는 명제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며, 지키고 가져야 할 무엇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작품에 나타난 편향성과 교학적인 측면

1. 소재의 편향성

시의 다양한 주제는 사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물은 시적대상이 되어 시인은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여 나타내기 위해 소재를 선별하고 찾아내어 작품을 만든다. 그 소재 역시 시로써 쓰고자하는 마음의 동기화(motivation) 과정을 거치며 시적 표현과 형태를 지녀야 예술적 형상화를 이루게 된다.¹⁴⁾ 이러한 시 쓰기는 시인이 인간사의 외부에서 취하기도 하고, 시인의 자아, 혹은 인간사의 내면에 깃든 근원적 문제에 천착하여 취하기도 한다. 시인이 인간사, 혹은 시인 자신의 내부에 천착하여 시 쓰기를 할 경우에는 보통 자아성찰과 시인의 의식, 인간이 직면해 있는 삶, 또는 직면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인간과 신에 대한 근원적 문제 제기 등을 소재로 삼아 글쓰기를 한다. 이러한 글쓰기(시 작품)은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독자는 시적 화자로 편입하는 경험을 통해, 각성, 치유, 성찰 등의 계기를 갖기도 한다.

현대시사(現代詩史)에서 일반 독자에게 이러한 계기를 심어준 시들은 대개가 사회의 변혁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정한을 노래한 소월, 정지용, 백석 등과 민족의 자주적 정신을 노래한 만해와, 육사, 윤동주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분단의 현실에서의 시사를 보면, 4.19와 60년대에는 김수영, 고은, 김춘수등의 등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70-80년대에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시적 관찰의 대상 혹은 시창작의 주체가 민중으로 이해되는¹⁵⁾ 민중시의 등장이 있었다.

14) 최재선, 「현대시조 주제에 대한 비평적 고찰」, 『시조학논총』 25집, 한국시조학회, p.50.

15) 강정구, 「민중시 형성의 한 과정-신동엽·신경림」,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p.426.

김춘수는 언어의 행위와 존재론의 문제, 즉 존재를 언어적 의미화의 범주 밖에서 인식하려는 노력으로 영원의 것, 연속적인 삶,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무한의 세계를 지향¹⁶⁾ 하고 있으며, 김수영의 경우는 자유의 갈망과 자기연민의 시세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은은 절망과 부정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그의 전력(승려생활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고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죽음과 좌절, 소멸과 절망의 부정적 상상력은 관념적 죽음을 통한 생의 의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¹⁷⁾ 그리고 현대한국사회 형성의 격동기라 할 수 있는 70-80년대에는 김지하, 조태일, 이성부, 박노해, 김남주 등을 필두로 한 민족문화, 민중시의 등장이 있었다.¹⁸⁾ 해방을 노래하고, 민족자주를 염원하고, 노동의 가치를 노래하고, 민중을 노래한 이들이 쓴 시들은 표면적으로 생각 할 때, 시적 미학에 앞서 계도성 구호로 인식할 수도 있겠으나, 이들의 작품은 은유와 비유, 절제와 함축 등 시적미학을 충분히, 훌륭하게 갖추어진 작품들이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당시에도 황동규, 황지우, 이성복, 최승호 등이 구사한 모더니즘과 언어미학 추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은 이렇게, 한국현대시의 시사에서 보이듯이 ‘시(詩)’ 민족, 자유, 노동, 평등등의 거대 명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명제를 시라는 작품으로 형상화 할 때에는 다양한 소재, 즉 은유와 비유를 갖춘 꺼리들로 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는 은유와 비유의 문학이다. 그것은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한 소재

16) 한원균, 「김춘수, 김수영, 고은의 시세계」,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p.382.

17) 한원균, 위의 논문, p.394.

18)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를 필두로 독재에 항거하는 문학인들의 결집이 두드러졌다. 대표적 결집으로 자유실천문인협회(이후 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로 명칭변경)발족 등이 있었다. 이들 작가 그룹은 그 후 꾸준히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활동해 왔다.

의 선택에서도 은유와 비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독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독도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재를 ‘독도’에 함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시의 제목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작품은 390편 속에서 38편뿐이다. 그 작품들의 발췌해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시 제목에 ‘독도’가 들어가지 않은 작품

시제목	메시지	소재	비고
애기기린초	일본의 거짓말	풀꽃,	시인작품
해풍에 보내 사연	혈육(우리 땅)	어머니, 사랑	
동해의 기침소리	일본의 야욕	여우바람, 송곳니	
나는 네가 좋아	독도사랑	별, 마음, 밤하늘	
총력안보	수호	달팽이, 유격훈련	
임의품	외로운 섬	바위꽃, 풍랑	
동해일출	우리의 땅	태양, 울릉도	
뿌리깊은 땅, 대한의 막내	혈육(막내)	무궁화, 곧은정신	
성난파도	일본의 야만	이빨, 성난파도, 돌	
피는 바닷물 보다 진한걸	혈육(우리)	토지, 살점, 피	
모녀봉	혈육(모녀)	햇줄, 바위	
내 사랑 한반도	독도사랑	춧대바위, 푸른 솔	
일장기는 찢어지고	동해의 수호신	메아리, 등대	
그 곳	한반도	겨레, 역사, 열도	
균형	독도찬	인연, 자연	
울릉 冬柏	지킴이	동백, 향기	
물 한모금 바람까지도	우리의 땅	흔불, 영혼	
동해의 돌장군	한반도 아들	어머니, 아들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땅	양심	
섬이 아닌 섬	외로운 섬	혈연, 총절	
뱀의 목적	일본의 사악함	뱀, 먹이, 눈독	
홀로 섬에	파수꾼	겨레, 아침, 동해	독자작품
그날	우리의 땅	슬픔, 외로움,	
파아란 수평선 너머	외로운 섬	조국수호	
천손민족과 조선	천손민족	조선해,	
한반도 사랑섬	우리의 땅	파도, 승냥이	

대한민국 연미복의 첫단추	독도 수호	연미복, 첫단추	
이 땅에 두발 딛고	파수꾼	부처님, 포말	
난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일본 징벌	백성, 평화	
남의 땅 탐내지 마라	일본 훈계	역사, 민족	
큰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독도 사랑	초대, 손님	
견우직녀 만나듯이	수호자	견우직녀, 독야청청	
내가 여기 있거늘!	우리의 땅	한반도, 어머니,	
다짐	독도사랑	이별, 배, 시간	
동해바다 깔끔이	수호신	동해바다, 민족융성	
더 가까이 하였더라면...	후회	미래, 금수강산, 약속	
아침을 열어 놓고	독도는 우리의 역사	아침, 방문객	
일본아 들어라	일본 훈계	진실, 영토	
만리향	독도의 향기	만리향, 돌섬	
우리는 그렇게 알고있었다	우리의 땅	조국의 혼, 무궁화 꽃	
집	우리의 집	무단침입	
동쪽은 내가 지킬게요	수호자	지킴이	
꽃	우리의 땅	꽃, 동해의 옷	

위 <표 5>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독도를 대상으로 한 시의 주제가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외로운 섬’, ‘독도는 한반도의 파수꾼’ 등으로 변별할 수 있다. 시가 은유와 비유를 가진 미학의 장르임을 생각할 때, 이는 너무나 편향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제목에 독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작품들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이것은 시의 대상이 ‘독도’라는 것에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작(詩作)의 관점에서는 좋은 선례로 볼 수 없다.

이들 390편의 작품 중에서 제목에 독도가 들어가지 않은 38편 이외에 제목 또는 부제에 ‘독도’를 쓰지 않은 작품이 10편 있었다. 그 13편의 제목을 보면, -「엄마와 아가-독도를 생각하며」·「독도-죽두리처럼 지녀야지」·「독도-괭이 갈매기」·「부르지 않은 노래-독도사랑」·「만천하에-독도 1」·

「파도의 노래-독도」·「한반도 수문장-독도」·「외롭다, 독도-패러디 쓰기」·「소곤소곤 독도의 말-난 행복한 섬입니다」·「독도-동문(東門)」·「천지백록-독도」·「씨름과 스모의 한판 승부를 보다-독도」·「사랑도-독도」 등이다. 이들 시편에서도 그 주제의 선택은 ‘독도수호’와 ‘우리의 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다음 시편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

“아가야,

호시탐탐 널 노리는 못된 이웃 때문에

-(중략)-

너의 집이 어디냐고 물을 때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번지’라고

아무지게 대답하던 너!

-(중략)-

아가야, 항상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한단다

태평양 태풍보다 더 무서운 이웃이 있어

어느 순간에 널 낚아채갈지 모른단다

그러나 아가야,

이제는 걱정 말고 네 족보를 펼쳐봐라

단군 오천년 역사가 너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¹⁹⁾

- 고두석, 「엄마와 아가-독도를 생각하며」 중 일부

(3)

“세종실록 찌든 활자 씨앗처럼 이어왔다

맨발로 주눅이 들어 흰 옷이 찢기어도

뿌리가

곧게 내려서

동해 끝은 늘 환했다

19) 김은령, 최재목, 이태우 편저, 『시로 만나는 독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정문사, 2019, p.33.

-(중략)-

목이 긴 한 구절 뺏속 깊이 표류하다
한 점 살아 숨쉬는 섬, 다시 안긴 돌부리여
영원히
뜬기지 말고
족두리처럼 지녀야지”²⁰⁾

- 김광순, 「독도-족두리처럼 지녀야지」 부분

(4)

“누가 뭐래도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읍 독도리
지배권리, 국토의 동문(東門)이다
평화이고 자유이다
대한민국 섬이다”²¹⁾

- 채만희, 「독도-동문(東門)」 중 일부

(5)

“흰구름 푸른 달빛 음저난 우산국
갈매빛 갈명덕인냥 하냥 속살거리는
‘그동안 수문장 하느라 고생 참 많았다’

별빛 따라 뱃길 따라 풍랑으로 휘돌아
백제인 후예 천황의 조상신마저 분노할
지금도,
천년 전에도
독도는 한반도다”²²⁾

- 양윤애, 「한반도 수문장-독도」 중 일부

(6)

“우리 바다 우리배로

20) 김은령, 최재우, 이태우 편저, 앞의 책, p.48.

21) 위의 책, p.255.

22) 위의 책, p.147.

우리 섬에 훌쩍 와서
 발 한 번 쿵 굴려보고
 끝과 끝을 걸어보며
 여봐라, 크게 외친다
 우리 것 말고 더 무엇 없어”²³⁾
 - 서석조, 「만천하에-독도 1」 전문

위 인용문에서 보면 (2)와 (3)은 ‘독도 수호’에 그 관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에서 보면 ‘호시탐탐 널 노리는 이웃’이 있지만, ‘단군 오천년 역사’가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지키고(지켜야 함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에서는 ‘영원히 뜯기지말고, 족두리처럼 잘 지녀야’한다는 말로 독도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족두리는 혼인할 때 신부가 쓰는 것이며, 머리 정수리에 쓰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독도는 우리가 고귀하고 성스럽게, 높이 잘 간직해야하는 은유이며 비유인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인용문 (4),(5),(6)에서는 독도는 ‘우리의 땅’임을 메시지로 하고 있다. (4)에서 보이는 ‘대한민국 섬이다’와 (5)에서 보이는 ‘지금도 천 년 전에도 독도는 한반도다’, 그리고 (6)에서 보이는 ‘우리바다, 우리 배, 우리 섬’ 등의 발언은 모두 ‘우리의 땅(국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은 어떠한 대상을 두고 그것을 사고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에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며, 공감을 유도한다. 하여, 그 공감된 의견들이 시대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효용성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문학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여, 불후의 작품이 등장하기도 하며, 그 작품들은 인간의 삶에 밀착되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한다. 문학에 대한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독도’는 문학작품의 대상으로 그 효용성을

23) 위의 책, p.128.

가지기에 충분한 기재이다. 독도는 역사성, 고유성, 희귀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의 분쟁사 등은 문학적 소재로서 공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문학적 관점에서 충분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대상에 대한 사고의 폭은 지극히 편향적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논하고 있는 ‘독도 시 모음집’인 『詩로 만나는 독도』에 수록된 작품에서 은유나 비유로 쓰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단어들을 <표>로 정리해 보자.

<표 6> 은유, 비유가 되는 단어

시제목	단어	수록면	대상
독도-족두리처럼 지켜야지	족두리	p.48	독도
독도	독버섯	p.67	일본
독도는 본토 지킴이	망나니, 오랑캐	p.83	"
독도-괭이갈매기	바다새	p.104	독도
독도	수련	p.111	"
독도	실크 용단	p.154	"
독도	큰스님	p.183	"
독도에찬	다이아몬드	p.203	"
울릉동백	동백꽃	p.217	"
독도야	호랑이	p.223	"
"	승냥이	"	일본
동해의 돌 장군	장군	p.225	독도
뱀의 목적	뱀	p.277	일본
독도, 독도여	연인	p.285	독도
독도, 당신이여!	"	p.342	"
조건 없는 내사랑, 독도	"	p.436	"
세말 휴게소에 독도가 있었다	"	p.453	"
당당한 초병 독도	초병	p.331	"
나의집 독도	집	p.360	"
집	"	p.505	"
대한민국 연미복의 첫 단추	연미복, 단추	p.369	"
독도보살 마살	보살, 우담바라	p.398	"
난 이렇게 살고 있었다	군왕	p.411	"

내친구 독도	친구	p.416	"
독도	점	p.478	"
동구밖 느티나무 독도!	느티나무	p.495	"

위 <표 6>을 보면 은유와 비유로 쓰여진 단어는 모두 23종이다. 이들 단어에는 긍정과 부정의 두 그룹이 있다. 우선 은유와 비유로 선택된 것 중에서 부정의 상징으로 차용된 단어는 ‘독버섯·망나니·오랑캐·승냥이·뱀’이다. 이들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해로움, 무지막지, 침탈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을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비유하는 단어로 선택한 것은 그 이미지에 있어서는 공감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시적 형용이나 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상투적이며, 평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의 상징을 가진 단어를 독도에 대입한 것으로 지극히 긍정적 이미지를 도출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이는 ‘큰 스님·다이아몬드·호랑이·군왕·느티나무’ 등은 최상, 힘, 위상, 등을 상징하며 독도를 높이 올려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족두리·연미복’은 결혼을 상징하여 새로운 시작, 함께 등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크용단·동백꽃수련’ 등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어 독도는 아름답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단어의 선택은 독도라는 시의 사물을 최고의 대상, 힘을 가진 대상, 아름다운 대상으로 인식케 하는 무한긍정의 이미지를 구축하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천체 390편에 달하는 작품에서 독도를 은유나 비유의 단어가 들어 있는 작품은 겨우 26개 뿐이라는 것은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4개의 작품에서는 독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한 ‘연인’이라는 단어이다. 연인이란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독도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요구이며, 과제일 수 있다. 굳이 시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연인’으로 비유한 것은 시적으로 보면 지극히 상투적이며, 평이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시편들에서 비유와 은유로 선택한 또 하나의 주제로는 ‘혈육’이 있었다. 혈육이라는 것은 ‘우리(family)’를 함의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을 좀 더,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 「엄마와 아가-독도를 생각하며(자식)」, 「뿌리깊은 땅, 대한의 막내(막내)」, 「독도(아버지)」, 「독도 너, 막내야(막내)」, 「독도는 나의 살붙이(자식)」, 「나의 땃줄인 독도야(아기)」, 「섬이 아닌 섬(피붙이)」, 「독도(막내)」,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아들)」, 「독도(형제)」, 『독도(어머니)』, 「내아들 독도야(아들)」, 「독도와 어깨동무 강강수월래(막내)」, 「혈육 한 점(혈육)」, 「내 아들 독도야(아들)」 등 모두 15편이다.

이 15편을 세부적으로 보면, 독도를 자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시편이 압도적이다. 특히 ‘아들’이나 ‘막내’로 비유한 것은 지리적 상황을 시에서 배제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한반도와 떨어져 동해상에 위치해 있다. 작가들은 한반도의 땅덩어리를 부모로 보고, 독도를 한반도가 낳은 자식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서 연유하여 막내라는 상징을 오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과 그 형태를 비유하여 독도를 쌍둥이로 상징한 작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독도를 대상으로 한 ‘독도 시’는 그 주제가 천편일률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독도’라는 대상에 편향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에 우리민족이 살았을 때부터 시작하여 긴 역사의 흐름 동안에 당연히 우리의 땅이었고, 지금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야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독도’이지만, 이를 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특히 문학의 정수라고 하는 시로써 접근한다면, 주제의 편향과 빈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가 가지는 문학적 효용을 살려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은유와 비유를 통해 독도를 노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도를 노래한 시

작품들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시는 은유와 비유의 문학이다. 이러한 은유를 차용하여 시대의 현실이나 역사적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 시의 덕목이기도 하다. 『장자(莊子)』의 「칙양편(則陽篇)」에는 ‘와각지쟁(蝸角之爭)’을 이르는 고사가 있다. 만(蠻)과 촉(觸)의 싸움에서 시작되어 ‘만촉지쟁(蠻觸之爭)’이나 ‘와우각상쟁(蝸牛角相爭)’으로도 불리는 ‘와각지쟁’은 달팽이 뿔에서의 다툼을 말하는 것으로, 즉 세상일이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사소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여기서의 가르침이란 세상사의 크나큰 재앙이나 혼란도 사소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장자의 무위자연론에 입각한 가르침이다. 하지만 이것을 문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보면 기발한 비유가 된다. 이것을 당(唐)나라 시인인 백낙천(白樂天)²⁴⁾은 “달팽이 뿔 위에 싸운들 무엇하리/ 부싯돌 번쩍이듯 순간에 사는 몸/ 부자든 가난하든 주어진 대로 즐겁거늘/ 입 벌려 웃지 않으면 바보로다”²⁵⁾라고 노래했다. 이 작품을 보면 영토분쟁을 그 기저로 하여 발생한 ‘와각지쟁’이란 단어가 시적 비유로 인간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나아가는 기재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고의 영역을 뛰어 넘어 전혀 새로운 장을 펼친 것이다. 그렇다면 영토분쟁으로 인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 있는 ‘독도 시’도 ‘독도 사랑’, ‘독도 수호’, ‘우리의 땅’이라는 편향적 주제에서 기발하고, 통찰적인 은유나 비유를 통한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는 작품이 많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24) 백거이(白居易: 772-846), 다중기의 시인, 처음에 관직에 나아갔으나, 도중에 배척되어 시와 술에 심취해서 살았다. 시의 대부분이 당시의 사회사, 경제사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시 가운데 사회를 풍자, 고발한 新樂府와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長恨歌 등은 널리 애송되었다.(신연철 감수, 『동양사사전』, 동양사사전편찬위원회, 1989, p.286.)

25) 蝸牛角上爭何事 石火光中寄此身 隨富隨貧且歡樂 不開口笑是癡人(백거이, 「대주(對酒)」)

2. ‘독도 시’가 가지는 교학적인 측면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독도를 대상으로 쓰여진 시작품은 ‘독도사랑’ ‘독도수호’, ‘우리의 땅’ 등에 함몰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적 관점에서는 지극히 상투적이고, 시적 미학이 결여된 작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학의 본령이 당대의 현실을 바라보고 동참하며, 불의를 고발하고, 정의를 대변하는 효용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때,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처해 있는 독도에 대한 문학의 기조는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고, 우리의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 그 첫째 목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살펴본 ‘독도 시’는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주제와 사고의 편향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들이 지키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이들 시편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주제와, 여러 소재들은 다분히 교학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시편들에서 보이고 교학적인 소재를 살펴보면, 역사, 자연생태, 지리, 애국심 등으로 변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역사의 측면을 살펴보면 교학적인 측면에서 역사와 관련이 있는 시는 모두 14편에 속한다. 이들 시에는 인물, 사건, 문서 등이 등장하는데, 우선 인물로는 지증왕, 이사부, 안용복, 최종덕, 홍순칠 등이 등장한다. 이들 인물에서 지증왕과 이사부의 등장은 지증왕이 신라의 왕이었던 그 당시(512년)에 이미 독도는 우리민족이 관장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다. 유구한 세월이 흐른 뒤 일본의 탐욕에 맞서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은 독도의 역사나 독도에 대해 무지했던 일반 독자들에게 독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이 시점에서 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이 터무니 없는 엉터리 주장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주인공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어부 안용복은 동료인 박어둔과 함께 울릉도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인들을 쫓아내다 납치당해 고초를 당했지만 일본 관리들에게

항의하여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장받았다. 귀국한 뒤 2년 간 유배형을 받고 풀려났지만 일본인들의 영해 침탈이 여전함을 알고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고, 서계를 위조하여 영토분쟁을 야기하려던 쓰시마번의 의도를 무산시켰다.²⁶⁾ 시에 나타나는 안용복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독자들은 시를 통해 최종덕이 독도를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 홍순철이 누구인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예문을 보기로 하자.

(7)

돌 하나 다칠까 신발까지 벗어두고
별빛 바람 몸부비며 움막집을 지었어요
역사의 징금다리 되어 생명 선(線) 이어가는

섬의 구석 돌아보며 “물골” 샘물 찾아 내고
물골로 오르는 988계단 만들면서
죽지엔 너털너털 피고름이 흘렀습니다

동도와 서도 사이 강철선을 설치하고
실선을 귀에 걸어 전화개통 시키던 날
덕골집 아랫목 구들은 뜨끈뜨끈 달았습니다.²⁷⁾

- 천숙녀,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옹」, 중 일부

(8)

이웃나라 섬나라 일본의 탐욕으로
자기네 영토라며 핏말을 박고 다니던 때

26) 안용복의 활약상은 심상규의 《만기요람》, 이익의 《성호사설》, 안정복의 《순암집》, 남구만의 《약천집》,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김건서의 《증정교린지》, 성대중의 《청성잡기》 등 수많은 서적에 수록되었다.

27) 김은령, 최재목, 이태우 편저, 앞의 책, p.23.

깃발 높이 든 홍순칠 대장
 의용수비대를 결성했던 33인 영웅들의 결사
 젊은 피 육탄의 불덩이를 동해에 내려놓고
 무장 순시선을 박격포로 격퇴시켜
 오키호, 해꾸라호를 물리쳤던 독도대첩의 날²⁸⁾

- 천숙녀,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영전에」, 중 일부

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최종덕²⁹⁾은 독도에 집을 짓고, ‘물골’ 이라는 섬을 찾아내고, 그 섬에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었으며, 동도와 서도 사이 전화를 개통하여, 독도를 무인도가 아닌 섬으로 가꾸어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홍순칠³⁰⁾은 독도를 자기네의 영토라고 꾀말을 박고 다니던 왜인선 오키호와 해꾸라호를 물리쳤던 33인이 결성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독도 시’는 일본이 독도에 자기네 영토라고 꾀말을 박았던 사실과 열악한 환경에서 독도에 주거하면서 독도를 수호한 인물들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시작품으로 독도를 더 잘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 역사적 사건을 알 수가 있다. 이들 시편에서 독도관련 문서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돗토리번 답변서(1695년), 카이로선언문(1945년)’이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돗토리번 답변서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 기록이, 카이로선언문에는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세계에 증명한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그리고 “훈도시 차고 머리 질끈 동여맨 왜의 갯것들이/ 폭풍처럼 몰려와 강

28) 위의 책, p.25.

29) “독도의 최초 주민은 최종덕이다. 최종덕(1923-1987)은 1964년에 독도에 첫 집을 짓고, 이후 1965년부터 독도에서 상주하면서 어로 활동을 하였고, 1981년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겨 법적으로도 독도의 최초 주민이 되었다.”(김호동,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경인문화사, 2012.)

30) 홍순칠(1929-1986)은 경상북도 울릉군 출신으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장으로 활동하였다.

31) 위의 책, p.113.

치의 정수박이에/ 낫본도를 무참히 꼽았다/ 잔혹한 피의 살상/ 강치들의
터전에 더 이상 자유와 평화는 없다”³²⁾ 라는 시구에서 보이듯이 독도에
서식하던 강치를 일본인들이 무자비하게 포획해 갔다는 역사적 사실들
을 배우게 된다.

둘째, 독도의 자연생태를 알 수 있다. 『시로 만나는 독도』에서 보면 8
편³³⁾의 작품에서 독도에 서식하는 생태동식물이 등장한다.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독도에 서식하는 자연생태물은 동식물을 포함하여 참으로
다양하다. 그 생태물들을 살펴보면 ‘변앵초, 천문동, 하늘나리, 왕해국,
참억새풀, 민들레, 기린초, 땅채송화, 섬장대, 나문재, 참나리, 술패랭이,
민들레 명아주, 바랭이, 쇠비름, 쑥, 큰족두리꽃’등 식물군과 ‘팽이갈매
기, 황조롱이 습새, 바다제비, 동박새’ 등의 조류와 ‘딱정벌레, 호랑나비’
등 곤충류까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생태물을 호명하여 시인들은 독
도를 상징하는 언어로써 활용하고 있다.

(9)

열도(列島)의 말 아닌 말들
섬 없이 건너오면
좌르르 심해 밖으로 키질해 되 보내느라
식은 땀 마를 새 없는
그대는 섬이 아니다

하늘이 그 마음 알아
거두고 또 피우는
변앵초, 천문동, 참억새, 날개하늘나리
내게서 꽃피게 하는

32) 위의 책, p.137

33) 「독도는 섬이 아니다」, 「독도는 말한다」, 「자랑스런 독도」, 「독도-팽이갈매기」, 「독도기행」, 「독도에 가봐」, 「독도 원경(遠景)」에서 독도서식 동식물의 이름이 보인다.

그대는 섬이 아니다³⁴⁾

- 곽홍란, 「독도는 섬이 아니다」 중 일부

(10)

왕해국은 알고 있다

강치도 알고 있다

말없이 지켜보는 저 등대와

깡이갈매기와 섬새도 보고 있다

아름다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섬 독도라고³⁵⁾

- 김블라시오, 「독도는 말한다」 중 일부

(11)

여기는 심해선 밖 태초의 바람들과

황조롱이, 딱정벌레, 기린초, 나문재의

물으로 향한 그리움이 일어서는 땅이니라³⁶⁾

- 리강룡, 「독도-깡이 갈매기」

(12)

울릉도 동쪽바다 뱃길로 이백 여리

화산이 분출하여 솟아오른 천애고도

동해를 지키는 첨병 의지할 곳 없는 삼봉

바람이 거센 터라 숲조차 없는 석도

해국과 땅채송화 섬장대와 하늘나리

동박새 바다제비 등 철새들의 낙원이라³⁷⁾

- 박근모, 「독도 기행」-110

34) 김은령, 최재목, 이태우 편저, 앞의 책, p.37.

35) 위의 책, p.65.

36) 위의 책, p.104.

37) 위의 책, p.110.

위 인용문 (9)-(12)에 등장하는 자연생태물은 독자들로 하여금 독도에
는 저런종류의 식물과 조류, 곤충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독도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생동성과 아름다움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천애고도 착박한 땅’에서 곳곳이 생명을 이어가
며, 독도에 터전을 잡은 존재들에게서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법을 배운
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문학(시)이 가지고 있는 교학적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시인들은 독도에 자생하는 식
물들을 호명하여 독도를 단순히 섬 이상의 존재, 즉 아름다운 생명들의
터전임을 알리고 있다.

셋째, 독도의 지리적 정보를 알 수 있다. 『詩로 만나는 독도』의 시편
들에서 지리적정보가 들어 있는 시편은 9편이다. 이 시편들에서 알 수
있는 지리적 정보를 살펴보자.

(13)

“너의 집이 어디냐고 물을 때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번지라고
아무지게 대답하던 너!
이 엄마는 참으로 대견스러웠단다”³⁸⁾
- 고두석, 「엄마와 아가-독도를 생각하며」 중 일부

(14)

“독도야 독도야!
너는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육지에서 약 218km, 울릉도에서 약 87.4km
떨어진 섬
2012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었노라
독도를 우산봉, 서도를 대한봉이라고...”³⁹⁾
- 오면수, 「대한민국의 새 아침은 독도에서 시작되다」 중 일부

38) 위의 책, p.33.

39) 위의 책, p.159.

(15)

“대한민국의 섬, 독도(獨島)는
 동경137° 북위37° 교저에 우뚝 솟아 있다
 우리의 동해물에 세수한 일출이 우리의 대문꼭대기에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
 보아라!
 이어져 있는 것이 어찌 길뿐이라
 우리의 맥박으로 펄럭이는 선명한 태극기를르
 국토의 동문(東門)이다”⁴⁰⁾,
 - 채만희, 「독도-동문(東門)」 중 일부

(16)

“독도에서 서울까지 435km
 버선발로 반기는 여인 있어
 단숨에 달려왔다//
 멀치국수 기다리는 손님 곁에 앉아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87.4km라며
 손가락 뻗어 방향제시로 한반도 모습 보여준다”⁴¹⁾
 - 고영점, 「나들이 온 독도」 일부

(17)

“독도를 잉태하루 때 품어둔 백두대간은
 한 줄기 내달려서 태백산맥을 이루었고
 또 한 귀 이 땅 역사를 우뚝하게 세웠다//
 함께한 마음들은 울릉도 동남쪽 87.4km
 북위도 37°14'22" 동경도 131°52'08"
 한걸음 일으킨 생각들 자석처럼 당기는 곳”⁴²⁾,
 - 김진태, 「독도의 아침을 만난다」

40) 위의 책, p.255.

41) 위의 책, p.294.

42) 위의 책, p.327.

(18)

“나의 주소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임을 잊지마라”⁴³⁾
- 박서영, 「나는 독도다」 중 일부

(19)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하늘이 맑은 날에는 독도를 볼 수 있다//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다”⁴⁴⁾
- 이정운, 「독도란! 무엇인가?」 중 일부

등이다. 독도의 지리적 정보는 굳이 시인들의 시편에서 찾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또 알 수 있는 정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의 위치를 접한다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혼습의 효과를 가지게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독도에 대한 무관심을 꾸짖는 시인의 통렬한 목소리 통해서 독자들은 독도에 다가가고 있다.

(20)

당신의 마음속에 안용복의 애국정신을 품지 않고
의용수비대 홍순철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독도는 더 이상 우리 땅이 되 수 없다
독도는 죽어버린 화산암이 아니다
독도는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이다

43) 위의 책, p.359.

44) 위의 책, p.441.

큰 가재바위 곳곳에 팽이갈매기 떼가 둥지를 틀고
 바다제비, 노랑부리백로가 휴식을 취하는 섬
 울릉도와 독도를 가로지르며 유영하는 강치
 사시사철 섬장대, 박주가리, 곰딸기가 풍성하지만
 대나무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중략...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이는
 아직도 독도가 동도와 서도인 줄 모르는
 바로 당신의 무관심이다 45)

- 권수진, 「독도」 중 일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적인 교학적 기능 외에 그의 모든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애국심’이라 할 수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다. 즉 국토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영토분쟁 속에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독도의 위치나,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사건들, 독도의 자연생태 알 수 있는 작품은 독도를 바로 알게하는, 다시 말해 독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료의 역할을 한다고 하 수 있다.

이처럼 ‘독도 시’는 문학적 측면에서 시적 기능이나 미학적인 면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땅’, ‘독도 수호’, ‘독도 사랑’을 함유한 ‘애국심’을 기저에 두고 독도의 역사, 자연, 지리, 형태를 알리는 교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IV. 나가기

이 글은 독도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그 실태를 문학 중에서도 시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독도에 대한 시편들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작가의

45) 김은령, 최재목, 이태우 편저, 앞의 책, p.44.

다양함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도시를 쓴 작가들이 기존 유명한 시인에서부터 등단하여 현재 문학을 전공으로 하여 활동하는 문인(시인)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에서부터 해방정국까지 겪은 80대까지의 폭 넓은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직업면에서는 주부, 기업인, 직장인, 공직자, 학생, 연예인, 예술가, 종교인, 정치인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현시대의 관심사에 들어 있고, 모든 국민의 생각이 하나의 안전(애국)에 동일성을 보임으로써 문학의 기재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독도 시’는 시가 가지는 특징이나 시의 미학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는 흔히 문학의 정수라고 불리고 있으며, 문학 장르 중에서도 천부적인 감성과 고도의 수련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면으로 접할 수 있는 ‘독도 시’는 이러한 시가 가지는 특성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독도를 문학적 기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국’의 기재로 독도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독도는 우리의 땅’ 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번에 살펴본 ‘독도 시’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독도를 알리고, 독도의 관심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서 ‘시’는 좀 더 시다운 작품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단순히 독도를 수호하자,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라는 구호성의 글쓰기에서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생태를 관찰하여 그 자연생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비유와 은유, 형용사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써야할 것이다. 이러한 작품 등을 통해서 독자들은 독도를 좀 더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함축적인 언어(시어)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시인들의 역할은 그들의 언어로써 삶을 노래하고, 사물의 아름다움을 밝혀내고, 나아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기도 한다. 그러므

로 그들이 짓는 시(詩)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가꾸어 나가는 도구가 되는 것은 물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사고의 영역에 진입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당시 사회가 주목하는 어떠한 문제를 그들의 언어로써 환기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효용성은 시가 대중화되어 대중들이 향유할 때 그 ‘효용’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독도 시’가 ‘대중 시’가 되기 위해서 시인들이 독도를 애국의 기재를 넘어 문학의 기재로 재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김호동,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경인문화사, 2012

김은령, 최재목, 이태우 편저, 『시로 만나는 독도』, 정문사, 2019,

신연철 감수, 『동양사사전』, 동양사사전편찬위원회, 1989, p.286.)

천숙녀, 『평화의 섬, 독도』, ㈜건강신문사, 2017.

한민족독도사관, 『독도시 200선』1, p브릿지, 2011.

_____, 『독도 시 200선』2, p브릿지, 2012.

강정구, 「민중시 형성의 한 과정-신동엽·신경림」,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김재홍, 「20세기 한국시의 근대의식 형성과 전개」,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이태우,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경과와 발생배경」, 『독도연구』 제20호, 영남대독도연구소, 2016.

임현순, 「한국 대중시 형성의 문화적 요인과 현대시의 대중화 문제연구-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독자들의 한국현대시 수용과 인식의 특성」, 『한국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시학회, 2007.

최재선, 「현대시조 주제에 대한 비평적 고찰」, 『시조학논총』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한원균, 「김춘수. 김수영. 고은의 시세계」,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Abstract>

Literary Interest and the Realities of Dokdo

-Focusing on 『Dokdo meeting with Poetry』-

Kim, Eun-Ryeong

Dokdo is a concern of all Koreans and is still in a confrontation with Japan due to territorial disputes. There are various ways to protect Dokdo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Then, there was a question as part of the preservation of Dokdo, what has been going on in literature?

Most of the literary works on Dokdo in the meantime, were able to see in the fairy tales at the educational level or historical literary works mainly focused on academic level. In the case of fairy tales or novels published in this way, readers can meet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audience as a book with a purpose. However, in the case of poetry, which is a song of the pure mind of the artist, the interpretation can be different.

This study examined the literary interest and actual condition of Dokdo based on the works of 『Dokdo meeting with poetry』 which is composed of poems written by the literary readers and professional poets. What can be seen through 『Dokdo meeting with poetry』 was the diversity of the artist and bias toward the theme.

The authors who wrote poems about Dokdo include not only literary people (poets) who are active in the literary world but also young students to the 80s who have experienced liberation government. In addition, the authors can be seen that almost all the people belonging to every fields of

society such as housewives, businessmen, workers, public officials, students, entertainers, artists, religious person, politicians and so on are participating.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diversity of the artist,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works were limited to the 'Patriotic'. he writing of slogan, 'Let's protect Dokdo, Dokdo is our land' has the utility of 'Dokdo love', but its utility is shown when the poem is popularized and enjoys the public.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for poets to make an effort of rediscovery on Dokdo as a literary material beyond the patriotic material in order for Dokdo poetry to become a 'popular poem'.

This suggests that Dokdo is not enough to be a literary material, but it is also a characteristic of poetry and aesthetics of poetr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Dokdo will be an opportunity to inform Dokdo more diversely in terms of literature.

Key words: Poetry of Dokdo, Guard of Dokdo, Literature Materials, Utilities, Bias

이 논문은 2020년 5월 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獨島研究』 제28호 편집위원회

□ 제1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20년 5월 19일(화) 15:00-16:00, 영남대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4, 총 6인(불참자 위임장)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19편
 - 2) 『獨島研究』 제28호 투고 논문 19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3) 논문 심사 기간: 2020년 5월 20일 ~ 6월 15일

□ 제2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20년 6월 17일(수) 15:00-16:00, 영남대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3, 총 5인(불참자 위임장)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19편
 - 2) 『獨島研究』 제28호에 투고한 논문 19편을 심사결과에 따라 11편을 게재하기로 결정
 - 3) 각 투고자에게 <논문심사결과>발송 의결
 - 4)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의 경우 해당자에게 ‘수정요구사항’ 발송 의결
 - 5) 이번 호 게재율: 약 58% (총 19편 가운데 11편 게재됨)

논문투고 규정

1. 투고 방법

1. 『독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홈페이지(<http://dokdo.yu.ac.kr/>) 오른쪽 중단의 논문 투고 사이트’ 또는 ‘<http://dokdo.dothome.co.kr>’로 직접 들어가 투고하도록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수령여부를 투고자가 확인해야 하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투고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 1) 필자의 소속, 직위, 전공분야,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 2) 필자 이름의 한자 및 영문 표기
 - 3) 논문제목의 영문표기
 - 4) 한글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
(요약문에 관한 사항은 원고 작성 지침의 6항 참조)
5.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해제를 비롯한 그 밖의 경우는 원고의 성격에 따라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가 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비용은 원고지 한 매당(소수점에서 반올림) 3,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II. 원고 작성 방법

1.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문

- 1)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지명·사건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에만 한자와 병기한다.
- 2) 한자의 경우 괄호 없이 한글음에 이어서 쓴다(併記). 단,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풀어썼거나, 의미는 같되 음이 같지 않을 때는 해당 한자를 한글 뒤에 괄호로 묶는다.

→ 독도獨島,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울진蔚珍

→ ‘죽도(竹島) 이나바와 호키(因伯) 상하이(上海), 가와카미 (川上), “천이 명한 성을 따른다(率性).”

☞ 단, 다음에서는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 ① 본문에서 불가피하게 한문원전을 그대로 인용해야 할 경우.
- ② 본문의 괄호 속.

→ 이황李滉(號, 退溪)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로서...

- ③ 각주 속.
- ④ 참고문헌란.

- 3)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① “ ” : 인용
- ②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③ 『 』 : 문헌이나 저서 이름
- ④ < > : 신문 이름
- ⑤ 「 」 : 논문이나 작품 이름
- ⑥ . : 동일사항의 나열

→ 백두산·한라산·지리산

- 4)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부기한다. 단 중국·일본 인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자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의 경우, 외국어나 한문은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은 본문보다 두 칸 들여 쓰되(왼쪽 2, 오른쪽 0), 첫 문장 들여 쓰기는 하지 않는다(들여쓰기 0).

4. 각주

- 1) 단행본인 경우 동양서는 저자명(편찬주체), 역자명, 서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沈興澤, 『鬱島報告書』, 1쪽.

李能和, 김상익 옮김, 『朝鮮女俗考』, 250쪽.

Judy Van Zile, *Perspectives on Korean Dance*, pp.125~133.

- 2) 논문의 경우에는 필자명, 제목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어로 된 논문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논문명은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 홍길동, 「조선시대 서얼제도의 연구」, xxx쪽.

Edward J. Shultz, “The Early History of Andong: Central or Peripheral”, p.6.

- 3) 세부적인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 일괄 표기하고, 각주에서는 이를 표기하지 않는다.
- 4) 신문·잡지인 경우에는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형식으로 표기한다.

→ 「미주한인사회를 합동하자는 의견」, 《共立新報》 1907년 11월 29일자; 安自山, 「三國時代의 文學」, 《朝鮮日報》 1931년 4월 11일자.

- 5) 각주에서 같은 인용문헌이 연속되어 나올 경우, 동양서는 ‘저(편)자, 같은 책(같은 논문),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서양서는 ‘같은 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Ibid’로 표기한다. 단, 인용문헌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될 때마다 제목을 표기한다.

→ 홍길동, 같은 책, xxx쪽.

→ 홍길동, 같은 논문, xxx쪽.

→ Kant, Ibid, p.xxx.

5. 참고문헌

- 1) 논문 뒤에는 반드시 참고문헌란을 붙인다.
- 2) 참고문헌란에는 각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만 표기한다.
- 3)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저(편)자, 역자, 서명, 총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 저자, 역자,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간행년도)

6. 요약문

- 1) 언어 :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되, 주제 분야 3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표 참조), 주제어 5개를 명기한다.
- 2) 분량 : 한글의 경우, 200자 원고지 2~3매로 하고, 영문은 이 한글 요약문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7. 기타

- 1) 괄호가 따옴표나 낫쇠와 같은 문장부호와 쓰일 때는 괄호를 이들 부호 밖에 둔다.
 - ‘자연과 인간(天人), 『말의 문화와 배의 문화』(馬の文化と船の文化)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도연구소에서 간행되는 [독도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1. 간행시기

본 학술지는 6월 30일, 12월 30일의 년 2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간행 시 필수기재 사항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한다.

대상		기재내용
대학소속	대학소속(전임/비전임)	성명/○○대학/ 교수*
	대학소속 강사	성명/○○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연락처

* 교수 :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연구교수 등

** 학생 : 학부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석·박사과정생 등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간행 목적에 맞는 학술지를 발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독도 연구자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또한 투고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혔는지를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집적, 관리하여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²와 ‘게재 불가’¹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수정 후 게재’¹과 ‘게재 불가’²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2와 ‘게재 불가’1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게재’1과 ‘게재 불가’2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3. 그 외,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제5조 (게재료)

1.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2. 모든 논문은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게재논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게재료를 청구하되, 연구비 지원 논문은 25만원을 청구한다.
3. 특별기고 형식으로 투고한 논문인 경우 게재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 (부칙)

1. 이 시행규칙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2008년 2월 15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獨島研究』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여 건전한 연구활동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의 의무)

- ① 연구자는 학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타인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거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⑦ 연구자는 표절 또는 저작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 ⑧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

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 ①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② 제소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소 당사자와 혐의 해당자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케 하고, 15일 이내에 그 답변과 상호 화해를 권장한다.
- ③ 제소자와 혐의 해당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종결하고,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6조 (연구윤리 협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①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한 때 연구윤리 협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확정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 최재목(영남대)

편 집 위 원 : 김명기(명지대)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손승철(강원대)

송취영(영남대)

심정보(서원대)

오상혁(제주대)

이성환(계명대)

정갑용(영산대)

제성호(중앙대)

정성일(광주여자대)

최장근(대구대)

편 집 간 사 : 박지영(영남대)

獨島研究

제 28 호

2020년 6월 28일 인쇄

2020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서 길 수

편집인 최 재 목

발행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 810-3686

FAX (053) 810-4704

인쇄처 도서출판 동방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77

TEL : (053) 424-8557

FAX : (053) 422-4268
